

2019

문화예술교류



**공론화 추진단
분과별 토론회**

결과 기록집

**2019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추진단
분과별 토론회
결과 기록집**

문화예술교육 의제발굴 원탁회의

CONTENTS

I. 개요	5
추진 배경	6
추진 개요	7
II. 원탁회의 기록	11
1. 총괄분과	12
2. 학교분과	22
3. 사회분과	35
수도권	37
충청권	46
경상권	56
전라권	67
4. 기반분과	79
5. 창의·융합분과	92
III. 부록(토론회 자료)	103
1. 총괄분과	104
_ 문화예술교육 담론 및 의제 논의를 위한 전문가 원탁회의	
【발제문】 사회문화 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역할, 10대 핵심 이슈 / 이동연	104
【토론문】	115
2. 학교분과	131
_ 학교문화예술교육 의제발굴을 위한 전문가 원탁회의	
【발제문】 지역 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현장 생태계 조성 방안 / 하장호	131
【발제문】 학교 현장 수요에 기반 한 학교문화예술교육 다각화 방안 / 김지연	136
【토론문】	142

3. 사회분과	164
_ 사회문화예술교육 의제발굴을 위한 전문가 원탁회의	
【발제문】 사회문화예술교육 공론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 정민룡	164
【토론문】 수도권	171
【토론문】 충청권	188
【토론문】 경상권	203
【토론문】 전라권	213
 4. 기반분과	 225
_ 문화예술교육 기반 정책의 의제발굴을 위한 전문가 원탁회의	
【발표문】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추진단 기반분과 논의현황 공유 / 추미경	225
【발표문】 문화예술교육 기반 정책 추진현황 및 전반적 이슈 / 김자현	234
【발제문】 R&D 기반 공론화 의제-동반성장형 R&D 시스템 구축·운영 / 김창환	239
【발제문】 문화예술교육 R&D기반 이슈 / 안성아	244
【발제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반정책-인적자원 관련 공론화 의제 / 김정이	246
【발제문】 문화예술교육 지역화에 따른 인적기반(전문인력양성) 이슈 / 홍기원	250
【토론문】	251
 5. 창의·융합분과	 268
_ 창의·융합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발제문】 예술과 기술의 융합과 문화예술교육 / 손경환	268
【발제문】 아동청소년 관점에서의 융합 문화예술교육의 접근 / 양혜정	273
【발제문】 무용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융합적 접근 / 차진엽	276
【토론문】	280

I 개요

추진 배경

문화예술교육 담론 및 의제 논의를 위한 공론화 원탁회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최근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책 및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전략을 도출하기 위하여 대외적 협력·소통·확장의 공론장을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 10월, 관련 현장과 학계 전문가, 문체부와 진흥원 관계자가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추진단’(이하 공론화 추진단)을 구성하였다. 공론화 추진단은 총괄분과 및 문화예술교육 정책 이슈별 4개 분과(학교분과, 사회분과, 기반분과, 창의·융합분과)로 구성하고, 문화예술교육 정책 분야별 핵심 이슈를 도출하며, 공론화 기획·추진, 실행계획을 마련하였다.

공론화 추진단은 올해 1월에 공론화 추진단의 분과별 이슈 리포트에 기반을 둔 핵심 의제를 검토하기 위한 첫 번째 공론의 장을 열었다. 2주간 분과별로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또는 공개 토론회를 열었고, 사회분과는 4개 권역별로 진행되었다. 진흥원은 향후 공론의 장을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마련해나갈 예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사업에 대한 상시적인 논의를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의 수요가 늘어나고 다양한 정책사업이 운영되면서, 문화예술교육은 국민의 문화 향유 저변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공급자·중앙 주도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수요에 따른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역별 특색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역량 있는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계속 제기되었다.

문체부는 2018년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국민의 새로운 요구와 달라진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지속 성장과 질적 제고를 목표로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라는 세 가지 방향성을 담고 있다. 양적으로 확대된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을 통합적인 방향에서 다양화하고, 수월성을 담보하는 질적 전환을 이루며, 공급 주체의 관점이 아닌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주체와 학습자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제안의 지점이다. 이러한 방향을 구체화하여 실행과 이행의 단계로 가기 위한 집단적인 논의와 합의의 과정들이 공론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문화예술교육은 참여 주체가 다양하고 역동적이다. 시민, 예술가,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영역의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 과정에서의 역동성이 정책사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일종의 협치 구조가 필요한 정책 영역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공론화 과정 이후에는 상시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협치 구조로 발전시켜 연속성을 가져가고자 한다.

추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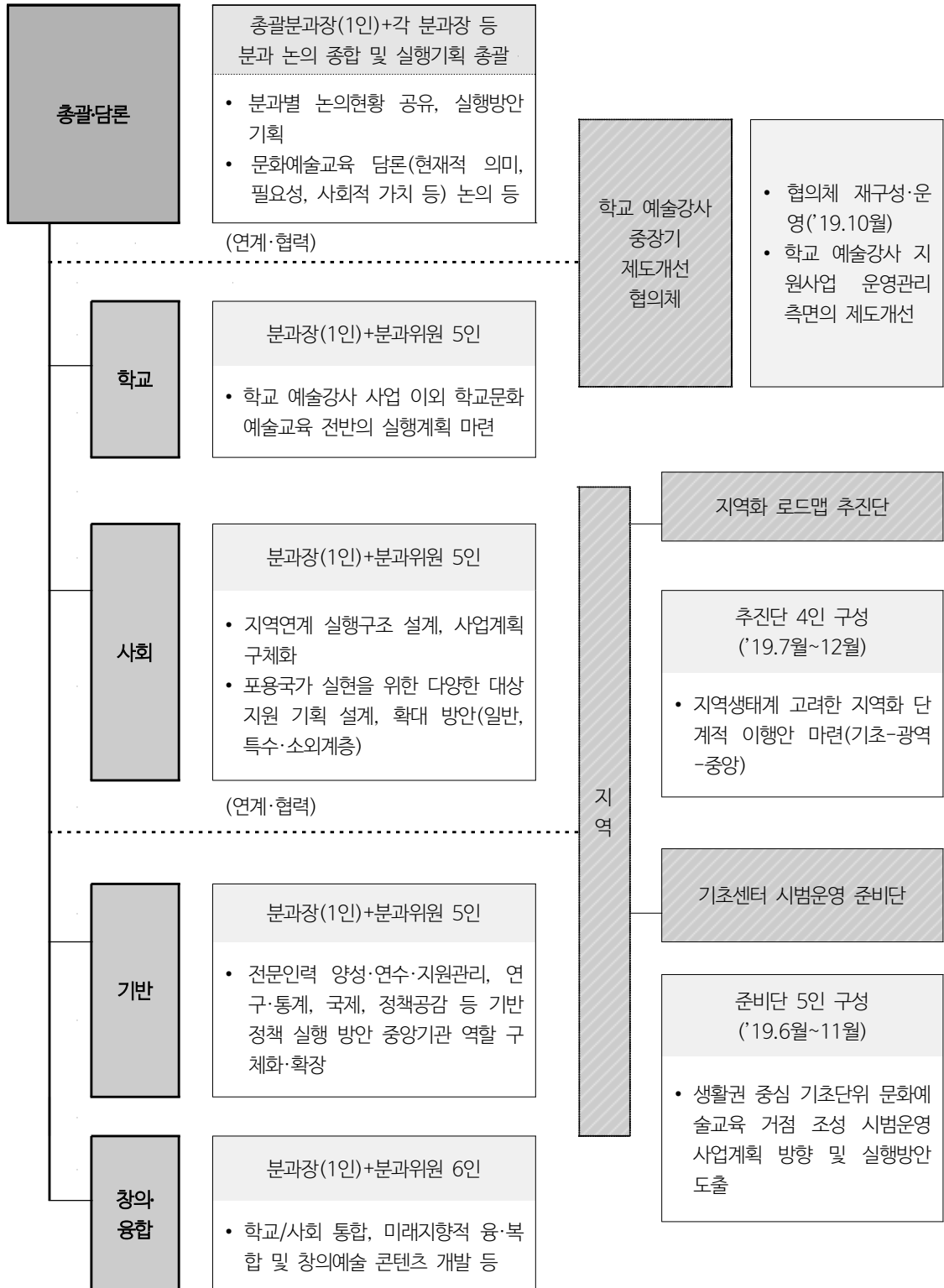
□ 공론화 원탁회의 추진 일정

분과		일정	장소	
총괄분과		'20.1.15.(수) 14:00~17:30	서울	LW컨벤션 (서울 중구 소재)
학교분과		'20.1.14.(화) 14:00~17:30	서울	바비엡2 (서울 중구 소재)
사회분과	수도권	'20.1.16.(목) 14:00~16:30	서울	LW컨벤션 (서울 중구 소재)
	충청권	'20.1.17.(금) 14:00~16:30	대전	스파크플로우 (대전 중구 소재)
	경상권	'20.1.20.(월) 14:00~16:30	부산	부산역KTX 회의실 (부산 동구 소재)
	전라권	'20.1.21.(화) 14:00~16:30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 서구 소재)
창의·융합분과		'20.1.21.(화) 14:00~17:00	서울	바비엡2 (서울 중구 소재)
기반분과		'20.1.22.(수) 14:00~17:30	서울	LW컨벤션 (서울 중구 소재)

□ 분과별 추진 방식 및 주요내용(핵심의제)

구분	핵심 의제(안)
총괄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사회문화 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역할 및 각 분과별 여건의 공통 이슈** 집중 토론 * ① 문화예술교육 정책 환경 변화, ②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 문화정책 변화, ③ 사회문화 환경 변화(고령화, 인구절벽, 노동시간 단축, 여가, 4차 산업혁명 등) ** 전 생애적 문화예술교육 지원 관점에서의 조직구성 문제,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분명한 정의(소외계층 중심 탈피,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생활문화와 창의성 영역 고려), 인력/R&D 문제 등 공통 이슈
학교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강한 현장 생태계 조성 관점의 지역 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 추진 방안 ② 학교 현장 수요에 기반한 학교문화예술교육 다각화 방안
사회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과 방향성 * 개념과 정체성, 접근 방법론(언제나 그곳에,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사회혁신(변화)에 발맞추는 문화예술교육, 문화생활 관점의 영역 간 연계협력 ②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 지원구조 개편 방안 - 포용적 관점 사업구조, 생태계 관점 지원, 생활권 단위 지원체계 구축
기반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분권에 따른 향후 문화예술교육 인적/R&D기반 정책 방향 * 지역화 관점에서 진흥원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① 전문인력 양성 범위와 지향점, 그에 따른 연수체계 방향 ② 진흥원의 R&D 강화, 연구 내용과 방식, 관리 방향 등
창의·융합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융합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방향 논의 ① 예술 장르간 융합(주제 중심의 융합예술) ② 예술과 기술(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③ 예술과 사회(사회 비판적 접근)

□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추진단 조직 구성



※ 기 구성·발족된 '학교 예술강사 중장기 제도개선 협의체' 및 지역 관련 '지역화 로드맵 추진단', '기초센터 준비단'과 연계·협력 운영

□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추진단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총괄분과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학교분과	박소연	안양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김지연	프락시스 대표
	김혜경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하장호	예술인 소셜유니온 대표
	남우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사무관
	이상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청소년교육본부장
사회분과	정민룡	광주 북구문화의집 관장
	김지나	감각사회연구소 소장
	백현주	수원평생학습관 기획실장
	유상진	지역문화진흥원 문화사업부장
	최보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박효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사무관
	김재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시민교육본부장
기반분과	추미경	(사)문화다움 대표
	김정미	비커밍컬렉티브 대표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
	안성아	추계예술대학교 영상비즈니스과 교수
	홍기원	숙명여자대학교 문화행정학과 교수
	정인양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사무관
	김자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장
창의·융합분과	신정원	한국예술연구소 책임연구원
	손경환	한국예술종합학교 융합예술센터 팀장
	양혜정	연극놀이 전문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차진엽	현대무용가
	박효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사무관
	김세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획협력실장
	김자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장

II 원탁회의의 기록

총괄분과

문화예술교육 담론 및 의제 논의를 위한
전문가 원탁회의

일시	2020.1.15.(수) 14:00-17:00	
장소	LW컨벤션 다이아몬드홀	
사회	김세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획협력실장)	
발제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공론화추진단장)	
토론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김정미 (비커밍컬렉티브 대표)
	박소연 (안양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박영정 (인천 연수문화재단 대표)
	백현주 (수원평생학습관 기획실장)	신승환 (가톨릭대학교 철학과 교수)
	신정원 (한국예술연구소 책임연구원)	양혜정 (연극놀이 전문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임학순 (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조충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추미경 ((사)문화다움 대표)	하장호 (예술인 소셜유니온 대표)
진행원	이규석 (원장)	김자현 (교육기반본부장)
	김재순 (시민교육본부장)	이상은 (청소년교육본부장)
문체부	이경직 (문화예술교육과장)	박효진 (문화예술교육과 사무관)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역할, 10대 핵심 이슈

전문가 라운드테이블로 진행된 총괄분과 원탁회의는, 문화예술교육정책 환경 변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 문화정책 변화, 사회문화 환경 변화(고령화, 인구절벽, 노동시간 단축, 여가,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역할 및 분과별 어젠다의 공통 이슈를 놓고 집중 토론회를 벌였다. 분과별 어젠다 중에서 전 생애적 문화예술교육 지원 관점에서의 조직구성 문제,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분명한 정의(소외계층 중심 탈피,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생활문화와 창의적 영역 고려), 인력/R&D 문제 등이 공통 이슈로 모였다.

총괄분과에서는 이동연 교수의 발제를 통해 ‘사회문화 및 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역할, 10대 핵심 이슈’를 하나씩 짚으며 화두를 던졌다.

-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정의
-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의 방향
-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확산 방안

-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 문화예술교육의 분권화와 생활문화 정책의 연계와 통합
- 예술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행방안
- 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체계 및 교육과정 혁신
- 지역분권 실현으로서 기초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방안
- 창의적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확산 방안
- 문화예술교육 R&D를 위한 플랜

총괄분과에서 주요하게 거론되었던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의 이분법적인 관점과 예술교육의 창의성, 문화교육의 다양성이라는 도식을 벗어나 통합적 상호작용적 관점을 제안했다. 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성, 사회적 가치의 의미를 구현하기 위한 유동적인 개념으로 보고, 문화예술교육을 “개인의 감각의 활성화와 사회의 이해와 소통능력의 확대를 위한 창의적인 모든 교육과정”으로 정의하였다. 또,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창의적 가치, 다양성의 가치, 경제적 가치로 다루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확산을 위해서는 건강한 현장 생태계 조성 관점으로 지역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연계와 학교 현장 수요에 기반 한 학교문화예술교육 다각화를 제안했다. 사회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문제 이해를 위한 교육, 전 생애적 문화예술교육으로 확장하는 방안과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는 지역문화분권 정책의 관점에서 사업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의 통합을 제시했다. 문화예술교육 인력과 관련해서 예술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지원과 신분 안정화, 문화예술교육사 인력양성 개선,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교육을 언급했다. 지역 문화분권 관점에서는 기초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필요성과 타당성 연구 및 운영방안 계획 수립을 제시했다. 창의적 융복합 문화예술교육은 예술 장르 간, 예술과 기술, 예술과 사회 관점에서 실천과제를 도출했으며 문화예술교육 R&D를 위한 체계와 법제도 정비를 짚었다.

분야별 이슈 돌아보기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박소연 안양대학교 교수는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이슈를 짚었다. 문체부 주도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과 가치와 관련해서 정책 추진이 병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처 간 협력관계 재설정과 역할 조정, 그리고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변화, 학교 현장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구조의 다각화와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은 현재성과 사회적 가치의 의미를 구하기 위한 유동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구조 개편은 공급자 중심 논의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경 (사)문화다움 대표는 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을 과정적·상태적 상황에서 유동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지역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기초적인 선에서의 동시대적 개념이 필요하고 문화예술교육의 관계성에 대해서 정책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생활문화와 문화예술교육은 통합하는 것보다 상호 관계성이나 연계의 접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지역화의 맥락에서 기반 고도화가 가지는 의미와 관련하여, 기반 영역의 구체적인 어젠다를 발굴하는 차원의 접근보다는 문화예술교육의 동시대적 정체성을 규명해가는 과정과 연계해서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가 지역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기반이기 때문이다.

신정원 한국예술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창의·융합형 문화예술교육을 예술 장르 간 융합, 예술과 기술, 예술과 사회 세 가지 범주로 나누고 학습자의 주체성과 새로운 경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디어 리터

러시, 비판적 사고 등을 제안했다. 창·융합형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R&D와 인적 기반의 보강, 플랫폼 구축을 통한 기술과 교육 정보체계 마련,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학순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지역밀착형, 생활밀착형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살펴보면서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문화예술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기반에 관해 다뤘다. 지역 문화예술교육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진흥원의 기능 조정, 광역센터의 지역 지원정책 거점으로서의 구축, 기초센터의 지역밀착형 정책사업 거점 구축을 제안했다. 지역문화 연계 이슈로 거점 공간 조성, 공동사업 개발, 문화예술교육의 지역 문제 해결 효과 등을 강조했다.

하장호 예술인 소셜유니온 대표는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적 관점을 중심으로 토론했다. 통합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 체계 구축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확대와 복잡성을 정책 주체 간 긴밀한 협력과 협의로 풀어야 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화예술교육의 주체 형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예술강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사업에 연결되어야 하며, 현장 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들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 구축을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의 핵심으로 보았다.

양혜정 연극놀이 전문가는 아동·청소년의 입장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지향점과 연결성을 이야기했다. 통합적인 사고를 하는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미래사회가 요청하는 인간형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논의할 때, 아동·청소년의 감각발달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정책 기조가 마련되어야 하며, 몸과 감각을 통한 예술 접근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김정아 비커밍컬렉티브 대표는 현재 10개 주요 어젠다가 이후 최종적으로 어떻게 쓰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로 다른 수위의 어젠다가 동등하게 놓여 모호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메타 어젠다와 하위 어젠다의 구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점에서 도구와 수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정의하고 있는 점과 각각을 사업의 단위로 대상화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했다.

유동적인 개념 정의, 가치와 원리의 강조

백현주 수원평생학습관 기획실장은 문화예술교육의 정체는 그것을 실행하고 운영하고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전제에 동의하며,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현장과 현장을 구성하는 실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정의는 공감되지만 각인되기에는 충분치 않아 보이기 때문에 가치와 원리, 뉘앙스를 전달하는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제도는 개개인, 개별자 또는 각자의 삶의 양식을 존중하도록 돕고 재구성하도록 돕는 것이 원리로서 드러나고 강조되어야 한다고 했다.

신승환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문화예술교육을 성취나 결과물로 보지 않고,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미적 체험을 담보하는 과정으로서 현대철학의 심미적 전환의 관점에서 보았다. 문화예술교육을 재개념화하고, 미적 감수성의 개념화로 접근했다. 문화예술교육의 존재론적 특성을 자기 성취, 자기 이해, 자기 성찰로서의 문화예술교육으로 설명했으며, 문화예술교육의 공동체성과 관계성에서 인간이 가지는 근본적 미적 체험과 공동선의 가치를 짚었다.

박영정 인천 연주문화재단 대표는 정책으로서 문화예술교육 방향 전환과 사업구조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았다. 학교 중심 문화예술교육에서 일상 중심 문화예술교육으로의 전환, 문화예술교육 거점 시설의 설치와 운영, 생활문화와 문화예술교육의 관계 재정립, 문화예술교육 지역 기반체계 구축을 짚었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이 학교 중심이었던 것을 일상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교육과정 결합이 아닌 생활

결합형으로, 학생들에게 창의성 개발 도구라기보다 삶을 충족하는 과정으로서의 생활을 돌려준다는 의미를 담았다.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은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의 현실을 짚으며 현 단계 문화예술교육의 몇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얘기했다. 지역 문화생태계 관점에서의 학교와 마을의 경계 허물기의 어려움을 말하며 생활문화와의 통합보다는 자율성과 연계해서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예술강사의 처우 개선 관련 네트워크 강화 지원과 지역거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따라 정부-광역시-기초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했다.

조충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융합분야 어젠다 개발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공공영역에서 국가단위의 체계적인 구조설계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국가핵심예술표준(National Core Arts Standards)을 사례로 들었다. 창의 파트너십 관련해서 융복합은 기업 및 산학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퍼블릭 도메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종 합 토 론

이동연 총괄분과의 기초발제에 그동안 각 분과에서 주로 논의된 쟁점 이슈를 바탕으로 도출한 주요 어젠다를 담았다. 준비해 오신 토론에 기초발제에 대한 코멘트가 많았다. 이제 가감 없는 논의와 제안을 나눠주시기 바란다.

임학순 총괄분과의 첫 번째 어젠다인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은 원래 사회분과에서는 중요한 과제가 아니었다. 그런데 생활권 기반, 자치구 단위로 살펴다 보니,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인 용어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첫째, 자치분권 시대에는 자치단체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장, 의원부터 담당자에 이르기까지 예산 수립, 회계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 없이 기능 중심, 결과 중심의 아카데미로 보는 등 혼란이 생긴다. 앞으로 기초 단위에서 문화예술교육 재정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기존의 생활문화나 마을 교육, 평생교육과는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고 어떻게 연계되는지 문화예술교육 정책 담당자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역에 인프라가 많다. 서울에도 기초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지역 문화 인프라들이 많고,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활동이 있다. 기존의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해 미학적 경험과 개인에게 미치는 과정으로 풀어내는 문화예술교육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문화예술교육이란 무엇일까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셋째, 융합과 협업이다. 문화예술교육이 문화와 예술을 바탕으로 하지만 다른 영역과의 연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문화예술이 문화와 예술 범주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다른 영역과 만나서 만들어내는 시너지가 크다. 타 영역과 함께하려면 그들의 문화예술교육이 무엇인지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 지금 법에는 문화예술, 문화재, 문화산업 영역으로 되어 있다. 선언적인 의미라 하더라도 이러한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정책적으로 집행할 때 문화예술의 특성, 문화예술교육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정책 과정에서 풀어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과정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다. 정작 정책 현장에서 담당자들이 문화예술교육과 문화강좌를 오해하거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준에 따른 결과 중심의 정책으로 풀어내면 안 되기 때문에 개념 정의가 중요해진 것이다. 사회분과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정의를 세 가지로 논의하고 있다. 첫째, 문화에



술교육의 효과나 영향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이 개인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중심으로 한 정의이다. 둘째, 예술적 경험, 심미적 체험, 참여자의 주체적인 참여 등 효과 및 영향 측면과 과정체제이다. 셋째, 문화예술의 가치 측면에서 문화와 예술이라는 요소이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네 가지 요구를 현장에서 명확히 해보고자 한다.

신승환 기초발제에서 경제적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공동선의 가치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초기에 예술과 기술은 같은 어원에서 나오면서 탁월함, 좋음의 의미로 사용했다. 가치의 문제를 문화와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 또는 좋음으로 접근하면 경제적 가치라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동연 그것은 프랑스에서 예술교육이 진보적인 좌파의 교육정책사업으로 얘기되면서 자크 랑 교육부 장관이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당시 우파가 예술교육은 돈만 많이 쓰고 실효성이 없다고 맹공을 퍼부으며 수능 교육, 집중 교육 등 학력 중심의 교육을 주장할 때, 문화예술교육이 그냥 퍼주는 교육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으로 반대 논리로 제시했었다. 그런 내용을 숨기고 인간의 탁월함이 얼마나 사회와 세계의 재화와 재원을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겠냐고 하는 쪽으로 접근해도 같은 말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달리 해석하는 방식으로 기술해보겠다. 정의, 가치, 목표 부분에서 사회의 갈등 해소에 예술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너무 지나치면 도구나 수단이 될 위험성도 얘기해 주셨는데, 포함해서 얘기해보면 좋겠다.

김정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거나 포괄적이어서 현장이 불만을 갖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



는데, 그 작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다.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앞단에 걸렸기 때문에 지금 공론화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체적인 언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달 체계’라는 말 자체에 이미 문체부, 진흥원, 광역, 기초로 내려가는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사업의 모습들이 응축되어 있다. 이 시점에서 어떤지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분권이라든가 다양성 이슈, 생태계가 같은 선상에서 동일한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을 담는 부분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전달’이라는 단어는 ‘소통’이나 ‘협력’으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소통과 협력의 구체적인 행정의 실천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실현한 적이 있는가? 기존에 모든 소통과 협력체계는 테이블 단위에서만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지역과 소통한다는 것이 기초문화재단과 광역문화재단 담당자들을 회의 석상에 불러 얘기를 나누고 그친다. 이 부분들은 어떤 식의 실천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현장의 혼란과 불만은 대부분 꿈다락 토요문화 학교(이하 꿈다락) 사업이나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같은 단위 사업이 공모에 올라간 순간부터 그 사업에 대한 해석이 명징하게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예로 들면, 그 안에서 다루어지는 스탠더드(standards)한 지향과 유아교육에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진흥원의 의지는 무엇인가라는 지점에서 구체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사업단위 현장에서 각각의 해석들로 사업이 제한된다. 다음 단계로 심사가 진행되는데, 심사나 평가에 들어갈 때도 심사위원들과 평가위원, 컨설턴트에게도 그 사업의 가치와 방향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소통과 협력체계는 사업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철학과 지향이 선제적으로 검토되고, 성과의 지점이 무엇인지 명징하면 현장에서 그 개념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실현의 구체성을 획득할 것이다. 모호한 소통체계와 전달체계 위주로 제시된 사업에 각자 나름대로 콘텐츠를 개발·실행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현장 평가자의 상이한 평가 기준 등의 이유로 점차 광역과

기초 단위에서 소통과 협력체계에서 멀어지고 신뢰가 붕괴되는 것이다.

결국 문화분권이나 다양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의 소통과 협력체계는 탈근대 시대의 요구이다. 그 지점에서 현장에 좋은 예술교육 콘텐츠의 포스트 휴머니즘을 담으라고 요구하기 전에 행정 프로세스와 절차, 정책 입안단계에서 그것들을 담보할 예산 자원의 반영, 면밀한 관리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원사업 예산의 10%는 사업의 가치를 입증하는 R&D에 배치하는 등 관리비에 배정되어야 한다. 다른 부처를 보면,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사업 실행 대비 10~15%의 관리비를 늘 반영한다. 사업을 관리하는 집행기관,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쓰일 수 있는 비용 반영이 병행되어야 한다. 철학, 가치, 방향은 실천적인 전략과 같이 맞물릴 때만 현장에서 뜨거운 반응으로 화답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문화예술교육 공론화에 병행되어 의지와 실천 전략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현장의 필요를 정책으로

권경우 이것은 두 가지로 풀어야 한다.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면밀하고 세부적으로 접근해서 사업이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사업이 실행되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사업화하고 정책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성동문화재단의 경우, 이번에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한 번에 직원이 70명 늘었는데 임금체계도 다 다르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힘든 상황이고, 그냥 사업으로 끝나지면서 기초에서는 고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에 괜찮게 보았던 사업 설계 중의 하나가 서울시의 ‘예술 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이다. 서울시는 최소의 사업 범주와 방향만 정해주고 기초문화재단, 지자체에서 사업을 설계해서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사업 설계과정부터 기초 단위의 필요를 반영하고 기초 단위 주체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 문화예술교육도 많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겠다.

양혜정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의 태생 자체가 국가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제가 멘토링으로 참여했던 유아 문화예술교육도 지원사업이 먼저 나오고 시장이 형성된 이후에 콘텐츠가 고민되는 구조여서 안타까우면서도 흥미로웠다. 우리의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철학이 공유된 하나하나의 용어 정리가 필요한지는 모르겠다. 공동의 용어 마련이 현재 지적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선행되어야 하는가? 다만, 유동적인 문화예술교육의 지향점을 만들어내는 어떤 캐치프레이즈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제가 속한 창·융합분과의 경우도 ‘창의문화예술교육’이라는 창의적인 관점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문제를 담았다. 감각의 예술을 다루는 입장에서 오히려 기술과 미디어의 결합 속에서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면, 더 인간답게 경이로움을 회복하는 예술교육에 대한 지향점을 1~2년 단위로 캐치프레이즈에 담고 그 안에서 미디어와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까, 인간을 어떻게 기술에 확장하게 하고 해방할 수 있을까, 관계망들은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 이런 큰 방향성을 제안하고 그다음에 유아, 연극, 미술 등의 파생되는 사업이 따라가면서 각 분야의 다양성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했다. 요컨대 예술이 가장 인간다움을 지향하고 감각들을 깨워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면 그 확장으로써 미디어의 결합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문화예술교육 공동의 지향가치의 부재를 지적한다.

이동연 조충연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정의보다 수사 표현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인 것 같다. 광화문광장 조성위원회 회의에서 어느 건축가가 한 얘기가 떠오른다. 어느 대학에서 오페라하우스를 지을 때



어떤 오페라하우스를 지을 것인지 1년 반을 토론해서 나온 결론이 “청바지를 입고 가도 되는 오페라하우스”였다고 한다. 청바지를 입고 간다는 오페라의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인식이 담겨 있었다. 우리도 문화예술교육에서 창의성 교육이나 융합 교육, 학교예술교육을 그렇게 정의해보는 언어적인 담론화도 필요할 것 같다.

하장호 학교분과에서 이해하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상은 큰 틀에서 얘기하면 비슷할 것 같지만,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면 굉장히 간극이 있다. 학교는 교과과정 안의 구조에서 파악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 ‘정의’가 중요하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여기서 정의를 내리는 게 중요한 과제일까 생각이 든다. 학교분과는 현재 문화예술교육을 담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계속 만들어내는 상식적인 구조들을 얘기했다. 특히 ‘학교’라는 특정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책 단위에서 최소한의 합의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회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한 방향을 확인하고 그에 맞춘 정책설계가 같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단계에서 진흥원에 필요한 작업은 계속적인 문화예술교육 관련 비평의 장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이 논의를 활성화하고 수면 위로 공론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학부모들의 참여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이해의 간극이 너무 크다. 간극을 좁혀나가기 위해 언어를 개발하거나 공론의 장을 만들거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영역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담론과 비평의 장 만들기

박소연 기반분과의 연구 관련해서 김정이 대표님의 이야기에 연결해 얘기하자면, 우리가 문화예술교육의 지향이라는 구름 위에 있는 이야기와 실제로 땅에 붙어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그 두 가지가 같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다 같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이 설정되고 사업화되었을 때, 목표, 성과, 효과가 구체적인 지표로 나와야 무엇을 하는 사업인지 이해가 쉽다. 그런데 그렇게 구체화하다 보면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실제로 정책연

구를 하면서 개념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R&D의 역할이 강화된다면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 효과분석연구나 성과분석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우리는 효과가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연구였는지에 거의 절반의 에너지를 쓰고 있다. 그런 것들이 미리 설정되어 기초 틀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틀을 다시 점검하는 형태로 두 가지 레벨이 모두 일직선상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이경직 작년 7월 이후로 정책환경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 2002년 국악강사포럼으로 시작된 학교문화예술교육은 2005년도 이후 문체부와 진흥원의 학교 예술강사 사업 위주로 이루어져왔다. 수혜자 수가 27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 약 94%가 아동, 학생, 청소년, 학교이다. 사회 영역은 8%도 안 되는 상황이고 예산도 7~80%가 학교로 투입되었다. 국고와 지방재정 합해서 980억 정도 되는 큰 규모이다. 하지만 작년 6월에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예술교육은 교육부 주관으로 추진한다는 「학교예술교육 진흥법안」이 발의되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학교 예술강사 사업 외에 거의 없고,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소외계층의 사업들이 일부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예술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까? 한편으로, 올해부터는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지역분권이 중요한 방향 중 하나인데, 문화예술교육은 지방에 근거한 게 거의 없고, 광역 중심으로 위임되어 있다. 지역 차원에서 봤을 때 학교와 사회가 뒤섞여서 지자체 정책 담당자들은 문화예술교육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상황이 되었다. 더하여, 2014년부터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어 지역문화진흥 영역에서 생활문화사업이 추진되면서 기초 단위에 생활문화센터가 만들어졌다. 문화예술교육이 어떻게 방향성을 가져가야 할지,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공론화 작업을 통해 최소한의 합의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추미경 이 논의에서 어려운 점은, 당면한 상황은 분명히 보이는데, 다루는 주제가 너무 커서 실현에 대한 간극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기반분과에서도 지역문화 생태계의 다양화와 연동된 지역 분권화로 큰 가닥을 잡으면서 논의의 가닥이 풀리기 시작했다. 우리도 공론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에서 중요하게 전환해야 할 관점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토대를 만들거나 실행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순서를 잡는 것을 제안한다. 그런 맥락에서 지역 분권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은 생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는 동시에 척박하다. 그렇다면 지역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 한 정리되지 않을 것이다. 사업을 제공하기보다는 과정을 사업화하는 방식으로, 문화예술교육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과정으로 사업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한다.

백현주 문화예술교육 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사업비로 쓰이고 있고, 사업을 잘 운영 관리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없어 악순환이 계속되는 지점은 평생교육원의 민간위탁 모델이 참조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기관의 경우, 9년 차가 되면서 인건비가 절반을 넘고, 운영비가 30% 정도이다. 사업비는 30%가 안 되는데, 그 예산으로 잘 할 수 있는 게 있다. 핵심은 불안정성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안정화하는 것이다. 지역은 안정성이 확보되는 순간 더이상 내부의 진전이나 성장을 이루지 못할 수 있는 함정이 있다. 지역은 나름대로 굉장히 잘하고 발전해 있지만 취약하다는 이야기의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사회분과에서는 개념 정의와 지향 자체를 우리의 장기 과제로 다루자는 의견이 나왔다. 사업을 꾸리는 구조 등 현안은 공론화 과정의 1차 목표로 두고, 정책의 개념, 지향, 원리, 가치 등은 다양한 주체들의 학습 과정으로 1년 이상의 장기 플랜으로 가져갔으면 한다.

문화예술교육의 현재화 과정으로서의 공론화

이규석 문화예술교육이 제도화된 지 15년 남짓인데, 초기 5년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개념화하고 현재적 의미를 찾으면서 정책을 실행하는 두 가지 노력을 병행한 굉장히 역동적인 시기였다. 이후 양적 팽창기라고 부르는 10년 동안에는 성과와 한계가 동시에 있었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수요가 늘어나는 것만큼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이 분야의 가치나 의미를 현재화하는 과정이 초기 5년에 비해서 부족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8년에 만들어진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제도화되던 초기의 역동성을 다시 회복하는 출발점 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 공론화에 대한 계획도 거기서부터 출발했다.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에서 제안했던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다. 질적 전환에 대한 부분은 종합계획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양적 확대의 맥락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이 분화된 질적 다양화나 질적 수월성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제안한 바 있다. 또 하나는 수요자 중심성이다. 공급 주체의 관점이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참여 주체나 학습자의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제안점이다. 이 세 가지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에서 합의하고 제시된 방향성이고 이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집단적인 논의나 합의의 과정이 공론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인위적인 출발점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2018년에 발표한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이 실행과 이행의 단계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 과정이다.

이 정책의 참여 주체는 다양하고 굉장히 역동적이다. 특히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시민 주체, 예술가 주체,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영역의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 과정에서의 역동성이 정책 사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일종의 협치 구조가 필요한 정책 영역이기도 하다. 지난 10년간 양적 확대 과정에서 조응하지 못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면 공론화의 과정이 이후에는 상시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일정 정도의 거버넌스 협치 구조로 발전하고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동연 공론화는 어떤 결과를 내는 보고서가 아니다.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안에 상당 부분 오늘 논의되었던 내용이 나와 있다. 그 내용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저희 분과와 총론 과정의 논의를 다 정리해서 문화예술교육의 공무원, 강사, 수요자 등 많은 당사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을 수 있으면 성공적일 것 같다. 각 분과별 토론회와 향후 계획하고 있는 대토론회를 통해 차근차근 마무리해나가고자 한다.

학교분과

학교문화예술교육 의제발굴을 위한 전문가 원탁회의

일시	2020.1.14.(화) 14:00~17:00	
장소	바비엡2교육센터 B1F. 크리스탈룸	
사회	박소연 (안양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발표	이상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청소년교육본부장)	
발제	하장호 (예술인 소셜유니온 대표)	김지연 (프락시스 대표)
토론	A조 강원재 (영등포문화재단 대표) 고은아 (참교육학부모회) *불참/사면 대체 고일석 (전라남도교육청 장학사) 남우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사무관) 박소연 (안양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손동혁 (인천문화재단/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팀장) 정진아 (무용분야 예술강사) 정혜은 (경기서평초등학교 교사) 하장호 (예술인 소셜유니온 대표)	B조 김지연 (프락시스 대표) 김혜경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박만용 (용인성서중학교 교사) 박은주 (참교육학부모회 성남지회 사무국장) 백 령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교수) 신운섭 (연극분야 예술강사) 이동준 (가평교육지원청 장학사) 이상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청소년교육본부장) 이재영 (한국원대학교 문화예술교육대학원 교수)
진행원	이규석 (원장)	
문체부	이경직 (문화예술교육과장)	

전문가 라운드테이블로 진행된 학교분과 회의는 학교 관계자, 학부모, 예술강사, 지역정책연구 관계자와 분과위원 등 18명이 참여해 ‘지역 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현장 생태계 조성방안’과 ‘학교 현장 수요에 기반한 학교문화예술교육 다각화 방안’ 두 가지 의제를 놓고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의제에 따라 2개 조로 나누어 각각 조별 토론을 한 후, 다 같이 모여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성과와 한계

학교분과 원탁회의는 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면서 논의를 시작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은 2003년 문체부(당시 문화관광부)와 교육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면서 추진되었다. 2005년 문체부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제정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2008년에는 문체부와 교육부 간에 「문화예술·체육 교육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함으로써,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확

대되는 계기를 마련했고, 같은 해에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도 시작되었다. 이렇게 지난 15년간,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양적으로 확대되고 보편화되었으며 인식을 변화시키고 저변을 확장하였고, 전문가 풀도 확대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반면, 부처 간 병렬적인 정책으로 인한 중복,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구조적인 문제, 변화된 학교와 지역 현장에의 대응 미흡의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하장호 예술인 소셜유니온 대표는 ‘지역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현장 생태계 조성 방안’ 발제에서, 문체부와 교육부의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계획」에서 보이는 다른 비전과 관점이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개념, 국가 정책으로서의 방향 설정에서 현재의 난맥상을 지적하며, 학교문화예술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생태계 활성화와 내외부 구조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임을 강조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통합적 정책 수립과 실행체계 구축,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공론장 형성, 지역 중심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주체 형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김지연 프락시스 대표는 ‘학교 현장 수요에 기반한 학교문화예술교육 다각화 방안’ 발제에서 기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재구조화와 지역형 학교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의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재구조화에는 학교와 예술강사 간 협력,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유연성 마련, 담당 교사-담임교사-예술강사 간 평가 시스템 마련, 예술강사의 전문성 개발 및 활동 지원 등 예술강사가 자기 삶의 전문성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관점을 담았다.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지역 문화예술교육단체 육성-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사-예술교육가 협력 프로그램 연구 개발, 지역 환경을 고려한 학교 규모별 문화예술교육의 접근 다각화,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매개 인력 육성, 학교 교사 대상 문화예술교육 기획 역량 강화, 교육부 협력을 포함한 중앙-광역 단위 매개 인력 지원환경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역연계-현장 생태계 조성-다각화

이어진 토론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철학과 가치에 대한 문제의식부터 실제 문화예술교육 공론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요구까지 폭넓게 개진되었다. 기존의 정형화된 교육이 아니라 새롭게 부상한 주체들과의 지역 공문화 장을 통한 새로운 구조의 고민, 그들이 같이 만나는 거버넌스, 지역 중심의 이야기에서 프레임의 전환, 지역 주체 및 지역공동체와의 연계방안,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교사 역량 강화, 학교문화예술교육 코디네이터 등이 제안되었다. 지역형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학교 운영 관련해서 가평의 소규모 특수한 형태의 사례도 나누었다. 공급자 중심의 관점을 전환해 학생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점, 학교를 시설이 아닌 조직이자 결정권을 가진 곳으로 인식하는 것, 일자리 사업 수혜자가 아닌 문화예술교육 주체로서의 예술강사의 지위 변화 필요성, 지역에서 좀 더 자치적인 관계를 갖는 모델 등이 제안되었다.

종합토론

박소연 이제 종합토론을 시작하겠다. 우선 조별 토론에서 나왔던 내용을 공유하고 종합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하장호 A조에서는 교육이나 철학과 가치에 대한 문제의식부터 시작해서 실제 문화예술교육 공론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요구까지 폭넓게 이야기되었다. 강원재 대표님은 교육에 대한 철학을 짚어



주셨다. 아이들과 나누고 싶은 삶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새로운 삶의 모습들을 고민하고 기존의 정형화된 교육 방식이 아닌 고민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새롭게 태어난 주체들과 지역 공론장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새로운 구조와 체계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같이 만나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주셨다.

손동혁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팀장님은 따끔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문체부의 두 개의 프레임으로 나눠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역 중심으로 이야기하려면 교육부에서 내놓는 논의를 문체부 프레임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더 논의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지역 중심의 이야기에서 프레임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주셨다. 2004년 「창의한국」에서 제안했던 과제들이 지금 여전히 현실적으로 유효하고 작동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셨다.

고일석 장학사님은 실제로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어떻게 재구조화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지역 단위의 공동체와 연결하는 구조에 대한 것을 네 가지로 말씀해주셨다. 공동의 예술교육 프로젝트 수업, 마을공동체와 연계하는 방안 등 지역의 학교를 포함한 공간을 지역의 예술가와 연결하면서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교사의 성장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현재 학교 교육의 시스템 안에서 문화예술교육은 더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정된 인원으로는 현실적으로 고민을 깊게 할 수 없다고 말씀했다.

정진아 예술강사님은 학교예술교육이 학교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조건과 고민을 많이 말씀해주셨다. 아직까지 학교 안에서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인식 제고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수업이 연계성과 지속성을 가지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



화에 대해 필요성도 이야기해 주셨다. 예술강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무연수와 교급, 초·중·고등에 대한 보다 전문성을 갖는 고민도 있었다. 평가제도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며, 특수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원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다.

정혜은 교사님은 학교 교사로 예술교육을 같이하고 있는데, 지역자원의 공연장이나 인적자원에 대한 부분을 지역 네트워크나 플랫폼과 공유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말해주셨고,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사들의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얘기해 주셨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이 교사와 예술가가 학생과 같이하는 구조인데 교사의 경우 예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고 예술강사는 교육에 관한 정보력이 부족하므로 이를 매개해주는 코디네이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것으로 시작하여 현장에 대한 요구까지 이야기했는데, 상호토론을 통해 풀어야 할 지점이 있었다.

손동혁 팀장님은 문화예술교육에 관해 이야기할 때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집중되는 문제점, 지역 단위에서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구조가 어떻게 가능한지 현재의 구조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불가능한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현재 단순히 협력구조가 아니라 어떻게 구조를 새롭게 짤 수 있는지 등의 문제의식을 얘기해 주셨다.

김혜경 B조에서 토론한 내용도 A조와 일치되는 부분이 많았다. 먼저 박만용 교사님은 지원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강사와 콘텐츠 매칭 등 두 가지 방식을 제안하셨다. 지역형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 학교, 지역학교 프로젝트팀, 매개 인력 구성이 필요하며 학교에 사서교사가 배치된 것과 유사하게 문화예술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박은주 사무국장님은 학생이 학교문화예술교육 논의에서 빠져 있어 아쉽다는 점과 중고등학교는 입시 위주의 수업으로 인해 예술교육이 밀리는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다. 학교와 마을이 경계



를 넘나들고 학생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는 한계를 넘을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예술교육이 왜 필요한가와 관련해서 경험 자체에 대해 의미를 부여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다. 이동준 장학사님은 가평의 소규모 지역에서 일어나는 특수 형태들과 연극이 특화된 지역에서 연극교육을 통한 변화 사례들을 말씀해주셨다. 또한 예술강사 지원이나 교사 협력관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셨다. 프로젝트 형식 지원으로 팀을 구성해서 들어가는 방식, 소규모 마을의 경우 프로젝트화해서 마을 전체가 경기도 혁신지구처럼 운영될 수 있는,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고 소규모 학교, 소규모 마을에 특화된 예술 활동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다.

백령 교수님은 학교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말씀을 하셨다. 학교는 명확한 방향과 철학을 가진 조직이다. 이러한 학교를 움직이는 운영 주체는 누구인가? 문화예술 예산이 예술강사라는 하나의 통로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방식이 맞느냐는 말씀을 하셨다. 마을 중심의 프로젝트 활동, 순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한다. 사실 이런 논의가 여러 차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인 건 학교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부족했던 탓인 것 같다. 학교도 예술가와 함께 예술강사 중심의 지원이 변화될 수 있는, 마을 중심의 예술교육 활동 구조에 주목해야한다. 이런 모든 것이 선순환 구조가 필요한 지점이며, 이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였다.

신운섭 예술강사님은 학교는 왜 믿지 못할 곳이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은 자생적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것에 숨통을 틀 수 있는 역할이 예술강사라고 했다. 하지만 예술강사의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이것이 정답인가? 경력을 갖추고 많은 경험을 가진 예술강사가 할 수 있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 고용의 안정을 원하면서 안정적인 경우에 따라오는 매너리즘 등 동전의 양면 같은 딜레마를 이야기하셨다. 문화예술교육사의 경우도 대학 졸업 등의 여러 가지 조건이 정말 문화예술교육의 조건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도 같이 해주셨다.

이재영 교수님은 학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시점이 되었으며, 예술강사의 지위가 지금의 프레임에서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학교 예술강사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강사’라는 명칭과 시간 운영에 대한 제한적 측면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예술강사 지위 변화가 가장 절실하고, 단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학교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한 점점들, 조금 더 마을과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실행될 수 있는 시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예술강사, 교사, 마을이 협력적 구조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 각각의 계층에서 각각의 말을 했을 때 분절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변화를 가로막는 복병들

박소연 오늘 이야기에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사실 이 고민은 오래전부터 나왔고 시도도 했지만 어려워져 변화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이다. 지역을 중심으로 교사도 문화예술교육의 철학과 전문성을 가지고 기획을 하고, 외부의 예술강사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하고 시설도 열려 있고, 각각의 주체가 모여 학습을 하면서 계속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이미지들이 그려진다. 실제로도 이런 일들이 가능할 것도 같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 마주할 수 있는 복병은 무엇인지 짚어보면 좋을 것 같다. 실제로 학교에서 그런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할 때 교사의 연수는 가능한지, 학생들이 학교 밖의 시설로 나올 수 있는지, 나올 수 있다면 차량 지원이 가능한 형태인지, 협력 구조가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닥칠 수 있는 어려움과 헤쳐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함께 논의 해주시면 좀 더 깊은 논의로 들어가겠다.

고일석 가장 중요한 과제일 수 있는데, 학교 안에 있는 교사들이 변화한 시대의 교육적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본인의 교과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 반성을 해야 한다. 많은 영역에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고, 박소연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림을 그려내기 위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가 교사들의 인식과 교사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학교 밖에서 아무리 좋은 콘텐츠와 좋은 예술강사를



양성해서 학교에 보내주려고 해도 학교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끝나는 상황이다. 교사들이 불편하면 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다. 그 부분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교사들의 역량을 키워서 학교 밖에 있는 또 다른 주체와 동등하게 협업하고 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학교 밖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지역센터나 마을 학교가 학교 공간과 같은 유기적인 공간처럼 활용될 수 있도록 버스가 바로 지원이 되어야 할 수 있는데, 매번 교사들이 버스 계약을 해야 하고 만약 사고가 나면 모든 것을 교사가 책임져야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지자체가 시스템을 만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전남교육청의 경우 지역 교육청에 꽤 많은 스쿨버스가 있다. 그 버스들을 연계 교육이 가능한 곳에 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면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 훨씬 더 완성되는 쪽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만용 변화를 꾀한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좋겠다. 학교가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연수의 문제가 아니다. 연수받을 의지도 없다. 교사를 탓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보면 지금 학교문화예술교육이 만나고 있는 지점이 권력과 이익이 부딪치는 지점이다. 누구든 권력과 이익을 손해 보면서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교사는 피곤할 일을 원치 않고, 예술강사도 학교가 변하지 않는데 내가 굳이 할 필요 있나 하면서 변화를 원치 않는 상태에 녹아들어 10년 이상 왔다. 좋은 이야기 한다고 바뀔 것은 아니다. 가능성은 열려 있고 위기는 다가오고 있다. 위기와 공간과 상황, 그 지점에서 학교가 신뢰받지 못하는 것과 함께 문체부의 사업은 신뢰받고 있는가? 이 사업이 12년이 되어가는데 과연 이대로 맞는가 하는 이야기는 한참 동안 들어 왔다. 어쩔 수 없이 끌고 오는 사업이기도 하다. 우린 다 알면서 그 위에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변화해야 하는 지점에 서 있다. 변화시켜야 하는 방향에서 교사가 연수를 받아야 한다. 지역에서 모이면 뭐가 되겠지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익이 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교사에게 수당 등의 혜택을 주고, 열정적인 소수 교사 중심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게 하는 등의 모범 사례를 지역별로 단 하나만이라도 개발하고

만들어 성공 사례가 보급되게 한다든지, 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다면, 학교도 변화되고 문체부도 변화되어야 한다. 이 점은 예술강사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은 손해를 보고 어떤 부분은 이익을 보면서 변화를 꾀해야 하지 않을까. 오늘 논의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학교로 강사가 들어와 역할을 하거나 학교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있었다. 리모델링 사업은 단순히 공간을 구성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와 그 일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익을 가지고 갈 것인가 놓치고 갈 것인가이다.

김지연 학교는 이것을 필요로 할까에 대해서 양평의 한 교장 선생님과 얘기를 나눈적이 있다. 양평에는 40개의 학교밖에 없는데, 학교를 변화시키고 싶은 곳은 일부일 것이다. 그중에는 누군가가 변화시켜주기를 원하는 학교도 있고, 강사를 원하는 학교 등 자기 필요에 따라 서너 가지 유형이 세팅되다 보면 한 단계 나아가는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학교의 사례를 통해 기초 단위 안에서 40개 학교 중 10개 학교가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이 중요하다고 보는 게, 문체부에서 사업을 하고 내부에서만 공유하면 다른 학교가 볼 수 있는 환경을 못 만든다. 지역 교육청에서 시범지역 안의 학교 유형에 따른 다양한 사례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문체부의 운영 방식은 중앙 중심으로 각각을 진행해 와서 사례들이 덜 모이는 것 같다.

박은주 학교문화예술교육 논의 안에 주요 주체인 학생이 없다. 학부모도 교육의 참 주체인데 학부모도 없다. 그런 입장에서 제안하고 싶다. 학교 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의 목표가 전 생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학교에서는 교육부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 문체부는 지원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고, 학생이 졸업하고 어른이 되면 문체부 소관의 활동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업하여 평생교육으로 지역과 연계를 해야 한다. 이렇게 폭넓게 보면 앞으로 계속 학교는 규모가 줄어들에 따라서 교사도 남을 것이고 예술강사도 남을 것이다. 그 방안으로 지역과 마을이 협의한다면 성인 대상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고, 문화예술의 중요성도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주체가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결부되어 있고, 가장 큰 틀은 두 부처 간의 조율일 것이다. 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입시교육에 찌들어 있는 학부모들을 만나다가 접한 문화예술교육은 약간 생소하지만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서 케이팝(K-POP)으로 해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중간 매개 역할에 학부모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작년에 가장 핫한 단어가 ‘학교 자치’였다. 미래학교가 화두였는데 이 단어를 빼고 자꾸 문화예술로만 좁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면 좋겠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주체와 동력

박소연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다. 핵심적인 이해관계자는 누구이고 고려하지 못한 이해관계는 무엇일까? 왜 움직이지 못했을까 하는 것과 왜 움직이지 않을까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었으면 한다.

박만용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자기 일이 아닌데 자기 일처럼 되어온 것이다. 교사들이 필요성을 느끼면 달라진다. 혁신학교 관련해서 영향력을 발휘한 사례는 교사들 자신도 학교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 동력이 실제로 통용된 것이라고 본다. 그 선상에서 문화예술교육도 학교를

살리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는 의지가 있는 교사들이 활동의 주체로 나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의지가 있는 교사들을 보지 못했다. 좋은 구호와 외침만으로는 바뀔 수 없다. 그래서 하나의 상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몇몇 시범사례로 그리는 상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예컨대 공간 리모델링 사업도 엄청난 돈이 투자되었지만 결국 죽은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만약 그런 사업도 다른 사업과 연계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문체부도 이 사업의 변화 주체가 되려면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저항도 많겠지만, 그 저항을 긍정적으로 보아 좀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면 동의하고 함께 가지 않을까? 현장에서 더 훌륭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강원재 어떤 일을 할 때 합의의 수준이 차이가 나면 그 일이 되어가는 방식도 굉장히 다를 것이라 생각이 든다. 지금의 학교 연계 문화예술교육을 개선하는 수준으로 합의를 한다면 10년 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이다. 변화가 절실하다면 논의의 수준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절실한 사람이 일하는 것이고, 계속하는 사람이 변화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한다. 해주면 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사람의 니즈는 이 테이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들에게는 굳이 바꿀 이유가 없는 것이다. 변화를 절실히 갈구하는 사람을 발굴하고 초대해서 그들과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것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이뤄지는 일이 아니다. 길게 보고 계속 제도 안에서 가져가야 하는 일들이다. 우리의 니즈를 그 제도 안에서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제도 안의 일부로 어떻게 시작하게 하는가를 고민하는 것, 그 시안만이라도 담아낼 수 있다면 5년 정도 이후의 모습을 상상하며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동준 저희가 합의한 것은 기존 학교 예술강사를 장르 중심으로 학교에 파견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이 깊었고, 그 대안으로 학교 안에서 문화예술을 코디네이팅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노동법에 관한 것도 있다. 학교에서 필요한 인력도 무기계약직이 될까 봐 활용을 못 하는 부분도 있다. 차후에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고, 일단 중요한 것은 시범사례가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시범사례는 학교 단위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단위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림을 그리고 인력을 배치하고, 그러면서 작은 지역 단위에서 지역 전체의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체부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가장 많은 예산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만 쓰였다면 이제는 재구조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박만용 만약 사업 기획 단위를 교육지원청으로 하더라도 담당자는 공무원이 아니었으면 한다. 아이디어 단계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예술가들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꿈을 꿀 수 있다. 현재는 예술강사 이상의 꿈을 실현하지 못한다. 그것이 좋아서 꾸는 것은 아니다. 그 이상의 꿈은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안타깝다.

이동준 핵심은 예술가들이 지역에 거점을 마련해서 상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그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지역에 거점을 마련해야 젊은 층도 들어오고 인구도 늘지 않을까. 소박한 마음이지만 문화예술을 통해서도 지역을 살려내는 사례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거기에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연령층, 노인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등이 있을 수 있다. 가평에는 아직 문화재단이 없다.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지자체에 문화재단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서 할 일은 예술가들을 모아서 학교, 노인 등 다양한 문화에

술교육을 하는 것이지 않을까.

누구도 빠짐없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하장호 이미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정책적인 비판은 지난 몇 년간 학교문화예술교육이 곧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인 것처럼 되어온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술강사 풀이 만들어졌고 이들이 주요 주체로 성장했음을 인정해줘야 하는데, 그냥 사업의 수혜자로만 논의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미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700명 중 70%가 넘는다. 자신이 문화예술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지역에도 문화예술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룹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예술교육은 이제 예술가들의 일자리 선택지 정도로서의 풀이 아니고, 나름 자기 전문성으로 커리큘럼과 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구조로 가고 있다. 전문성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본다. 학교문화교육이라는 시스템 안에 예술강사들이 책임지는 주체로서 어떻게 논의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인가를 얘기해야 하는데, 항상 논의 밖으로 밀려난다. 지난 몇 년간 정책 안에서 예술강사를 그런 식으로 대해왔다. 그것이 수만 가지 문제를 야기했다. 가령 사용 주체가 누구인가를 정리하는 데 15년이 걸렸다. 15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과정을 평가하지 않고 당면했던 상황들의 불편함만으로 이야기하면 답이 안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강사 고용 주체를 진흥원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진흥원으로 일원화해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 같이 고민하자. 제도를 개선하고, 평가받고, 신규 인력들도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비해야 한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후의 논의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교사가 남게 되는 문제는 교사들만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고민하면 안 된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참여 주체들의 가치 전환이 필요하고 모두 생태계의 주체이다. 학부모와 학생이 이 구조에서 빠진 것은 말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예술강사와 교사가 빠지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누구를 덜어냄으로써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이 사람들이 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논의를 풀어야 한다. 정책사업으로 단순화되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재영 저도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학교에서 지금 문화예술교육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책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의문이다. 대부분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학교에서 책임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예술강사의 지위가 학교예술교육에 종속된 구조로 편성되어 있고, 그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학교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책임권을 갖는다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인식을 바꾸지 못하면 결국 교사와 예술강사의 불신과 문제부와 교육부 사이의 힘든 줄다리기가 될 것이다.

백 령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예술강사 사업이 예산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시작 당시에는 학교 현장을 바꾸기 위한 것이었다. 그때는 교사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했다. 교사가 할 수 없는 예술가의 전문성으로 학교 현장을 바꾸고 삶의 질을 바꾸기 위해 시작했는데 학교에 들어가기에 너무 어려웠다. 학교는 교육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교육과정 안에서 예술강사를 학교에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 지금 국악교사의 문제나 무용의 문제라든가 교과 편성의 문제와도 같다. 교육 환경과 사회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 처음에는 삶의 질을 이야기했지만, 최근에는 포용, 창의, 4차 산업에 관한 문제 등을 예술가들이 계속 던지면서 학교와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예술강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20년을 기반으로 다음 단계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4천 명의 예술강사도 중요하지만 1만6천 명의 문화예술교육사들도 중요하다. 예술이 학교와 만나게 할 수 있는 지원과 협업의 문제인 것이지 누구를 폄하하거나 어떻게 하자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제가 고민하는 것은 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의 탈출구와 도약의 단계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지점이다. 학교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시설’로만 생각했는데, 실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었다. 예술가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교과를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창의적 콘텐츠를 가지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가, 지역에서 예술가로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교사에게 연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담론이 있어야 예술가들이 학교에 문을 두드릴 수 있고, 또 학교 안에서도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 누군가는 서로 만나는 첫 단추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너무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일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 작은 지역의 작은 사례라도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면 파급력이 클 것이다. 그 안에는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신운섭 선례를 만들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하장호 대표님 말씀에 동의하고, 김지연 대표님이 발제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 해봤으면 좋겠다. 진흥원 꿈다락 사업을 지역의 독립영화협회와 함께 진행했는데, 학교 안에서만은 도저히 불가능이었다. 사업은 잘해서 성과도 있고 평가도 나쁘지 않았다. 이걸 어떻게 학교 안으로 들여갈 수 있을까 생각도 해봤지만 사실상 불가능했다. 각론으로 얘기하면 학교에 작가들이 들어가 레지던스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학교마다 빈 공간이 많은데 그 안에 들어가서 뭐라도 하라는 것이다. 제가 학교 밖으로 뺀 아이들은 욕구가 있는 아이들이었지만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원해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시켜서 참여하게 된다. 모든 사람에게 연극이 좋은 것은 아니다. 아이들 주변에 어떤 사람을 배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성남에서 실험한 적이 있다. 아이들과 어울려 놀지 않고 예술가끼리 재미있는 것을 하고 놀자. 그렇게 아이들을 그냥 두면 아이들이 호기심에 다가온다.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도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곤란하다. 학교와 예술가들은 긴장 관계가 필요하다. 아이들은 낯선 것을 볼 필요가 있다.

고일석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학교 밖에서 책임진다는 발상으로 협업 관계를 만들거나 학생들의 역량을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국가가 공교육 시스템 안에 예술 교과를 넣은 이유는 학교가 책임지라고 하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너희들이 못하니 내가 가져가서 할게” 이러면 결국은 세력 싸움밖에 안 된다. 사실은 학교 안에 있는 예술 교사도 다른 교과 교사에 비해 주도권이 미미하다. 속된 말로 기타 교과 교사로 분류하고 있다. 주도권 싸움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학교 안에서 문화예술교육의 혜택을 받는 학생에게 내실 있는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학교 안에 있는 교사와 예술강사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풀릴 것 같다.

학교 안과 밖 : 지역, 자치, 협력 모델 만들기

하장호 저는 지역 활동도 하고 있다. 지역 네트워크도 만들고 지역 단위로 활동을 하고 있다. 2015년부터 서울교육청과 해운 푸른누리마을학교 사업이 있다. 동구여중과 함께했었는데 마을 전체를 학교와 같이 연계했다. 성북에는 예술가가 많이 사는데 프로젝트 매니저를 예술가가 맡아 3년 동안 사업

을 진행했다. 학교를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했다. 스태프 영역까지 직업체함과 예술을 결합하여 이행하는 형태로 했다. 전문 예술가들을 따로 섭외하고 매칭해서 1년간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진행했다. 최종적으로 학생 스태프와 학생 배우들이 하나의 작품을 올렸다. 학교 안에서는 어려웠는데 밖에 있는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결했더니 나름 성과가 좋았다. 학부모들도 만족도가 높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3년 뒤에 푸른누리마을학교에 참여했던 지역 예술가, 교사, 교육 주체들이 지역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사업 종료 후 지금까지 네트워크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완전히 좋은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이라는 것을 놓고 이야기했을 때 기존의 사업 틀만으로 지역을 구조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역을 놓고 조금 더 자치적인 관계를 갖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교사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없는 것은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서일 것이다. 예술강사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에서 결정권이 없다. 학교 안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그런 것들을 지역과 매개하면 각 주체 간의 협업 관점에서 자기 역량을 돌아보게 된다. 저 역시 예술강사들이 지금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서 책임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그것을 고민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를 위해서는 역량 있는 분들이 들어와 더 결정하고 더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수업하는 것 외에는 별로 역할이 없다. 이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의 견고한 구조보다는 지역이라는 좀 더 말랑말랑한 구조 안에서 협업과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보면 좋겠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화가 얘기되어야 할 것 같다.

박은주 미래에 가장 바뀔 게 학교 구조 건물일지도 모른다. 지금은 대부분 직사각형의 콘크리트 건물인데 그 건물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 학교 자체의 디자인을 바꾸는 것이다. 딱딱한 직사각형 모양을 보면 아이들의 사고도 그렇게 정형화될 수밖에 없다. 사고의 유연성이 공간이 주는 의미들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당장에 학교를 허물고 할 수는 없으니 지역을 좀 넓게, 지역 전체를 학교로 보는 생각이다. 미래의 학교를 이야기할 때 저는 공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다.

정혜은 저는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와 예술강사와 교사를 접하고 있는 교집합적인 위치에 있다. 이런 것들이 다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면 너무나 행복한 학교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금 교실에서 변화되거나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것은 기획자 양성, 시범사례, 레지던스, 강사 이상의 꿈 등을 하나의 맵으로 그려주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하다. 예술가-교사, 교사-예술가 양성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 뜻이 있는 교사에게 직분이나 권한을 줘서 교사가 속해 있는 지역을 관리해서 예술가와 학교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서 파견해주는 것도 좋겠다. 교사로서 열정 페이지로 일을 많이 했는데, 교사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익으로 해외연수나 링컨센터 파견, 국내 예술단체 파견 등을 통해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등의 현실적인 것을 지원해주었으면 한다. 김지연 대표님의 이야기에 적극 공감하며, 저라도 구체화해서 시범사례를 만들어 시행해보고 싶다.

공교육과 문화예술의 접점에서, 협력적 주체로

이규석 문체부나 진흥원의 중요하고 무거운 이슈 중 하나가 학교문화예술교육이다. 공교육과 문화예술이 만나는 접점에서 시작되는 것이라 기본적으로 협력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예술 교과 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술에 대한 비용의 기회, 학습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기존 예술 교과 교육이 차지하

는 위치가 있고, 반면 예술가이면서 강사인 예술강사들이 학교에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술에 대한 체험이다. 예술의 본질이 무엇이고 예술가의 시선으로 삶과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체험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술 교과 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은 각자의 역할과 영역이 분명히 있다. 어느 하나가 무엇을 대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본원적인 것이 협력적 주체로서 만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 방향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혁신 모델을 만들어나갈 수 있게끔 현실적으로 실행과 실천이 가능한 최소한의 지역 모델을 고민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경직 많은 분들이 고민해 주셨는데 이 시점에서 작은 것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2003년도에 시작할 때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고 그때 학교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도 없었고 가치도 없었던 시절이었다. 일정 부분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1,3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학교에 투자할 만큼 문제부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고 그만큼의 한계도, 성과도 있었다. 절실하면 바뀔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는 절실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로서도 반성을 많이 한다. 예술 교과 교육과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양립하지 않고 함께 가야 하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교육부와 함께 풀어야 하는 문제이다. 교육부나 문체부 어느 일방이 주도적으로 가져갈 수 없는 문제이다. 그 지점에서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와 각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공론화 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좋은 실행 방안들이 나와서 장단기적으로 실천이 되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문체부는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교육부도 정말 감사하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신 것을 수렴해서 교육부와 조만간 협의를 시작하려고 한다. 좋은 협업과제가 나오면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박소연 학교문화예술교육이 변화할 기회가 지금이라고 생각될 만큼 의지가 보이고 무르익었다는 생각이 든다. 노력한다고 한 번에 바뀌지는 않고 중장기적으로 5~10년 천천히 바뀌어갈 것이니 그사이에 너무 쉽게 실망하거나 지치지 마시기 바란다. 오늘 나온 것을 가지고 구체화할 수 있는 자리를 여러 번 마련할 테니 그때마다 논의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

사회분과

사회문화예술교육 의제발굴을 위한 전문가 원탁회의

사회분과는 지역분권이 중요하게 연계되는 현재성을 담아, 지역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사회분과 공론화 원탁회의는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서울, 대전, 부산, 광주에서 진행된 원탁회의에는 8명의 분과위원과 지역별 10여 명의 기관 관계자와 문화예술단체 등 40명의 전문가와 함께했다.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체성과 방향성, 지원구조 개편 방안

사회분과는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체성과 방향성 관련 4가지 이슈’와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구조 개편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원탁회의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정민룡 광주 북구문화의집 관장이 정체성과 방향성에 관해 도출한 4개의 이슈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념,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접근방법론, 생활문화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관계, 사회적 변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실천 방안이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정의가 소재와 영역만을 다루고 있어서, 시대적 상황과 환경에 맞게 철학과 가치를 담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전 생애 동안 경험하는 예술 배움, 시민의 기본 문화 권리, 사회갈등 해소 등의 관점에서 개념적 정의를 제안했다. 접근방법론의 측면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이 그간 특정 대상·시간·시설을 중심으로 지원한 단일구조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했다. 한편, 생활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모호한 경계는 현장에 혼란을 야기한다. 진흥원은 ‘교육’과 ‘활동’으로 정책영역을 구분하고 있는데, 넓은 의미의 교육을 활동의 범위까지 확장할 때 문화예술교육이 생활문화의 일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생활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의 연계, 조정, 통합을 위한 방안과 사회문화 환경변화를 반영한 문화예술교육의 실천 방안, 사회정책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 사회적 변화를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필요조건 등을 토론 주제로 제안했다.

김재순 진흥원 시민교육본부장은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구조 개편 방안’ 논의를 위해 진흥원의 현행 사업구조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대상·방식·목적에 따른 나열식 사업 분류, 특정 계층이나 시설 중심으로 정해진 지원 대상, 특정 장르나 유형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업 내용, 공모와 위탁 방식이 혼재되어 있는 지원방식, 1년 단위 지원, 전담인력 지원이 거의 없이 강사비·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별 자체 기획에 따른 지원 절차의 복잡성 등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했다. 또한 제한적이고 경직된 지원 사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세 가지 방향에서 제안하였다. : ▲누구나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관점의 사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 ▲대상별·계층별 비문화시설 대상 1년 단위 지원방식에서 생활권 단위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권 단위 지원체계 구축’ 방안, ▲1년 단위 공모방

식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의존하는 취약한 상황을 개선하고 현장 활동가와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생태계 관점의 지원’ 방식이다.

권역별로 진행된 공론의 장은 지역마다 환경과 현장 여건이 달라 의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개선 방안을 위한 제안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대체로 현재의 지원사업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한 문제 인식은 다르지 않았다.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공통의 상을 나누고, 중앙-광역-지역-현장 각각의 역할을 고민해보는 자리였다.

[사회분과 권역별 원탁회의 일시 · 장소]

구분	일시	장소
수도권	'20.1.16.(목)	서울 LW컨벤션 중회의실
충청권	'20.1.17.(금)	대전 스파크플로우 스튜디오01룸
경상권	'20.1.20.(월)	부산 부산역KTX 530호 회의실
전라권	'20.1.21.(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중소회의실 307호

■ 수도권

일시	2020.1.16.(목) 14:00~16:30	
장소	서울 LW컨벤션 중회의실	
사회	김재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시민교육본부장)	
발제	정민룡 (광주 북구문화의집 관장)	김재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시민교육본부장)
토론	강승진 (춘천시문화재단 정책기획팀 팀장)	고주영 (공연예술 독립프로듀서)
	권오현 (극단 차악무대/강원예술교육연구소 대표)	윤종필 (CCS525 대표)
	이호순 (상상놀이터 기획자)	임재춘 (문화기획자, 생활적정랩 빼꼼 대표)
	좌동엽 (장애인문화예술판 대표)	제환정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최영화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분과위원	백현주 (수원평생학습관 기획실장)	최보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문체부	박효진 (문화예술교육과 사무관, 분과위원)	

사회분과 수도권 원탁회의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 공공기관 관계자와 지역 문화예술단체 대표, 기획자, 그리고 분과위원이 함께했다.

좌동엽 장애인문화예술판 대표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장애인 교육은 의무교육이지만 소외되는 경우가 있어 평등권이나 향유권으로 권리적인 개념을 들어가기로 제안했다. 문화예술교육의 접근방법론과 관련해서는 문화예술교육에서 참여자들과 어떤 관계성을 맺었는지, 보이지 않는 커리큘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강사의 처우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했다.

제환정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는 예술가 1인이 시설로 투입되는 방식은 각자의 역량에 의존하게 되고 예술가 역시 계속 자기 증명을 해야 하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며 허브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어젠다가 현장의 예술가들과 제대로 공유되고 있는지, 평가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지향과 가치가 구체화·현실화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종필 CCS525 대표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범주는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까지 모두 보는 것에 동의하며,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을 일괄적인 혜택의 수준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사회적 배제를 겪는 대상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가 별도로 구분되어 정책이 적용되는 것은 정책적 효율성에서 떨어진다고 보았다. 포용적인 관점에서 경력단체와 신규단체에 대해 공모방식에서의 동일 기준 적용에 대한 개선, 생활권 단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한 장소에서의 연속성, 생태적 관점에서 강사비의 불균형 개선 등을 제안했다.

예술교육 vs 문화교육

최영화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술교육과 문화교육의 지향점이 융합되어야 하고,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민주시민 양성교육으로 개념을 정의했다. 조작적 정의에서 장소에 생활문화시설을 포함시켜, 문화시설 외 기타 사회복지시설 연계를 위한 사업추진체계 재구성의 필요성을 얘기했다. 생활문화와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해서는 목적은 구분하되 생활문화 공간이나 문화예술교육 인력 연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호순 상상놀이터 기획자는 종이접기 프로그램을 예로 들며 예술적인 종이접기 방법을 알려주는 것인지, 종이접기를 통해 소통하고 관계 맺기인지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관점을 설명했다. 문화예술교육

이 생활문화의 일환이 될 수 있고, 생활문화 속에 사회문화예술교육이 포함되며,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생활문화동아리가 발화하는 방식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평가틀을 만들고 척도를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권오현 극단 치악무대/강원예술교육연구소 대표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이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넓힌다면 인력과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질문하며, 모두가 문화예술교육을 향유하기 위해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특정 분야, 장르에 대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지속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금이 단체를 넘어 개인으로 확대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임재춘 생활적정랩 빼꼼 대표는 학교는 사회의 일부분이므로 학교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분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았다. 공공문화시설이 현장 파트너를 시설 중심으로 사고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시설 바깥까지 포용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생활문화는 자기 주도성과 자기 조직화의 문제이고, 문화예술교육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접근성과 수월성이 문제해결 지점이라고 보았다. 한편, 누구의 관점에서 수요를 언어화할 것인가 문제를 제기했다. 문화예술교육의 비효율성, 반가성비 등을 기재부에서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강승진 춘천문화재단 정책기획팀 팀장은 문화예술교육의 범주를 나누고 구분 짓기보다는 주체를 확장해가는 방식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정의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지역 현장을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초연결 사회에서도 피할 수 없는 외로움을 시민들의 욕망으로부터 출발한 교육 설계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고주영 공연예술 독립프로듀서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예술교육과 예술창작이 다른 영역으로 구분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예술교육과 예술창작 주체가 전혀 다른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것은 효과적인 방식이 아니라고 보고, 전문예술가만이 창작의 주체가 된다는 관점이 사라지고 있는 최근 예술창작 경향을 짚었다. 시민단체와 예술가가 협업하는 방식이 다양한데, 그 과정은 교육과 비슷하지만 창작이라 불리고 있다면서, 예술창작과 예술교육이 유연하게 넘나들 수 있는 인식개선과 제도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중 합 토 론

김재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의제발굴을 위한 발제와 각자 준비한 토론 내용을 들었다. 지금부터 종합토론으로 이어가겠다.

권오현 사업에서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기관, 단체, 지역에 있는 복지관, 협회 등은 공공성을 확보할 수도 있고, 단체의 역량이나 활동기준을 볼 수도 있겠지만, 개인이 예술교육의 주체적인 역할로서 사업을 진행할 방안도 필요하다. 젊은 층은 협회나 단체에 속하기보다는 혼자 활동하는 경향이 많다. 또 단체나 협회에 속하는 순간 예술에 대해 제한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는, 사업 예산 집행과 정산의 제한이다. 사업비에서 프로그램 인건비, 운영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참여자들이 자기가 배우고 싶은 분야, 예를 들면 피아노를 배우고 싶고, 연극을 배우는 데는 전혀 책정이 안 된다. 단지 프로그램 발표회 때 포스터를 제작하는 정도가 가능하다. 지역이나 중앙에서는 전체적인 통합 홍보를 하고 있나? 방과 후 청소년 교육, 명예교사, 군부대 사회문화예술교육 같은 사업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흥원에서 어떤 장르의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이 중요하지, 사업을 알고 싶어 하

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서 진흥원의 역할이 필요하다.

좌동엽 예산 구조를 깨지 않으면 창의적인 교육개혁은 불가능하다. 다른 공간에서의 활동도 유의미한데 예산 문제 때문에 복지관에서만 진행해야 하는 구조이다. 아동은 간식이 중요한데, 간식비 책정이 어렵다. 사업이 수요자의 니즈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한 수업에 강사 한 사람만 들어가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기관에 강사 몇 명이 포진되어 있다면 나눠서 수업을 할 수도 있고, 분반했다가 합반하는 등 유연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할 수 있다. 현재의 예산 구조가 이런 유연함을 제한한다.

윤종필 가용한 항목이 정해져 있다. 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하면 강사비와 재료비, 그 외에도 필요한 항목이 있는데 예산 구조 때문에 지역특성화 사업 역시 자유롭게 하려 해도 결국 교육의 형태로 갈 수밖에 없고, 프로그램 자체가 경직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캠프는 5시간밖에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함께 캠프를 갔는데 강사는 5시간만 진행하고 돌아가야 하는 건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꿈다락 사업만 해도 벌써 10년이 되었는데 변하지 않는다. 지역에서는 경력단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신규단체가 생겨난다. 그런데 지원사업은 경력단체든 신규단체든 매년 똑같은 프레임에서 시작해야 한다. 경력단체의 노하우와 경험이 인정되지 않고, 형평성이나 공정성, 투명성이라는 잣대로 매년 똑같이 재단한다. 새로운 것을 굳이 연구해야 할 이유가 없는, 지역 차원에서 보면 하향 평준화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강사비는 가장 첨예한 문제이다. 인건비 기준이 공모사업을 받는 주강사도 4만 3천 원, 학교 예술강사도 4만 3천 원이다. 업무량만 따져도 지원사업에서는 기획도 하고 정산도 하고 운영도 해야 한다. 자기 공간이라면 전기세와 공간비도 지출된다. 반면, 학교 예술강사는 모집관리의 부담이 없고 교육만 진행하면 된다. 지역 공모로 진행할 경우, 이런 부분이 섬세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지원사업을 받으면 정산도 e나라도움 시스템을 써야 한다. 지원사업을 받으면 마치 도둑 취급을 받는 느낌이 든다. 증빙도 과정보다 까다롭게 만들어 놓았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을 자꾸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지역특성화 사업이나 꿈다락 사업 등 전국으로 확대된 사업들은 지역특성화로 안착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 정책 사업이다. 1년 단위로 감시하듯이 진행되면 결국 그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는 장기간 진행되어온 이 사업에 개선이 필요하다.

‘예술가다움’이 필요하다

제한정 문화예술은 공공재일 수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술가의 노동력까지 공공재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 보상은 시간제로 매기고, 보조강사면 그마저 50%로 줄어든다. 그들이 노동을 50%만 하는 게 아닌데, 강사인건비 수준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또 예술가가 파견되는 방식이고 대상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 어떤 때는 예술가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예술가에게 교육이나 치유를 당연하게 기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현장에 가는 예술가들의 피로도를 높인다. 예술대학에서 예술교육을 하지만, 사실상 예술교육을 하지 않는다. 대부분 자신이 엘리트 교육을 받아왔고, 엘리트 교육을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 위주로 예술교육이 예술가들에게 진행되었다. 그래서 오히려 일반 사회에서 실제 관객을 만나고, 그들과 공감하고 설득하고, 그들을 타자화하지 않고 함께 활동할 수 있으려면 예술교육자보다는 ‘예술가다움’이 있을 때 더 가능하다. 주요 의제 중에 매해 예술가와의 파트너십이나 오디션을 하는 것은 탁월함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기존에 누적된 예술강사들의 탁월함은 어떻게 계속해서 개발할 것인가? 탁월한 예술가들이 진입할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보상과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가? 앞으로 5년, 10년은 예술가와의 파트너십과 동기부여 등 중요한 한 주체로서 매개자이자 촉진자로서 이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어떤 사업은 수업이 마무리되는 학기 말에도 교사가 자신의 역할을 규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사업을 열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강승진 저는 진흥원의 직원 평가제도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흥원의 평가 시스템은 잘 모르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처럼 BSC 기반의 정량적 수치에 의한 평가를 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직의 평가체계는 평가를 받는 구성원의 사고체계와 일에 영향을 미친다. 진흥원의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나갈 것인가도 중요한 이슈이다. 기존에 숫자로 재단하는 방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른 부분도 개선하기 어렵다. 평가방식에 협업의 구조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면 늘 현장을 만나는 방식이 자기가 필요로 하고 자기의 성과 목표에 필요한 부분만 진흥원에 불러서 만나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방식으로 패턴화된다. 이 구조를 깨고 직접 현장을 찾아내고 진단하고 함께 하는 모델을 만들어가는 구성원이 우수한 역량을 가진 직원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

김재순 중요한 이야기이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정량적 실적이 최소한이라고 말하지만, 최소한이 최대한이다. 최대한이 채워져야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는 기관의 평가, 직원의 평가가 결국 여기에 매몰되게 만든다. 저희 안에서도 중요한 이슈이다.

임재춘 문화예술교육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 두 가지다. 하나는 전달체계의 문제이다. 지금 이러한



시간도 이 부분을 해소하는 노력인 것 같다. 다른 하나는 앞서도 지적했던 예산 구조의 문제이다. 예산편성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끼리의 말 잔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과연 기재부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고민을 공유할 수 있을까. 지원기관인 문화재단의 역량도 점검해 봐야 한다. 실제로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행하는 행위 주체들이 있고, 행정 주체들이 있다. 직접 참여하는 수요 주체도 있다. 이 세 주체의 욕구나 열망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의미는 다양하게 펼쳐진다. 예를 들면, 문화센터에서 참가자들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자꾸 “너의 이야기를 해보라”고 해서 부담스러워한다. 학부모 역시 예술강사가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우리는 왜 그런 이야기에 흔들리는 걸까. 이런 주체들이 각각 어떤 역량을 전제로 이야기나 실행을 경험해야 문화예술교육이 발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우리는 시민의 문화적 인식과 역량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데려오는 이들은 왜 엄마여야 하는가 등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어야 현장이 바뀐다. 예술가나 예술강사, 기획자, 교사 등 전문인력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기존 틀 안에서 자기 고민이나 자기발전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구조들을 혁신할 수 있는 요소들은 무엇일까? 행정 주체의 경우 인적 시스템은 유연해서,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이들이 문화예술교육을 질적으로 사고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한 과제이다. 결국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 자기 현장에서 문제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생활권 단위 지원체계에서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시설 등 문화기반시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이 계속사업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결국 단체의 기획자들이 떠안게 된다. 문화기반시설은 예술강사의 몫도 아니고 현장 문화기획자의 몫도 아니다. 공공기관으로서 문화기반시설은 각자 시설의 정체성에 맞춰 퍼블릭 도메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



민해야 한다. 이것은 사업 건별 접근을 넘어서는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안에서 ‘공모’라는 방식은 대단히 경쟁적이고 문제를 유발한다. 작은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다른 방식의 사업참여 제안이 필요하다. 공모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지역의 네트워크와 협업에 기반한 역할분담 방식 등 호환적이고 호혜적인 관계가 사업 안에서 생겨나야 생태계가 건강해진다.

‘공모’ 경쟁을 넘어, 호혜의 생태계로

윤종필 전국 단위로 공모 방식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한 지 15년이 되었지만, 지역에서 각 단체가 협업해본 경험이 없다. 늘 경쟁만 했고, 그럴 만한 협업의 사업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분권을 이야기하고 지역생태계를 이야기하는 시점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다. 앞으로 광역센터와 기초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예술가와 예술단체가 지역에 맞는 이슈를 발굴하고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경험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임재춘 지역센터를 통해서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현장의 입장에서는 지역센터의 역량이 실망스럽기도 하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자기 주도성을 갖기보다는 지침을 따라가기 급급한 모습이다. 지역재단의 업무 문화를 보면 지금 고민하는 것들이 지역 현장의 고민과 맞닿을 수 있을까 싶다. 바깥에서 벌어지는 지금 논의들을 좀 더 공유할 수 있는 여러 주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강승진 진흥원부터 문화재단에 이르기까지 종사자들의 역량 점검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을 운영하고 예산을 잘 사용해야 한다. 이들이 현장의 고민과 일을 만들어가는 방식을 이해하고 경험치를 쌓아가야 하는데, 공공기관의 각종 경영 시스템들이 그러한 환경을 못 만들어준다.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마다 여론을 형성해 견제와 비평의 장을 만들고 서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

요한 부분이다.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이야기에 덧붙여, 다양한 전환 실험이 많아지면 좋겠다. 각 이슈별로 논의는 무성한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핵심 주체들이 그 자리에는 빠져 있다는 거다. 예를 들어, 실무자들이 논의에서 나온 목소리를 기록하고, 그것을 근거로 전환적 실험을 제안하고, 예산의 5% 만이라도 수용되면 예술가 개인들이 모여 1년 동안 실험해보는 판을 열어놓으면 좋겠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사점과 접점이 열릴 것이다. 저희도 윤종필 대표님이 얘기했던 거버넌스, 협력, 시민참여예산제 등의 사업을 해보려 한다. 미리 조직된 구성이 아니라, 예산도 공개하고 모든 대상에 열어서 개인이 가진 욕구와 욕망을 바탕으로 춘천이 전환도시로 갈 수 있는 긍정적 실험에 아이디어를 보낼 사람을 모아서 1년간 실험하는 것이다. 이들을 지원하며 책임을 묻지 않고, 관찰하며 다큐멘터리 기록도 해볼 수 있겠다. 이 과정의 끝에 좀 더 많은 실험이 세팅되면 좋겠다.

예술가와 참여자 모두의 다양한 욕구를 담을 수 있는

고주영 진흥원 지원사업의 구조를 봤을 때, 개별성이라는 것은 모두 사라진 지원제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공급자도 마찬가지로 수혜자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장애인 시설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식으로 공고되는데, 이런 방식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획일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밖에 없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예술가들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주체로 참여할 때는,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자신의 창작활동과 연계해서 특정 시민을 만나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욕구가 있을 텐데, 그런 개별의 욕구를 반영할 수 없는 지원사업 구조이다. 공급자와 수혜자 양측 개개인의 욕구를 세밀하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으면 좋겠다.

최영화 접근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 기존의 문화예술교육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많이 진행했다면, 구조개편을 논의하는 지금의 시점에는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계획이 필요하다. 인구 구조가 바뀌는 사회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아동 중심에서 앞으로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하는 노년층을 위한 교안이나 시스템, 장소를 고민해야 한다. 장소, 지리적 접근성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관련 실태조사를 보면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1위 ‘시간이 없어서’, 2위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3위 ‘근처에 시설이 없어서’로 나온다. 순서별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시간이 없으면 방법이 없다. 문화 소외계층으로 치면 직장인이 1위일 것이다. 사실 비용은 큰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 무료이거나 저렴하다. 그런데 비용 대비 질이 낮아서 듣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많다.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의지도 있고 상황이 좋아도 후속으로 좋은 프로그램이 없으면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 지역에는 문화시설 외에도 도시재생이나 유희공간 재생 등을 통해 청년시설,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복합형 생활 SOC 등 인프라가 많이 늘었고, 그곳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 수요가 높다. 확충된 시설은 지리적 접근성을 어느 정도 해소해준다. 여기에 사회문화예술교육 체계를 구축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센터의 역할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다. 중앙 중심이 아닌 지역 주도로 갈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지난해 공간 연구를 하면서 본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는 단계별 교육이 잘 짜여 있었다. 관심도가 낮은 사람들이 재밌게 진입할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부터 초급·중급·고급 과정까지 구성했다. 고급 과정을 마치면 직함을 부여하고 교육 보조강사 등으로 참여한다.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심화 수업을 하고 지역에서의 역할을 찾도록 하는 방식이 직장인이나 중장년층, 노년층으로도 확장되면 좋겠다.

윤종필 문화예술교육이 지난 15년간 아동·청소년으로 집중된 이유는 모집의 용이성이 크다. 꿈다락 사업

도 한 요인일 것이다. 꿈다락 사업은 주5일제 정책에 맞춰 ‘노는 토요일’로 설계된 것인데, 이제는 ‘토요’라는 글자를 빼도 되지 않을까? 꿈다락 사업을 특정 요일에 국한하지 않고, 또 직장인과 성인으로 대상을 확장해보면 어떨까?

김재순 꿈다락 사업은 공감 가는 이슈이고 내부에서도 이야기되었지만, 아직은 완강하다. 사회분과 원탁 회의는 지역 권역으로 묶어 세 번을 더 진행한다. 거기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다.

편견을 걷어내고, 변화를 기대하며

백현주 공감하고 있었던 이야기들인데 미처 정리되지 못했던 것을 대신 이야기해주셔서 감사하다. 저는 문화예술계에서 있다가 평생학습계로 왔는데, 정부가 바뀌고 변화를 기대하지만 지역에서 체감하는 공공부문의 관료화는 갈수록 강해진다. 그나마 문화예술계는 아직 숨통이 트인다. 싸울 전투력이 남아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격렬함이 마지막으로 남은 희망이다.

최보연 깊이 공감하고, 많은 부분 동의한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또 다른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세 가지 지점인데, 첫째는, 고주영 프로듀서님이 지적한, 이미 현장에서는 예술창작과 예술교육이 결합된 양식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가 예술창작과 예술교육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현실이다. 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선화하고 있고, 이미 예술창작에 있어서도 교육적 프로세스, 배움의 프로세스가 연계되어 일어나고 있지만, 문화예술교육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적극적으로 수용되거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을 논하면서 우리는 재료로써 예술을 이야기하곤 하지만, 예술은 늘 여기에 없다고 느껴진다. 문체부의 직제에서 문화예술교육과는 예술정책관 소관이나, 예술창작지원과는 연계되지 못하고 좁은 의미의 향유에만 한정시킨다. 이러한 틀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입을 모아 얘기하면서도, 오늘의 자리를 포함해서 여전히 문화예술교육을 학교와 사회로 나누어 보고, 문화예술교육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예술’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예술현장의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문화예술교육 속에서 반영할 것인지 이야기하지 않는다. 둘째, 교육의 주체로서 인력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예술가에 대한 고민은 심화되지 못하고 투입요소 관점에만 머문다. 사회분과 회의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이제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이끄는 주체에 대한 지원 대상을 지금까지처럼 단체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예술가 개인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협업이 부족한 지점에 대한 것은 이 자리의 현장전문가들이 함께 공감한 문제이나, 이러한 라운드테이블 세팅과 진행구조 상 결국 가장 중요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는 논의가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게 되는 것이 너무나 아쉽다. 앞으로 논의가 지속되어 예술이나 문화예술교육 주체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갇힌 사고를 열고 다르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셋째, 오늘과 같은 자리, 그리고 “공론화”라는 용어, 그리고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 우리가 ‘문화예술교육’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관한 프레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어느새 고유명사화되어 버린 “공론화”라는 단어는 이미 오염된 말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무엇을, 왜, 어떻게 공론화하고 싶은 것인가? 공론화가 될 수 있으려면 많이 듣고 의제들을 밑에서부터 끌어올려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논의는 15년 전과 크게 다를 바 없이, 그때의 개념인 ‘문화교육’, ‘예술교육’으로 나누어서 저 위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리는 문화민주주의를 말하고, 시민을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이

앞으로의 문화예술교육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재정질이 필요하다. 현재 논의는 여전히 과거의 이원화된 관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는 예술교육에서 문화교육으로' 라는 식으로 자칫 단순한 패러다임 전환의 이슈로만 흘러가는 것 같아 이에 대한 우려가 든다. 마치 문화교육이 이상적인 지향인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문화교육에서 예술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논의는 빠져있다. 세심한 성찰이 필요하다. 정녕 우리가 예술교육은 제대로 했던가? 아니라면 무엇이 부족했던 것인가? 문화교육으로의 방향성 선회라면 거기서 '예술'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이 논의가 보다 중요하게,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꾸 뒷전으로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논의가 보다 주요하게 아래에서부터 다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공론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정민룡 저는 여러 번의 회의를 해오면서 한 가지 돌파구를 찾았다. 앞에서 주체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풀면 답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행정 주체 측면에서 보면 문화예술교육의 실체는 주체가 없다. 대부분 문화예술교육으로 먹고살지 못한다. 이 문제는 전체 문제를 관통하는 핵심일 것 같다. 지역센터 역시 명확한 행정 주체가 아니다. 진흥원만이 문화예술교육 자체를 업으로 하는 주체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결정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기생(寄生)할 것인가, 기생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것인가. 여기에 따라 구조가 달라진다. 왜 기생인가 하면, 문화예술교육은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이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지 않는다. 사람이 하는 문화예술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체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지금 모든 구조의 병폐 중 하나이자 문화예술교육의 한계는 주체를 못 만드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계속 프로그램 등 휘발성 있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사람은 휘발되지 않는다. 다른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떠나거나 다시 기생한다. 이것을 끝내는 데 새 사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기존의 제도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사업은 프로그램을 공모하지 사람 자체를 공모해서 현장을 운영하지는 않는다. 이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핵심이고, 이를 위해서는 강사비의 문제가 아니라 주체 자체를 올곧게 세우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하면 지역센터도 해결된다. 지역센터 역시 기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센터의 인력도 1년 있다가 떠난다. 진흥원만 빼고 대부분 마찬가지로이다. 주체를 세우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하다 보면 지역화 문제, 분권 문제,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의 문제, 문화예술교육 활용의 문제, 모든 제도적 문제가 풀릴 것 같아서 구조적인 고민을 더 많이 해보려 한다.

김재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용보다는 다짐과 당부를 드리고 싶다. 지금의 공론화 과정이 '론'으로 끝나지 않아야 하고 일회성 행사 같은 '공'이 아니어야 한다는 각자의 다짐도 있을 것이다. 이것들을 지속하고 실제 사업화와 구조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 충청권

일시	2020.1.17.(금) 14:00~16:30	
장소	대전 스파크플로우 스튜디오 01룸	
사회	김재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시민교육본부장)	
발제	정민룡 (광주 북구문화의집 관장)	김재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시민교육본부장)
토론	강선미 (디자인 강선미 대표)	김인숙 (대덕문화원 사무국장)
	박성연 (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 들락날락 이사장)	북관승 (교육기획협동조합 품 대표)
	서은덕 (문화예술협동조합 움직이는 대표)	오혜자 (초롱이네도서관 관장)
	이춘아 (지역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	이희성 (단국대학교 문화예술학과 교수)
	장윤하 (가물가물 대표)	정지은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분과위원	유상진 (지역문화진흥원 문화사업부장)	
문체부	이경직 (문화예술교육과장)	박효진 (문화예술교육과 사무관)

사회분과 충청권 원탁회의는 충북·충남과 대전 지역 공공기관 관계자, 지역 문화예술단체, 기획자, 그리고 분과위원이 함께했다.

이춘아 지역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문화예술지원 중간조직의 역할 변화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진흥원 세 조직의 역할을 창작, 교육, 활동으로 구분하고 각각 창작 중심, 교육의 전문화, 동아리 활동 중심으로 명료하게 해야 함을 강조했다. 활동의 경우, 학습이 아닌 마을활동가들이 주체가 되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상을 그렸다.

장윤하 가물가물 대표는 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언어적 정글’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생활문화 참여자와는 달리 특정 욕구에 따라 유동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에게 스스로의 고민과 질문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사회 변화와 관련해서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 방식의 변화에 따라 작은 규모의 활동에 집중하고 그 단체들의 교집합을 만들어 시너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 접근 방법론에서는 공공기관의 차원에서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보려는 실험과 실패가 필요하고, 지역의 문화적 유형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민간 차원의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은덕 문화예술협동조합 움직이는 대표는 도시재생, 생활공동체 등 많은 사업이 시민참여형, 교육형으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세대 및 지역, 젠더 갈등 등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기반의 필요성에서 답을 찾아보고자 했다. 지원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예술강사가 강사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경계(boundary)를 만들어주고, 중간조직에서의 전수조사 등 역할분담을 제안했다. 외부에서 사례를 찾지 말고 지역에 좀 더 집중하자고 했다.

김인숙 대덕문화원 사무국장은 여러 기관에서 같은 형태의 공모사업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혼란스럽다고 보았다. 지원기관의 공급자 중심 지원제도와 참여자들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문화예술교육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현실에서, 문화예술교육은 더이상 결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어떻게 찾아내고 채워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혜자 초롱이네도서관 관장은 사회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예술이 많이 약화되어 있다고 보았다.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 사회, 지역이라는 부분이 형식적으로 결합된 것이 많다면, 문화다양성이나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성의 가치가 인정되려면 기획자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사업구조 개편 관련해서는 생활권 단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접근성을 높이는 공유공간의 관계망과 생활문화 거점 공간이, 생태계 관

점에서는 전담조직이나 활동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강선미 디자인 강선미 대표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삶의 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해 시민들과 예술 관계자들이 함께 예술의 씨앗을 심는 방법을 찾아나서는 과정부터 시작해야한다고 보았다. 교육이라는 의미를 벗어나 자기 방식대로 경험을 해보는 사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다양한 계층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진화하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일상 공간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구조 개편 방향으로는 지원사업이 1년 주기가 아닌,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일상 공간의 재구성, 1년 단위 지원구조 개편

정지은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이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포함한 정의로 확대되어야 하며, 융복합, 케이팝(K-POP) 등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고 경험 교육을 포괄하는 교육 방법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중앙정부 주도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운영방식에서 다양한 주체 및 유관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전수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누구나 소외받지 않는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나가기 위한 장기적인 운영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여건과 선순환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희성 단국대학교 교수는 충남과 울산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평가 결과 비교를 통해 지역 특성과 사회환경변화에 따라 문화예술 수요와 욕구 조사 분석 결과를 통해 수요자 중심 맞춤형 사업설계가 필요함을 말했다.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구조화된 수업방식 제시 등으로 수요자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는 기획, 참여자의 과도한 중복을 예방하고 수행단체와 수행대상(기관)이 3년 이상 진행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사업 참여자의 외연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박성연 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 들락날락 이사장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문화적 취약계층의 범위를 유연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았다. 주민 주체성을 갖게 하고, 역량을 강화시켜나가는 것도 문화예술교육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포용적 관점의 사업구조에서는 리빙랩 사업공모의 사례를 들어 주민들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주민 주체가 참여하면 지원해주는 구조를 제안했다. 생태계 관점에서는 취약한 여건의 제도 개선과 더불어 청년 일자리와 문화를 접목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권승 교육기획협동조합 품 대표는 복잡한 현장을 풀기 위한 도구가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관해 관계중심, 몰입중심 두 가지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로 보았다. 지역 거버넌스 체계와 구조를 만들고 문화기획자를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총 합 토 론

김재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과 방향 관련 네 가지 이슈와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구조 개편 방안 관련해서 발제와 토론을 들어보았다. 이제 종합토론에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어보자.

이희성 지역문화예술교육 강사비와 학교문화예술교육 강사비가 똑같다. 그런데 둘의 역할은 조금 다르다. 또 학교문화예술교육은 강사 검증 시스템이 있는데, 지역문화예술교육은 그런 시스템이 없다.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강사비이다. 지역문화예술교육과 학교문화예술교육에서, 강사비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강사비 구조와 강사 검증 시스템은 지원사업 구조 개편에서 중요한 영역이다.



이경직 그동안 문화예술교육에서 학교예술교육과 학교 예술강사 지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사회문화 예술교육도 대부분 소외계층, 취약계층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보편적 권리로서의 문화예술교육 측면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확장하기 위한 정책의 전환을 고민하는 시점이다. 보편적 권리로서 일반 시민으로 넓히고 지역으로 내려가다 보면 지역문화도, 생활문화도 걸리고, 평생교육도 걸리면서 다양하게 중첩된다. 정책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이런 고민을 공론화 작업을 통해 풀어보려 했다. 문체부 안에는 지역문화 정책, 문화복지, 문화예술교육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지역은 문화사업에 생활문화사업과 문화예술교육사업이 함께 담겨 있고, 문화원도 어르신 사업과 지역문화 사업이 섞여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문화교육도 문화예술교육으로 볼 수 있는가? 주체성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활동이나, 예술을 도구로 하지 않더라도 지역의 문화기획자,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등의 문화 활동도 문화예술교육으로 볼 수 있는가? 주체와 중간 매개층으로 보면 지역문화진흥원 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사업이 있는데 토론문에도 뒤섞여 있다.

이희성 왜 그런가 하면, 현장을 가보면 수행기관이 제한적이다. 지원사업과 지원금이 내려오지만, 그것을 배분하고 수행할 단체가 적다. 그러다 보니 예술적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교육기관에도 참여를 열어줄 수밖에 없었고, 어느 순간 이 영역이 사업범주로 들어와 버린 것이다.

이경직 제가 고민하는 이유는 정책 영역을 넓히려면 공론화를 통한 최소한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술이 매개되지 않은 지역 공동체성과 시민이 주체인 문화 활동은 빠지거나, 아니면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예술적인 매체나 도구를 활용해서 예술적 접근을 하는 작업을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할 것인지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역문화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



원을 가지고 지역문화를 진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과는 다르다. 토론문에도 이런 개념이 혼재되어 있어서 공론화 작업을 통해 명확하게 하고자 하나 생활문화처럼 명확하지 않은 점도 있을 수 있겠다.

복합성이 작용하는 지역 현장

복권승 정부부처는 대부분 전문화되어 있고 고유의 법제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민간은 생활 현장이기에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문화기획 풀조차 없는 시골 같은 취약 지역은 그러한 구분이 어렵다. 협의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런 정체성은 어느 정도 명확하게 가져가야 하고, 거기에서 지역문화의 고유성을 찾아내고 그것을 지역의 문화적 역량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티브가 되는 예술 활동을 통해 정체성을 찾아가자고 얘기한 것이다. 광역 단위만 되어도 사업을 수행할 때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적다. 기초지자체도 문화관광과에서 해결 가능하다. 그런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지역 현장과 어떻게 매치시킬 것인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경직 그렇다면 교육과 활동이 구별되어야 할까? 정부 조직의 경직성과 무관하게 지역분권이나 지역의 지향점에서 봤을 때, 문화적인 활동, 예술을 통한 교육 활동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면, 문화 활동과 교육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협의의 예술교육과 통합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면 문화예술교육과의 명칭을 바꿀 수도 있겠다. 그 안의 정책 영역을 다르게 가져가면 되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지역에 이로울 것인가이다.



장윤하 저는 충북 괴산에서 5년 동안 활동하다가 청주에 와서 활동한 지 2년 정도 되었다. 산골로 들어갈 수록 지역 현장은 영역을 나누기 어렵다. 지역마다 너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리서치가 필요하다. 지역이라고 통칭하기에는 더 세밀하게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청주와 괴산, 청주와 금산은 또 다른 지역성을 가지고 있다. 양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교육보다 문화 활동이 더 활발한 지역은 어디이고 장단점은 무엇인지. 지금까지의 흐름을 단절하고 새롭게 바꾸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야기한다. 지역의 사안마다 다르게 정책이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 그것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경직 인적인 문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지역, 기초 단위에서는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문화 예술교육이 어떤 의미인지, 무엇이 좋은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문화예술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측면에서 사회예술교육이 소외계층에 한정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확장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지역 단위로 가면 개념이 섞인다고 했는데, 기초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좋은 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김인숙 이런 게 중앙에서 지역을 바라보는 방향성인데, 정작 현장에서는 그 방향성이 흐트러진다. 이제까지 현장은 중앙의 지향을 받아들이고 현장에서 충돌하며 운영해 왔다. 그러다 보니, 문화원에서조차 문화예술교육을 지역문화의 틀 안에서 한정된 고민을 하게 된다. 중앙부처의 생각을 은연중에 지역 현장에서 관철시키려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경직 복지부나 교육부는 행안부 같은 조직이 말단까지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든 평생교육이든 복지 영역에서 지역 일선까지 정책이 미친다. 그런데 문체부는 문화복지조차 전달체계가 없다. 지역문화도 마찬가지로 상황으로 문화원밖에 없다. 생활문화센터가 최근 확산되어 몇백 개가 있다고 하지만 활

등을 많이 못 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예술교육을 광역재단에서 수행하는데, 그들도 고위 업무가 많아 쉽지 않다.

복관승 정부 부처도 최근에 빠르게 변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부여, 공주, 청양, 홍성에 공동체과를 신설해서 행안부와 농림부 등 정부 부처의 경제 분야 관련 업무를 통합해 진행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의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국민의 행복과 편리와 즐거움을 목적에 두게 된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조직 개편에서 전향적인 자세도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제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거기에 맞춰 역할을 조정하는 상호협치가 지금은 필요하다. 그래도 문체부는 유연한 편이긴 하다.

지원사업 구조 개편 방안

김재순 진흥원의 사업 현황 분석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이 약 서른 가지가 있다.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을 바꿔야 할까?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까? 이제 구조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희성 발제에서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9.2%라는 자료를 발표하셨는데, 제 토론문에 보시다시피 제가 9개 지역 66개 단체와 48개 단체 참여자 전수로 설문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충청남도의 지역특성화사업 참여율은 여성 86%, 60대 이상 77.6%, 재참여율 87%였다. 항상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한다는 말이다. 울산이 광역시이고 교육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특성화사업은 연령대는 다르지만, 여성 89%, 재참여율 56%였다. 수행단체에 물어보니 사전에 지역을 돌아다니며 발굴하는 등 준비할 수 있는 기획료나 개발비가 지원되지 않고, 예산은 강사비와 재료비로 다 지출되기 때문에 기존에 관계 맺었던 대상들과 똑같이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거꾸로 말하면, 예산 구조만 바꾸어도 참여 대상(수혜자)을 2배로 높일 수 있다. 한편, 현장에서 많이 체감하는 부분인데, 참여자들의 온라인 지식 습득이 굉장히 빨라졌다. 미디어, 특히 유튜브 활용은 짧은 시간에 효용성과 유용성을 추구하면서 욕구가 갈수록 높아진다. 저도 ‘문화공장’이라는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문화예술교육도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에서 접근해봐도 좋겠다. 인터넷 강의, 사이버대학 등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니즈도 높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히 시골은 겨울이 농한기이고 공동체가 잘 모인다. 이때가 중요한 문화예술교육 기간인데, 실제로는 단절되어 있다.

정지은 현재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수혜 대상이 소외계층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처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현장에 가보면, 단체에서 소외계층 아이들을 필수로 모집해야 하는데 못하겠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충남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세울 때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진흥방안 연구로 접근했다. 진흥원의 전반적인 사업 수혜자의 연령층을 분석해본 결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이 많았다. 그런데 지역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현장들을 모니터링해보면 노년층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 현장과 간극이 있다. 또한 발제에서 진흥원의 사업을 “메인 요리 없는 뷔페”로 표현하셨는데, 오히려 메인 요리를 집중적으로 만들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선택지를 뽑을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한 목표일 수 있다. 꼭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소외계층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포함되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도 있다.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들을 위한 교육과정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이와 관련

된 국내외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사례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따라서 소외계층 범위를 넓고 깊게 들어가야 한다. 생애주기별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두 번째는 지자체의 역할이 좀 더 강조되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은 진흥원, 광역재단, 기초재단, 지역 예술단체 이렇게 네 개의 주체가 주로 담당한다. 그런데 지자체를 좀 더 잘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부여하는 역할을 필수사항으로 지정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기반시설 인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인력풀을 연계한다면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속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이다. 모니터링한 지역의 좋은 사례 중 하나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미술교육이었다. 그 사례는 한 지역에서 5년 정도 운영하고, 다른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5년 안에 문화예술교육 참가자들이 자립성을 기르고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참가자들이 향후 4, 5년 차가 되어 직접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문화예술단체가 수요를 따라 옮겨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자립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구축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생태계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걸까 생각해보니, 지원사업의 지침이 매년 달라지는 것이다. 지원에 맞추다 보니 단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문화예술단체에게는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도움이 된다. 진흥원에서 다양한 사례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하는 부분도 필요해 보인다.

김재순 몇 년 동안 꾸준히 연구하면서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의견이었다. 공론의 장을 만들고, 그것이 어떻게 공유되고 다음을 확인할 수 있는지, 지자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실천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우리끼리만 반복하는 것 같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깊이 고민하는 부분이다.

지역 거점 공간의 추천·발굴·활용

오혜자 자치단체와 결합해서 변화를 만드는 것은 사실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이미 각자 고유업무가 있는데, 거기에 업무가 추가되는 것을 받기는 공무원이 있을까. 지역 안에서 공공성, 안정성, 접근성 등을 고려해 공모하거나 추천하고 발굴해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다. 지역에 공간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민간 영역이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꿈다락 사업을 예로 보면, 토요일이 휴일이 되면서 공공 공간도 휴무다.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실랑이를 벌이면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아량이나 포용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시스템 속에서 지역의 공간을 활용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면서 지역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토론을 거치고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겠다. 사업 대상에서 노인과 장애인이 주로 많은 수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공모 지침에 이미 우대조건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과 결합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복지기관의 공간은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도 하고 우대정책도 있어서 민간활동의 유입이 늘고 있다. 기회 편중 면에서도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어떤 나비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김재순 이제 사회 취약계층과 문화 소외계층을 구분해서 대상에 맞게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구조화될 필요가 있고, 세심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김인숙 문화예술교육에서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해 왔는데,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대상, 시설, 공간 등에 대해서는 리서치(research)나 아카이빙(archiving)이 되지 않은 것 같다. 저희 같은 문화원은 지역에 들어가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하는 데 한계가 있고, 예술강사의 참여 요구도 지원해줄 수 있는 직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못한다. 그럴 때 다른 자원과 연결해줘야 하는데, 그것도 어렵다. 리서치가 안 되어 있고 리서치 비용도 없고, 지원사업은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 예산을 쓸 수도 없다. 지역재단의 인식 변화와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단에서는 현장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침만 강조해 강사료를 반납한 적도 있다. 문화예술교육과 현장에 대한 인식 변화와 파트너십의 태도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이춘아 지역문화재단은 지역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역 기반을 중심으로 각종 전문화된 사업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역문화재단은 연구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없다. 예산도 사업비로만 내려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 기초조사나 데이터 구축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결과물과 교육이 어떻게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없다. 문화예술교육 측면에서는 진흥원에서 나온 교육 연구 자료도 상당히 많다. 지역에서도 그런 기본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한편, 앞에서 사례로 든 예술동아리는 결국 우리가 문화예술교육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예술가들이 연구동아리 형태로 과제를 실험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했는데, 단순한 취미동아리로 치부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사업비뿐만 아니라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예산도 지원해야 한다. 연구와 교육 등 문화예술교육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평생학습진흥원이 지역에 생기는 데, 하부에 평생학습원이 있다. 이들도 에듀케이션(education)과 러닝(learning)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경우, 지역문화진흥원이 평생 러닝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 광역 단위로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시민대학을 운영하며 강의를 한다. 역할에 맞지 않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중앙 단위는 전문화로 가는 것이 맞고, 지역재단에서 잘 녹여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만 내려보내면 안 된다. 사업의 토대를 다질 수 있는 요소를 함께 보내야 한다.

서은덕 저는 현장에서 일하는 기획자이기도 하다. 저도 인건비에 관해 이야기하겠다. 제가 지난 2년간 국가지원사업을 받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문화예술교육사업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예술강사는 건당 수당으로 수입을 얻는다. 월 40, 50만 원 정도의 수입만으로 한 달을 사는 거다. 그런데 문화예술 기획사업을 하다 보면 한 달에 250만 원씩 인건비를 책정해준다. 그렇게 되면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고 사업의 질도 올라간다. 예술강사들은 재단에서 강사비를 받으면서 “내가 저 예술가 먹여 살렸어”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 수당은 임시방편이지 인건비가 아니다. 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나의 일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돈을 줘야 한다. 자기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사업비는 2천만 원 주면서 2억짜리 평가를 받으라고 한다. 지원금은 천차만별인데 평가의 기준은 늘 같다. 오히려 사업비 2억 원의 평가가 훨씬 느슨해서 깜짝 놀랐다. 기획인건비나 예술강사비는 건당이 아닌 월급의 형태여야 하고, 책정 기준도 현실적으로 높여야 한다. 연구인력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전문성을 키워도 강사비는 똑같으면 일을 할수록 지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본다. 지금 90년대 생이 현장에 진입하기 시작하는데, 보상이 거의 봉사활동 수준이다. 예전에는 교육사업에 간식비 지출이 가능했는데 이제 그마저 안되니 강사나 기획자 개인이 지출하기도 한다. 사업의 규제는 더 강화되고 신뢰와 파트너십이 사라진 것처럼 보인

다. 제대로 시도해볼 수 있는 규모의 사업비와 안정적인 인건비가 반영되었으면 한다.

현장 종사자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고려해야

이춘아 현장 종사자들은 문화예술교육에 기본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건이 좀 더 나은 지역재생사업이나 문화도시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중앙 단위에서 이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복권승 중앙과 광역, 지역은 각자의 역할이 있다. 중앙에서는 사례를 모으며 모델을 만들고 매뉴얼을 개발하고 장기 계획과 방향성 수립, 협업 등의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광역 단위에서는 연구와 모니터링, 문화예술교육 인력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에서는 사람, 공간, 네트워크와 관련된 현장을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제도화와 관련해서 가능하면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이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춘아 앞에서 현장 인력 중에서 4대 보험이 제대로 적용되는 곳이 거의 없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얼마 전에 참석했던 시민사회 활성화 토론회에서 팁을 얻을 수 있었다. 거기에서는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을 만들어 활동가들의 4대 보험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다행히 예술강사는 4대 보험이 되고 있는데, 문화기획자에 대한 고려도 절실하다. 서울시에서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문화 영역에서도 시민 주체와 같이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고 활동가 지원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월급을 줄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도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구조화해야 한다.

장윤하 저는 대안학교에서 오랫동안 예술강사로 활동했었는데, 대안 교육 현장에는 안식년 개념이 있다. 문화예술교육에서도 안식년이 필요하다. 대부분 혼자서 버티다가 고민의 지점에서 그냥 떠나버리게 된다. 안식년의 개념을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경력과 활동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 지지해줄 구조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희성 사업비의 현실성이 담보되지 못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무리한 상황들이 발생한다. 다른 항목으로 지출이 안 되니 사업재료비를 부풀리거나, 역할이 거의 없는데도 보조강사를 지원 한도 최대 숫자로 편성하거나, 수업시간을 획일적으로 3시간씩 편성한다. 결국 현실성 없는 사업비 제도 때문에 무리수를 두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된다. 현장 모니터링을 하면서 느낀 것을 제안하자면, 지금과 같이 3월에 공모를 시작해서 4월에 사업을 수행하는 상황에서는, 사전 수요 발굴은 전혀 예산이 없고 사업비는 오로지 강사비와 재료비만 측정해서 나눠주면 참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구조개선이 필요하다.

유상진 풀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중요한 지점을 짚어봐야 할 것 같다. 발제에서 본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자기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 최근 1년 이내 문화예술교육 참여경험이 10명 중 1명이고, 비경험자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의향은 10명 중 2명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현장이 답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장이 답이라면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교육을 펼치는 것은 문

화예술교육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으며 중요하다는 신념과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른 방식의 고민이 필요하다. 숫자를 높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예술을 어떻게 필요로 하게 하고 수요를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의 삶 속에 문화예술을 어떻게 배치시켜 찾아오게 만들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진흥원과 문체부, 그리고 여러분의 역할일 것이다. 사회문화예술에서 파생된 생활문화, 지역문화가 우리 공통의 관심사라면 보다 생산적이고 실현 가능한 논의를 위해 그 부분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좀 더 집중해서 논의하면 좋겠다.

보편적 문화권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

이경직 정부가 공적 자원을 투입하게 되면 가치가 창출되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 영역이 할 수 없는, 문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 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을 해왔다. 정부는 늘 “문화가 답”이라고 얘기해왔다. 선진화될수록 문화를 즐기고 삶 속의 문화를 누린다. 시장 논리가 아닌 가치의 측면에서, 소외계층만이 아닌 보편적 문화권의 차원에서 문화복지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해왔다. 문화예술교육도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역할을 하려다 보니 2014년에 「지역문화진흥법」이 나왔고, 정책과 예산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저희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향후 정책이 바뀌더라도 지역 차원에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문화예술교육을 고민한다. 많은 의견과 제안 감사하다.

정민룡 정리가 되기도 하고 복잡해지기도 한다. 우리는 가치 지향적이고 참 거룩하게 일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을 뒷받침할 기반은 약하다. 현실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은 현재 기반사업이 아니다. 문화예술교육은 기생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된다. 기생할 것인가, 기생의 악순환을 끊을 것인가 정책적인 단호한 결정이 있어야 한다. 만약 기생을 선택한다면 기생하는 부분을 확대해서 선택권을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 예술교육은 사교육 기반이다. 예를 들어, 공예 예술교육이라면 그것은 사적인 영역에서 민간 영역이 수행하는 문화예술교육이다. 이 영역에서 선택권을 늘리고 이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태계 구조를 어떻게 짤 것인지로 접근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기생의 악순환을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프로그램 공모는 민간 경성 보조사업으로, 정확히는 광역재단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위탁 구조가 아니고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절대 풀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편, 보편적 문화예술교육을 지향하는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공간이다. 이때의 공간은 물리적인 기반시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여건과 기반 환경을 기초 단위에서 구축해야 한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일례로 중앙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사업을 하는데, 프로세스가 간단하다. 매년 메이커스페이스를 선정하고 지원하는데, 사업 자체를 5년으로 지정을 하고 있어서, 5년간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그에 비해 문화예술교육의 지원 구조는 허약하고 문화재단만 바라보는 구조이다.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들을 발견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양질의 환경과 일자리를 구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사회분과에서 구조를 정리할 때 선택지를 두 개로 나눠 준비해보려 한다.

김재순 많은 이야기에 감사드리며, 공론화의 자리를 통해 오간 논의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 경상권

일시	2020.1.20.(월) 14:00~16:30	
장소	부산 KTX 회의실 503호	
사회	김재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시민교육본부장)	
발제	정민룡 (광주 북구문화의집 관장)	김재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시민교육본부장)
토론	김미정 (창원시 문화정책관)	김정주 (Gachi예술협동조합 대표)
	류기정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센터장)	박진명 (생각하는 바다 대표)
	서민정 (내마음은콩밭 대표)	안진나 (홀라 대표)
	원항미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이강민 (울산미학연구소 봄 대표)
	이현혜 (경북문화재단 문예교육팀 팀장)	최수환 (웃골 대표)
문체부	박효진 (문화예술교육과 사무관)	

사회분과 경상권 원탁회의는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경상권역 공공기관 관계자와 지역 문화예술단체, 기획자, 그리고 분과위원이 함께 토론했다.

원항미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은 공론화를 특정 계층 대상이었던 사회문화예술교육이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한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보았다. 서로 배움, 상호학습, 상호성장을 학교와는 다른 사회의 차별점으로 보았다. 평생교육, 생활문화,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법으로는 지역의 동네서점, 카페 등 제3의 장소를 주목했다. 새롭게 문화예술교육에 진입하고자 하는 예술가나 활동가를 위한 진입-성장-안착 단계별 모형 구축과 체계적인 지원 활동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박진명 생각하는 바다 대표는 최근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강조되고 있는데, 여기에 교육이 결부되면서 그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고 보았다. 생활문화, 마을공동체 등이 확대되는 사이에,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새로운 역할과 방법을 찾지 못하고 교수자와 피교육자가 나뉘는 형태의 경직된 모습이 도시재생사업 등의 유연한 대응과는 대비된다고 짚었다. 단기적으로는 생활문화 등 다른 사업과 문화예술교육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이 변별성을 부여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강민 울산미학연구소 봄 대표는 한국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모델이 2002년 영국에서 실시된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에 영향을 받았으며,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은 1997년 신노동당 정부의 문화 정책으로써 예술가와 일반인(저소득층 학생)이 협력하는 참여 예술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전제하였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은 학교와 달리 프로그램 위주로는 정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술강사가 지역사회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가 핵심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술강사가 지역사회를 치유하겠다는 참여 예술의 관점보다는 지역사회가 지역사회 이슈와 가치를 스스로 파악하고 실행하는, 권리 부여로서 예술교육, 즉 커뮤니티 아트에 관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지역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류기정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센터장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은 각 지역의 현장 상황에 따라 개념과 정의가 달리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정체성은 현장의 모습이므로, 그동안 진흥원이 늘 앞에서 끌고 갔다면 이제는 현장과의 간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활동가를 학교 예술강사처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은 맞지 않고, 예산지원방식의 일부는 공모방식을 택하더라도 일부는 위탁, 용역방식으로 구성해서 정당한 이윤을 보장해 민간단체가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를 제안했다.

최수환 옷골 대표는 농산어촌에는 도시와는 다른 방식의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문화예술교육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도시 지역과는 달리 농산어촌은 포괄적 문화의 욕구가 크고 문화와 예술을 분리하거나 예술을 우선시할 때 대상이 급격히 줄어들다면서, 이에 대해 5~10명의 소규모 지역 주민에게도 닿는, 지역에 특화된 지원 구조를 주문했다.

안진나 홀라 대표는 자신과 사회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화 자본을 공공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개인과 사회, 세대와 전승 등 다양한 이야기를 입체화하고 생태계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지원체계를 제안했다. 강사-학습자 관계를 탈피한 팀워크 방식의 멤버십 구성과 라이프사이클적 접근도 이야기했다.

김정주 Gachi예술협동조합 대표는 진흥원의 역할, 예술가교육자의 역할, 기획자의 역할을 짚었다. 특히 예술가와 참여자 사이에 기획자의 역할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적합한 장소가 부족하며, 예술분야에 따른 교육공간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다. 앞으로 공간을 리모델링하거나 만들 때는 예술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무료수강의 문제는 문화예술교육단체가 자립하기 어렵게 하는 부분이며, 오히려 참여자의 수업 참여 의지를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정 내마음은콩밭 대표는 지역에서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다 보면 문화 활동, 생활문화, 지역문화로 이동하면서 교육이 중요해지는데, 예술에 좀 더 방점을 둔 문화예술교육에 사회라는 말이 붙으면서 혼란스러워졌다고 보았다. 생활문화 지원제도는 장르가 아닌 생활권, 문화권에 중심을 두어서 자유로운 면이 있는데 반해, 문화예술교육은 대상이 너무나 명확해서 생활문화로 확장할 수 없고, 결국 둘은 같이 갈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했다.

김미정 창원시 문화정책관은 현시점이 정체성과 개념, 기본원칙을 공고히 해나가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했다. 문화예술교육이 보편성에 기반하고 있는데, 사회문화예술교육은 보편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교는 지역사회에서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학교를 포함한 범주를 가져가야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았다. 문화예술교육은 자아실현의 과정이자, 지역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현혜 경북문화재단 문예교육팀 팀장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혼란스럽고 발전이 더딘 부분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행정의 견고한 체계가 사고를 획일적으로 만들어 새로운 시도를 상상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로 어느새 체화되어 있었다는 반성과 함께 ‘예술가 없는 문화예술교육은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종 합 토 론

김재순 지금까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의제발굴을 위한 발제와 각자 준비한 토론을 들어보았다. 이어서 종합토론을 시작하겠다.

박진명 문화예술교육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자, 생산자, 단체가 참여한다. 최근 5년의 흐름 안에서 느끼는 게,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에 전문성을 키우고 자기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과 성장이 있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초기에는 예술가와 예술단체가 문화예술교육에서 사회적 역할을 찾아보며 선순환의 흐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종류의 사업도 많아지고 꿈다락 사업 등 양적으로 크게 늘어난 만큼 전문가들도 계속 쌓이고 있는가? 또 좋은 콘텐츠로 몇 년간의 실험을 했다면, 그것을 지원사업 바깥에서도 실험할 수 있을 정도의 그룹이 나왔는가? 아마도 그런 주체는 거의 없다고 본다. 이런 문화예술교육 실험 비용이 공모를 통해 사회문화예술교육, 특히 꿈다락 사



업 같은 특성화 영역에서 지금까지 치른 비용이 생산자를 성장시키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다. 지금까지 평가지표는 ‘몇 회차 몇 명’이라는 수혜자를 염두에 둔 성과지표였다. 지역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사업을 기획·운영해온 주체들이 전문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중요한 평가 지점이다. 오늘의 화두 중 사회적 가치에 대한 수렴과 확장이 있었다. 이것은 방향성의 문제이다. 문화예술교육이 얼마만큼 잘 수렴해서 교육 안에서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잡을 것인가의 부분에서는, 재설계는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 생활문화와 문화예술교육을 분리해버리면 장르 중심의 예술, 기능 중심으로 회귀해버린다. 따라서, 이것들을 부처 간의 개별 사업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에서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포지셔닝하고 재설계해야 한다.

이강민 저도 비슷한 관점에서 토론문 마지막 글을 썼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면 가치와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이미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목표가 지식기반 사회에서 문화 자본이라는 문화상품을 어떻게 잘 만들어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를 만드느냐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생활문화 등 모든 정책이 일반 시민을 포함해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책적 방향이기도 하다. 문화예술교육이 교육에 방점을 찍고 수동적인 교육방식으로 가면 생활문화와 접점이 생기더라도 실제로는 뒤쳐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역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을 중심으로 보면 오히려 방금의 얘기와 충돌한다. 발제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외계층 중심에서 다른 면으로 넓히자고 했는데, 이런 것도 고민해야 한다. 문화예술의 실제 소비자는 누구든 조건이 되는 사람이다. 교육도 다르지 않다. 그런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방식으로서의 확장을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나?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말은 문화 민주주의의 정신 기조이지만, 이 용어의 탄생 자체가 실제로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다.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어떤 무언가를 해보자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다. 다른 영역마저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문화예술교육이 실용성이나 시대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야 한다는 데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류기정 부산의 기초생태계, 문화생태계는 거의 전멸이다. 젊은 사람도 없다. 초기 꿈다락 사업의 시간당 강사비는 누가 4만 3천 원으로 책정했을까? 문화생태 종사자를 취미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근본적인 것은, 산업계 종사자로서 정당한 노동자로서 대우받는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행정의 무단사용 문제를 짚어야 한다. 많은 기획자와 예술가들이 기획서를 생산한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무단으로 아이디어를 사용하고 현장에서 써먹는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없고, 불법이라는 인식도 없다. 그러고서는 식상하다, 새로운 것 없냐고 요구한다. 현장의 전문성과 노동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원향미 모 기초문화재단에 있을 때, 지역 예술가와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었다. 인재개발원 기준으로 책정한 강사료가 자치구 보고에서 구청장님께 인건비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 주민자치센터 무료 강사로 일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2시간에 5만 원이면 적절하다는 것이다. 저는 납득할 수 없어 결국 섭외를 포기하고 프로그램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현장에서는 취미 강좌, 평생교육 개념 등이 혼재되어 있고,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교육 강사에 대한 관점과 이해가 다르다. 또 다른 사례로, 관내에서 문화다양성 연구 지정학교의 제안으로 함께 ‘인생기록단’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예술적인 방법으로 타인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상은 학부모들이다. 예술교육강사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노동예술기록단 흥을 섭외해 강의와 교육을 진행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일어났지만, 대상은 학부모이고, 지역 예술가들과 지역 문화재단, 학교가 연계해서 진행한 프로그램이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인가, 사회문화예술교육인가. 기초 단위에서는 이러한 상상력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 여기에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유기적인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시도를 품을 수 있는 지원사업이 새로 만들어져야 할까?

현장의 다양한 시도를 품는 유연한 구조

김재순 지금 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과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지원구조 개편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발제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화예술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 하는



지점에서, 산업계의 문제인지 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의 문제인지 얘기하셨다. 또 사업구조를 동시에 건드리기보다는 정체성과 방향을 명확히 하는 게 우선이라고 제안하셨다. 그런데 저희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는 것은, 자칫 담론에만 매달려 1, 2년을 보내야 하는 시간의 문제도 있고, 실질적인 구조 개편에 대한 가시적인 것이 없으면 논의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저희는 전면 개편이라는 말도 쓰면서 의욕적으로 임하고 있다. 지역의 구체적인 사례 등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서민정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 지역사회에 방점이 있다면, 지원사업의 지침을 조금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목적에 계층이나 세대 또는 대상이 너무 견고하게 설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지역을 잘 아는 기획자와 예술가가 지역사회의 상황과 수요를 반영해 노인층과 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설계할 수도 있고, 지역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지원사업의 목적이 너무 촘촘하게 설정되어서 내려오면 지침에 맞춰 설계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한다. 왜 문화예술교육이 지역사회에 필요한가의 관점에서, 지원사업이 견고한 세팅보다는 현장의 상황에 맞게 풀어내고, 아래로부터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수용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획하고 매개하는 코디네이팅의 역할에 대한 지원구조도 고려해주면 좋겠다. 예술단체나 예술강사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코디네이팅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소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 단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지원 범위에 관한 이야기이다. 지역에는 취향취미 공동체가 많이 있다. 사비를 내는 문화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영역까지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다 지원을 해야 하는가. 직장인 지원사업의 경우도 직장인을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으로 볼 것인가? 자생적으로 돌 수 있는 부분과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 지원 범위에 대한 재고도 필요하다.

김재순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이 약 서른 가지가 있다.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수정·보완이 필요하

다면 어떤 것을 바꿔야 할까,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까?

최수환 오늘 이야기 중에 예술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다. 문화예술교육 또한 문화예술이 사회적으로 담당해야 할 어떤 것이라는 전제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당사자인 교육자는 대부분 예술강사, 기획자로 불리는 예술가이다. 이들 개인 예술가에게 어떤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가? 예술가 개인에게 사회적 역할이 있다면 4만 3천 원도 합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사회는 예술가가 그 의무를 수행하게끔 무엇을 주었나? 국가로부터 받은 게 거의 없는데, 이런 틀을 통해 많은 것을 내놓아야 한다. 예술가 개개인이 모인 예술단체에는 무슨 사회적 의무가 있을까. 문화예술교육이든 문화진흥이든, 사회적 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하다 보니 능력 있는 예술가를 데려올 수도 없고, 그들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녹아나게 수행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대부분 정책이 “이것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서 “왜 좋은 것을 만들어줬는데 안 하는 거지?”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실례로, 저는 15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에 산다. 도시에서 문화예술교육사업도 해보고 마을사업도 해본 저는 우리 마을에서 효용이 높은 문화예술교육강사이자 전문가일 수 있다. 그런데 마을 주민이 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약 30여 개의 사업 중에서 15가구의 작은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큰 고민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예술의 사회적 역할 vs 예술가의 사회적 의무

박진명 비슷한 고민인데, 기초 단위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고민할 때, 접근성은 물리적 공간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주민 주체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지리적으로 지역을 좁혀서 접근성을 높이면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지역 단위 안에서 수요를 조사하고 설계하다 보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 지금까지의 사회문화예술교육, 꿈다락 사업 등의 지원체계들은 사전 조사를 통해 데이터 기반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장려하는 방식이 아니고, 문화예술단체가 가진 재능을 단기간에 결집시켜 수행하는 방식으로, 비용 자체도 그렇게 설정해놓았다. 평생교육과 비교해도 강사비(시간당 2만5천 원)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평생교육과 꿈다락 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이 같은 선상에서 비교되고 있다고 본다. 오히려 지역 범위가 더 좁아질 수도 있고, 장애인인 많은 지역, 노년층이 많은 지역 등, 조건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기획되어야 한다면, 예산도 그에 맞게 담보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역 내에서 실험이 필요하다면, 그에 맞게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 초기에 각광을 받았던 꿈다락 사업이 최근에 관심이 낮아진 이유도, 문화예술단체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투여해서 설계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에 있어서, 지리적 요소를 넘는 장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류기정 ‘지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는 불쾌함이 있다. 예술가의 행위가 공공성을 띠다면 투자라고 봐야 한다. 투자로 본다면, 지원사업을 내리는 방법에 고민이 필요하다. 행정 간에는 조례와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행정과 민간 간에는 관련 조례 등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렵고 제약이 많다. 사업은 공모보다는 위탁으로 진행하면 좋겠다. 그러면 현재의 지원 구조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경상비, 운영비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예산을 좀 더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컨설

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무 공급자 관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를테면, 연봉 400만 원 받는 사람에게 어떤 컨설팅을 할 수 있을까. 현장을 불신의 시선으로 보는 감시자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중앙, 광역, 기초가 단계별 추진체계를 가져야 한다. 중앙에서 광역으로 내려오면, 광역에서 지역 상황에 맞게 다시 조정해서 광역에서 기초로 내려오면 한결 소통이 쉬워진다. 기초와 현장은 좀 더 가까이 있으니까.

서민정 영국은 예술지원에 팔길이 원칙을 적용해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유지한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태도가 있으면 좋겠다. 저는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얘기했었다. 중간지원조직이 플랫폼으로 기능하기를 바란다. 중간지원조직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중앙에서 정해진 사업을 내리기보다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안아 필요한 사업들을 중앙으로 올리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중간지원조직이 거꾸로 사업지침과 규칙을 제안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강민 ‘지역사회학교’라는 개념으로 보면 학교와 사회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예술 과목 전공 교사들의 수업 발표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그들의 수업의 질이 높다고 생각된다. 일반 문화예술교육사와 차이가 크게 난다. 학교 예술강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것이다. 현재 학교 예술강사 제도하에서 그들이 시도해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적다. 사회에서는 더더욱 할 게 없다. 제로 베이스(zero-base)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학교와 사회는 개념 자체가 달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이나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사회경제가 바뀌면서 점점 강화되고 있다면, 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생들이나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해 무엇을 강조해서 가르칠 것인지 분명한 자기 지향점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예술강사나 문화예술교육사들을 지역의 활동가와 비교해보아도 한참 못 미치고, 관점 자체도 다르다. 이들이 지역의 문화기반시설로 유입될 수 있으려면 주변 환경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제안하자면, 제 경험에 비추어볼 때, 지역의 마을활동가와 연계해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것이 유의미하다. 지자체에서도 생활문화나 평생교육 영역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광역 사도는 자치구 단위나 마을 단위까지 미칠 여력이 없다. 유형화된 역동적인 곳과 결합하는 데 예산을 지원하면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술강사 스스로도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규정짓기보다는, 예술가로서 마을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과 존재감을 세워야 한다.

원향미 기초 단위에서는 생각보다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예술가에 대한 요구도 다양하다. 어떤 플랫폼에서 그러한 상호작용을 담보해줄 것인가 고민된다. 예전에 주민자치센터 동장님에게 상담 요청을 받았었다. 건물주가 자기 건물을 공유공간으로 지역사회에 열었는데, 마을 카페와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동장님에게 물어보았고, 동장님은 저희 재단으로 문의한 것이다. 저희는 지역의 초등학교와 지역 예술단체를 연결해 코디네이팅해 줄 수 있었다. 또 부산시 교육청 주관 마을교육공동체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에서 함께 할 예술가들을 찾지 못했을 때, 저희 재단에서 기관과 예술가를 연결시켜 주었다. 기초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플랫폼으로서 긴밀하고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다. 지역에서 커뮤니티 기반으로 이러한 다양하게 시도하고 실험해볼 수 있는 느슨한 구조의 지원사업들이 좀 더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시민의 일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틈을 발견하고, 마이크로(micro) 한 데서 고민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소외계층으로 집중되어 있는 지원의 방향이 생활권 단위의 문화예술교육으로 확장되었을 때, 학교 또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제3의 공간이 되고, 마을의 갤러리, 카페, 책방도 충분히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역주민 간담회에서도 많이 나왔던 요구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서 일

상적으로 문화를 즐기고 싶다는 것이었다. 주민자치센터는 6시에, 학교는 4시에 문 닫아버리는 현실에서, 지역에서 커뮤니티 활동,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인지 고민해야 한다. 또 주민자치센터나 학교 같은 공공공간을 지역에 더 열 수 있는 것까지 마이크로 하게 고민을 시작하면 좋겠다.

서민정 저희 경험을 중심으로 매개자 역할에 관해 얘기하자면, 저희는 지역의 창작자를 발굴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어떤 창작자들이 있고, 어떤 것들을 나누고 싶은지, 그리고 예술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하고 싶은 작업 등의 리서치 과정에서 코디네이팅하는 작업을 만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수혜자를 설정하고 예술가들이 거기에 맞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나누고 싶은 것을 찾는 과정에서 매개자와 함께 프로그램을 구성해나간다. 이러한 방식은 예술을 수혜나 복지의 개념보다는 창작과정을 만들어가는 워크숍 같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매개자의 역할은 창작자와 지역사회의 중간에서 코디네이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활동 중에는, 지역 청년 창작자들과 상인이 함께한 경험이 있다. 상인들은 청년들에게 요리법을 가르쳐주고 음식을 나누었고, 청년들은 요리를 배우고 그림을 그려서 레시피북을 만들고 지역의 요리법을 같이 나누는 식으로 창작과정을 만들어 갔다. 지역에 이슬람 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스스로 지역을 어둡게 만들고 슬럼화시키는 존재로 의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들의 문화를 지역에서 춤으로, 언어로, 그림으로 나누면서 동네 친구가 되어 갔다. 청소년들은 지역에서 불편한 요소를 미디어로 담아 동네 뉴스를 만들었다. 이러한 활동들은 목적사업에 맞춰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지역의 매개자들이 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찾고 함께 바꿔나갈 필요에 의해 제안된 것이다. 도시와 농촌은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지역과 매개하고 연결하면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운영하면 좋겠다.

기초와 광역, 수직 관계가 아닌 역할 구분

김미정 기초센터가 설치된다면 광역센터와는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광역센터에서 그동안 잘 안 되었던 역할은 광역 단위의 문화예술 전반의 정책 수립이다. 광역센터는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에 대한 방식의 변화를 담보하면서 진행하고, 기초센터는 기초 단위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를 모아내고 실현해나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은 수직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로서,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고 싶다. 작년에 했던 파견사업을 돌아보면, 실제로 교육청과 뭔가를 진행하는 게 힘들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학교를 접촉하고 학교와 함께 사업을 진행했다. 학교는 지역사회 내에서 큰 영역을 차지하고,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 큰 범주로 볼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교육청과의 연계가 아니라 학교 개별로 보면 하나의 큰 덩어리이다. 그래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추진할 때 예술강사만 파견하지 않고 연구모임을 조직하고 상호 모니터링할 수 있게 했고, 파견기관과 상호 협의하면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많이 투입했다. 이렇게 공급자와 수요자, 중간매개자가 함께 참여한 사업은 좋은 결과로 나타났고, 참여자들의 만족도와 반응도 좋았다. 아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꾸준히 연구하고 서로 피드백할 수 있는 과정이 설계되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주력 콘텐츠를 기반으로 다른 영역과 융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는데, 이러한 부분이 잘 되었던 것 같다. 실제로 통합교육의 시너지는 엄청 컸다. 학교의 고정된 시간표가 아니라, 통합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유연한 방식을 찾아내서 교육과정을 변화 시켜 나갔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나가

면서 진행해서 가능했던 부분이다. 그리고 예술교육 종사자의 노동에 대한 보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우리 시에서도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진흥원의 기준으로 정하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은 현실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현혜 저도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이 중요하다. 문화예술교육은 더욱더 그렇다. 안타깝게도 기획인건비 지급 기준이 낮아 유능한 기획자를 끌어오기가 쉽지 않다. 기획자들은 예술강사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문화예술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을 구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하니 워크숍에도 참여해야 하는데, 일비 2만 원 받으려고 50만 원짜리 강사로 포기하고 여기에 왔다고 농담처럼 얘기하기도 한다. 문화예술교육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서 참여하긴 하지만, 생활의 부담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예전에 저는 민간단체에서 낮은 수준의 인건비를 받으며 사업을 하다가, 기초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되면서 10개월 월급을 받게 되었고, 그러다가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되자 12개월 월급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되니 온전하게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 현장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또한 지역문화예술의 질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김정주 저도 동감한다. 저희는 부산에서 2003년부터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해 왔다. 초기에는 콜라보(collaboration)도 해보고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열의가 떨어졌고 주변에서도 사업을 포기하는 단체들이 많았다. 공모사업 심사를 받을 때면 상처를 받고 기분이 상하기도 한다. 트렌드에 따라 심사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 잘해오던 사업을 좀 더 개선해서 지원했지만 선정되지 않아 낙심했는데, 다른 공모사업에 그 사업을 지원해서 우수단체로 선정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래서 심사 방식에 의문이 들었다.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고, 현장을 이해하는 심사위원의 선정으로 납득할 만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사업의 수혜 대상을 견고하고 세밀하게 설계해 놓으면 현장에서는 맞지 않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마을에서는 아동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요구하는데, 정작 문화예술교육에 관심 없어 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억지로 모집하여 교육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은 학교교육과는 다른 구조로 가야한다. 틀을 짜놓고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대상의 요구에 따라 변화 발전할 수 있는 좀 더 유연한 구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진흥원의 지원시스템과 별도의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제안사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

서민정 생활문화지원사업은 3년 연속사업인 반면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1년 사업으로 분절적이다. 파견 방식은 맞지 않는다. 지역 현장에 있는 매개자, 기획자, 예술가들이 유입되는 방식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무엇보다 사회적 가치,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연속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몰입하고 실현하게 하는 ‘가능성’

박진명 저희가 꿈다락 사업을 안 하는 이유는 이것을 일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다섯 개의 수업을 해도 월수입이 100만 원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문화예술교육사 파견사업은 매칭해서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준다. 그들이 수행하는 프로그램도 3천만 원 규모에 한두 개 정도다. 그런데 사회문화예술교육 현장은 오랜 경험과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5만

원도 안 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잡는다. 자체적인 기준도 안 맞다. 내부 기준을 점검하고 외부와도 비교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원 기간 문제도, 예술꽃씨앗학교 사업의 경우 4년 연속지원을 하기 때문에 4년간 아이들의 변화와 학교의 변화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꿈다락 사업은 1년 단위로 지원을 해서 수행단체와 대상도 계속 바뀌고 단발적으로 끝나고, 질적 계고를 염두에 둘 수 있는 체계가 아니다. 예산 구조도 유연하게 만들고, 방식도 좀 더 실험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들이 몰입할 수 있게 하면서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기초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선적으로 선결해야 하는 것이, 다년간 연속지원을 통해 다양하게 실험하고 좋은 모델들을 만들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진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회’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더 확실해졌다. 지원 근거나 대상을 설정할 때, 준비하고 기획할 때, 향후에 영향력을 어떻게 펼칠지 고려할 때, 사업의 목적에 집중해서 문화적 접근과 예술적 경험이 교육으로 지속될 수 있는 설계를 해야 한다. 공통의 문화를 이루는 집단으로서 사회는 지리적 혹은 지역적 공통분모일 수도 있고, 쪽방 같은 사회적 이슈로 범위를 열어둘 수도 있다. 거기에서부터 리서치가 시작되어야 하고, 지속 가능한 맥락 속에서 기획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에 ‘지역문화’가 들어간 어떤 사업 현장을 본 적이 있었는데, 잘 밀착되어 있지 않고 이질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리서치를 토대로 지역의 이해와 해석이 이루어진 기획 속에서 참여자들이 각자의 해석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퍼져나갈 때 영향력이 발휘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1년 지원사업은 문제가 많다. 성과가 축적되고 심화될 수 있도록 양적 변화에서 질적 변화로 전환할 때이다.

박효진 문화예술교육 공론화가 시작된 작년 10월부터 분과별 전문가 회의를 20회 이상 다녔다. 세 차례 연속해서 사회분과 원탁회의에 참석해서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동안 이러한 논의 자리가 여러 번 있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말에 안타까웠다.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사업구조 개편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민룡 현실을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광역재단 간부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이 뭐냐고 물어보면 교수-학습 활동이라고 답한다. 이렇게 굳어진 인식이 유연하게 바뀔 수 있을까? 공론화를 위한 사회분과 회의를 세 번째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수월성과 대중성 부분이다. 일단 강사와 기획자를 포함한 사업 수행 주체는 수월성이 있어야 한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과 장소도 수월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수월성을 가지고 만나는 대상은 대중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보편적 문화권으로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이 확장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문제가 숙제가 있는 것 같다. 지난 원탁회의 때 토론자분이 종이접기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 얘기하셨다.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그 프로그램이 예술적으로 종이접기가 될 수도 있고, 종이접기를 매개로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종이접기를 어떻게 잘할 것인지만 얘기하고 있다. 즉, 교수-학습 프로그램만 고민하다 보니 답이 안 풀리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주체를 튼튼하게 세우는 쪽으로 논의를 가져갔으면 한다. 예를 들면, 저는 한정식보다 가정식 백반을 좋아하는데, 제가 말하는 주체의 전문성은 가정식 백반 요리사를 얘기다. 가정식 백반 요리사는 많이 배운 사람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대중의 입맛에 가장 잘 맞추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기존에 모든 음식을 한정식으로 생각했던 것을, 가정식 백반에서 한정식을 맛볼 수 있는 구조를 상상해봤다. 그렇다면, 우리가 맛있는 가정식 백반집을 동네마다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과 체계가 필요할까? 유능한 요리사를 발굴하고 그 공간을 동네마다 두면 되지 않을까?

여기서 한정식은 기존 예술교육의 예술 구조이다.

류기정 쓴소리를 두 번이나 했지만, 그동안 진흥원이 해왔던 시도들은 상당히 혁신적이었고, 공감대를 얻기 위해 현장과도 부단히 소통하고자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관료화된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그때의 감각을 다시 찾고 보완해 나가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재순 긴 시간 많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다. 공론화의 자리를 통해 오간 논의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 전라권

일시	2020.1.21.(화) 14:00~16:30	
장소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중소회의실 307호	
사회	김재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시민교육본부장)	
발제	정민룡 (광주 북구문화의집 관장)	김재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시민교육본부장)
토론	고길섭 (고창군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김수재 (전남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교육팀 주임)
	김혜일 (문화공동체 아우름 대표)	모상근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케팅팀 팀장)
	임영규 (전 전남문화예술전문위원)	임진아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 팀장)
	임현수 (지리산씨 협동조합 대표)	정혜영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팀장)
	추말숙 (연극분야 예술강사)	

사회분과 전라권 원탁회의에는 전남·전북·광주 지역 문화재단 관계자와 지역 문화예술단체 대표, 기획자, 지역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의제 발굴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임진아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 팀장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의식과 제안한 개념적·조작적 정의에 동의하며, 문화예술교육에서 ‘예술적 방식’에 더 집중하는 것이 평생학습, 동아리 사업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예술교육의 일상적 접근에 있어 원하는 장소, 시간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개개인의 성향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기관이나 공공시설처럼 제약이 있는 공간이 아닌 예술가의 공간을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로 확장하는 것을 제안했다.

임현수 지리산씨 협동조합 대표는 문화예술교육의 프레임을 넘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학교(교육청), 지자체, 복지관 등 각각의 시설에서 서로 다른 틀과 활동으로 오랜 시간 유지해왔으며 정체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주체와 객체, 학교와 사회, 교육과 실천의 벽을 허무는 과정에서 혁신이 나온다고 말했다. 문화예술교육의 단위와 역할에 대해서는 예술가들의 생계 보조나 사교육의 변형이 아닌 지역교육의 주체를 형성하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자원과 주체가 문화적 자본화될 수 있는 수평적 거버넌스가 모범적으로 이루어져 지역 중심의 생태계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영규 전 전남문화예술전문위원은 사회공동체를 문화예술교육으로 매개하는 시민교육으로서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의 질, 방향성 없이 비슷한 프로그램이 계속되는 문화예술교육의 홍수로 참여자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으로 그들의 필요나 요구에 대한 더 많은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측정

모상근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케팅팀 팀장은 구조적으로 하나의 질문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보았다.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전체를 아우르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복합적 지원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좀 더 촘촘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가치, 파장에 대한 평가 틀 등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길섭 고창군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은 ‘사회’, ‘교육’, ‘문화예술’, ‘가치지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지금까지 은유화하는 방식으로 진화해왔고, 이번 공론화 과정은 지금까지의 개념과 방법을 넘어서는 모색

으로서 의미를 쫓았다. 자치분권-지역문화분권 시대에 맞게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의 질문 또한 도시형 질문에서 벗어나 농촌에 맞는 질문과 설계가 필요하며, 접근성 및 수월성 또한 농촌의 문화예술 활동과 생활세계(생활양식)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말숙 연극분야 예술강사는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활동하며 생활문화나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다른 점을 느끼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편, 오랫동안 함께 해 온 연극동아리 회원들이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주체로서 활동하게 된 데에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하며,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이 있으면 그 안에서 무언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개인과 마을의 공동체성이 회복될 수 있음을 이야기했다.

김수재 전남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교육팀 주임은 2016년 이후 학교 문화예술교육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전남 지역의 상황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 개편 없이 사회/학교문화예술교육 통합이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를 덮어두기 위한 방책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문화예술교육이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경직성, 의무교육의 관점을 벗어나 자유로운 공간, 시간,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며, 사회문화예술교육은 방식, 장소, 대상의 자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생활문화사업 영역과 문화예술교육 사업 간의 통합 필요성, 고령화 세대의 건강한 문화 만들기 등 일상의 문화적 관계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만드는 것이 사회적 변화를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이라고 보았다.

김혜일 문화공동체 아우름 대표는 교육이 아닌 배움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쫓았다. 실제 현장에서 학습이 아닌 상호 경험이 일어나는 교육을 인지하고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한계도 있다고 했다. 그 대안으로 무형식의 교육방식도 지원하여 역량을 키워내는 제안에 동의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함께 공유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했다. 규격화하지 않는 열린 태도를 확산하고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개념을 인식하고 경험하며 공유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교육의 대상에 관하여는 기존 소득분위별 하위계층을 대상으로 했지만, 문화적 감수성 면에서 보면 모든 대상을 문화적 취약계층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보았다. 문화예술교육 경험의 기회 면에서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런 면에서 대상의 확장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혜영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팀장은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 ‘배움’은 서로 교차 되어야 하며 수혜자가 창조자가 되는 단계까지 왔음을 강조했다. 광주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에서 시민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이 85.3%로 나온 자료를 인용하면서, 홍보, 사업예산, 프로그램 수, 대상층의 범위가 아직은 좁다고 판단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사회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접근성뿐만 아니라 생애·계층 통합적, 장르 통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활문화사업은 예술가가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하듯이 생활문화(동아리)도 통제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토론

김재순 지금까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의제발굴을 위한 발제와 각자 준비한 토론을 들었다. 지금부터 종합토론으로 이어가겠다.

정혜영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체성에 대해서 세 가지 정의에 대해서 공감한다. 그리고 「광주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에서의 정의도 덧붙여 보았다. “한 개인이 전인적 존재로서 성장하기를 지향하고 인간과



자연의 분리, 개인과 세계의 분리, 이성과 감성의 분리, 교육과 삶의 분리를 지양하면서, 이를 통합시키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총체성을 확보함으로써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지금 현재 사회문화예술교육은 각각의 개인이 전인적 존재로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 중 하나로 생각한다.

임진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체성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장소 개념으로 학교와 분리되었다는 것은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학교가 사회의 하위 개념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장르 중심으로 폄하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사회 영역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저는 문화사업부에서 일하며 문화예술교육의 교육적 방식을 현장을 통해서 배웠지만, 다시 또 큰 영역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아닌, 사회문화복지 차원의 사업을 하고 있다. 현장에서 혼용되는 측



면도 있지만, 문화예술교육은 결국 예술성이 더 강조되면 좋겠다. 예술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적 감수성일 수도, 교사로서의 예술가일 수도, 예술가의 공간일 수도 있다. 이 일상적인 문화예술교육 환경은 기관 중심이나 시설 중심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결국 콘텐츠로서의 지역에 술가, 지역예술공간, 예술적 언어를 계속 문화예술교육으로 끌어 들어야 한다. 개개인의 수요, 요구가 반영해서 사업이 설계되려면 중앙주도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지역의 여건에 맞게 사업이 설계되어야 한다. 스스로 사업을 만들고 사업설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율기획사업도 심도 있게 논의되면 좋겠다.

임현수 작년부터 구례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구례교육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지원을 구상했다. 이것을 바탕으로 교육부에서 ‘미래교육지구사업’이라는 것을 받았다. 혁신적인 방향으로 미래교육을 실시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이다. 지역의 문화예술교육협의회도 참여시키고 주민들과 마을 학교를 운영하는 팀들과 함께 생태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민관 거버넌스 시스템을 모색하고 있다.

임영규 사회문화예술교육은 두 가지다. ‘학교가 아닌 곳’에서 행하는 문화예술교육을 ‘문화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학교가 아닌 교육 시설, 학생이 아닌 대상에게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본다. 여기에는 교육방식이나 학교 교육과의 차별성은 언급하지 않는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이라는 교육 자체의 추구성과 정체성과 지향점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문화예술교육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저는 ‘시민교육’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이 주체가 되고, 시민이 양성되고, 문화예술교육을 매개로 하는 교육으로서 사회문화예술교육, 사회 공동체이다. 모든 교육은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조화롭게 서로 간섭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교육’은 필요한 부분이고 ‘활동’은 그 결과의 이유로 나타나는

방법으로, 활동과 교육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활동을 하면서 경험과 노하우를 쌓고, 시행착오도 겪는 것이 교육 아닐까? 교육과 활동이라는 이분법적인 개념보다는 자연스럽게 넘나들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과 ‘활동’이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모상근 오늘 주제는 크게 정체성, 방향성, 지원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인데, 두 번째 주제에 관심이 크다. 사회적기업으로서, 어떻게 주체를 만들어가고 건강하게 좋은 자원들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만들어가면서 장기적으로 발전해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의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이다. 그간 사회문화예술교육이 계층이나 장소의 범위를 한정했다면, 범위를 전체로 하고 전 생애를 대상으로 하는 방향이 사회문화예술교육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과 맞지 않을까. ‘문화예술교육 사회적기업 사회성과 측정 결과보고회’를 보면서, 예술교육이 가진 사회적 가치나 파장을 드러낼 수 있는 평가 툴(tool)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잡히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고길섭 다양한 환경변화가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근원적인 전환점을 모색하려는 시점인데, 이런 공론화 과정이 결국은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개념과 방법의 전환을 둘러싼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사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사회구성의 문제를 성찰적으로 바라봐야 할 지점이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사회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하면서도 ‘문제 해결의 과정’이라는 식으로 의미화해 왔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이 무엇인가 할 때 주체를 어떻게 형성해나갈 것인가 문제로 보면서도, 결국은 삶의 인문학적인 주체에 대한 성찰적인 과제를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계속 펼쳐나가고 제기하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오는 과정을 보면 또한 생애사적 기회 제공 등의 방식으로 의미화 해왔던 것 같다. 또 문화예술교육의 사회화 주체의 좌표 설정의 과제, 문화예술교육의 기능 전환의 문제들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정해진 곳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과정들 속에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자치분권, 지역문화분권과 관련해서 농촌, 농촌형 사회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을 다시해보자. 농촌형에 맞는 질문과 설계는 도시형과 다르게 가야 한다. 농촌형인데도 도시적인 질문과 설계 속에서 계속 대답하다 보면 공허한 것들이 많다. 도시와 농촌의 삶의 기반이나 문화예술 존재의 지형 자체가 차등적이고, 보편성으로 내세우는 도시 문제와는 다른 생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시골은 문화예술 활동이 생활 세계에 밀착해 있다. 그러면서도 문화예술교육의 감수성이 다르다. 생활 세계와는 동떨어진 자연주의적인 표현을 보편적이라고 믿고 활동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다. 한편, 관변화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문화예술 활동이 심각하게 왜곡되거나 비판적인 담론조차도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이 농촌형이고, 비판을 비난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곧바로 적이 되어버려서 사회성을 띤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힘들다. ‘언제나, 그곳에 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사실 발제문 속에 답이 있다. 저는 농촌형이라는 설계 가능성 속에서 제안을 했다. 농촌형 공동체의 문화예술 기질, 그 마을이라는 생활 세계까지 고려한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생태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문화예술 생태계 전환을 위한 사회적 수단으로써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 생태계의 전환 자체로 농촌형 지역사회 변화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마을 재생,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마을 학교와 연계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고민해볼 수 있다. 다섯 번째 이슈와 관련해서, 지방분권으로 농림부에서도 올해부터 지자체에 마을사업을 배당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농촌협약을 통해서 직접 지원

하고, 지자체의 역량과 마을 활성화에 대한 설계에 따라 사업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도 특정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 주체에 대한 협약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발전 설계를 가지고 평가 지원하거나, 행정이나 재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변화시킨다면 행정과 다른 결을 갖는 문화예술교육의 기질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거점 공간

추말숙 저는 주 2회는 학교에서 놓고, 주 3회는 사회에서 ‘규정지외인 대로’ 노인, 장애인, 일반인과 놓고 있다. 심지어는 수업이 없을 때는 제가 대상자가 되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생활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이 딱히 다르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지원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 저의 장기인 연극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며 ‘인생공동체’를 실현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이후로 수강료를 받지 않고도 계속 그분들과 함께한다. 그분들이 저와 함께 문화예술교육에 강사로 참여하기도 한다. 지역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공간 문제이다. 마을 자치에 관련한 문제이기도 하다. 커뮤니티센터처럼 이미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이용하기 쉽지 않은 곳도 있고, 일곡도서관 강당처럼 우리가 원할 때 항상 이용할 수 있는 특혜 공간도 있다. 그래서 공간이 있으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선 든다. 문화예술교육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동체성 회복이다. 생활공동체를 꾸준히 유지하고, 그 속에서 무언가 도모한다면 선한 영향력을 좀 더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김수재 사회문화예술교육이 특정 사업, 특정 대상, 특정 시설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점을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연결통로 만들기로 접근해보았다.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까지를 범주로 정한다.”라고 정의하셨는데, 이게 중요하다고 본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전남은 2016년 이후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중단되면서 학교에 문화예술교육은 전무한 상태이다. 학교문화예술교육,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선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문화예술교육이 공교육 내에서 수행하는 예술교육의 경직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접근방법론을 보면서 저희가 2019년에 진행한 ‘문화지소’가 떠올랐다. ‘문화지소’는 문화예술교육의 가장 기초단위시설인 군 단위의 기초지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나 실험을 이루고자 하는 장소로, 1군 1지소 1코디네이터를 목표로 한다. 전남은 17개 공간이 있다. 문화지소는 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대응과 변화를 반영해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지원하기 적합하다. 생활문화와 문화예술교육 관련해서는, 생활문화사업과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은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활문화사업은 대부분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화예술교육의 형태가 많고, 활동 장르가 문화예술교육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기타 영역으로 봉사나 체육활동을 제외한 예술 장르의 생활문화사업은 사회문화예술교육에 포함해서 사업 간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 혁신적인 변화와 관련해서, 저희는 세대 문제가 가장 많은데, 개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도와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일상에서 문화적 관계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혜일 전반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담론을 이렇게 재구성하고 있는 것이 좋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 관련해서, ‘교육’이 아닌 ‘배움’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이다. 현장을 보면 자연스러운 배

움과 학습과 상호 경험이 일어나는 교육을 인지하고 과정을 설계해 기획한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 결국 현장에서 이 개념들을 어떻게 스스로 학습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예술가, 기획자, 예술강사들은 이 부분을 프로그램이나 교육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기획하는 것에 한계를 느낀다. 그런 대안으로 무형식의 교육 방식도 지원했다. 이러한 경험이 쌓이고 공유되면서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거라고 본다. 얼마만큼 균형을 가지고 만들어 나갈 것인가는 정책에서 해결할 문제이다.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두 번째 이슈이다. 대상의 확장을 중요시하며 2, 3, 4분위로 균형 축을 가져갔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를 고려해 대상에게 맞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소득분위별 하위계층 지원은 그들이 문화적인 감수성도 약하고 문화적인 경험도 약할 것이라는 전제에 시작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도 문화적 소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사회에서는 다 문화 취약계층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2, 3, 4분위로의 확장은 의미 있다. 다만, 그 경우 당위성보다는 또 다른 사회적 미션이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면, 진흥원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예술강사들이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 향유 개념을 넘지 못한다. 그러한 교육의 지향점에 새로운 미션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이는 사회적 미션과 이슈들을 함께 해결해나가는 것으로 지원사업의 명목을 담보해나가는 것도 좋겠다. 예를 들면, 우리 시대의 사회적 이슈가 세대갈등인데, 노인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함께 풀어볼 것이냐 하는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다.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적 미션을 차상위층과 함께함으로써 그들에게는 또 다른 미션을 도출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정혜영 사회문화예술 정체성이나 개념에 대해서 저희 센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역시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지역사회에서 학교까지를 안는 범위에서 모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총화라고 생각한다. 그런 방향으로 모든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의 ‘배움’은 상호 간에 서로 배우는 ‘배움’이 되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에서도 ‘문화예술교육이란 서로 배움의 장이다.’라고 정의 내렸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이제는 강사주도형이 아니라 수혜자가 창작자가 되는 단계까지 왔다. 서로를 배우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아닐까 생각한다. 접근성 제고 관련해서,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 향유 실태조사를 했는데, 문화예술교육 유경험자와 무경험자를 포함해서, 사회문화예술교육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겠다는 질문에 85.3%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그렇다면 홍보가 부족했거나, 사업예산이 부족했거나, 프로그램 수가 부족했던 거라고 판단했다.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 예산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예산이나 대상층 범위가 아직은 미약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다. 대상 역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이 대다수이고, 앞에서 언급한 사회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하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전반적인 삶의 총화가 좀 더 주체적인 삶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세대 통합적·생애 통합적인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에 계층 통합적·장르 통합적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활문화와 관련해서, 저는 사회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예술교육은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교육’이라는 용어로 규정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이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이야기될 수 있다. 모든 교육이 교육, 창작활동 등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반면, 생활문화는 예술가들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자율적이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예술동아리 활동지원과 교육지원사업을 지원팀에서 하고 있다. 생활문화지원사업, 생활문화동아리의 활동지원사업이다.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은 구분되어 있고, 사회문화예술교육 과정을 통해서 예술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사업의 구조상 사회문화예술교육 실천의 결과가 생활문화의 활성화라고 본다.

생활문화와의 차별성, 변별성

김혜일 생활문화와 사회문화예술교육 간 차별성, 변별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문화예술교육이 자연스럽게 생활문화 영역으로 스며들면서 문화예술교육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차별성과 변별성이 떨어졌다. 그런데 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방식, 정체성이 무형식인 교육 형태도 사회문화예술교육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자연스럽게 이것도 생활문화 영역으로 들어와서 운영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광주에서 오랫동안 해온 지역특성화 대표 사례 중에 ‘엄마 예술꽃이 되다’라는 프로그램이 저희 동네에서 진행되었는데, 문화예술교육인지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 프로그램은 좋은 성과를 냈고 충분히 그 안에서 문화예술교육적 가치를 발견했다. 강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안에서는 배움이 일어나고 경험이 일어나고, 마을공동체 안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게 좋은 모델이라고 볼 때, 문화예술교육이 생활문화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좋은 에너지라고 본다. 단, 그러려면 공간 거점이 있고 전문인력이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보장되어야 한다. 2시간 수업하고 계속 떠돌아다니는 방식으로는 지역문화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넘나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온전한 한 마을 한 공간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기초 단위에서 문화지소를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중의 하나이고, 그런 시도를 뒷받침하는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프로그램만 넘나드는 구조 안에서는 연동할 이유를 못 찾을 것이다.

임영규 창이나 개성이 예술의 핵심요소라면 문화는 소통과 다양성이 핵심요소이다. 그것이 추구하는 활동의 개념에서 보면, 모든 활동에는 기본적으로 교육이 기반이 되는 하나의 연속성을 갖고 있다. 그것을 사업적으로 나누는 것은 행정의 일이다. 그러나 생활문화가 문화 민주주의, 문화다양성이 중심인 이 시대에는 한 개의 개념으로 이해되더라도 연결 간 조화를 이루는 것, 즉 어떤 것이 매개되고 연결될 수 있는가, 그 지점을 찾아서 지원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자가 활동의 개념에 들어갈 때도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정부의 지원 예산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원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른 부처 다른 팀에서 유사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도 비슷하다.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이다. 진흥원 사업도 병렬적인데, 기술적인 체계와 맥락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단기형, 기초형 사업 지원이 있고, 단계형, 계속형 사업으로 체계를 구성할 수도 있다. 또 하나는 경력 유지형으로 지속될 수 있는 봉사활동 영역이 있으면 좋겠다. 이 사업을 네트워크나 사회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컨소시엄의 형식으로도 지원할 수가 있겠다. 이런 교육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회도 지원되는 시스템을 제안해본다.

모상근 문화예술교육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인가는 사람이 핵심이다.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인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사회적기업 형태의 조직들이 문화예술교육 쪽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지고 안정성을 가져가면서 구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문화지소 같은 공간이나 운영 주체가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형태라면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정부 정책 흐름도 사회적경제에 주목하고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문체부도 지난해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도입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성장단계별 지원 플랫폼을 짜서 지원하고 있다. 진흥원과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도 이런 내용을 포괄하는 지원 플랫폼을 고민해보면 좋겠다.

김혜일 결국 생태계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현장에 집중할 수 없을 것이다. 지표상으로 외연은 커지는

데, 현장은 왜 힘을 가지 못하는 걸까? 이 말은 이 일에 매진하는 사람이 줄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지속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렵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대부분 1년 단기 사업이고, 예산 규모가 크지 않고, 사업비 사용에 제한이 많다. 결국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통제와 감시 중심의 지원이 아니라, 생태계가 잘 작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 사업 공모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없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도 부족하다. 지원기관에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기반 마련

정혜영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생태계를 말하려 한다. 지금까지 진흥원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했던 문화예술교육은 우리나라 전체 문화예술교육의 균형 발전, 균형 성장을 위한 사업으로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지역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기반 구축사업에서 시도하고 있는, 지역별 특성화를 발전시킬 수 있고 지역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또 하나는 문화예술교육 행정체계인데, 문화예술교육 행정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발제에서 관련 조직체계를 보여주셨는데, 중앙정부 차원의 그런 행정조직 체계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있다. 그런 문화예술교육 행정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인력 양성 등을 1년 단위 공모 형태가 아닌 장기적인 플랜 속에서 설계해주시기를 바란다. 저희 센터에서도 1년 단위의 프로그램 공모 방식이 아니라, 점차 생활권역 내로 들어가서 문화예술교육 거점을 지정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거점과 프로그램과 인력이 생활권 속에서 활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배움터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문화예술교육 배움터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 국민의 균등 발전, 균형 성장을 위한 지점보다는 지역문화예술교육 발전의 지점을 더 키워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김수재 테이터에도 나와 있지만, 많은 사업이 중앙에서 진행된다. 지역문화 분권에 대한 로드맵이나 계획을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다. 지역 활성화, 지역으로의 이관, 지역의 자율성 보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야 할 때이다. 저는 2019년도에 문체부와 진흥원이 가장 잘한 것 중의 하나가, 기반 구축으로 통합예산을 내려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로 인해 지역재단과 지역센터 운영예산이 늘어나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래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남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및 정책발굴' 용역을 했다. 그동안에는 그 일을 할 만한 예산도 인력도 없었다.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지역에 대한 자율성 보장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다. 실태조사를 하면서 나왔던 안건 중 지역에서 가장 크게 얘기했던 게 지역생태계와 지역의 활동가에 대한 것을 얼마나 조사할 것인가였다. 그러나 그것을 조사할 수는 없었다. 그들을 찾아갈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염두에 두고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만들었다. 지역 활동가들이 문화예술교육적인 지식이나 지역의 이슈, 트렌드를 도출하기 위한 모임을 갖도록 지원하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 기반을 마련한 다음에, 그 기반을 토대로 문화지소로 연결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문화지소만 만들고 거기에서 알아서 네트워크를 만들라고 하기보다는, 그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통해서 생활권 단위의 지원체계가 구축되지 않을까?

교육계획도 세우고, 실태조사도 하면서 도출한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주민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인가’였다. 거기에서 문화지소가 언급되었고, 그것을 핵심과제로 추진하려고 한다. 문화지소는 1년 단위 프로그램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3년 연속 지원한다. 전남의 경우, 문화파출소를 3년 지원했는데, 4년 차에 사라져버렸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교육받은 이도 참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식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과 그들을 모아줄 사람이 필요했다. 세 번째는, 기초지자체의 협력이다. 도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장을 설득하지 못하면 기초지자체에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 공간, 사람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협력체계를 갖춰야 장기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플랜을 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토대를 만들어줘야 활동가들도 활동할 수 있다.

김혜일 정책이나 지원 이야기를 하면 네거티브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유심히 보면 지역에도 많은 자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 단위농협이나 마을금고, 인재육성기금 등 자원이 없는 게 아니다. 수요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촘촘하게 들어가도 사각지대가 생긴다. 그러한 사각지대를 찾아서 수요자 중심으로 다시 재편하는 것과 그것을 모델링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공론화도 마찬가지인데, 지역에 필요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이것에 대한 평가나 과정을 외부 전문가 및 지역 주민들과 같이하고, 지역에서도 함께 출자해서 이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매칭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에서 창의적으로 활동해보고 싶은 이들의 협업을 지원해주는 형태도 좋겠다. 마을로 청년활동가들을 보내는데, 아무런 계획 없이는 ‘내 활동’이 되지 않는다. 이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지 않을까?

지원방식 전환을 위한 행정체계

임진아 다년간 전북에서 경험한 사업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다. 창작자로 활동하다가 문화예술 교육을 시작하면서 사고의 전환이 매우 어려웠다. 향유자로서의 소외계층을 생각해야 하는 등 고려해야 할 게 많았다. 그러다가 문화예술교육적 방식을 배우고, 문화예술인 복지사업을 하고 문화 사업을 경험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좋은 체험을 연결해 예술인 복지사업을 만들었다. 예술가와 기업을 연결하는 방식이었다. 지원방식의 틀을 만드는 데는 조금 어려웠다. 대부분의 지원사업은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이 사업은 개인에게 사업비를 지급하는 시스템 실험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원방식의 틀을 한번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 개인을 대상으로 바뀌면 최종 지원실행 기관에서는 이것을 설득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너무 없다. 두 번째는, 접근방법론으로서 일상성을 고민하고 시도한 사례이다. 일상성은 시간과 공간의 문제인데, 근거리 생활권 안에서 언제든지 접근하기 쉬운 것은 예술가가 운영하는 공간이라는 답이 나왔다. 계속 창작이 이루어지고, 예술적 감성이나 태도를 배울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이 지향하는 모든 언어를 다 갖고 있는 장소이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행정적인 노력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지원받을 수 있는 트랙(track)이 없었다. 결국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를 통해서 문화예술교육 활동가의 진입 경로를 예술가로 확장할 수 있었다. 그것의 발전 형태로, 인력 양성에 어떤 주제가 필요하겠다는 수평구조의 고민이 만들어졌다. 시간의 측면에서 일상적인 접근을 시도한 사례로는 문화예술교육 클래스가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정량적인 지표로 보면 예산 대비 산출이 저조한 사업이어서 예산 확보를 위해 설득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지표화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면서 근거리 생활권 안에 옴니버스식으로 내가 원하는 교육을 불규칙적으로 들을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고민하게 되었다. 그게 결국 시간의 문제라는 것은, 공공기관의 문화공간은 6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6시 이후에도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예술가가 운영하는 공간이 답이라고 보고, 그 공간들을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행정적인 노력을 했고,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는 사업이다.

한편, 전남에서 진행하는 문화지소 사업처럼, 전북은 문화마실 사업을 하고 있다. 재단이 이 사업을 주도하여 공간설계를 해주고 프로그램도 만든다. 운영자를 선정할 때, 문화예술단체의 공간이면 가산점을 받는다. 문화예술단체는 예술을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연계해 문화예술교육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3개가 만들어졌고, 올해 2개가 더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

문체부 사업이 진흥원을 통해서, 진흥원 사업이 재단을 통해서 분배되면 다시 (민간단체에) 재교부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청년 지원사업 모델을 참고해 시민들이 스스로 원하는 사업을 만들도록 지원했는데, 신청자가 많았다. 위험요소는 많았지만, 매개 기관으로서 행정기관과 지역단체를 매개하는 경험이 고스란히 민간단체로 전해졌다. 그 사업의 원칙은 소규모, 단체 지원이 아닌 그룹 지원, 300만 원 이하 무정산이었다. 문화예술단체도 소규모에는 무정산을 도입하는 행정의 실험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논의해보면 좋겠다. 이런저런 시도 속에서 지속하는 사업도 있고, 실패해서 없어진 사업도 있다. 이 과정에서 남는 것은 공동체였다. 이것이 지역문화자원으로 안착되는 게 지역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추말숙 포용적 관점의 사업구조 개편 방안 관련해서, 차별 없이 모두가 지원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예술가들이나 예술교육가들을 선정하는 기준은 진입장벽이 높아져야 한다. 지원을 시작한 지 15년이 되었고 양적으로도 많이 확대되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맞는 수준이 있어야 한다. 생활권 단위의 지원체계 구축은 여전히 공간의 문제가 크다. 따라서 공간 지원을 확장해서 그곳을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활성화한다면 효과적일 것 같다. 생태계의 관점에서는 정말로 예산지원을 받아야 하는 곳에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철저히 해야 한다.

고길섭 제가 앞에서 농촌형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직접 협약을 통한 지원, 즉 행정이나 문화재단, 중간지원조직을 거치지 않는 지원을 이야기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의 문제가 수직적인 관계가 있다면, 삶의 생태계, 구조 변화에 따라서 수평적인 공간 분할이 일어나야 한다. 도시형·일반적·보편적 지원의 과제라고 한다면, 농촌형 설계가 새롭게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들을 어떻게 연구하고 차이점을 발견할 것인지 심층적인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장에 답을 구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제안이 설득력이 있다면 설계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한 배경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특히 농촌의 경우,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수동적이다. 그러다 보니 생활권에 밀착해서 살면서도 생활의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서 문화예술교육이나 문화예술이 지역의 생태계 자체를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아무리 시·군의 문화재단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해오던 습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농촌형에는 도시와는 다른 삶의 생태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주면 좋겠다.

김재순 앞에서도 이 이슈에 대해 각자의 입장이 있었다. 기초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가, 아니면 자율성과 유연성을 위해 현장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행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장단점은 저희도 계속 고

민하는 숙제이다.

정책사업의 대중성과 고도화·전문화

정민룡 수도권 원탁회의 마무리 발언으로 했던 이야기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이 왔다는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이 기생할 것인가, 기생의 악순환을 끊을 것인가.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기생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면 잘 기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생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지금 사회문화예술교육이나 문화예술교육에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문화예술교육이 지난 10년, 15년 동안 일종의 거룩한 헌신을 해왔다. 평생학습 영역이나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기타 등등 모든 영역에 문화예술교육적인 방법이 스며드는 거룩한 헌신을 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한테 남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왜냐하면 기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수사적인 표현이지만, 기생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이 일이 된 적이 있느냐, 즉 직업이 되어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고유한 자기의 영역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든, 사회적인 실천을 하든, 사명 의식을 갖든 문화예술교육이 일로써 자리 잡았느냐 했을 때 그렇지 못했다.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구조나 정책 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화예술교육은 현재 정책사업으로서 대중성과 수년 동안 쌓았던 경험 자체를 훨씬 더 고도화·전문화시키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할 문제인데, 그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책을 고민하는 분들은 주체의 전문화에 관심이 없다. 일단 많은 대중이 소비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수월성과 대중성이 부딪히는 문제가 있다. 일단 문화예술교육 주체인 활동가, 예술강사, 예술가에게는 고도화가 필요하다. 이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대중적으로 많이 넓어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높은 수월성을 가진 전문가들은 자꾸 대중성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다. 무조건 프로그램은 세련되고 좋아야 하고, 낮은 수준의 대중 요구 자체를 수용하는 것은 자기의 전문성을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고리를 끊으려면 주체의 전문화가 필수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가정식 백반에 비유해봤다. 대중들의 입맛에 맞는 가정식 백반이지만, 가정식 백반을 만드는 요리사는 질이 떨어지거나 하찮지 않다. 그래서 가정식 백반처럼 대중성을 확보하면서 주체를 전문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정리해보고자 했다. 기존에 지원 방식 안에서 논의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 약간 힌트를 얻은 게 앞에서 얘기하신 사회적경제의 개념, 일자리에 대한 것이다. 현재 일자리 사업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에서 아무리 기관에 배치한다고 해도 기관에서 받지 않는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틀을 놓고, 사람 자체를 만들어내고 적어도 5년 이상은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내는 방식, 이것을 위해서 문체부나 진흥원에서 어떤 행동적인 전략이나 단계가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추후 ‘문화예술교육의 거룩한 헌신’을 실제 지속 가능한 생태계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공론화 자리에서 나왔던 네 개 권역의 이야기를 전략적으로 여러 버전으로 잘 정리해서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김재순 오늘로 네 개의 권역으로 나눠 진행한 사회분과 토론회가 마무리되었다. 오늘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가지고 구체화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앞으로의 과정도 관심 가져주시고, 논의의 장에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기반분과

문화예술교육기반 정책의 의제발굴을 위한 전문가 원탁회의

일시	2020.1.22.(수) 14:00~17:00		
장소	LW컨벤션 다이아몬드홀		
사회	추미경 ((사)문화다움 대표)		
발표	추미경 ((사)문화다움 대표)	김자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장)	
발제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	안성아 (추계예술대학교 영상비즈니스과 교수)	
	김정미 (비커밍컬렉티브 대표)	홍기원 (숙명여자대학교 문화행정학과 교수)	
토론	강승진 (춘천문화재단 정책기획팀 팀장)	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손동혁 (인천문화재단/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팀장) *불참/서면 대체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	
	임진아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 팀장)	임학순 (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정시윤 (인천 연수문화재단 문화도시팀 팀장)	주성진 (문화융역추진 대표)	
	최도인 (메타기획컨설팅 본부장)	최혜자 (문화디자인 자리 대표)	
진행원	이규석 (원장)		
문체부	이경직 (문화예술교육과장)		

기반분과 원탁회의는 기반분과 위원과 관련 정책연구자, 지역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로 진행되었다. 기반분과는 지역 분권화에 따라 기존의 학교 사업 또는 프로그램 중심의 직접 사업 운영을 넘어 중앙의 정책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로서의 진흥원 고유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논의과제로 다루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추진단의 논의 현황을 발표하면서 회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간 진흥원에서 수행해온 문화예술교육 기반 정책 추진현황 및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문화예술교육 연구와 실천과제로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연수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대내외적으로 요구받는 R&D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 수행방안과 전문인력 연수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문화예술교육 지역화에 따른 R&D 기반인적 기반 이슈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은 ‘동반성장형 R&D 시스템 구축운영’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문화예술교육 R&D의 필요성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와 빅데이터 기반의 역량 강화를 제안했다. 연구·통계의 공론화 의제로 문화예술교육의 연구 기능 강화, 연구기획위원회 구성 운영, 통계 기능 강화, 동반성장형 R&D 시스템 구축,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기능 보강, 「문화예술

교육 지원법」보완을 제안했다.

안성아 추계예술대학교 교수는 진흥원의 문화예술교육 사업 컨트롤 타워로서의 R&D 주요 방향인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 조사의 종합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과 방향성을 발표했다. 플랫폼의 기본 요소인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참여·연결·상호작용과 연결을 통한 가치 창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예술교육 R&D의 결과물은 누가 원하고, 또 결과물을 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검토하면서, 연구, 교육콘텐츠 개발, 통계 및 조사 등 R&D 영역별 방향성을 제안했다.

지역화에 따른 인적기반 이슈 발제를 맡은 김정미 비커밍컬렉티브 대표는 메타 어젠다를 설정하고, 생태계, 다양성, 분권이라는 세 개의 톱니바퀴가 상호 일맥상통하고 일관성 있는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 세 가지를 어떻게 실천하고 패턴으로 만들어갈 것인지를 관점에서 분석했다. HRD 추진 시 대상화에서 당사자성으로의 전환, HRD 시스템에서 중앙-광역-기초의 역할 재설정, 진흥원의 씽크탱크(think tank)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홍기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있어 ‘어떻게’의 관점이 아닌 문화예술교육이 ‘무엇’인지 내용적 측면의 규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시대와 환경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공론의 장을 통해 정해야 하고, 문화예술교육에서 ‘전문가’ 규정은 문화기획보다는 예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에서 예술정책이 파편화된 현상이 지방에서 복제되지 않고 연결성을 갖는 가운데 전문인력 양성 의제가 다루어지길 당부했다.

문화예술교육의 미래를 모색하는 관점

이어진 토론에서 임학순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문화예술교육 R&D 활성화를 위해 진흥원이 현장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연구개발하고 지속발전시키며 서비스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예술교육 R&D 랩(Labs) 활성화 지원사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문화예술교육연수원의 전문 운영체계 및 지역협력형 연수체계 구축과, 진흥원과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통계 협력체계를 제안했다.

최도인 메타기획컨설팅 본부장은 정부-중앙-광역-기초-교육 현장으로 이어지는 체계에 정책 전달이 아닌 파트너십의 복원을 강조하며, 지역협력 서로도움 평가체계 모형을 예시로 들어 정책효과 분석 모형과 현장 성장 지원 모형을 설명했다. 문화예술교육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무엇이 생산되는지보다는 어떤 지식이 생산되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세운상가-서울시립대 산학협력을 예시로 들었다.

최혜자 문화디자인 자리 대표는 문화예술교육의 기반과 관련해서 어떤 관점이 어떤 위치에 서야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관점의 전환 측면에서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분권의 절차와 과정 및 지역 자치역량, 문제부와 진흥원의 역할 등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기존 관점과 전환 관점, 그리고 요구되는 지점을 구분했다. 한편, 문화예술교육 R&D 차원에서 미래 방향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역할 확장 등에 기여할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은 R&D 기반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유용한 정보와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통계평가 전문가의 참여, 원자료의 공개와 활용 확대, 활용한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활성화를 이야기했다. 인력양성 및 연수 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역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인력양성 및 연수 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온라인이나 모바일 연수 프로그램을 제안하며, 협력 연수체계나 타 분야와의 매개자·협력자 체계 구축은 중앙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우리가 가진(기대하는) ‘인간상’은 무엇이고,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에 대해 상상하는(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이 양성하고자 하는 전문인력에 관해 질문하며, 문화예술 전문기관인 문화재단 직원이 전문가가 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조직이 현실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명문화, 문화예술교육이 권리(문화기본권)로 이해될 수 있는 지표와 기준 마련, 독립·소수자·장애인 등과 관련한 교육콘텐츠 및 미디어·인문 영역과의 협력(각자 자기 주체성을 갖고 융합하기) 방안, 콘텐츠와 함께 가는 공간(환경의 조성)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시운 인천 연수문화재단 문화도시팀 팀장은 진흥원과 광역지원센터의 모호한 파트너십을 지적하며, 중앙-광역-지역의 접점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진흥원 조직 내에 지역문화예술교육 대응 조직의 신설을 제안했다. 인적 기반 이슈 관련해서는 진흥원의 교육연구와 연수는 더 많아져야 하고, 아르떼 아카데미의 지리적 접근성의 어려움을 광역센터와의 협력 연수를 통해 풀어볼 것을 제안했다.

임진아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 팀장은 R&D 기반 이슈와 관련하여 문화재단 내 문화예술교육팀의 역할과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라는 역할이 너무 달라 선순환 구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프로그램만 난무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지역센터와 R&D 사업을 협력·공동 추진함으로써 진흥원의 경험을 공유해줄 것을 제안하면서 중앙으로서의 진흥원의 역할을 기대했다. 인적기반 이슈와 관련해서 지역문화 전문인력, 생활문화 코디네이터 등 중앙기관에 따라 다른 타이틀로 운영되고 있는 각 제도와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의 문제, 문화예술교육 생산과 소비, 연구와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을 통해 통합적인 지원체계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주성진 문화용역주성진 대표는 저점 중심 접근에서 성장판 중심의 접근으로의 전환을 제안하며 고유성과 수월성을 이미 갖춘 활동가들의 활동을 확장하고 자극하는 데 집중해서 전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예술가의 작업방식이 연수 과정의 형식에 반영되어 연수보다 학습에 중점을 둔 프로세스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이 모두의 예술에서 개인의 취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R&D 기반 관련해서는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으로의 집중을 강조하며 데이터를 보이게 만들 것, 보고 싶게 만들 것, 데이터와 관계를 맺게 할 것을 제안했다.

종 합 토 론

추미경 이제부터 종합토론을 시작한다. 가감 없이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란다.

임학순 발제를 듣다 보니, 두 가지를 발견했다. 오늘 논의하는 연구 파트와 R&D, 연수, 통계 부분은 분권화 흐름과 무관하게 진흥원이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할 핵심 영역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기되는 문제인 지역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도 중요한 부분이다. 다만, 진흥원에서는 연구나 통계, 연수는 직접 내부에 추진체계를 구축해서 주도하는 모델이 R&D보다 강할 수 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R&D의 경우, 진흥원에서 콘텐츠 R&D를 개발해서 확산하겠다는 접근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확산할 콘텐츠의 개념을 설정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R&D 이슈를 찾고, 그것을 실제로 개발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 발제에서 언급하신 ‘Connect & Development’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지점이 R&D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도 문화기술(CT) R&D를 많이 했다. 무엇을 만들어서 내보낸다는 개념이 쉽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진흥원이 직접 하는 R&D 과제를 없애라는 뜻은 아니고, 현장 중심으로 가자는 것이다. 진흥원에서는 R&D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향후 5년, 10년간 어떤 형태의 R&D 주제들을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창조라든가 문화예술교육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통합예술 분야, 예술 분야와 비예술 분야 간 융합 등 학제적·융합적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한 테마들을 다룰 수 있겠다. 현장 중심으로

본다면, 문화예술교육 R&D 랩 같은 것을 활성화하는 지원사업을 개발해서 3년, 5년 정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 그것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로드맵 수립을 위한 R&D 위원회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 그것을 자산화하는 전략도 상당히 중요하다. R&D 랩은 대학이나 문화예술교육단체, 문화공간 등의 현장에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가 협업의 플랫폼에 중요한 역할을 해도 좋겠다. 통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파트이다. 발제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화예술교육 통계조사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야 한다. 지역과의 협력을 위한 지역문화예술교육 통계 워크숍도 필요하다.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에 통계담당자 1명 정도는 지정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이 체계가 가능할 것이다.

참여 주체의 역할이 투영된 평가 체계

최도인 2018년에 지역협력형 체계로 꿈다락 사업부터 지역특성화 사업, R&D 기반 사업이 진흥원에서 지역센터로 이관되는 시점에서 평가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 연구한 사례가 있다.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참여 주체는 네 가지 정도이다. 정책에 대한 논의였기 때문에 그중 하나가 정부이다. 정부는 가장 크게 예산을 결정하고 투입하는 곳이고, 중앙 정부에서는 예술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문체부와 진흥원이 해당된다. 다음으로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 지역재단이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이 있고, 그다음으로 실제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예술교육단체, 교육강사 등의 현장 단위가 있겠다. 이렇게 네 개의 주체들이 이 정책에서 작동한다고 했을 때, 각 주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욕망이 무엇인지를 화두로 올린다. 정부에게 국가적인 차원과 총합적인 차원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재정 투입 대비 효과를 확인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것은 문체부 차원을 넘어서는 이유로, 기재부의 예산 편성이나 중앙 정부의 정책 중요도 등이 영향을 미친다. 문체부나 진흥원에는 문화예술교육의 정책과 현장을 매개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미션이자 욕망이다. 광역재단이나 기초재단을 포함한 지역에서의 이슈는 지역과 시민의 문화적 삶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지역과 시민의 지지와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것 같다. 광역재단 이슈로 내려가는 순간 문화예술교육 자체의 고유성보다는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더 커뮤니티화된다. 정치체계가 작동하면서 시민 기반의 지지가 예산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예술교육이나 단체, 예술교육을 행위하는 주체 입장에서 보면 더 나은 예술교육을 위한 노력과 인정 욕망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그들의 경제적 삶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각각의 욕망을 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평가체계 연구에서 R&D 기반, 제도 기반, 인력양성 기반과 함께 작동하는 네 번째 축이 평가(evaluation)이다.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는데, 지역화에 대한 평가에서 ‘서로도움 평가체계’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중앙정부-문체부-진흥원-지역재단-문화예술교육 현장으로의 수직적인 평가체계라면, 평가의 목적 자체를 두 가지로 설정하는 것이다. 그중 하나는 정책 효과 분석이다. 여기에는 정책 평가 분석이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생기기 때문에 공동 평가 체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현장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과 관련해서는 현장성장지원형 평가 체계를 제안했다. 이것은 지역별로 지방정부, 지방재단, 수행단체가 진흥원 지식 기반의 지원 체계를 갖는 것으로 협력적 평가 체계이다. 창의랩 지원사업은 지역 단위의 문화예술교육 R&D로, 5개 지역재단이 선정되어 진행했는데, 제주문화재단 창의랩의 특징 중 하나가 R&D와 D&I 랩이라고 해서 3개의 주제별로 각 주제별 랩장과 청년 연구원 그룹들을 선발해서 시범 교육 개발 작업을 진행했다. 지역 단위로 내려갈수록 R&D의 성격을 띠는 정책의 측면으로 시작되었지만, 인적자원의 네트워크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었다.



최혜자 우리는 지역화나 일상화를 이야기하면서 포용과 혁신을 얘기하지만, 지난 15년 동안 문화예술교육의 중요한 관점은 성장주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성장주의적 관점이 필요했을 때도 있었고 일정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가? 현재 우리가 새롭게 재구성해야 할 문화예술교육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위치에 서야 할까는 중요한 질문이다. 이런 논의가 되어야 R&D나 인적자원에 대한 이야기할 수 있다. 현재 논의되는 내용은 대부분 문화예술교육의 역할 정립 방안, 중앙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해소와 재구성, 사회 일반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의 혁신이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되지 않고는 R&D도 인력양성도 얘기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관점을 전환할 수 있을까? 중앙의 정책이 흔들리면 지역은 혼란스러워한다. 관점을 정립하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내재화하는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잘 가져갈 것인가가 핵심적인 문제이다.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개념을 정립할 수 있을까? 광범위한 영역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하나로 개념을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가치와, 문제 해결은 분리해야 한다. 우리가 지역화, 일상화를 계속 이야기하지만, 지역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며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역재단도 연습할 시간이 필요하다. 지역재단도 지역정책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그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발휘할 시간을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으려면 이것을 프로세스로 설계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플랫폼 역할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설계해야 한다. 지역재단도 인력양성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진흥원이 이후에 R&D 또는 연구와 관련해서 주로 해야 하는 것은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을 잡고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다. 기술혁명, 1인 가구, 도시재생 등 인간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문화적 돌봄과 키움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우리 사회의 혐오와 갈등, 젠더 이슈 등에 대해 문화예술교육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의 이슈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양혜원 문화예술교육 R&D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중앙과 지역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의 현황 파악, 문화예술교육의 역할과 비전, 문화예술교육의 주체나 행위자들이 필요로 하는 솔루션의 제시이다. 중앙 차원에서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사업별 통계,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성과평가가 핵심이다. 문제는, 이런 정보들이 매년 적지 않게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써먹지 못하는 형태로 생산되고, 쓸 수 있다 해도 공개되지 않는다. 정말 유용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통계 전문가나 평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진흥원은 상당히 많은 행정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자료들이 공개되면 활용과 분석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이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철학, 담론과 최신동향에 대한 연구로, 진흥원이 핵심적으로 가져가야 할 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부족한 부분이 질적 연구이다. 5년, 10년 이상의 생애주기를 두고 문화예술교육의 중단적 효과와 변화를 기술한 질적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진흥원에서 맡아주어야 하는 부분이다.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것을 활용한 학습을 만들어내는 것도 진흥원의 중요한 부분이다. 지역 분권화 시대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역에서 담당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진다. 지역은 지역의 자원을 조사하고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의 성과를 평가하여 데이터를 축적하고, 광역 단위에서 그것들을 통합하고, 중앙에서 다시 한번 재조정되는 형태로 지역과 중앙 간의 역할분담을 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과 관련해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재정 내실화, 전문인력 역량 제고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를 통한 현장 적합성 제고, 경력개발을 고려한 연수체계 설계가 중요한 요소이다. 문화예술교육의 목표와 철학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전문인력 양성의 의미는 감소된다. 문화예술교육의 수요 또한 상당히 가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창조적인 혁신을

선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과 지역 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실행해야 한다. 기존과는 전혀 다르게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서 인력양성과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게 지역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력양성과 연수 과정이다. 기초연수부터 심화연수까지 단계적으로 지역에서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과 중앙 간 협력연수, 소규모 자발적 학습모임, 통합 워크숍도 효과적이다. 교육이나 복지, 민간 문화센터와 같은 타 분야의 매개자, 협력자에 대한 연수 기능도 단계적으로 중앙 단위에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과 지역 간 협력 연수체계, 타 분야와의 협력체계 구축, 연수 가이드라인 개발과 연수 과정 맵핑, 커리큘럼 개발과 보급 등은 중앙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람 중심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손경년 기초재단은 이론과 현실이 고스란히 눈앞에 드러나는 곳이다. 예술정책이나 교육정책이나 문화정책 등은 지역으로 올 때 각기 다른 기관을 통해 전달된다. 교육은 진흥원을 통해 내려오는 등, 중간기구를 통해 지역으로 오면서 이것이 통합되어 적용되는 곳이 지역이다. 기초단위의 지역은 소위 중앙에서 오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퍼포먼스가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어떻게 그 각기 다른 개념에 함몰되지 않고 전체 삶 속에서 융합 시켜 나갈지를 고민하게 된다. 저희는 사업할 때 항상 이렇게 질문한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인간상을 갖고 있는가.” “열심히 공연도 하고, 교육도 하고, CoP도 하고, 오케스트라도 하고, 다 하는데, 이를 왜 하며 무엇을 기대하지?” 우리가 타인에게 ‘왜(why)’라고 질문하는 것과 ‘누가(who)’라고 질문하는 것은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진짜 사람에 대해 깊이 생각했는가 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 사람 중심인 국가를 만들겠다는 「문화비전 2030」을 보면서 국가는 도대체 어떤 사람, 어떤 인간상을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 나는 국가가 원하는 사람인가? 되돌아가서, 우리가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생태계는 무엇일까? 현재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관점이고 당대의 인식수준을 의미할 텐데, 과연 우리의 인식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짚어봤는지 궁금했다.

전문인력 이야기가 나오지만, 문화재단 직원들이 지역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공연기획 과정에서 협력기관 하나를 선택하려 해도 현재의 기준에 의하면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외부 심사위원회 의해서 선정된다.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해 전문적 역할을 해 주는 전문기관으로 문화재단을 만들었지만, 재단의 인력들이 전문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이런 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 전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이반 일리치가 이런 말을 했다. “나는 20세기를 인간을 불구화하는 전문가 시대라고 명명할 것을 제안한다.” 전문가라고 명명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다소 급진적인 의견으로 보인다. 몇 가지 사례를 찾아봤다. 지역에서 열심히 개념을 받아들여 진행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문화다양성이다. 문화다양성은 교육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자주 언급하는 맞춤형이라는 말은, 내가 배우고 싶지 않은 것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갈 수 있고 관계 맺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게 이루어지는 사례를 찾아보니 옛 우리의 서당교육과 비슷하였다. 서당교육은 가르침의 기본원리는 동일하지만, 교재, 교육과정, 교육방법은 서당을 이끌어가는 훈장의 방침에 따른다. 그래서 각각의 교육을 통해 개인은 자연스럽게 다양성을 획득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서당에서 교육하고자 하는 인간상은 개인이 선택한 공부와의 관계가 아니라 방향을 만들어가면서 동시대의 서당들이 같은 경로를 갈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교육방법과 다양한 전통이 나오게 되고, 사람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스승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지를 넓혀준다는 것은 자기 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다양성에서 중요한 점이 이런 것은 혹시 아닐까 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어떤 교육방법을 통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지역에서 고민하고 있다.

평가 관련해서 언급하신 ‘배움과 익힘’이라는 말을 우리도 쓰면 좋겠다. 배움과 익힘, 문리(文理)와 문안(文眼)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문리는 글의 결을 아는 것이고 문안은 결을 읽어낼 수 있는 눈을 말한다. 배움을 익숙하게 하는 과정을 지속할 때 실질적으로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흐름을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 방법론을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는 교과 중심의 커리큘럼이었다면, 문화다양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뭘 해야 한다는 지시가 아니라, 방향과 틀을 얘기해 주면 지역, 혹은 재단에서는 문화다양성이든 특수성이든 혹은 인권에 대한 얘기 든 그 속에서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협조’하라고 말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협력’이라고 말한다. 자율성의 측면에서, 자기 주체성이 없으면 협력이 안 된다. 오늘 모두 ‘협력’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각자 작든 크든 자기 주체성으로 만날 수 있는 덩어리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고민하고, 이후 집단화(grouping)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때의 상황을 고려, 개념정리를 하면서 진화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정시윤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진흥원이 소속감을 주길 원한다. 광역문화재단 안에서도 소속감이 없기 때문이다. 같은 법에 의거해서 설립되었고 지자체 지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예산이 직접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밀도 있는 관계 맺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업을 계획하거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읽을 때는 진흥원을 찾게 된다. 그래서 진흥원에게 광역센터란 무엇인지 묻고 싶다. 광역센터를 진짜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걸까? 앞서 발제와 토론 자료에서 광역센터 혹은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모두 진흥원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만 읽혔기 때문이다. 이전에 지역협력형의 형태로 꿈다락 사업과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할 때는 사

업담당자 간 밀도 있게 만났는데, 예산이 지자체로 넘겨져 내려오고 난 이후부터는 애깃거리도 사라졌다. 그래서 진흥원 안에 지역을 위한 대응 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R&D팀 안에 광역센터에 생산되는 정보만이라도 먼저 해볼 것을 제안한다.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에도 꼭 나온다. 「지역문화진흥법」에도 지역문화재단의 위상과 역할 강화가 언급된다. 현장에서도 진흥원과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긴밀한 관계가 만들어지면 지역에서 역할과 활동하기 좋은 여건이 만들어질 것 같다. 광역센터는 예산 운영과 인력구성에서 자율성이 있는 편인데, 지역재단 안에 가둬두면 다른 팀과의 형평성 때문에 제약이 있다. 인적자원 이슈 발제에서, 진흥원의 백화점식 아카데미를 반성적으로 분석하셨는데, 오히려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연구와 교육기관은 진흥원 한 곳이다. 일단 양적으로 더 많이 늘리고, 연후에 정리해가면 좋겠다. 그리고 아르떼 아카데미의 접근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광역센터, 지역의 문화기관과 연계해 지역의 접근을 늘려가면 좋겠다. 또 하나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해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력양성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이 만들어지면 현장 진입과 전문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겠다.

임진아 많은 부분 공감한다. 지역화 얘기가 나오기까지 진흥원은 중앙과의 관계에서 얘기하겠지만, 저희 센터나 재단은 진흥원과의 기억이 있다. 지역센터가 2012년에 만들어졌는데, 당시 지역센터는 예술장사 사업의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이 컸고 내부에 그만큼 열정이 있었다. 그런데 2년이 흘러 지역특성화 사업과 꿈다락 사업을 얘기하다 보니, 지역 얘기는 쏙 빠졌다. 이후 사업을 계속 이어갔지만,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큰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지역센터가 그 결을 유지하고 있었던 건 지역재단이 늦게 생긴 덕분이라고 본다. 그런데 막상 사업화로도 지자체의 정책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지금 중앙주도에서의 지역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역재단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했었다. R&D라는 언어로 오가는 것들이 10년간의 사례만 담아도 좋은 자료가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당시에 다른 지역의 자료들을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 자료들을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는 구조의 문제가 크다. R&D 기반 이슈에서 첫 번째로 든 생각이, 팀과 센터라는 조직의 역할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다. 한 조직을 구성하는 R&D부터 네트워크를 만들어 인력양성도 하고 사업을 했지만,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프로그램만 난무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도 나름 다양하고 선도적인 시도가 있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센터라는 용어가 맞나, 센터의 역할은 진흥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인적 기반 이슈에서는, 발제에 언급하신 것처럼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이 너무 다양하다. 다양한 해석이 허용되어야 인력양성 모델도 다양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모든 지역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광역연합회 구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접근성의 문제나 주제 다양성의 문제, 네트워크의 문제도 해결될 것 같다. 이런 기록을 통해서 새로운 슈가맨이 나타나면 좋겠다. 사장되었던 사업들이 다시 발굴되고 부상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데이터 커뮤니케이션과 성장판 중심 접근

주성진 R&D 기반 이슈에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를 만들고 가공하고 공유하는 것은 오랜 시간과 자본의 투입이 필요하다. 그러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 당장 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해보는 거다. 예를 들면, 기존에 축적된 자료를 활용해 유용한 통계를 사람들이 가장 보고 싶은 시점에 보여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언제 데이터를 보고 싶을지

상상해 보자. 아마도 자신의 필요에 의해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시점이다. 이때 공모사업 공지 화면에서 해당 공모사업과 관련된 통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원데이터 테이블이 함께 제공된다면 사용자가 훨씬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쓰임이 활성화될 것이며, 사업 기획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데이터 리터러시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상해보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누가 언제 어떤 자료를 왜 볼 것인가를 생각하고 디자인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데이터와 관계를 맺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의 이용 빈도를 추적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본 데이터는 인포그래픽으로 가공해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스스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공유하고 싶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주체가 좋은 소스를 유튜브로 만들어 공유한다면, 저작권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안전한 방식으로 참여자의 권위를 인정받는 관계를 만드는 것, 믿고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인적자원 관련해서는 올해 경기도에서 진행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연구로 고민을 전달해보겠다. 생태계 저점 중심의 접근에서 성장판 중심의 접근으로 변화를 시도해보고자 했다. 많은 시도들이 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격증으로 최소한의 질(quality)을 보장하는 방식 혹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 등이다. 현재의 뻘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 의향이 낮은 사람들이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만들고, 그들이 생태계의 성장판으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하자는 생각이다. 두 번째는, 발표의 언급과 일맥상통하는데, ‘연수’를 ‘학습’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CoP와 같이 보조적으로 사용되었던 전환학습적인 접근이 메인이 되어야 한다. 패키지여행을 가장 싫어할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예술가라고 생각하는데, 자유여행을 가장 좋아하는 그들에게 패키지여행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셋째, 사회의 탈락 시스템. 초격차 시대에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의 취향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이 될 것이다. 과거 국가의 교양, 품격에서 시작했다가 지역 공동체와 동아리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이제 더욱 개인을 중심으로 접근할 때가 되었다. 경기도에서 진행한 연구인데, 지속적으로 고유한 활동을 해왔지만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스무 명이 모여서 주제를 공부하고 학습 과정을 설계해서 하반기에 일반을 대상으로 실행 또는 연구를 해보는 구성이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못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아무 제약 없는 구조다. 이들이 반응을 보였던 것은 문화예술교육자 5명이 모여서 참여자 1명을 위해 6개월 동안 예술교육을 진행해보는 것과 같은 방식이었다. 현재 제도 하의 문화예술교육에서 불가능했던 실천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실천하게 해서 기존의 연수 프로그램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성장판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안정된 기반이 생태계를 다양하게 한다

강승진 기초 단위에서 무언가 기반을 만들어보려는 사람들의 증표는 조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기초센터나 기초문화에서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여섯 군데나 있다. 이들이 왜 조례를 만들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하나는, 중앙의 입장에서는 조례가 많아져야 자발적인 예산도 늘고 활동도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욕구를 자극하는 역할을 해준다. 다른 하나는, 안정된 기반은 생태계를 다양하게 만들어준다. 이 두 가지는 기초문화예술교육 현장과 기반을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좌표로 작동할 것이다. 2012년, 2013년에 춘천시문화재단이 진흥원의 꿈다락 사업에 적극 참여하면서 좌절을 느낀 경험이 있다. 그때부터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담론의 장을 만들었다. 그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문화예술교육 자체 예산

을 확보하고, 전용공간 부지도 확보되었다. 작년에 1인 1예술교육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지역에서 예술강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올해는 자체적으로 예술강사의 전문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 역시 참고할 만한 사례나 협력할 파트너를 구하기 쉽지 않다. 이처럼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 진흥원이나 광역에서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해주면 좋겠다.

임학순 문화예술교육 연수원 체계로 확산될 경우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내부 직원 중심 모형에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모형이다. 그래서 문화예술교육 연수 PD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하자고 제안한다. 둘째는, 연수 프로그램은 다양한 실험적인 R&D가 필요한 분야이다. 연수 프로그램 연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평가체계도 필요하다. 그래서 연구와 평가체계를 새롭게 확장한 교육연수원의 조직과 기능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 기존에 교육연수팀과 진행했던 협력형 모델에 몇 가지를 더해보았다. 사전·사후 협의과정과, 자기가 민감했던 것들을 연수 프로그램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둘째, 진흥원과 광역의 협력형 사업은 바로 체계화시켜나가고, 기초 단위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해나간다. 셋째, 지역을 소재로 한 프로젝트 개발이 중요할 수 있다. 진흥원을 중심으로 거버넌스 리더십을 가지고 가며 중앙-광역-기초의 연계망을 구축한다. 넷째, 다양한 연수의 거점이 존재할 수 있다. 민간영역의 대학, 랩, 경험을 가진 문화예술교육단체도 등이 될 수 있다. 자체 연수를 다양한 형태로 확산시키고, 컨설팅과 약간의 기획, 사전·사후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면 전체 인력에 대한 연수가 되지 않을까.

최도인 연수원 체계에서 문제는 대량생산체계에서 공급되는 것이라고 읽힌다.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거다. 실제 현장에서는 교사 인력 수요가 미스 매칭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수요공급 예측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또 하나는, 제가 참여 중인 다시세운 프로젝트도 현장학습기관의 모델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 시립대학교 세운 캠퍼스와 같이 연구를 하고 있다. 여기서도 토론에서 언급된 문제의식과 비슷한데, 저희는 프레임의 지식, 실천공동체 CoP, 학습 이렇게 세 가지 모형을 순환적으로 구조화하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가 아니라, 어떤 지식이 이 장소에서 생산되느냐이다. 다양한 형태의 CoP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미 15년간 축적된 지식의 생산, CoP의 체계, 교육체계에 지역이나 특화된 현장에서 벌어졌던 시도 등이 있다.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기획해서 무엇을 하기보다는, 생성된 것들에서 어떻게 시사점을 얻어낼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다.

논의의 지속과 실천을 위한 설계

최혜자 15년 전에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역센터를 논의하던 시점과 비교하면 지금은 환경도 많이 변하고 기반도 많이 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는 2, 3년 동안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 흐름이 지역으로 내려가서 기초까지 쭉 진행되어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논의의 프레임을 길게 짜주는 것, 이 이야기들을 계속 연결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문화예술교육이 아닐까. 이를 위해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교육활동을 통해 새로운 문제의식을 갖고 난 다음에 계속 논의하고 이러한 과정을 연결해야 논의가 적어도 2, 3년을 갈 수 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가 앞으로의 10년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논의 자체를 어떻게 핸들링하고 유지시킬 것인가에 대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양한 방식의 연구, 새로운 콘텐츠 개발방식, 방법론, 그리고 수많은 논의를, 언어를 줄이고, 상징을 만들고, 몸을 만들어나가는 과정들로 새롭게 재구성하

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구현해야 할 때다.

손경년 최근에 성인지 감수성이 증대되다 보니 이전에 느끼거나 보지 못한 것들이 보이고 느껴져서 아프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는 특정한 몇 사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문화예술교육에서도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이다. 지역문화재단에서는 제도나 교육 등을 통한 적극적인 추진을 고려하고 있으며, 문체부와 진흥원에도 함께 하기를 제안하고 싶다. 예컨대 기관에서 홈페이지나 공모 제안서를 만들어 올린 것을 보면 차별적 용어나 성인지적 감수성에 걸리는 말이 많은 것으로 본다. 우리가 무심하게 사용하는 용어에 차별의 용어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스스로 자성하는 것도 있고 참여하는 시민들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공공기관 홈페이지 사업설명 등에 사용되는, 혹은 제안서나 공지사항에 사용되는 문구 중에 차별적인 용어를 찾아보시오’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저희 재단에서는 해보려고 한다.

김정이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거의 10년째 이어오고 있으니 올드한 논의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양성은 모던을 극복하는 탈모던에 대한 선언이다. 우리는 한 번도 다양성의 시대를 살아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실천한 적도 거의 없다. ‘문화다양성’이라는 말도 다양성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에 나온 단어라고 생각한다. 다양성은 그 단어 자체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실천 방식, 그리고 모든 사고의 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 테이블에 연구자, 교육자, 기관 관계자, 예술가, 기획자 등이 함께 있는 것도 진흥원이 교육적 실천으로 가져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2~3년 동안 이런 논의를 꼭 끌어가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모든 실천은 회의 테이블부터 시작해서 이런 태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년에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종사자들 대상의 연수를 진행했는데, 그들에게 본인이 기획자라고 생각하는지 행정가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다. 행정가라고 응답한 분들은 이 질문에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재단의 10% 미만 정도만이 자신을 기획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분들만 예술에 대해 이해하는 강의와 매개활동, 그리고 전체 행정의 스펙트럼을 보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진흥원 직원들이 함께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 드린다.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많이 변해야 할 곳은 진흥원이다.

작은 변화로부터 큰 변화로 이어가기

추미경 저희가 얘기하는 전체 틀이 저는 사실 매우 부담스럽다. 기반분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가 현장에 서 일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부딪히는 현실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저의 오래된 관습과 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러한 이슈들과 조직, 혹은 정책으로 계속 확장되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동시대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 거대한 것들은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저의 결론이었다. 담론으로 극복해 가기에는 답도 안 보이고 좌절감이 앞서기 때문에, 토론에서 제안하신 홈페이지 문구의 작은 변화, 평등한 논의 테이블 등 먼저 시작해볼 수 있는 작은 변화로부터 큰 변화로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이규석 오늘 논의를 시작할 때 문화예술교육 분야 기반의 역할을 지역 패러다임과 연결 지어 시작했다. 저도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기반의 역할을 중앙기관으로서 진흥원의 고유 역할로만 바

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광역과 기초라는 지역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찾아주고 협력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진흥원이 더 중심적인 역할을 가져가야 된다는 전제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런 맥락에서 R&D나 인적자원 개발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지점을 많이 짚어주셨던 것 같다. 지역과의 발전이 중요한 이유는 중앙보다 지역이 현장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예술교육 자체가 실체와 구체를 갖기 위해서는 일상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환경을 변화시키고, 광역과 기초에서 그런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중앙에서 기반 역할로서 연결고리를 만들어나가는 태도와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이 한편으로 실행에 옮겨지고 이런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경직 사회분과는 권역별 토론으로 네 개 지역으로 다니면서 진행했다.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문화 활동과 문화예술교육을 거의 차별 없이 사용하고 있었다. 지역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가치에 너무 큰 혼돈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문화예술교육 인력 양성을 얘기하면 지역에서는 문화매개 인력과 지역문화진흥 인력과 문화예술교육 인력과 지역의 각종 박물관, 미술관, 문화시설에 있는 인력들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도 고민되는 지점이다. 지역을 다니면서 찾은 답은 ‘사람’이다. 지역의 관점에서 지역의 현안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며 학교와 지역을 연계하는 문화기획자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와 연결된 문제이다. 발제에서 언급한 예술부터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협력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해결해보자는 얘기가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논의 자체가 중요하고 활발히 일어났으면 한다.

추미경 장시간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가지고 구체화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앞으로의 과정도 관심 가져주시고, 논의의 장에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창의·융합분과

창의·융합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일시	2020.1.21.(화) 14:00~17:00
장소	바비엡 II 교육센터 컨퍼런스홀
사회	신정원 (한국예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발제	손경환 (한국예술종합학교 융합예술센터 팀장) 양혜정 (연극놀이 전문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차진엽 (현대무용가)
토론	지우영 (예하예술학교 교장) 황주선 (대진대학교 초빙교수) 황하영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기과 교수)

창의·융합분과에서는 청중이 있는 가운데 예술과 기술의 융합과 문화예술교육, 아동·청소년 관점에서 융합 문화예술교육의 접근, 무용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융합적 접근 등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진행했다.

손경환 한국예술종합학교 융합예술센터 팀장은 ‘예술과 기술의 융합과 문화예술교육’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4차 산업이 문화예술교육과 만나는 접점을 고찰 하며 변화에 발맞춰가기 위한 의제를 도출했다. 그 본질은 연결, 탈중앙화와 분권, 공유와 개방을 통한 맞춤형 시대의 지능화 세계를 지향하며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통해 현실과 가상을 잇는다. 예술가의 직관이 중요했던 시절을 넘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또는 협업을 불리하며, 새로운 관점의 예술을 상상 하게 했다. 오픈 소스와 메이커 운동이 바탕이 되는 다양한 창작의 가능성으로 새로운 예술의 형태를 가능 해보고, 기존 예술 장르에 대한 이해를 넘어 과학기술,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 분야와의 협업 능 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융합예술센터 ‘팀러닝’을 사례로 기술 기반 문화예술교육의 목적 과 이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살펴보았다. 예술과 기술 융합형 예술교육은 예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어야 하는가, 누가 가르칠 것인가, 대상과 그에 따른 수업내용과 목표에 대한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쟁점을 던졌다.

양혜정 연극놀이 전문가는 ‘아동·청소년 관점에서 융합 문화예술교육의 접근과 방향’을 주제로 예술 의 통합적 접근의 현황과 쟁점을 짚었다. 예술 장르의 전문화 교육에 집중할 것인가, 장르의 경계를 넘출 것인가. 양질의 예술교육 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예술교육가의 예술성을 개성과 독립으로 볼 것인가, 매 뉴얼을 통해 보편적인 방법론의 기술을 마련할 것인가 등 아동·청소년 대상 창의예술교육의 주요 쟁점도 일별하였다. 아동·청소년이 경험의 주체로 문화예술교육을 소비가 아닌 창조적 경험이 되게 할 수 있는가?

아동·청소년의 감각발달 지원에 대한 이해가 미디어 리터러시와 감각적 소통,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연계 방안을 논의할 때 전제되어야 하고, 예술을 중심으로 발달의 해석적인 결합이 필요하며, 창의·융합 교육을 위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차진엽 현대무용가는 ‘무용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융합적 접근’을 발표했다. 기존 공연예술의 형식을 해체하고 새로운 형태로 확장됨에 따라 나타나는 협업과 융복합 공연 등 예술에 대한 접근과 예술적 경험과 이해도의 변화를 짚었다. 감상에서 경험으로, 관객의 수동적 역할과 태도의 변화, 예술교육 대상자의 아동·청소년·일반에서 잠재적 예술가 관객의 부상은 예술에서의 융합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 장르 융합의 한계와 협력적 유대관계를 통한 가능성을 무용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창의성의 개념과 창의·융합 교육의 정의와 목적 등 창의·융합 문화예술교육 개념과 방향성의 쟁점을 논의했다.

창의·융합의 근본적인 동기와 방향, 실천의 쟁점

이어진 토론에서 황주선 대진대학교 초빙교수는 창의·융합 문화예술교육의 인재상과 함께 ‘예술의 창의성’에 대비한 ‘기술의 창의성’에 주목하며 창의·융합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 예술 창작자의 태도 변화, 예술적 소양과 기술자가 되기 위해 갖추고 추구해야 하는 방향을 질문했다. 협업 또는 예술과 기술의 만남으로 인해서 작가의 작가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황하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예술 장르 간 융합의 근본적인 동기와 방향, 융합 문화예술교육에서의 실천적 쟁점 및 정책을 지적했다. 미래 시대를 살아갈 세대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예술교육가는 어떤 준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새로운 창조의 주체이자 배움의 주체인 어린이·청소년 주체와 어떤 소통과 교류의 자산이 필요할까, 융합에서 개념과 경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질문했다.

지우영 예하예술학교 교장은 창의·융합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보편적이고 전인적인 통섭 예술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계성 지능 통섭 중심 예술대안학교인 예하예술학교로 시작해서 중고등학교로 확장된 학교의 사례를 바탕으로 융복합 통섭 교육의 효과성을 이야기했다. 연구결과로 장르 간의 전문성이 각각 융합되는 것보다 사람 자체가 융합되는 전인적인 교육적 효과를 통해 더욱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 통섭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장르와 장르의 통섭에서 새로운 구조에 대한 발견 및 교육적 효과와 경험을 질문했다.

종 합 토 론

신정원 지금까지 발제와 토론을 들어보았다. 여섯 분의 융합에 대한 아이디어가 약간 다른 것 같지만, 사용하는 단어나 설명방식을 볼 때, 융합이 목표로 하는 경계를 허물고 뭔가가 스며들어 가게 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뭔가가 발생하게 하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계신 것 같다. 이 자리는 이제까지 (창의·융합분과에서) 논의된 것을 소개해 드리고,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과정의 자리이다. 발표에 대한 코멘트, 사업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안을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다.

청중 1 (영화분야 예술강사)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와서 디지털 관련 연수를 많이 받았었다. 그런데 사실 기술적인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다. 연수만 받고 끝났고 수업에 적용을 못 했다. 손경환 팀장님께 질문하겠다. 저처럼 기술적인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흥미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기술을 다루는 분들과 작업하면 좋을 것 같다. 저는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기 힘들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손경환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실제로 코딩 능력이나 기술적인 것을 바로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연수 프로그램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중요한 것은, 그 연수를 들으셨다는 것 자체가 선생님께 가장 중요한, 호기심을 가진 매개자가 될 수 있는 소양이라고 생각한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기술과 예술의 융합에 있어서, 실제 기술자와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인프라 구축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진흥원이 예술과 기술의 융합에 있어서 가장 먼저 가져가야 할 것 중의 하나가 그런 플랫폼의 구축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아직 다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기술적 역량을 좀 더 키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기술자를 당장 만나서 그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술적으로 조금 더 알아야 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장은 제도적으로 마련해주면 거기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신정원 앞서 발표하신 부분에서 플랫폼 구축이라는 부분이, 교사가 원하는 기술을 스스로 찾아서 습득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방향을 말씀하신 것 같고, 보여주신 사례에서 팀티칭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만들어서 연결해드리는 방안으로 모색이 가능할 것 같다.

황주선 적절한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한국과학창의재단 같은 경우에는 주로 메이커 문화 확산 사업이나 관심 있는 일반인이 방문해서 뭔가를 직접 만들어보는 창작공간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기관이나 소수의 작업실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메이커 스페이스에 등록해서 공동 활동을



제안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거기에 가면 필요한 정보나 활동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다.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여건에 맞게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미디어 리터러시와 소양 교육

청중 2 (디자인분야 학교·사회 예술강사) 저는 원래 호기심이 많고 시대에 뒤떨어질까 싶은 강박에 과학 강연도 다니고 여러 강의를 쫓아다닌다. 작가로서 제 작품에 디지털적인 것을 넣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것을 가져와서 융합으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하고 있다. 무한상상 스페이스 등에 어렵게 등록하고 배웠는데, 거기서는 그쪽 전공인 분이 많을뿐더러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 뒤처지는 거다. 아두이노(arduino)에 대해 세 번 배웠는데 이제 조금씩 뉘지는 알겠지만, 쓸 수는 없는 경계선에 있다. 저는 창의·융합으로 가야 하는 방향도 맞고 T자형 인재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훈련을 키우는 게 우선이 되고 나머지는 도구가 되어서 자유롭게 쓰고 노는 게 예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런 관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다.

손경환 우선 말씀하신 것 중에, 디지털 네이티브에게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능력과 소양 교육이 필요하다는 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이다. 그러나 꼭 굳이 예술의 방법론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져가야 할 것인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미디어를 과학이나 기술적인 영역에서 다루는 것도 있으니까. 교육방법론 자체에서 예술적 소양 교육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의 체계랄까,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CPS(Creative Problem Solving,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론)를 받아들여서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이라든가 미디어를 바라보는 시선을 좀 더 확장



시키고 그 안에서 예술적인 것을 바탕으로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뒤쳐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신다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열심히 빠르게 가시는 것 같다. 아까 하신 말씀 중에 대부분 기관에서 같은 (수준과 내용의) 교육을 하고 있다는 얘기하셨는데, 보통 저희도 융합연수센터에서 팀러닝 교육을 해보면, 미디어에 대해서 비판의식은 개념적으로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기술적인 언어를 모두 습득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소양으로 습득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만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 들어서 아두이노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기술과 예술 융합형 교육의 딜레마 중 하나이기도 한데, 초급교육밖에 할 수가 없다. 중급으로 나가야 하는데, 기존 풀이 아직 안 만들어진 거다. 아직은 기반형 교육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보이고, 이러한 저변 확대를 통해 점차적으로 확장 시켜야 한다. 이들이 강사로 성장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 강사 풀도 넓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넓혀야 한다.

동시대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환경을 경험하기

청중 2 제가 디자인 강사이다 보니, 제 경험치에서 아이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싶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빨리 배워서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지금 예술강사들은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황주선 지난 학기에 대학교 조각 전공 2학년 2학기 과정으로 디지털 미디어라는 수업을 개설했다. 그들의 선배들은 아두이노 코드도 짜보게 하고 프로세싱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환경도 수업했는데, 한 학기 만에 제가 기대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수행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지난 학기는 스크래치(Scratch)나 스크래치 파생 플랫폼인 교육용 블록 쌓기 툴인 엠블록(mBlock)을 했는데, 거기에는

인공지능 인식 기능이 들어 있다. 이리저리 움직여보고 소리 내면서 한참 놀다가, 카메라에 자기 얼굴이 뜨면서 성별, 나이, 기분 등을 물으며 인공지능 서비스를 갖고 놀았다. 그러다가 이왕이면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코드, 즉 블록을 짜보자 하는 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았다. 저에게도 신기하고 기뻐던 경험 중의 하나였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단박에 전문 엔지니어처럼 하는 것은 힘들고 그럴 필요도 없다. 그냥 적절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동시대 과학기술 환경, 문화예술 환경이 어떤 것인지를 즐겁게 경험하게 하고 스스로 격차나 니즈를 찾아 나가게 하는 게 좋은 출발점일 것 같다. 조금 더 고학년, 졸업작품까지 해야 하는 학생들은 또 다른 니즈까지 갖게 되는 것 같다. 시중에 유통되거나 풀려있는 기술은 실험적이라기보다는 이미 상품화되어 있거나, 많은 부분 오픈 소스라고 되어 있지만, 광고로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완전히 무료인 오픈소스와는 다르긴 하지만 그 너머, 기술이 제공해주지 않는 것을 탐구하게 되고, 충분히 갖고 놀다 보면 해킹의 단계까지 가고, 규칙을 넘어야 한다는 자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본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저학년 때부터 엄청난 훈련을 받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런 가능성을 예술 전공 학생에게도 발견했다. 아까 엠블록 얘기를 했지만, 어떤 조각 전공 학생 중에는 스크래치로 소리 나게 하다가, 자신의 과제에 연결해보고 싶어하기도 했다. 다행히 그것이 조각이 아니라고 막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행복하게 과제전을 했다. 저는 그런 학생 중심적, 자기실현적 과정을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는 아량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교육이라서 특정한 인풋에 대한 아웃풋을 기대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꼭 전통적으로 우리가 예술과 문화의 엄격성과 전문성에 귀의 또는 기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기술적인 부분에 기여하는 예술가가 나올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창의·융합예술교육의 변화 방향과 평가 기준

청중 3 황하영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다. 창의·융합이라는 게 단순히 문화예술교육에서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입시 제도, 교육에 대한 큰 변화의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고 있다. 일본은 이미 대학입시 제도에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식 논술형 교육과정을 도입했다. 제가 보기에 굉장히 부러운 부분이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맞게 빠르게 변화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창의·융합이다. 그렇다면 현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창의·융합적 인재를 기르기 위한 토론, 협력식 수업과 논술, 서술식 평가방식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지점이나 문화예술교육으로 바칼로레아 논술형 교육과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예술에서 기술과 융합한다거나 예술 장르 간 접근을 이야기하는 게 10년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계속 모색하고 토론하고 발전하고 있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문화예술교육이 한국 대학입시 제도에 뭔가 바꿀 수 있는 부분까지도 멀리 내다보고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고민까지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황하영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설립 초기 각 영역의 전문예술가를 양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커리큘럼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지속된 지 20여년이 되었다. 어느 곳이든 20년이 넘으면 변화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끼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연극원에서도 변화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이다. 한 가지는 어떤 예술가를 양성할 것인가이다. 그동안은 기술적 전문성과 수월성에 방점을 찍는 교육이었다면 더불어 인문학 교육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인문학인가? 예술가들의 피부

에 직접 와닿고 본인의 작업과 직접 연결되어 영감을 받고, 사유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인문학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면에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 과거에도 인문학 교육에 대한 강조나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접근방식과 관련하여 어떻게 예술학교의 특성 및 학생들의 니즈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방법을 찾아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늘어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수업 안에서 실천하고 있다. 다른 한 가지는 어떤 연극을 할 것인가이다.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연극에 대한 관념적 프레임워크를 탈피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도전을 어디서부터 할 것인가이다. 현재 5개 학과로 나뉘어 있는데, 그 경계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생성적 에너지를 찾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교류하고 새로운 커리큘럼을 만들어내서 새로운 형태의 도전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어떤 예술가를 양성할 것인가와 어떤 연극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어떤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할 것인가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워낙 구조적으로 맞물려있기 때문에 변화를 줄 때 신중함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는 특성상 입시 재량권이 큰 편이다. 수능 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고유한 평가 방식을 채택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입시생들이 필기 시험에서 예술철학에 대한 강의를 듣고 논의된 주제에 대해 자기 생각을 쓴다든가, 창의적 사고를 촉발하고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과 질문들에 대한 고민과 실천도 이어지고 있다. 입시는 앞으로 필연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중 3 전 세계적으로도 문화예술교육의 평가 기준의 근거,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 등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질적 평가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다. 저희가 아산나눔재단에서 지원받았을 때 생소하게도 사회복지기관에서 세 분이 2년간 계속 오셔서 모니터링하고 설계하고 영상보고 평가했었는데, 익숙하지도 않고 쉽지 않았다. 이런 질적 평가에 대한 가치척도가 필요하고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행되고 있을까? 한국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질적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황하영 문화예술교육에서 평가의 문제는 참 어려운 것 같다.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객관화된 기준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것이 경험이고 개인의 주관적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양쪽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갈 것인가가 큰 과제이다. 한국 내 질적 평가 기준에 대해 답변하기에는 제가 갖고 있는 리소스가 부족하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린다. 다만 한 가지 더 추가하여 말씀드리다면, 예술에 있어서 평가의 문제가 굉장히 논쟁적인 지점이고, 국내보다는 오히려 해외에서 이를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다. 다만 그것이 시스템 안에 평가의 척도로 들어왔을 때, 어떤 가치와 방법을 찾아 시스템을 설득해서 운용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부딪히면 항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만약 해외 사례에 대한 논의와 궁금증이 있다면 끝나고 도움을 드리겠다.

제대로 된 장르 간 융합이란

청중 2 양혜정 선생님과 차진엽 무용가님께 질문한다. 무용, 사진이 협업하는 수업에 관한 발표를 들은 적이 있는데, 좋기도 했지만 그 경계선까지밖에 못 만나나 하는 답답함을 느꼈다. 두 분이 이전에 다른 장르와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 궁금하다. 예술가마다 경험치가 다르고, 경계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니까 다양성, 화학작용이 잘 안 일어나는 것 같다. 타 장르와 제대로 된 융합을 하려면 어떻

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다.

차진엽 융합 작업도 사례마다 다르다. 다른 장르의 아티스트와 협업을 통해 융화되는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아이디어와 컨셉으로 내가 디렉팅하여 장르를 융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로튼 애플〉 작품은 나의 아이디어와 컨셉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협력을 하였지만 공동작업이라고 할 수 있나 하는 고민도 있었고, 그래서 트러블도 있었다. 우선 그 작업을 할 당시에는 융복합이라는 말이 통용되지 않던 시절이었다. 막막하게 이런 개념으로 이러한 공연을 하고 싶은데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없어 그것을 구현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긴 시간 동안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무대가 만들어졌다. 다른 장르도, 음악이든, 무대장치든, 소품이나 의상도 필요한데, 아이디어와 컨셉은 있지만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에 구체적인 디자인은 없다. 그러나 어떤 개념이나 그림을 가지고 각 분야 전문가와의 의견을 통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작품이 만들어진다. 결과적으로 그 공연을 하고 나서 한 평론가의 리뷰에서 “이것이 융복합 공연이다”라고 해주셔서 뒤늦게 융복합이라는 단어를 알았고, ‘내가 그런 것을 하고 있었구나’ 했다. 저의 경우를 봤을 때는,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표현하고 싶은 것을 구현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왜 해야 하는지, 의미와 필요, 매체 사용의 이유 등, 컨셉과 아이디어가 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그것은 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다. 각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통해 구체적으로 발현시키기 때문에 공동작업이기는 하지만 내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도 시작 단계부터 다른 아티스트와 콜라보 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는 저에게 어떤 개념이나 의도나 주제가 전혀 없는 영(0)에서부터 시작했다. 작가의 작업이 마음에 들어서 그녀의 작업을 리서치하고 오랫동안 지켜봤었고, 그 작가의 성향을 좋아했기에 함께 작업하면 시너지가 날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무작정 공동작업을 제안했다. 어떤 명확한 방법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다른 장르가 가진 메커니즘까지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기술적으로, 장치적으로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는 제가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장르와 장르의 융합이기 전에 사람과 사람과의 융합이다. 서로 간의 많은 대화를 통해 상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무엇을 추구하는지, 어떠한 개념으로 작업을 해오고 있는지, 성향과 취향이 어떠한지 등을 파악하여 서로 간의 공통화제를 발견하여 그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 그렇게 사람을 알게되고 그 장르와 매체가 갖고 있는 특성과 방식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융화가 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무대 위에서 신체의 미세한 움직임, 어떠한 부위를 부각시켜 집중해 보여주고 싶다고 가정하자. 그랬을 때 무대 위에선 신체의 디테일을 보여줄 수 없으니 내 움직임을 줄인하여 보여주고 싶으면 카메라라는 영상의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다. 영상이랑 뭘 해봐야지가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 내가 뭘 보여주고 싶은지가 명확하면 그 매체가 선택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양혜정 거의 같은 얘기인데 분야가 다른 얘기가 될 것 같다. 저는 2001년부터 박물관, 미술관에서 수업하는 것을 좋아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리 연극도 만들며 다양한 작업을 했다. 경험이 쌓이다 보니 관심도 더 커졌다. 기본적으로는 내가 미술을 좋아하다 보니 미술 하는 사람이랑 협업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했는데 미술 작가와 맞춰가면서 공동으로 수업을 짜보기도 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야기할 때는 너무 재밌고 잘 통해서 분야를 넘어 공동의 이슈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는데, 참여자를 놓고 함께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달랐다. 요컨대, 연극을 하다 보니, 연극은 관계의 예술이어서 기본적으로는 먼저 감각을 연다. 상대방에 대한 의식을 열고 몸에

대한 컨디션을 만들어서 다음 단계로 나간다. 그런데 미술은 자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장르가 가진 독특한 몸과 감각적 컨디션에 대해 집중하다가, 오히려 타 장르의 독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꽤 오랫동안 주의 깊게 집중하면서 연구하게 되었다. 진흥원에서 4개 분야의 아티스트가 서로의 작업을 관찰하며 연구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중 미술 작가의 작업을 보게 되었다. 당시에 그 작업은 연극을 하는 저로서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프로세스였다. 상대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이 지시적으로 수업을 했다. 한 6일 동안 수업을 지켜봤는데, 끝나고 나서야 알았다.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내적 충동이나 이런 것이 잘 가이드 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포스트모던하고 어떤 매체와 만나 사고를 바꾸는 방식은 굉장히 독특했던 거다. 그래서 그 독특성에 주목하면서 제 작업이 넘어가게 되었다. 그후 류장현 안무가와 만났다. 그는 항상 파격적인 경계를 넘는 방식으로 춤 추는 것을 좋아한다. 굉장히 파워풀한 음악 속에서 자기의 경계를 넘는 몸을 일으키는 게 재밌다. 그 작가와 협력을 계획할 당시에 저는 청소년들과 이카루스 스토리를 가지고 ‘충동과 비상’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 안무가와 작업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았다. 우리는 협력에서 단순히 소재를 공유하는 것에서가 아니라 감각적 경험에서의 통합적인 테마를 끌어내고자 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 경계를 넘는 움직임, 그리고 충동하는 몸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무용분야에서는 그 작업을 하고 이후에 연극에서는 ‘비상하는 이카루스’ 신화로 연극작업을 했는데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되었다.

제가 최근 주목하고 싶은 문화예술교육의 방점, 흐름은 무엇이 장르의 경계냐가 아니라, 이 시대의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이다. 그래서 기술이라는 부분이 어떤 니즈나 목마름 때문이 아니라,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당면한 과제인데, 그 기술이 인간의 상상력과 어떤 가능성을 해방시켜주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상상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나아가 인간의 상호 관계망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측면들이다. 지금 이 시대의 어린이·청소년의 삶은 꽤 제한적이다. 입시 중심으로 몰리고, 정답화하고, 창의라는 이름으로 계속 결과물(product)을 만들어 내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과정 중심이라고 하지만 빠른 시간에 결과물이 나와서 그것이 마치 창의적 결과물인 것처럼 포장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지금 여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지? 그럴 때 나는, 연극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혹은 타 장르와 기꺼이 협업하게 해준다면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을 되게 독특한 사례로 생각을 바꾸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다. 문화예술교육에 도전하는 초심자 문화예술교육가의 고민과 내가 사회와 내 눈앞에 있는 대상에 대한 아이디어, 연극에 관심 없는 청소년들에게 의지를 불러일으키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차라리 오브제로 아이들과 주제를 탐구해볼까? 그때 그것이 과연 장르와 섞이는 것에 대한 문제일까? 등의 고민을 한다.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장르적 경계를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아이들의 삶의 차원에서 어떤 도전을 해낼 수 있을까 다시 묻고 싶다.

청중 4 (공예분야 학교 예술강사, 장애 미술 사회예술강사) 창의·융합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인데, 가치와 방향이 하나로 가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방향성이 다양할 수 있으니 각자가 가진 장점과 독특성을 가지고 그 가치와 방향성을 찾아가자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려움은 늘 있지만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방향을 스스로 찾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청중 2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예술가 간에) 만남의 시간이 너무 적어서 충분히 얘기하지 못한 것 같다. 해커톤처럼,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막 섞여 융합되는 연수와 워크숍이 있었으면 좋겠다.

신정원 굉장히 장시간 토론을 했다. 현실에서 예술강사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진흥원이 어떤 식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까 방향을 잡는 게 저희의 역할이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계속될 것 같다. 장시간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못다 한 말씀은 끝나고 개인적으로 나누셔도 좋을 것 같다. 이것으로 오늘의 토론회를 마무리하겠다.

III 부록

총괄분과

문화예술교육 담론 및 의제 논의를 위한 전문가 원탁회의

- 【발제문】 사회문화 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역할, 10대 핵심 이슈 / 이동연
- 【토론문】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김정이 (비커밍컬렉티브 대표)
 박소연 (안양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박영정 (인천 연수문화재단 대표)
 백현주 (수원평생학습관 기획실장) 신승환 (가톨릭대학교 철학과 교수)
 신정원 (한국예술연구소 책임연구원) 양혜정 (연극놀이 전문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임학순 (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조충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추미경 (씨문화다움 대표) 하장호 (예술인 소셜유니온 대표)

발제문

문화예술교육 공론화를 위한 주요 어젠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공론화 추진단장)

1.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정의

- 법률의 정의에 대한 개정과 정책현장에서 공론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상의 정의 필요

1) 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

- 용어의 혼란 : 문화교육인가? 예술교육인가?
-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은 정책 초기 때부터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

구분	관점	대상	가치
예술교육	전통적, 분과적, 장르적, 보수적 교육	문학, 연극, 무용, 국악 등 예술 장르 기반의 교육	예술장르의 역량강화 사운드, 이미지, 텍스트의 창의적 감각 확대 - 감각과 감수성 교육
문화교육	동시대적, 통합적, 탈장르적, 진보적 교육	예술 장르교육에 한정하지 않고 대중문화의 영역까지 확장 예술장르 간, 탈 예술장르, 사회적 이슈와 연계	근대적 예술장르의 경계를 벗어나, 예술 교육이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중요한 매개가 되는 것을 강조 - 사회적 이해와 소통을 위한 교육

→ 예술교육은 전통적, 문화교육은 동시대적, 예술교육은 분과적, 문화교육은 통합적, 예술교육은 장르 교육, 문화교육은 사회교육, 예술교육은 보수적, 문화교육은 진보적이란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야 함.

→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예술교육과 문화교육을 분리하는 관점보다는

“예술교육에서 문화교육으로”라는 도식적인 패러다임의 전환보다는

“예술교육의 창의성과 문화교육의 다양성을 잘 연계하여 개인의 감각의 역량을 높이고 사회의 소통 능력을 활성화하는 교육”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

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은

“개인의 감각과 사회의 소통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 상호작용의 파급 효과를 높이는 교육”

→ 따라서 이 정체성은 모호하게 이해하기보다는 통합적, 상호작용적으로 이해.

→ 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은 불변하는 본질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현재성, 사회적 가치 의미를 구하기 위한 유동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

“존재(be)가 아니라 상태(being)로”

“주어진 것(the given)이 아니라 생성(becoming)으로”

2) 문화예술교육의 정의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안) (2018~2022), 문화체육관광부, 2017.12]

□ 문화예술교육이란

- 법적 정의(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 :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으로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
 - 학교 문화예술교육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 사회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
- 균등하고 보편적인 문화예술교육 기회제공 → 모든 국민의 문화적 권리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조 제2항】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를 포괄하는 개념

□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문화적 가치	사회적 가치
미적 감성, 창의성, 정체성, 자존감, 성찰력 등	공감, 소통, 포용성, 공동체성, 사회성 등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

3) 법적 정의의 문제점

■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 학교문화예술교육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 사회문화예술교육

나. 사회문화예술교육 :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의 법적 정의는 사업으로서 정책 대상에 대한 가장 초보적인 정의에 그침
문화예술교육의 철학과 가치를 담고 있지 못함.
- 결론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의 감각의 활성화와 사회의 이해와 소통능력의 확대를 위한 창의적인 모든 교육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음.

2. 왜 문화예술교육인가?: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의 방향

- 문화예술교육은 국민의 문화권리(전-생애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의 창의적인 삶을 디자인
- 문화예술교육은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갈등해소에 기여한다.
- 문화예술교육은 창의적 문화예술 분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의 원리

- ① 문화권으로서 문화예술교육
 - 개인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는 권리
 - 문화적 기본권으로 이해

〈참고〉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

의제1 :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추진과제 5 〈개인의 문화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 지역 분권화 추진과 지역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
- 학교 예술강사 등 문화예술교육가의 지위와 권리를 강화해 문화예술교육 안정화
- 수요자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영역의 다변화
- 예술 수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강화
-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미디어교육의 활성화
- 치유와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 생활 속 자생적 인문 확산 기반 구축

- ② 감각의 활성화로서 문화예술교육
 - 개인의 감각과 감수성의 특이성
 - 사운드, 이미지, 텍스트의 경험
- ③ 소통과 공감으로서 문화예술교육
 - 교육과 체험을 통한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의 이해
 - 타자의 차이를 이해하는 감각
 - 개인 혹은 공동체의 교육을 통한 공감 능력의 확대
- ④ 삶으로서 문화예술교육
 - 좀더 창의적으로 사는 방법
 - 일상의 삶 속에 다가오는 교육
 -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의 기회

2)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참고〉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문화체육관광부, 2018.1

□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공감대 미흡

-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 개념 및 범주 등에 대한 인식 차이 발생, ‘문화예술교육의 목적과 가치의 모호함’에 관한 지적
 -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지향점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 및 공론화 필요
 - ‘지식교육’에서 ‘문화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당초 취지 고려
- 학교(공교육) 내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지위 불안정
 - 단일교과와 분야의 내용, 체계만 존재할 뿐 종합적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과 접근방식에 대한 논의와 구체적인 방법론 부재

(1) 창의적 가치

■ 창의성 증진을 위한 10가지 단계(제프리 바움가르트너(Jeffrey Baumgartner)¹⁾)

- ①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음악을 들을 것,
- ② 브레인스토밍을 할 것,
- ③ 항상 메모를 할 수 있는 노트북과 필기도구를 갖고 다닐 것,
- ④ 어떤 아이디어에 꽃히면, 먼저 사전을 찾아 무작위로 어떤 단어를 고른 후, 이 단어를 결합하여 아이디어를 정식화할 것
- ⑤ 당신의 문제점들을 정의할 것,
- ⑥ 생각이 나지 않으면 산책을 할 것,
- ⑦ TV를 시청하지 말 것,
- ⑧ 약속 하지 말 것,
- ⑨ 가능한 읽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읽을 것,
- ⑩ 두뇌를 활성화할 것

1) Jeffrey Baumgartner, “10 Steps for Boosting Creativity”, www.jpbc.com/creative/creative.php. 참고.

■ 창의성의 세 가지 문제설정(켄 로빈슨, Ken Robinson)

- 행동으로서 창의성: 창의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행동 속에서 비롯된다. 창의성은 가만히 누워 머리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수반한 것.
- 독창성(originality)으로서 창의성: 기존에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거나 생각해보지 않는 것들을 시도하고 생각하는 것, 독창적인 결과를 생산하는 상상력의 과정
- 가치로서의 창의성: 창의성은 미래를 위해 현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생각들을 제안하고 그래서 현실의 벽을 넘어서는 노력들이 새로운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 창의적 가치로서의 문화예술교육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다른 생각들을 상상하며, 색다르게 경험하는 과정

(2) 다양성의 가치

- 다양성은 한 사회의 문화적 성숙도를 평가하는 척도이며, 한 사회의 개인과 공동체 간 차이와 공존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
- 다양성은 한 사회에 살고 있는 다양한 정체성과 다양한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포함
- 다양성은 계급, 성, 인종, 언어, 종교, 성적 지향성, 지역, 세대 등 개인과 공동체의 다양한 구성 주체들을 존중하고, 그 문화와 표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
- 다양성은 획일화되지 않고, 자율성을 보장하며, 지속가능한 문화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가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안〉 제2조 정의

1.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 다양성의 가치로서 문화예술교육은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을 배제하며,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건과 환경을 이해하며, 공동체의 삶을 공감하는 과정

(3) 경제적 가치

- 2006년 프랑스 정부는 국민총생산액(GDP)에 대한 의미 있는 통계 결과를 제시
- 2005년 프랑스 국민총생산액의 40%가 기업이 아닌 원천기술을 가진 이른바 장인들에게서 나옴
- 장인들은 화이트칼라 노동자들보다도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직업인. 목공예, 유리공예, 디자인, 인테리어와 같은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부류들이 두드러지게 포함
- 분석 결과, 그 이유는 1980년대 프랑스 문화예술교육의 장기효과
- 문화예술교육은 좋은 문화예술인을 만들고, 좋은 문화예술 소비자를 만들었음.
- 문화예술교육은 공교육의 핵심 가치이자 창의적 문화예술 산업의 토대 마련

→ 경제적 가치로서 문화예술교육은 교육을 통한 개인의 창의적 잠재성을 확대하여 그들이 문화예술 분야에 생산자로 활동하는 것뿐 아니라 매개자, 소비자로 활동할 수 있는 경제적 활동의 과정

3.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확산 방안

- 건강한 현장 생태계 조성 관점의 지역 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 추진 방안
- 학교 현장 수요에 조응하기 위한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다각화 방안

1) 지역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 추진

- 지역 교육청을 활용한 지역 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ex. 서울시교육청 창의인성센터, 악기나눔 행사 등)
- 지역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ex. 아난말로형 서울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센터 연계, 지역의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 문화센터 등)
- 지역의 마을학교, 마을사업, 문화도시 선정 지자체와 연계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2) 현장 수요 기반 학교문화예술교육 다각화

- 학생들이 원하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선호도 조사
- 학교 안 문화동아리,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강화를 위한 교육
- 게임, 영상, 멀티미디어 관련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학교 안 문화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게임 머시니마 제작교육 등)

4.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념 및 정체성 재정의
- 생활문화와 문화예술교육(별도 의제설정)
- 사회문화 환경변화에 조응하는 문화예술교육 역할
: 지역 중심 체계 개편, 포용적 관점의 지원정책, 사회적 변화와 혁신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접근 방법론 : 사업구조와 내용, 지원방식 및 대상

1)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념 및 정체성 재정의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내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의의 문제점: 법률적 정의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
-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 사회와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제 이해를 위한 교육
(ex. 사회갈등해소, 기후변화 생태위기,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과 인간, 사회 양극화 등)
-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기술문화 환경에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며, 창의적 삶을 향유하는 전-생애적 문화예술교육

2) 사회문화 환경변화에 조응하는 문화예술교육 역할

- : 지역 중심 체계 개편, 포용적 관점의 지원정책, 사회적 변화와 혁신
- 혐오, 폭력, 불신, 갈등의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소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힘.
- 기후위기를 공감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생태문화적인 삶에 대한 교육.
- 기술문화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교육 (스마트사회, 디지털기술문화교육, 기술커먼스 교육 등)

3)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접근 방법론 : 사업구조와 내용, 지원방식 및 대상

-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대한 총괄평가
-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프로그램 개발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예산 확대

5. 문화예술교육의 분권화와 생활문화 정책의 연계와 통합

- 문화예술교육으로서 생활문화
-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생활문화 사업의 중복 해결
- 지역문화분권 정책의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 사업의 통합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문화체육관광부, 2018.1]

[수요자 중심의 교육 다각화]

- 문화예술교육 수요와 요구를 바탕으로 수요자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체계 개선
 - 수요자 대상화 관점에서 수요자 특성을 반영한 관점으로 전환
 - 유아부터 고령자까지 지역을 기반으로 계층별, 세대별 요구와 특성 파악을 전제로 생애주기별 보편적 기회 확대

1) 문화예술교육으로서 생활문화

- 생활문화는 아마추어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에서 비롯되어서 개인의 문화취미활동의 의미가 강함.
- 문화예술교육의 관점을 수동적인 문화예술교육에서 능동적인 문화예술교육으로 확대하는 데 있어 생활문화는 중요한 연결지점
- 문화예술교육이 개인들의 전생애적 문화취미활동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생활문화 사업과 유사한 점이 많음.
- 따라서 생활문화를 문화예술교육의 확대된 지평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생활문화 사업의 중복 해결

- 문화예술교육은 예술국 문화예술교육과가 담당, 생활문화는 지역국 지역문화정책과에서 담당
-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정책의 관점에서, 생활문화는 지역문화정책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지만, 사업의 성격과 확대발전의 관점에서는 통합할 필요가 있음.

3) 지역문화분권 정책의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 사업의 통합

- 지역문화분권 정책이 새로운 문화정책 환경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 의제로 부상
- 문화분권의 실현에 있어 국민들의 문화향유 확대는 지역문화정책의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 정책 사업을 통합하되, 사업의 영역을 지역 문화분권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두 개 과의 통합 후 지역문화정책과로 이관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6. 예술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방안

1) 문화예술교육사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취득과 활용의 실태 파악 현장 중심의 수요조사

- 문화예술교육사 수급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수립
-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과정 내실화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문화체육관광부, 2018.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개선]

- (2급 보수교육) 기배출된 문화예술교육사 2급의 보수교육 도입 등 제도개선('19년~)
- (1급 양성) 기존의 교직(교수역량) 중심에서 벗어나 교육, 기획 및 관리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사 1급 양성('19년~)
- (활용도 제고) 문화예술교육사 활동 영역 발굴 및 확산

2) 예술강사들의 교육활동 영역의 확대

- 학교문화예술교육 파견 예술강사 중심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 영역을 확대
- 생활문화 분야와 생애별 맞춤형예술교육의 확대
- 융복합 분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영역의 확대
- 직장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의 기회 확대

3) 예술강사들의 복지지원

- 예술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예술강사들의 단계별 4개 보험 실시 적용계획 수립
- 예술강사들의 강의 지원을 위한 환경개선

4) 예술강사들의 신분 안정화

- 예술강사에 대한 강사법 적용 여부 검토
- 교원으로서 예술강사에 대한 신분 안정화를 위한 인식 제고

7. 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체계 및 교육과정 혁신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문화체육관광부, 2018.1]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 문화예술교육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연구역량 강화
 -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활성화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 대국민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

1) 문화예술교육사 인력양성 교육과정 개선

- 문화예술교육사 인력양성 기관 역량강화
- 문화예술교육사 영역별 교육프로그램의 개선
- 문화예술교육사 운영과 교육과정 관련 개선 연구 추가

2) 예술강사들의 연수 프로그램의 내실화

- 예술강사들의 기존 연수 프로그램의 총괄 평가
- 체험형, 교육 방법론을 강화하는 연수 프로그램의 개선
- 예술강사들의 역량제고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의 의무화
- 예술강사 연수를 위한 전문 연수기관의 설립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문화체육관광부, 2018.1]

[협력 관계자 대상 문화예술교육 연수 체계화]

- (교원) 일반 교사 및 학교장·감 등 교원 대상 문화예술교육 연수 확대
 - 학교경영자, 교육전문직 대상 문화예술교육 인식 제고 연수 확대
 - 예술교과 및 비예술교과 교사 대상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 연수 확대
 - * 교육전문기관 및 문화예술기관 연계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 추진
- (교육대학 및 예비교원) 교육대학의 예술분야 교육과정 확대 및 예비교원 대상 연수 제공
 - 초등학교 교사 양성기관인 교육대학에 예술분야 교육과정 확대 및 문화예술기반 통합형 교육에 대한 과정 신설 협의
 - 임용고시에 합격한 초등예비교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기관과의 연계연수 제공
- (공무원 대상) 공무원(정부 및 지자체) 등 주요 정책 협력 관계자 대상 문화예술교육 가치 함양 및 정책 응용력 제고 연수 추진
- (행정기관 대상)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기관 등 행정기관 종사자의 문화예술교육 전문성 및 직무 역량 강화 연수 추진
- (교육시설 대상) 부처 협력 사업 등 문화예술교육 수혜기관 및 시설 담당자, 관리자 등 대상 문화예술교육 인식 제고 연수 추진

3) 문화예술 교육 매개자 교육의 확대

-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양성 교육프로그램 확대
- 예술교육 교육과정 개발 프로그램 강화
- 예술강사 재교육을 위한 매개 강사 교육 확대

8. 지역분권 실현으로서 기초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 방안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문화체육관광부, 2018.1]

[지역기반 생태계 구축]

□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미흡

- 중앙-지역간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및 협력체계 미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기반지원 및 협력연계 역할 강화와 함께 광역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역할 및 위상 강화 필요
 - * 중앙정부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을 지역에 전달·수행하는 것에 초점
 - * 광역 센터의 조직 및 인력 안정성 확보를 통한 거점 역할 강화 필요
 - 생활권(기초) 단위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하여 밀착화 필요
 - 지역 예술단체, 문화시설 등의 특화된 자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부족
 - 현 학교와 사회로 이원화된 문화예술교육 정책구조를 지역 내 학교-사회를 연계한 통합적 접근 필요
- ⇒ 지역 내 환경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 분권 및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 체계 구축

□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분권화로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실현

-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탈중앙화, 분권화, 지역별 특화
- 중앙-지역(광역-기초)의 협력체계 재구성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권한 및 역량 강화
- 기초지자체-생활권 단위 문화예술교육 실현

1) 기초 지역문화예술지원센터(기초센터)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연구

- 기초센터의 정의와 필요성 근거마련
- 지역 문화분권 관점에서 기초센터의 설립의 필요성
- 광역과 기초센터의 역할 관계 정립
- 문화예술교육의 지역분권 실현을 위한 전달체계로서 기초센터의 타당성과 필요성

2) 기초 센터의 운영방안 계획 수립

- 기초 센터의 기관 성격, 지정 범위와 선정 절차
- 기초 센터의 지정 원칙과 조건 검토
- 기초 센터의 규모, 역할, 운영의 장기계획 수립

9. 창의적 융·복합 문화예술교육의 확산 방안

1) 예술 장르 간 융합 관점에서 창의·융합문화예술교육

- 예술교육의 융합 교육의 유형과 모델 개발
(inter-disciplinary, multi-disciplinary, cross-disciplinary, trans-disciplinary)
- 특정 장르 중심 형 융합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음악을 기반으로 한, 무용을 기반으로 한, 시각문화를 기반으로 한 융합예술교육)
- 사운드, 이미지, 텍스트의 미학적 원리를 이해하는 융합예술교육

2) 예술과 기술 관점에서 창의·융합문화예술교육

- 미디어아트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 첨단기술(VR, MR, AI 등)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 기술 커먼스(techno-commons)에 기반한 기술공유 문화예술교육

3) 예술과 사회 관점에서 창의·융합문화예술교육

- 특정 예술장르를 활용한 사회적 문화해결 문화예술교육
- 현장 체험형 교실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분노, 혐오, 차별에 반대하는 인지적 정동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10. 문화예술교육 R&D를 위한 플랜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문화체육관광부, 2018.1]

[기획 및 연구 역량 강화]

□ 문화예술교육 연구 개발 활성화

-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Lab 구축 지원(R&D))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지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연구개발 체계 구축
 - 예) ▶ 융복합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 ▶ 예술장르 기반 일반교과와의 연계 속에서 통합형 문화예술교육과정 연구 등
 - 문화예술교육 및 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 * 예술강사, 교사, 문화예술교육단체, 문화예술교육연구기관, 대학연구소 등
 - 조사 → 연구 및 개발 → 문화예술교육 시범 적용 → 시범 사업의 평가 → 우수 사업 확산('18년 시범)
- (문화예술교육 정책 조사연구 역량 강화)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지표개발, 실태조사, 평가, 효과분석 등 체계적인 조사연구 추진
 - (문화예술교육 지표 개발) 단위사업별 상이한 실태조사 등 통일성 확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지표 개발
 - * 공통지표·특성화 지표·지역문화예술교육 지표 등
 - (실태조사 정례화) 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지속, 지역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신규 추진 등
 - (체계적 평가)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체계 마련
 - (정책 효과 분석) 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업의 효과 분석 체계화

□ 문화예술교육 통계 및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문화예술교육 통계 관리 시스템 구축) 문화예술교육 통계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수집, 분석, 발간, 공유
 - (단기) 공공영역 중심으로 : 연례보고서 등에 제시된 수치 중심 보고 → 통계자료 작성 → 문화예술교육 지표에 따른 정기 통계조사 실시
 - (중장기) 민간영역 예술교육 포괄하는 통계조사 시스템 구축
- (문화예술교육 조사통계센터 구성·운영) 문화예술교육 조사 및 통계를 체계적으로 생성·관리하는 문화예술교육 조사통계센터를 구축·운영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조사·통계*를 체계적·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지역·관계기관 등과 공유하는 전문적인 조사통계 기능을 담당, 보다 체계적·근거기반 정책 수립에 기여
 - * 수요자 조사, 모니터링, 정책사업별 통계, 전국 통계, 지역별 통계 등

1) 문화예술교육의 R&D 혁신을 위한 체계

- 문화예술교육 관련 통계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의미 있는 사회적 통계와 연계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문화예술과 기술혁명의 연계를 통한 인간의 감각 연구
- 문화예술교육의 첨단 교재 및 교육 방법론 개발
- 인지과학 중심의 교육혁신에 필요한 감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2) 인적기반 및 R&D기반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

- 문화예술교육 R&D 법 제도 기반 마련
- 미래 인간의 감성적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연구

토론문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현 단계 문화예술교육의 몇 가지 논점

1. 지역문화생태계 관점에서 바라보는 (학교)문화예술교육

- 학교와 마을의 경계를 허무는 문화예술교육
- 지역 소재 대학과의 연계방안, 청년예술가문화예술교육과 지역문화와의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2.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

- 미디어, 노인/아동 등 복지, 도시재생 사업 등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모색하고 실험하는 과정과 이를 통한 성과 도출 구체화 필요

3.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

- 주무과 및 사업 통합?
- 수요자 중심의 교육 다각화 관점을 근거로 하더라도, 문화예술교육은 주체와 대상의 구분이 명확하고 각각의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생활문화는 주체와 대상이 구분되기 이전에 겹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는 통합보다는 지역문화생태계 차원에서 상호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봄

4. 예술강사 처우개선

- 지역 대학 및 청년예술가 연계 모색(1-2 참고)
- 지역형 문화예술교육강사네트워크(협동조합) 강화, 평생학습관 및 동주민센터, 여성교실 프로그램 등 강사 활동기관 연계 모색-->정규직화 등 처우개선 방향

5. 기초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 정부-광역-기초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할 필요 있음(ex.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문화예술교육 지역특성화사업 등)
- 기초 센터의 운영 방향은 수직적 전달체계를 넘어 지역문화생태계라는 수평적 네트워크의 필요성(학교/교육청-마을, 대학-지역, 평생교육 및 주민센터프로그램 등)을 담아내야 함

6. 창의/융합문화예술교육

- 지역문화시설의 활용과 연계 방안 모색 필요
- 미술관/박물관/도서관/IT창업지원센터 등: 미디어아트, AR/VR 활용 체험 등

토론문

김정아 (비커밍컬렉티브 대표)

문화예술교육 공론화를 위한 주요 어젠다

- 실효성 있는 공론이 되기 위해서는 주요 어젠다 도출과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 대한 수렴과 정리를 해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됨.
- 현재 발제로 제기된 총 10가지의 공론화를 위한 주요 어젠다가 논의된 이후 최종적으로 어떻게 쓰일 것인지에 대한 제시가 필요함. 예를 들어 새예술정책이나 서울 어젠다처럼 선언되고 각 어젠다별 5년 혹은 10년의 중장기 전략과 실천을 마련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현재부터 진흥원의 조직개편과 사업개선, 문화부의 정책운영에 직접적 영향을 발휘하는 것인가?

어젠다 1.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정의

- 문화예술교육의 법적 정의는 사업으로서 정책 대상에 대한 가장 초보적인 정의에 그침 문화예술교육의 철학과 가치를 담고 있지 못함
- 결론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의 감각의 활성화와 사회의 이해와 소통능력의 확대를 위한 창의적인 모든 교육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도구와 수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정의하고 있음. 이러한 관점은 2번 어젠다에서도 이어지고 있음.
- 법률 개정의 단계까지 연계된 어젠다로 ‘교육’이란 단어의 적합성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란 명칭까지 함께 논의되어야 할 어젠다로 보여짐. (메타 어젠다)

어젠다 2. 왜 문화예술교육인가? 사회적 가치 확산의 방향

※ 메타 어젠다 1의 논의와 함께 연계된 하위 어젠다

어젠다 3.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확산 방안

※ 메타 어젠다 1의 논의와 함께 연계된 하위 어젠다

어젠다 4.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 메타 어젠다 1의 논의와 함께 연계된 하위 어젠다

어젠다 5. 문화예술교육의 분권화와 생활문화 정책의 연계와 통합 (메타 어젠다)

- 각각을 사업의 단위로 대상화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가치와 철학,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공론의 장이라는 설정과 문화부 조직(예술국 문화예술교육과와 지역국 지역문화정책과)내 사업의 중복이란 관점이 동시에 다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공론의 수위와 이러한 논의의 결론이 무엇을 위함인지에 대한 모호함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함.

어젠다 6. 예술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방안

※ 어젠다로 간주하기 어려움

→ 문화예술교육사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

- 사람에 대해 ‘활용 방안’이란 용어 사용은 가급적 우리 모두 공론의 과정에서 지양할 필요가 있음. 민감한 감수성을 갖고 논의 테이블에 임해야 함.

어젠다 7. 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 체계 및 교육과정 혁신

※ 메타 어젠다 1과 5의 논의와 함께 연계된 하위 어젠다

어젠다 8. 지역분권 실현으로서 기초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 방안

※ 메타 어젠다 1과 5의 논의 및 하위 어젠다7과 연계된 하위 어젠다

어젠다 9. 창의적 융·복합 문화예술교육의 확산 방안 (메타 어젠다)

어젠다 10. 문화예술교육 R&D를 위한 플랜 (메타 어젠다)

- 궁극에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일종의 ‘메타 어젠다’와 그에 영향을 받는 ‘어젠다’들이 현재 매우 평평하게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정책 실행 및 사업 단위의 대상으로서 ‘학교’와 ‘사회’란 MECE하지 않은 개념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를 ‘사회’라고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변화된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는 중층 구조의 레이어 설계가 필요함. 각 레이어별 작동하는 ‘힘’의 지점이 다르며 실천에 이르는 구조 또한 다양한 행위로 구성되게 됨.
- 결론적으로 정책 수립을 위함인지 정책 설계를 위한 논의의 과정인지 분명한 실천의 지향점에 대한 제시가 필요함.

토론문

박소연 (안양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1.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성과

지난 15년간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 주도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기반을 갖추고 꾸준히 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보편적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였다. 또한 신규 사업을 발굴 및 정착하고, 연구 기반의 사업 점검 및 개선을 통해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질을 개선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학교를 이해하는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를 확보하였으며, 이제 이들은 그 활동 범위를 확장해가고 있다.

2. 학교문화예술교육 이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 변화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민감한 정책적 이슈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이슈는 첫째, 문체부 주도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과 가치에 대한 이슈이다. 교육부의 학교예술교육 정책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문체부와 교육부의 정책추진이 병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처 협력관계 재설정과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이슈이다. 그간 양적 확장에 가려졌던 사업의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었으며, 특히 일자리사업이라는 예산확보 동력을 상실하면서 고유의 목적과 논리로 사업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셋째, 학교 현장의 요구에 대한 이슈이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적 경험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다각화 및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교육 공론화를 위한 주요 어젠다”에서는 이러한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이슈를 포함하여 문화예술교육 발전과 관련한 보다 포괄적인 어젠다들을 다루고 있다. 이 중 특히 학교문화예술과 밀접하게 관련한 어젠다를 중심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관점에서 제시한 의견을 다음과 같다.

3. 정체성과 가치

학교문화예술교육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정책적 해결책 설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과 가치에 대한 검토 및 협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의 감각의 활성화와 사회의 이해와 소통 능력의 확대를 위한 창의적인 모든 교육과정”이라는 정의는 논의의 출발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다만, 교육을 곧 교육과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수단이나 방법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향후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 문화예술교육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으로 제시된 “창의적 가치, 다양성의 가치, 경제적 가치”는 개념적으로 완결된 구조라는 점에서 훌륭한 프레임을 제시해주고 있으나, 추후 이에 대한 협의 조정 및 실질적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은 “불변하는 본질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현재성, 사회적 가치 의미를 구하기 위한 유동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바, 지속적으로 개념적 논의를 이끌어가고 시대에 적합한 정의를 제시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4. 법적 정의

모든 정책은 법적 근거를 갖고 실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적 정의는 정책 이해관계자들이 문화예술교육을 이해하는 가장 현실적인 프레임을 제공하게 된다. 현재 문화예술교육에서의 법적 정의는 두 가지 점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첫째, 장소를 기준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구분한 점이다.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해질 경우 학교문화예술교육, 그 외의 모든 형태는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생애단계별 정책 추진,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구조 설계 등의 지향에는 적합하지 않다. 둘째, 교육과정이라는 용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적 정의에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문화예술교육”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로 제한할 경우 정책대상이 학교는 학생, 사회는 전생애단계가 된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의 정책추진 프레임에 대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현시점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면 법적 정의 변경도 고려해볼 수 있다.

5. 확산 방안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지역 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과 “학교 현장 수요 기반 학교문화예술교육 다각화”가 제시되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양적 성장을 거듭하며 견고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생태계가 조성되었다. 이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훌륭한 자원이 되기도 하지만, 사업구조 변화를 위해서는 그만큼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지역 연계를 위해서는 지역 시설의 준비(프로그램, 인력 등)가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와 지역 시설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 예술강사에게 새로운 기회와 역할을 부여하고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학교의 사업추진 방식도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든 변화의 핵심은 학습자가 되어야 한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시각을 전환해서 학습자의 요구²⁾를 분석하는 데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역할을 나누는 방식으로 사업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문

박영정 (인천 연수문화재단 대표)

1. 정책으로서 문화예술교육 방향 전환과 사업구조 개편이 필요한 시점

- 시민의 문화활동 참여 욕구 증대로 예술적 표현활동을 포함한 생활문화 활성화
- 4차 산업혁명 시대(디지털 문화, 기술융합 문화 등) 문화예술교육 역할 증대
- 문화정책의 지역 기반 강화, 생활권에서의 정책 대응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
-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 개념 구분의 정비 필요 *사회 = 학교 밖 = 비학교

2. 학교 중심 문화예술교육에서 일상 중심 문화예술교육으로 전환

- 교육 과정 결합형 문화예술교육에서 생활 결합형 문화예술교육으로
- 학교에서의 ‘학령기 문화예술교육’도 그 관점은 생활 결합형 문화예술교육으로
- 창의성을 계발하는 도구로서의 문화예술교육에서 삶의 충족 과정, 삶을 즐기는 과정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으로 *문화적 권리로서 문화예술교육
- 생활공간에서의 문화활동과 연계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마을예술

3. 문화예술교육 거점 시설의 설치와 운영

- 문화예술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 전용/전문 거점공간 설치
- 기술융합 문화예술교육 실현이 가능한 장비와 공간, 전문인력 구비
- 상주 문화예술교육가와 파트타임 문화예술교육가의 혼합 구성
- 다른 문화시설(박물관, 문예회관, 문화의집 등) 문화예술교육과 연계, 협력 사업 운영

2) 일반적으로 요구(needs)는 기대수준과 현재수준의 차이(gap)를 의미하는데, 이는 학습자의 선호나 수요와는 다르다. 교육 기획을 위해서는 선호도나 수요가 아닌 요구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 ‘꿈꾸는 예술터’나 ‘거점형 생활문화센터’와 유사한 기능
- 시설형 문화예술교육과 파견형 문화예술교육의 혼합
- 기초단위 1거점시설 설치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기능 중첩

4. 생활문화와 문화예술교육의 관계 재정립

- 생활문화는 공동체에 기반한 문화활동으로 그 지향성 명확화 *마을 공동체, 동아리 등
-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향
- 생활문화 활성화에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이 있음
- 그러나 모든 생활문화 활동이 문화예술교육과 연계되는 것은 아님
- 또한 모든 문화예술교육이 생활문화로 귀결되는 것은 아님
- 문화예술교육 거점 시설에서 생활문화센터의 교육 기능과 협업하거나 지원

5. 문화예술교육 지역기반체계 구축

- 기초센터 설치 및 운영
- 지역 내,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

토론문

백현주 (수원평생학습관 기획실장)

- 문화예술교육의 정체를 “불변하는 본질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현재성, 사회적 가치 의미를 구하기 위한 유동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전제에 동의. 문화예술교육은 문서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고 운영하고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의 현장과, 현장을 구성하는 실체(혼란, 오해, 왜곡마저도: 부정과 비판에서 수용과 개선으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 현재 논의되는 개념 재설정 배경은 1)법상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철학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 2)개념(정의)의 모호함 때문에 현장 및 담론 형성과정에 혼란, 오해, 왜곡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3)유관 분야와의 적극적인 연결과 협력을 앞두고 있다는 점임.
- ➔ 그런 면에서 발제문에서 제안된 새로운 개념 정의는 원리와 가치 모두 공감되지만 각인되기에는 충분치 않아 보임. 같은 내용을 담더라도 개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문학적인 수사와 선언(선동, 감동, 유혹)이 필요한 것이 아닐지. 그 자체로 문화예술교육을 다른 것과 차별화시키게 되지 않을지. 그런 차별화전략이 필요하지 않은지.
-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제도는 개개인, 개별자 또는 각자의 삶의 양식을 존중하도록 돕고 & 각자의 삶의 양식을 구성 또는 재구성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원리로서 드러나고 강조되기를 바람.

- 이렇다면 이제까지의 복지제도는 인간성에 대한 모욕의 회피라는 관점에서는 한계. 다양한 상황과 처지에 있는 개개인들을 고려하는 대신 이들을 행정 집행이 쉬운 특정계층이나 생애주기에 있는 사람들로 뭉뚱그려, 즉 특정 집단으로 가두어놓음으로써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오히려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 왔음.
- 문화예술교육이 실행되는 과정(수업의 장면에서, 공모지원 절차에서, 리뷰와 평가에서, 교수자 참여자 기획자 행정과 평가자 등등의 관계에서 모두)에서 유사한 모습을 발견해왔으므로 이를 탈피. 변화하는 세계에서 교육의 장면은 이미 이를 요구하고 있음.
- 여기서 개인이나 개인의 삶의 방식을 존중한다는 의미는, 경제 사회 문화적 수준이나 차이, 즉 이질집단이나 소수집단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인 우리들 사이에 더 근원적으로 존재하는 차이에 관한 것. 따라서 일상의 차원에서 누구나 타인과 다르게 가지고 있는 차이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감각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함.
- 아울러, 타인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문제와 자신의 고유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생성하는 문제가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임.
- 예술은 ‘각자가 가진 다른 감각과 감수성, 그로부터 이어지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을 그 독특한 고유함으로 삼기에’ 문화예술교육에서 이를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없는지.

토론문

신승환 (가톨릭대학교 철학과 교수)

1. 문화예술교육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현대철학의 심미적 전환

- 1) 문화와 예술을 인간의 문화적/예술적 성취나 그 결과물인 “작품”으로 이해하는 조류 비판
- 2) 예술형이상학 ; F. Nietzsche 이후 현대철학의 지향점
- 3) 의미와 진리에 대한 인간의 체험 : 미적 감수성과 심미적 체험의 언어화
- 4) 문화: 세계와 존재일반을 상징적 언어로 체험하는 인간의 해석학적 지평
- 5) 예술: 진리의 자기 정립

* 진리는 사실적/정합적 판단의 진리를 넘어 인간의 존재론적 체험에 관계하는 것. 이 진리에 근거하여 실증적/사실적 진술이 의미를 지니게 됨: 이런 전환 안에서 미적 감수성과 심미적 체험은 근원적 진리의 탁월한 지평으로 자리매김

- “문화·예술·교육”의 재개념화
- 미학적 전환: 미적 감수성의 개념화

2. 문화예술의 존재론적 특성

- 1) 자기성취로서의 문화예술교육
- 2) 자기이해로서의 문화예술교육
- 3) 자기성찰로서의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의 철학적 지평』, 한길아트 2008, 55-61쪽.

- 존재론적 특성으로서의 생성과 인간의 자기성(Self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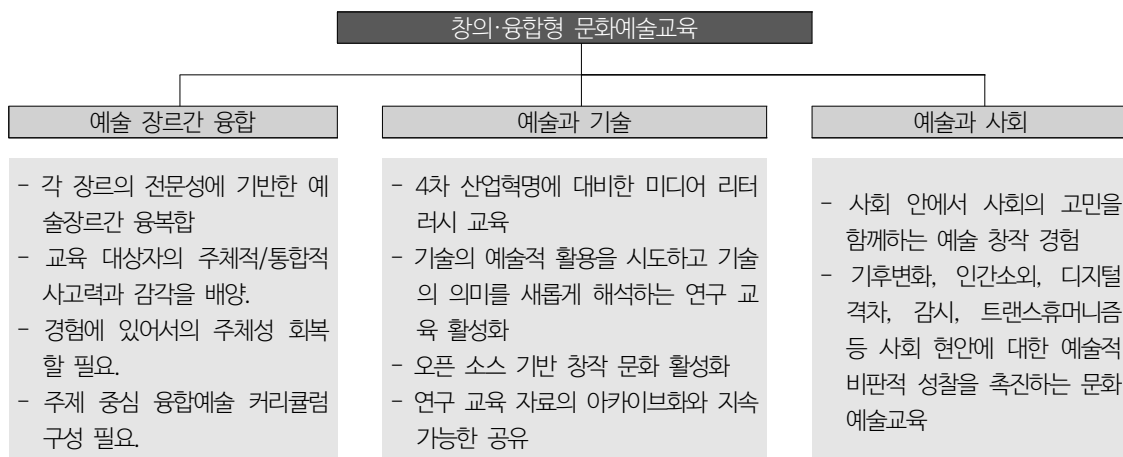
3. 문화예술교육의 공동체성

- 1) 근대의 인간이해: 개체(in-dividual)로서의 인간을 넘어 공존재(Mit-Sein)로서의 인간 관계성/상호성 속에서의 인간
- 2) 공동성의 원리: 공동선(公同善)
- 3)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드러나는 공동선

- 탈근대성의 문화예술교육론 : 포스트 휴머니즘(posthumanism) → 지금·여기의 실존적 체험
- 언어화 : 해석학적 순환

토론문

신정원 (한국예술연구소 책임연구원)



1. 창의·융합형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기반이 조성되어야 하는가?

- 기존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창의예술교육 프로젝트 성과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연구/연수 및 콘텐츠

- 츠 개발사업의 성과에 기반하면서도 창의·융합형 예술교육의 지속적인 연구 및 실행의 토대가 될 기반 구축
- 창의·융합예술교육 관련 체계적 기초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네트워크를 통한 창의·융합예술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 첨단 융합예술교육 인프라의 필요성, 새로운 교육과정 구성, 새로운 교육자 양성 방안

2. 창의·융합형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의 필요성

- 4차 산업혁명으로 나타나게 될 새로운 사회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문화예술분야 인재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
- 다변화하는 미디어를 이용한 창작, 실험, 연구, 교육을 시도하는 교사, 매개자, 학생 지원을 통해 창의·융합예술 분야 창작자, 수용자 양성
- 차세대 미디어 제작 및 유통 환경에 대응하는 창의·융합형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 실감형 콘텐츠 제작 교육 및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다양한 창의·융합형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아카이브

3. 창의·융합형 문화예술교육 실현을 위해 고려할 사항들

- 창의·융합형 예술분야 인재 양성 활성화를 위해
 - 교육/연수에 활용될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필요
 - 창의·융합형 예술교육 연구 활동에 예술강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
 - 교사와 매개자들이 국내외의 다양한 예술인, 기획자, 디자이너, 엔지니어, 과학기술자, IT전문가 등과 협업하고 교류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창의·융합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창의·융합형 문화예술교육이 도입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 예상되는 난관은 무엇이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토론문

양혜정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이 ‘개인의 감각과 사회의 소통과 상호작용이며 그 상호작용의 파급 효과를 높이는 교육’이라는 데 동감합니다. “존재(be)가 아니라 상태(being)로, 주어진 것(the given)이 아니라 생성(becoming)으로”는 결과보다는 과정중심, 삶과 존재적인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에서 두 가지 주체에 대한 입장에서 지금의 공론화되는 이슈들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수혜자, 경험자의 입장에서 특히 어린이 청소년이라는 주체, 다른 하나는 매개자로 불리우는 문화예술교육가입니다. 이는 문화예술교육의 콘텐츠 개발의 한계, 융합과 통합 등의 콘셉트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양질의 교육은, 양질의 교사인력수급의 문제와 직결되고, 전 생애를 아우르는 예술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모

색에서 아동,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공동의 가치에 대한 논의가 현재까지 매우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고

- 예술교육 콘텐츠의 다양성과 개성을 현장의 요구 vs 프로그램의 매뉴얼로 인한 매너리즘 체계화와 기준(standard)를 마련하는 것이 미래적인가에 대한 논의: 시스템화할 것과 유연하게 남겨둘 영역에 대한 정의
문화예술교육의 목표가 균등하고 보편적인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받는다는데 있으나 그것이 균등하고 보편적인 콘텐츠를 제공받는다는 의미는 아닐 것.
- “문화예술교육 지역 분권화 추진과 지역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의제 내 예술교육가의 자생과 자립의 문제가 포함되는가?
- 예술교육에 대한 비평 문화의 부재, 예술교육 평론가 양성 또는 평론문화정립을 위한 예술 교육의 기록과 이해에 대한 방향성과 질적연구 접근방식을 모색할 필요
예술결과발표와 성과회가 아닌, 기록과 이해를 통한 깊이 있는 예술교육의 담론 확산

2. 아동, 청소년의 입장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지향하는 바와의 연결성

-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영유아부터 아동의 예술성과 발달에 대한 연구의 부재
“문화예술교육이 개인의 감각의 활성화”를 지향한다고 할 때 아동청소년의 감각발달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정책기조가 마련되어야 함. ‘몸’과 ‘감각’을 통한 예술 접근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확산을 통해 건강한 아동청소년의 교육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
- “문화예술 교육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공감대 미흡”에 대한 문제점에 동의.
대다수 국민 어린이, 청소년은 사교육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접함. 창의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실제로 사회가치와 연결되지 못함. 종국적으로 입시 제도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
-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과 인간”의 이슈에서,
Art & Technology + Philosophy of Mind 심리철학/Neuroscience 신경과학/Phychology 심리학등의 과학과의 연계를 통해 예술의 궁극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창의성에 대해 연구, 논의가 필요.
- “예술 장르 간 융합 관점에서 창의·융합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논의 중 예술장르간의 통합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장르의 혼합적 접근과 통합적 커리큘럼의 방향과는 전혀 다름. 경험하는 아동, 청소년의 관점에서 통합 경험의 의미와 궁극적인 가치지향점을 재고가 선행되어야 함.

토론문

임학순 (가톨릭대학교 교수)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정책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1. 기초 자치단체 차원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기반 조성

- 자치분권 차원 + 국가·광역·기초 거버넌스 차원
- 문화예술교육 조례 표준모델 개발 및 조례 제정 동기부여
 - 계획 수립 및 평가, 시군구 문화예술교육협의회,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역문화예술교육 협력망 사항 포함

2. 지역 문화예술교육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기능 조정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능 조정
 - 정책연구 및 평가, 지역에 대한 정책컨설팅, 통계 및 정책데이터 체계, 문화예술교육 가치 확장 및 브랜딩, 소통과 공유 기반 협력 네트워킹, 혁신형 정책사업, 국제 교류 협력 등의 기능 강화
 - 집행 성격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지역분권을 단계적으로 추진
-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지역의 지원정책 거점으로 구축
 - 지원정책 사업의 지역 핵심 기관으로 위상 정립
 - 기초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거점 조성을 광역문화예술교육센터의 핵심 업무로 강조
 - 기초-광역을 포함한 지역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허브 리더십 구축
- 향후 지정 및 설립될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지역밀착형 정책사업 거점으로 구축
 - 자원 발굴 및 연계, 협업 플랫폼 구축, 정책사업 및 예술교육콘텐츠 개발
 - 기초 문화재단 (현 71개 - 확대추세)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기반 조성 지원

3. 문화예술교육과 지역문화의 연계 이슈

- 문화예술교육의 철학과 가치를 창조하고, 확산할 수 있는 공간 거점 조성
 -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의 확장 (꿈꾸는 예술터)
 - 생활문화시설, 지역문화기반시설 등 연관 공간의 문화예술교육 활용 활성화
- 문화예술교육-생활문화-평생교육 연계 체계 구축
 - “지역” 소재 기반의 공동사업 개발 (예컨대, 지역 생활사 자원 기반 / 지역 생태 자원 기반의 문화예술교육-생활문화-지역재생 프로젝트 개발 등)
 - 경험, 지식과 정보 공유 체계 구축
- 문화예술교육의 지역문제 해결 효과를 새롭게 강조
 - 문화다양성문제, 환경문제, 노인문제, 공동체문제, 생활사 기록 문제, 지역 인식 역량 문제, 사회취약 계층 문제, 문화 및 여가활동 문제 등

토론문

조충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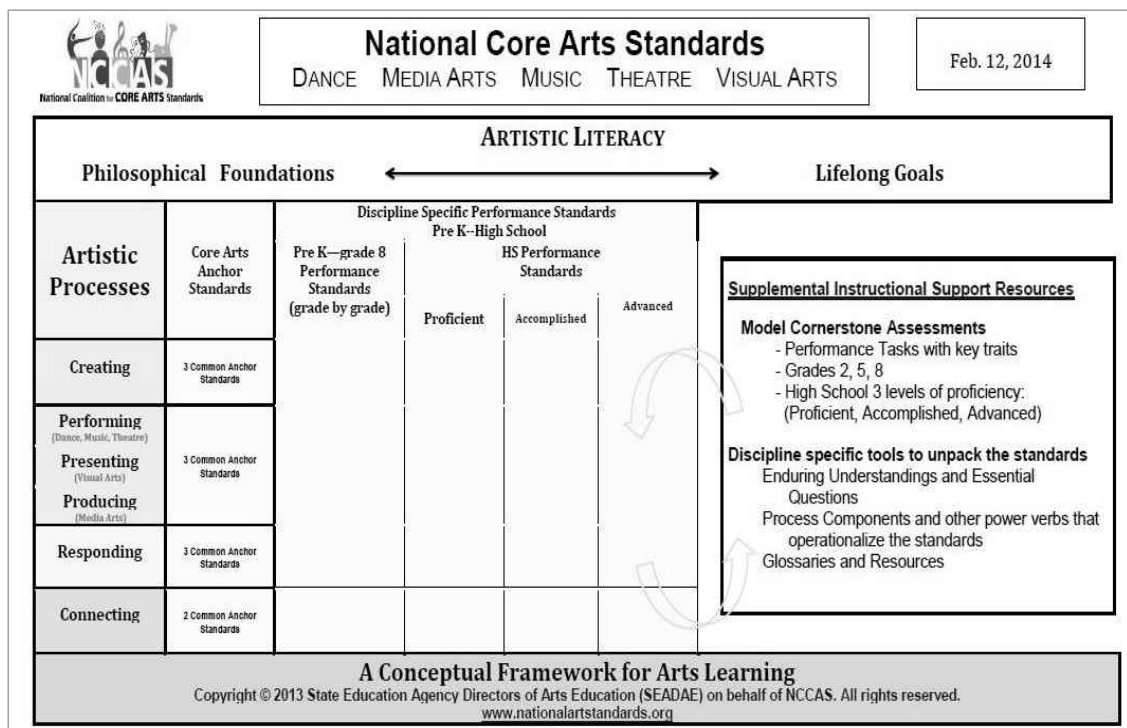
예술(교육)의 미래를 위한 핵심예술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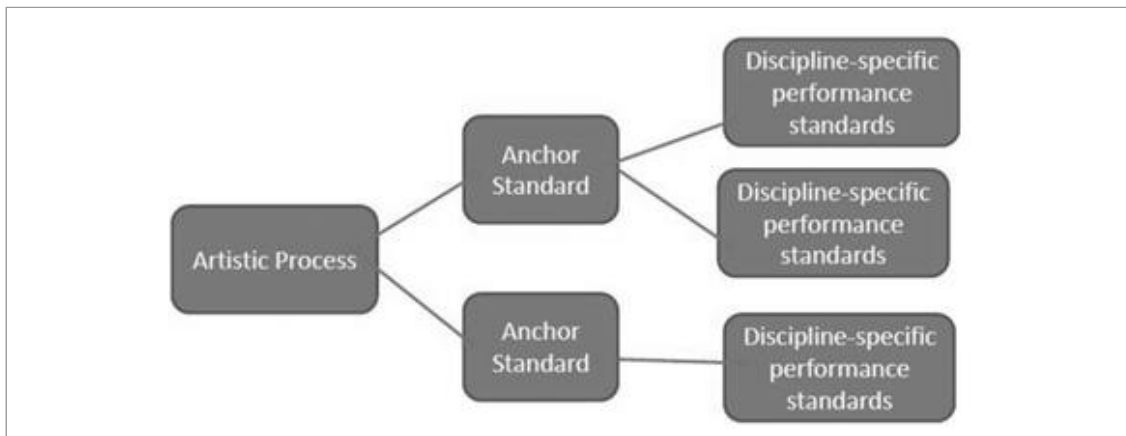
1. 국가핵심예술표준

- 수리력, 문해력과 함께 예술교육을 통한 창의력은 다른 핵심교과과목에 영향
- 지식학습, 실행학습, 공존학습의 창의학습과 창의력 파트너십의 형성
- 학교를 통한 예술의 부흥, 예술교육의 미래를 위한 약속으로서의 핵심예술표준

National Core Arts Standards (2014)의 사례

- 분야 : Dance, Music, Media Arts, Theatre & Visual Arts
- 실행 : Creating, Performing/Producing/Presneting, Responding, Connecting





National Core Arts Standards			
Artistic Processes and Anchor Standards			
Artistic Processes			
Creating Definition: Conceiving and developing new artistic ideas and work.	Performing/Presenting/Producing Definitions: Performing: Realizing artistic ideas and work through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Presenting: Interpreting and sharing artistic work. Producing: Realizing and presenting artistic ideas and work.	Responding Definition: Understanding and evaluating how the arts convey meaning.	Connecting Definition: Relating artistic ideas and work with personal meaning and external context.
Anchor Standards			
Students will: 1. Generate and conceptualize artistic ideas and work. 2. Organize and develop artistic ideas and work. 3. Refine and complete artistic work.	Students will: 4. Select, analyze, and interpret artistic work for presentation. 5. Develop and refine artistic techniques and work for presentation. 6. Convey meaning through the presentation of artistic work.	Students will: 7. Perceive and analyze artistic work. 8. Interpret intent and meaning in artistic work. 9. Apply criteria to evaluate artistic work.	Students will: 10. Synthesize and relate knowledge and personal experiences to make art. 11. Relate artistic ideas and works with societal, cultural, and historical context to deepen understanding.

2. 핵심예술표준을 통한 예술교육

-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개별 예술장르 중심에서 탈장르/복합장르화되면서 융합(미디어) 확장으로 인식의 폭이 확대되고 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융합역량을 기대.
- 예술을 위한 교육인가? 교육을 위한 예술인가? 학교예술교육/사회예술교육에서의 예술교육은 충분히 예술적인가? 다양성, 접근성과 통일성 등 예술교육표준을 통해 새롭게 제고되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교과과정과의 연계, 입시에 발목잡힌 예술교육은 정규교과안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 창의 파트너십의 형성 : 예술강사의 역량을 위한 지원책과 예술교육 강사를 위한 교육 및 학교, 예술계, 지역, 산업과 연결된 창의 인적/리소스의 네트워크 구축 (창의 클라우드와 지적 자원의 공유)

토론문

추미경 (사)문화다움 대표

1. 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의 동시대성 및 법적 보완 관련

- 문화예술교육 정책 15년, 2020년 동시대 문화예술교육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제반 영역에서 각기 다른 맥락의 실천들이 진행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의 감각의 활성화와 사회의 이해와 소통능력의 확대를 위한 창의적인 모든 교육과정”으로 정의된다면 너무 포괄적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진행되는 모든 교육이 문화예술교육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정체성이 구별되지 않을 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에서 예술교육, 문화교육의 이분법적 구분, 단계적 전환 패러다임을 극복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가 되지만 현재성 및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상태의 생성이라는 유동적 맥락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문화예술교육 정체성에 기반을 둔 정책실행에서의 혼선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요소라 생각함.
- 고정불변의 개념을 설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국사회의 탈근대성을 반영한 동시대적 관점에서 문화, 예술, 교육의 관계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예술적 체험(경험)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감각하고, 소통하며, 관계를 형성해가는 교육과정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을 바라보는 최소한의 공통된 인식 위에서 다양한 가치와 태도가 발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철학적 태도가 15년간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지금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성찰적 논의가 필요하며, 정책과 현장의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이 과정을 전개해가는 방식의 공론화 작업이 필요함.
- 2007년 발간된 문화예술교육론 연구(신승환 외, 진흥원)처럼 2020년 버전의 문화예술교육론이 현재에 걸맞은 연구방법으로 새롭게 정리될 필요가 있음.
- 현행 법률에 제시된 법적 정의(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으로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재정의될 필요가 있음.
- 학교문화예술교육 vs 사회문화예술교육 또한 문화예술교육의 동시대적 정체성을 반영할 경우 문화예술교육이라는 큰 틀 속에서 통합적으로 적용되고 실천의 영역을 재구조화될 수도 있음.
-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를 통합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개념과 사업영역을 통합하는 접근이 아니라 상호관계성과 연계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사업추진의 연계성을 높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봄.

2. 기반의 고도화가 가지는 의미 : 지역화의 맥락에서

- 문화예술교육 기반의 고도화는 기반영역의 구체적 어젠다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문화예술교육 동시대적 정체성을 규명해가는 과정과 연계하여 접근하되, 문화예술교육 지형변화에서 가장 구체적인 변곡점인 지역분권의 맥락에서 기존 중앙 중심, 공급 중심의 기반의 영역이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가로 집중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 그동안 대부분 교육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집행에 집중되었던 지역문화예술교육 생태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가 지역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기반이 허약한 지점일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임.

1) 인적 기반

- 중앙에서 담보해야 하는 인적기반체계의 핵심과 지속가능성의 맥락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진화해야 하는 인적기반 핵심영역 및 체계는 무엇인가?
-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예술강사의 지역현황, 현장에서의 성장을 위한 방안은 어떻게 접근되어야 하는가?
- 문화예술교육 지역현장에 실제 필요한 전문인력 수요와 재교육, 양성의 체계는 무엇인가? 바텀업 연수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가?
- 지역기반 연수체계의 구축은 어떻게 가능한가?
- 연수기반시설은 지역화의 맥락에서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가? 등

2) R&D 기반

-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의 주제는 중앙과 지역이 어떻게 역할분담, 또는 협력 발굴이 가능한가? 랩의 운영 방식에서 지역과의 상생, 지역적 특성은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 것인가?
- 문화예술교육 정책조사연구에서 지역별 수요는 무엇이며, 중앙은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가?
- 문화예술교육 담론의 지역화를 위한 기반은 어떻게 구축될 것인가?
- 문화예술교육 지표의 개발에서 공통지표와 지역화 맥락에서의 지표는 어떻게 구축될 것인가?
- 문화예술교육 중앙의 통계지표는 무엇이어야 하며, 지역마다의 통계지표는 무엇이어야 하나 또는 어떻게 접근되어야 하나?
- 지역화의 관점에서 본 정책효과성에 대한 변화는 무엇이어야 하나?
- 평가체계가 실천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지역상생 접근방식은 무엇인가?

토론문

하장호 (예술인 소셜유니온 대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적 관점을 중심으로

1.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생태계적 관점에서의 접근

- 생태계란 관점은 상호작용과 순환구조를 전제로 하며, 학교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체간의 상호작용, 자원의 전달체계, 정책 효과의 확산과 순환의 구조에 대한 파악 등이 필요. 이런 맥락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내부구조와 외부구조를 구분하고 유형화할 필요가 있음
- 문화부의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 계획과 생활권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구축, 문화예술교육사 사업, 융복합 교육모델의 개발 등을 고려할 때 주체, 공간, 사업, 예산 등의 구조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생태계 맵핑이 필요
-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 간의 상호협력과 생태계 자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

2. 통합적 정책 수립과 실행체계 구축

-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확대와 복잡성의 증가에 따른 부처 간, 정책 주체 간 긴밀한 협력과 합의가 필요
- 현재의 이원화 된 정책구조를 통합적으로 재설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단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정부 부처, 기관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형 구조
- 사업실행과 운영을 위한 조직에서 협력구조를 만들고 촉진하기 위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역할과 위상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

3. 문화예술교육의 주체 형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지금까지 문화예술교육, 특히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주체 문제는 대부분 예술강사 문제를 지칭하는 것을 의미했으나, 문화예술교육이 확대되면서 예술강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주체들이 학교문화예술생태계 안에 형성
- 예술강사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사, 매개인력, 기획자, 행정주체 등 다양한 형태의 주체들이 현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사업에 연결되어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도입되기도 함
- 현재의 예술강사 관리 중심의 정책이 좀 더 다양한 주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문화예술교육 전문 매개자에 대한 발굴과 지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4. 지역 또는 삶의 공간에서 시작하는 문화예술교육

-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이란 단순히 정책 수립과 실행 구조를 중앙 집중에서 지역으로 옮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들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음
- 지역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사고할 때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과 같은 사업구조보다는 지역의제나 주체 중심의 새로운 사업구조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이 과정에서 다른 정책영역-생활문화 등-과의 접점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학교분과

학교문화예술교육 의제발굴을 위한 전문가 원탁회의

- 【발제문】 지역 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현장 생태계 조성 방안 / 하장호
학교 현장 수요에 기반 한 학교문화예술교육 다각화 방안 / 김지연
- 【토론문】 강원재 (영등포문화재단 대표) 고은아 (참교육학부모회 중등)
고일석 (전라남도교육청 장학사) 박만용 (전국미술교과모임 대표, 성서중 미술교사)
박은주 (참교육학부모회 성남지회 사무국장) 백 령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교수)
손동혁 (인천문화재단/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팀장) 신운섭 (연극분야 예술강사)
이동준 (가평교육지원청 장학사) 이재영 (한국교원대학교 문화예술교육대학원 교수)
정진아 (무용분야 예술강사) 정혜은 (경기서평초등학교 교사)

발제문

생태계적 관점에서 본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과제

하장호 (예술인 소셜유니온 위원장)

1.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목적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 (2018~2022)’을 발표

〈표〉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비전과 전략

비전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목표	문화예술교육의 재도약 : 문화예술교육의 지속 성장과 질적 제고	
추진전략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화 - 지역 문화예술교육 공간 및 자원과의 연계 강화 - 문화예술교육 협력망 활성화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 -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속 확대 - 문화예술교육 지원 다각화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 및 연구역량 강화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 -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활성화 - 가치확산 및 홍보강화

-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은 탑다운 방식으로 공급되어 온 문화예술정책과 사업을 문화예술교육 현장과 수요자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고, 협치에 기반한 추진체계와 전략을 수립하여 장르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통합적이고 융복합적인 문화예술교육 추진을 제시
- 그러나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에서는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나 구상을 별도로 밝히고 있지는 않음. 대신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 등에서 관련 내용들을 다루고 있음

교육부는 2018년 발표한 학교예술교육 중장기 계획에서 학교예술교육의 비전과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표〉 학교예술교육 중장기계획 비전과 전략

비전	예술감수성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시민		
목표	학교-지역 협력을 통한 모든 학생들의 예술체험 생활화로 보편교육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 강화		
추진전략	학교 교육과정에서 교원과 학교의 예술교육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 높은 예술수업 구현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지원 - 교원의 학교예술교육 역량 강화 지원 - 학교예술교육 모니터링 지원 내실화 	
	학생의 예술교육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개별 요구에 따른 예술교육 지원 - 학생의 예술심화교육 및 예술영재 관리 지원 - 문화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예술교육 지원 	
	예술활동을 위한 지역협력 네트워크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자원의 유기적 연계 및 활용 - 학생 및 학교 중심의 외부 인적자원 활용 -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지속가능한 학교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학교예술교육진흥법 제정 - 교육청의 학교예술교육 지원체계 정비 - 유관기관과의 정책 공조 	

- 학교예술교육 중장기 계획은 2016년부터 수립 및 추진된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예술교육을 보편적 교육, 포괄적 공교육으로 체계화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음
- 교육부의 학교예술교육 중장기 계획은 예술교육을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예술교육을 위한 학교 내 자원과 협력구조를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때문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학교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계획과 내용, 학교 예술강사와 관련한 내용 등 문체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과 관련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음
- 오히려 교육부는 학교예술교육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학교 내 예술교육을 교육부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학교 중심의 예술교육 체계를 구축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음

문체부의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과 교육부의 학교예술교육 중장기계획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개념, 국가 정책으로서의 방향 설정에 있어 현재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음

- 학교문화예술교육은 동일한 정책 대상에 대해 두 개의 비전과 전략, 정책을 각각의 부처가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 없이 자기 사업화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책적 본질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

- 정부 부처 중심의 탑다운 방식의 정책과 사업구조에서 정책현장과 시민에 기반한 아래로 부터의 통합적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대적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정책구조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한 상황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 공통의 가치와 전제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정책단위에서의 합의 혹은 개념화가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과정에서 형성된 최소한의 가치와 관점, 혹은 공통의 감각들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예술에 대한 기능적 교육이 아니며, 창의적 시민주체 형성을 통해 삶의 구조를 바꾸는 과정이며,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에서는 공통의 인식이 존재한다고 보임
- 반면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주제/현장/실행구조를 어떻게 볼 것인지 등에서는 여전히 학교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간의 간극이 존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주요한 정책적 방향과 관점, 정의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필요

- 현재의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전문가 중심의 연구나 행정 부처 간의 업무적 조율 수준에서의 논의가 아닌 학교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충분한 시간과 논의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
- 이 과정을 통해 학교문화예술교육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정책적 실행구조가 설계될 필요가 있음

2. 생태계적 관점에서 본 학교문화예술교육

학교문화예술교육 실행 과정에서 형성된 생태계에 대한 파악과 이에 근거한 정책설계 과정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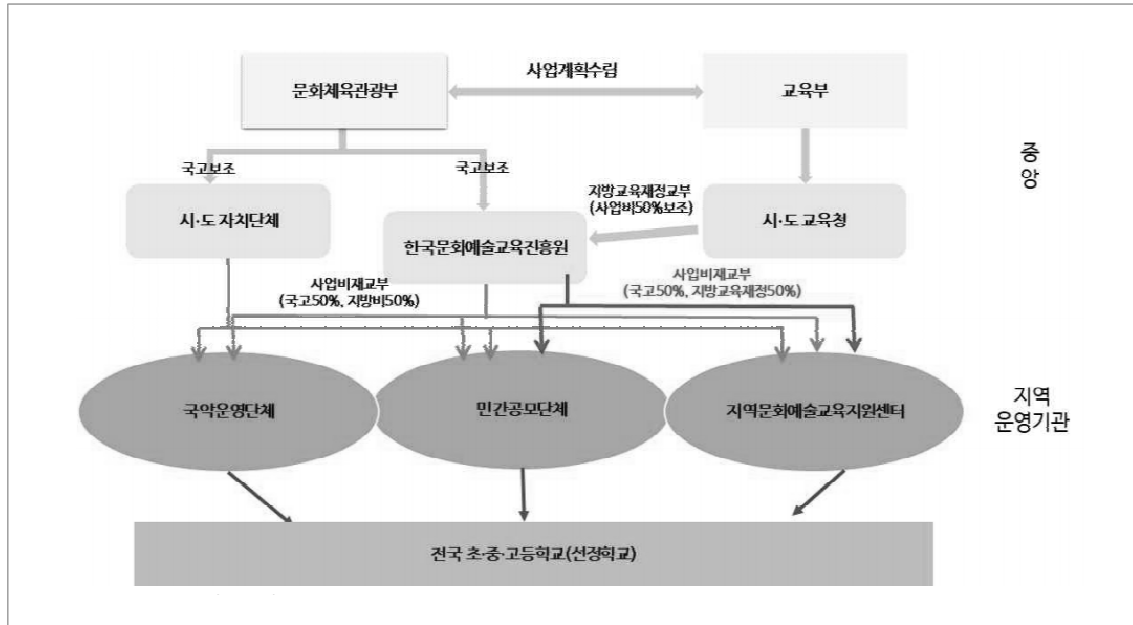
- 생태계란 관점은 상호작용과 순환구조를 전제로 하며, 학교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체간의 상호작용, 자원의 전달체계, 정책 효과의 확산과 순환의 구조에 대한 파악 등이 필요. 이런 맥락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내부구조와 외부구조를 구분하고 유형화할 필요가 있음
- 이후 문화부의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 계획과 생활권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구축 등을 고려할 때 주제, 공간, 사업, 예산 등의 구조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생태계 맵핑이 필요

주체	공간	정책	예산/사업
학생 교사 예술강사 학부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학교 지역현장 혁신/대안 공간 문화예술교육센터	문화예술교육 예술교육 생활문화 문화다양성 일자리지원	(학교)문화예술교육 일자리예산 지방교육재정

학교문화예술교육 생태계의 변화

-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은 문체부 주관 사업이지만 교육부 소관인 초·중·고교에서 사업이 수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정책사업보다 복잡한 실행구조를 갖고 있음

〈그림〉 2017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추진체계도



- 기존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생태계는 이러한 전달체계 중심의 사업구조 안에서만 이해되었으나 예술강사 문제의 대두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기관 반한 사태 등을 거치며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 또한 문화예술교육사의 등장, 교육부의 학교예술교육 중장기 계획의 제시, 문체부의 문화예술교육 종합 계획의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계획 등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생태계 내 다양한 주체와 공간, 관계들이 등장할 것을 예견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의 확산과 전문화, 그리고 이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조직의 등장과 사업들의 확산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학교문화예술교육 생태계의 변화와 사업 다각화

- 현행 학교문화예술교육 주요사업은 학교 예술강사지원, 예술꽃씨앗학교지원,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학교 예술강사지원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학교 예술강사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 실행초기엔 예술인의 일자리 보조 개념이 강했으나 현재는 문화예술교육을 전업으로 하는 전문인력들이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전문성의 강화와 지속가능성의 보장을 통해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한 계획이 요구되어지고 있음.
- 또한 융복합 교육모델의 개발, 단체 기반의 예술강사 활동 토대의 구축, 학교현장과 예술가들을 매개해 줄 수 있는 매개인력의 양성 등도 생태계의 변화에 조응하기 위하여 필요

학교문화예술교육 생태계 파악과 이에 조응하는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작업의 필요

3. 학교문화예술교육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통합적 정책 수립과 실행체계 구축

-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확대와 복잡성의 증가에 따른 부처 간, 정책 주체 간 긴밀한 협력과 합의가 필요
- 현재의 이원화 된 정책구조를 통합적으로 재설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단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부처 중심의 사업과 실행구조가 아닌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주체와 현장에 대응하는 부처 간 협력구조가 필요

2) 문화예술교육의 가치확산과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공론장 형성

- 문화예술교육이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어느 정도 사회적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
- 전문가 영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생태계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구조, 혹은 상시적인 공론의 구조가 필요
- 현재 아르떼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포럼을 포함하여 공론장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플랫폼들이 고민되어야 함

3) 지역 중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

- 교육과 문화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이 중앙집중적이고 위계적인 정책구조를 정당화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책임과 권한의 분산과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화 전략을 통해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전달체계와 장르 중심으로 구조화 되어 있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학교를 넘어서 지역과 일상의 현장에서 새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재구조화하는 실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문체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지원 구조가 단순한 지원의 역할을 넘어서는 거버넌스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함

4)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주체 형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지금까지 학교문화예술교육 주체의 문제는 대부분의 예술강사 문제를 지칭하는 것을 의미했으나, 문화예술교육이 확대되면서 예술강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주체들이 학교문화예술생태계 안에 형성
- 예술강사뿐만 아니라 교사, 매개인력, 기획자, 행정주체 등 다양한 형태의 주체들이 현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사업에 연결되어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도입되기도 함
- 현재의 예술강사 관리 중심의 정책이 좀 더 다양한 주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문화예술교육 전문 매개자에 대한 발굴과 지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발제문

학교 현장 수요에 기반한 학교문화예술교육 다각화 방안

김지연 (프락시스 공동대표, 문화기획자)

현재 학교문화예술교육정책 관련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 방향과 운영구조, 다각화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은 학교 예술강사제도 외에도 예술꽃 씨앗학교(400명 이하의 작은 학교를 대상으로 한 4년간의 전교생 대상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이 10년을 지속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확장되는 유아문화예술교육, 그리고 고3 프로젝트는 일회성 프로젝트들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연수나 연구 또한 학예강 사업을 중심으로 하거나 연구 시범사업으로 그치는 경향이 많다.

이에 안정적인 생태계 마련과 더불어 학교 현장의 경험을 근거로 몇 가지 다각화를 위한 사업제안을 해 보고자 한다.

1. 기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재구조화

학교 예술강사(이하 학예강) 지원사업이 초기에 비해 양적 팽창을 한 것은 모두가 안다. 2019년 현재 89,605백만원, 2,474,667명의 수혜, 8,484개 학교의 참여는 2008년 대비 60,880,000원 (3배)의 사업비 증가, 수혜자 1,300,000명 증가, 운영학교 4,800교 증가³⁾를 가져왔고, 많은 학교들이 ‘문화예술교육’이라 하면 ‘학예강’을 이야기하고, 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이 확산되었다고 느끼지만, 한편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활성화되고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 양적 팽창은 공감하나, 질적 성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경향이 많은 현실이다.

이에 많은 원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자료는 전문가들의 토론을 위한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기존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의 보완 필요

지난 11년간 학예강 인원과 학교수, 총예산의 2-3배의 증가를 가져왔지만, 역으로 1개 학교, 학급에 미치는 수혜자들의 예술교육에 대한 경험은 단순 체험화되거나, 선택의 제약성, 지역의 한계 등을 낳고 있다. 많은 학교와 예술 강사 모두 신청대비 시간의 부족, 강사의 자질, 교사-예술강사 협력의 부재 등을 문제제시하고 있다. 또한 신규의 진입이 어렵고, 강사들의 휴직년도 불가하여 학예강 제도는 복합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현장의 이야기를 토대로 방법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학교와 예술강사 간 협력 또는 희망 선택제에 대한 재추진

- 현재 운영방식은 학교에서 장르와 희망시수를 요청하면 내부 심사를 통해 장르 선정, 예산에 따른

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현황자료 참조

시수 제한이 생기고, 학교는 강사가 배치되는 것에 입장을 갖지 못한다(이는 부정적 문제를 보완하려 했었지만). 그러나 교육은 많이 알고 보아야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이미 학교와의 경험 속에 서로의 호흡을 함께 할 수 있는 학교와 예술강사라면 이 두 그룹이 만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 학교 교육차시의 현장을 고려한 유연성 마련

- 한 학급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시수와 예술강사의 배치인가, 이에 대한 소통 창구가 막혀 있다. 학교 현장의 필요와 고민, 예술강사의 전문성을 파악할 수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 많은 학교들이 학급 담임교사에게 교육계획과 내용들이 충분히 전달되기보다 학예강 담당교사 선에서 학교 시수가 확장되면 학급수를 고려한 1/N의 학급별 수업시수를 마련하고 있다.
- 이에 담당교사의 예술강사제 연계에 대한 유연성의 방향과 방법 모색의 필요, 학교 현장의 필요를 고려한 수업시수 연계, 수업시수 및 강사 배정에 따른 강사 협의 구조, 운영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현 정책을 이해하기 어려운 학교에서는 다양한 시도보다는 학교, 학급을 고려한 1/N이 습관화 되어있다.
- 담당교사와 담임교사의 협의, 담당교사와 운영기관의 협의, 담당교사-예술강사 협의가 필요하다.

(3) 담당교사-담임교사-예술강사의 사전, 중간, 사후 평가 시스템 마련

- 현재 학교에 예술강사가 배치되면 예술강사가 1회의 사전 학교방문, 담당교사 인터뷰를 통한 학급별 수업 시수를 확인하고 개괄적 계획서를 제출하며, 이후 수업 협의, 수업조정, 학생 나눔의 시간은 부재하다. (개인의 역량)
- 교과시간에 강의를 맡은 예술강사에게 담당교사의 수업 참여는 필수가 되었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한편 담당 교사 입장에서는 계획서도 통보받고 수업 후 바로 가는 강사에 대해 교사의 역할은 아이들 관리일 뿐이라는 것이다.
- 이에 기존 학예강 사업이 좀더 학급안에서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예술강사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급 또는 학년별 담당교사들과의 사전, 중간, 사후 평가 회의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학교의 과정을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학교와 예술강사의 협력이 가능한 것은 일 년 이상의 조율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양쪽 모두 평가가 좋을 경우에는 사전, 중간, 사후 평가가 차기 년도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연계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예술강사의 전문성 개발 및 활동 지원

- 예술강사의 연구모임 지원을 통해, 예술강사들의 역량개발 및 협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들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 예술강사 인력풀 시스템을 통해, 지역 내 예술강사 인력풀에 대한 정보 조회 및 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며, 한편 학교가 원하는 일정과 내용을 알 수 있어서 예술강사의 정보와 학교 필요가 공유되는 것이 필요하다. (예. 독일의 경우 '협력 나침반'이라는 자체 인력풀 시스템 운영. 중간 코디네이터가 활동)
- 예술 강사들의 모임이 점차로 단체를 만들고, 지역에서 협동조합 등을 만들면서 스스로 성장하려는 노력에서 예술경영센터의 단체 지원과 같이 이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단체 안정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2) 교사- 예술강사 협력 사업 개발 및 환경 구축

- 학교와 예술강사 사이에 기존 학교의 협력이 잘되었거나, 협력 가능성이 만들어진 예술 강사에 대해 교사-예술강사 협력시스템은 두 당사자 간의 사전 협의를 통한 차시, 프로그램 운영 방향과 내용을 사전 공유하여 제출할 때 우선적 권한을 학교와 예술 강사에게 줄 수 있다면 어떨까?
- 이에, 학교와 예술강사가 함께 희망시수(최대 시수 100-150시간이내) 내에서 학교별 협력 계획 운영서를 제출할 경우 우선적 지원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학교-교사-예술 강사 간의 협력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것이다.

3) 학교 수요 환경을 고려한 '주제 중심 사업' 개발 및 환경 구축

- 1-2인, 2-3인 또는 주제 프로젝트 사업. 학교교육 과정 속에 다양한 주제학습의 필요가 나오고 있다(진로, 평화, 폭력, 공동체, 관계, 성, 안전, 봉사, 흡연 등) 이러한 주제는 학교 교육과정 시수 안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계몽적 수업이나 지식 전달 수업, 단순 체험수업만으로는 아이들의 문제의식을 키우지 못한다. 이에 예술교육가들이 학교 주제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제안 -연계함으로써, 학교 주제학습의 문제를 문화예술교육과 접목할 수 있다.
- 일부 지역 교육청에서는 주제 프로젝트 관련 예산을 마련하고 있어,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실행은 이후 지역의 자발적 확장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학교 연계 주제 프로그램은 매뉴얼을 통해 현장에서 교사/ 예술교육가 활용의 자료가 될 수 있다.

4) 신규 예술강사 인력 참여를 위한 사업 개발 및 환경 구축

- 현 시스템에서 신규인력 (기존 학예강 이었으나 1년 이상 실 경우 신규가 되며, 졸업- 자격인증 후 초기 도입 인력) 들의 프로그램 경력을 키우며 인정해 줄 수 있는 학교-신규인력 또는 신규인력 간의 협력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 예를 들어 초, 중등의 경우 주기 집중기간, 축제를 통하여 다양한 예술활동이 활발하다. 이에 20대 청년예술교육가 그룹이 학교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뮤지컬 만들기, 축제 등은 신규인력에게는 현장 파악과 경험의 기회,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예술교육가 접촉의 기회를 줄 것이다.

2. 지역형 학교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

1) 지역 문화예술교육단체 육성- 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예술 강사제, 중앙 중심으로 되면서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일반화 대비 다양성, 지역 여건 마련 등 어려움이 있다.
- 이에, 지역에 근거한 단체들의 학교 연계 프로그램 개발, 지역 환경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실행 등을 통해 지역단체 육성 및 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다.
- 학교 교육과정의 주제 프로젝트는 지역의 문화예술교육단체 육성과 연계하여 긍정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2) 교사-예술교육가 협력 프로그램 연구 개발, 실행 다양화 및 지역별 지속적 환경 구축

- 2019년 교사-예술교육가 협력 프로그램 연수를 추진하며, 그 가능성을 확인
- 광역 지역센터,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한 교사, 예술교육가가 학교 여건을 고려한 협력 프로그램

의 연구, 실행은 아이들과 일상적 교육을 책임질 교사와 예술적 전문성을 지닌 예술교육가 간의 새로운 상상과 현장 연계 프로그램 개발의 힘이 될 것이다.

- 이것은 직접 실행을 지원할 수도 있지만, 연구 워크숍에 집중하고, 오히려 현장 컨설팅을 통해, 교사들의 주체성을 키우고 예술교육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3) 지역 환경을 고려한 초중등, 학교 규모별 문화예술교육의 접근 다각화

- 학령인구의 감소, 지역별 인구 편차 등의 문제는 중소도시로 갈수록 300명 이하의 학교가 늘어나고 있으며 폐교 위기의 학교도 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한편 1개교 1개 학급으로 다양성 교육이 가능할 수도 있고, 한편 예술교육가의 섭외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 그러나 아직도 학교문화예술교육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도시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닐까?
- 초중등 600명 이상(학년별 4~8개학급)의 학교와 300명(학년별 2~4개개학급)이하의 소규모 학교에서 교사들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다르게 나타나며, 교육과정 구성에서도 달라진다. 특히 중등의 경우 과목교사, 진로교사의 역할 또한 달라진다.
- 한편 대도시의 다양한 프로그램, 장르 전문성에 근간한 예술교육가가 많다면, 중소도시는 전문 강사의 부족에 대한 고민도 크다.
- 이에 대도시/중소도시의 지역 환경, 초등과 중등의 교과연계, 아동, 청소년의 교육접근 등 문화예술교육이 학교를 접근할 때 다양해져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중앙의 일반화보다는 지역별 환경에 근거한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방향(전문가 양성, 학교 교과연계 및 협력, 지역 프로그램 등)을 모색해야 한다.
-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예술꽃 씨앗학교'사업이 400명 이하 초중등을 대상으로, 전교생 대상 프로그램을 시행하다보니 아동,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효과가 높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작은 학교사업으로 치부되어지기도 한다. 오히려 이 사례 효과를 확대하고 안정적 방안, 큰 학교 적용시 접목 가능한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3.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매개인력(조정자) 육성

1) 기초 단위 지역대상 학교 문화예술교육 디렉터 PM 육성 및 현장 연계 4)

- 학교-예술강사의 정보 및 소통, 지역 연계에 대한 관심은 이제 문체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넘어 교육부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 그러나 학교 현장은 아직도 예술강사, 지역,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부족하고, 홈페이지의 정보, 자원 지도만으로는 학교의 필요한 인력,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한편 학교를 보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조차 부족하다보니, 과거로 회귀하여 전시/ 발표/ 일회성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들이 확장되고 있으며, 교사들은 외부강사로 인하여 수업에서 소외되고 있거나, 예술 교육에서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고 한다.
- 학교와 예술강사, 학교와 지역 사이를 연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학교와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 자원을 찾고, 가능성을 확장하며, 이들을 조직화하고 연계할 디렉터, 예술강사들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학교 현장 연계 가능성들을 만들어 낼 PM은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의 주 자원이 될 것이다.

4) 양평학교문화예술교육 연구팀,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의 마중물- 학교문화기획자, 2018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연구개발 오픈 랩',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P43~P67

- 학교 조정자는 ‘예술꽃 씨앗학교’와 같이 특별 사업목적의 경우 학교 내에 고용될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기초 단위의 3~5명의 운영을 통해 학교/ 지역 자원발굴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의 판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 학교의 입장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본다면 학교수위에 따라 여러 접근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판짜기(Producer/Director), 학교의 지역 매개자(Agency), 예술 특성화 학교 연출가(Director), 프로그램 기획자(Planner), 교사-예술가, 단체 매개자 (Coordinator), 프로그램 진행 지원 (Manager)

2) 학교 교사 대상 문화예술교육 기획 역량 강화

- 예술강사에 대한 학교 내 담당교사가 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수업의 증가, 축제 등의 학교 활동으로 예술교육 담당교사를 두고 있지만, 대부분 학교 내에 부수적 역할이기에 담당교사들은 추가된 행정업무로 바라본다.
- 관련하여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하나의 방법은 상담교사와 같이 별도의 예술교육가를 전담교사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학교 내 문화예술 공간과 별도 예산 마련, 학교와 전담교사 간의 적극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특성화 학교의 경우 의미있을 것이다.
- 본인은 또한 중고등학교의 진로부장제도처럼 학교 교사로서 수업시간을 줄이고 관련된 별도의 활동들을 책임지면서 학교 안과 밖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교사가 있다면 좋겠다. 이것은 문화예술교육이 한 분야일 수 없고, 위의 언급된 것처럼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예술교육은 아이들의 성장과 관계, 삶과 연계된 교육의 지향점에서 교사들과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한 진로교육만큼 중요한 목적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한편 중고등학교에서는 공교육형 대안학교에서 진로교육 담당교사들이 하시는 많은 역할에서도 이것을 보게 된다. (성지송학중, 이우고, 전인고 사례)
-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담당교사의 이해도에 따라 발표위주인가 학교 가치관을 성립하는 것인가에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술강사 담당교사들이 1/n의 생각, 교사들이 쉬는 시간이라는 생각으로 편성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를 축소시키게 된다.
- 최근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사 수요감소에 대한 예술교육 방법론 연수를 통한 예술장르 교육 담당 교사의 양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이러한 형태보다는 위에 언급한 교사들의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기획자로서의 환경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관련 연수들을 확장하고, 교사들이 이 역할을 해낼수 있는 환경을 제안한다.

3) 중앙- 광역 단위 매개인력 지원 환경 구축 (교육부 협력 포함)

- 정보가 많아지고, 관계가 어려워지는 사회가 되면서 조정자, 매개자의 역할이 많이 이야기된다. 이것은 여러 조직에서도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라는 조직에는 조정자, 매개자라는 역할이 매우 부재하다. 그래서 더 어려운 환경이다.
- 이에 이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매개인력을 지원하는 환경 구축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학교의 담당교사제도 이제 간 학교에 초임으로 들어간 교사가 이 역할을 하게 된다면 다른 선배 교사들을 설득하며 방향을 만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혼자 할수 있는 것이 아닌 진로부장제처럼 교육부의 역할에 대한 인정과 지원이 필요하다.

- 또한 지역 거점형 디렉터, PM에 있어서도 영국의 CP제⁵⁾처럼 안정적 지원환경이 필요하다. 중앙 또는 광역 단위의 지원 환경, 교육부 협력 환경이 마련되어 직위와 존재가 인정되어질 때 학교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그 파급력이 안정적으로 될 것이다.

- 2019년 현재 전국의 초등학교는 6,215개, 중학교 3,216개, 고등학교 2,336개이다. 그리고 학령기 인구는 782만명(6세~18세)이다.⁶⁾
- 이 많은 학교, 초중고 학령기 아이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정책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교육부, 교육청과 좀 더 협력, 상생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 광역- 기초별로 지역 여건, 학교 현황, 학급수와 학생수 등의 교육 여건, 강사 운영 환경 등 많은 차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관리, 협력에 대한 구조가 매우 단순하다. 이에 지역 기반의 사업 구조 다각화 및 유연화 운영은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참조〉 2017 기준 전국 학교 현황 및 지역 규모

	초등 (공)	초등 (사)	초등 (국)	중등 (공)	중등 (사)	중등 (국)	고등 (공)	고등 (사)	고등 (국)	합계	면적(k㎡)
서울(25구)	557	39	2	273	109	2	117	200	3	1,302	606,114
부산(15구,1군)	298	6	1	137	37	0	63	76	3	621	993,535
대구(7구,1군)	223	4	2	90	34	1	43	48	1	446	883,568
인천(8구,2군)	254	5	1	125	10	0	91	33	1	520	1,156,694
광주(5구)	151	3	1	64	25	1	24	42	1	312	501,244
대전(5구)	148	2	0	72	16	0	34	28	0	300	539,603
울산(4구,1군)	121	0	0	60	3	0	44	13	0	241	1,144,600
경기(28시,3군)	1,284	3	0	543	87	0	338	135	0	2,390	10,365,462
강원(7시,11군)	376	3	1	148	15	0	89	21	1	654	16,909,519
충북(3시,8군)	266	1	2	106	19	2	62	21	2	481	7,405,423
충남(8시,7군)	416	1	1	146	43	1	81	36	1	726	8,762,424
전북(6시,8군)	421	0	2	160	49	0	64	70	2	768	8,131,267
전남(5시,17군)	467	3	1	221	34	0	96	43	0	865	15,316,001
경북(10시,13군)	505	3	1	198	73	0	95	91	1	967	19,128,633
경남(8시,10군)	518	2	1	189	77	1	112	78	1	979	11,700,468
제주(2시)	118	0	1	38	6	1	20	10	1	195	2,049,862
합계	6,123	75	17	2,570	637	9	1,373	945	18	11,767	

* 세종자치시 면적 제외, 학교는 세종시 점검전으로 추정됨 (오차범위 넓어서 적용하지 말 것, 참조용)

* (공)-공립, (사)-사립, (국)-국립

5) 양평학교문화예술교육 연구팀,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의 마중물- 학교문화기획자, 2018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연구개발 오픈 랩’,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P38-40

6) 전국 학교 현황 (2018년, <https://blog.naver.com/so15284/221437102442>), KOSIS 통계청, 2017. 11 <https://blog.naver.com/khd9345/221247239033>)

토론문

강원재 (영등포문화재단 대표)

1. 우리 사회는? 학교의 모습은? 문화예술교육은?

- 기후변화시대, 자동화된 지능형 기계시대, 투명사회, 단속사회, 각자도생시대, 위험사회, 다문화사회, 양극화, 카지노경제, 글로벌게임, 혐오사회...
- 입시중심의 경쟁적 학습제도, 스승이 사라진 학교, 정당화된 폭력이 만연한 교실, 왕도가 없음을 잊어버린 학습문화, 바쁘고 지쳐 서로를 돌볼 수 없는 교사와 학생, 헬리콥터맘, Phajaan 혹은 Paideia...
- 통제가능한, 예측가능한, 계획된, 정량화된, 안전한, 표준화된, 보편적인, 학교행정 틀에 맞는, 비정치적인, 프로그램화된...

2. 사람이 생기로운 시대를 위한 학교와 문화예술교육의 과제

- 생명돌봄 신인류(최초의 호혜적 어울림 인간) 교육 : 합리적이지도 합법칙적이지만도 이성적이지만도 않은 스스로와 이웃, 마을 그리고 자연의 섭리와 가능성을 ‘알파고’보다 먼저 발견하고, 선한 마음과 아름다운 가꿈에 의지하며 생기를 돌보는 감성, 영성, 지성, 기술 교육
- 자율문화학습 : 주어진 학습환경을 벗어나, 각자의 타고난 기질과 본능에 충실한 학습계획을 스스로 만들고 공부하는 일시적 유목적 문화교육(※두달예술학교)
- 에너지·생태교육 : 탈원전 탈화석연료 이후 시대에 대한 상상과 에너지를 아끼며 사는 삶의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한 교육적 접근(※에너지전환학교운동)
- 모험협동교육 : 자연이든 도시든 혼자서는 어디라도 위험한 환경에서 따로 혹은 같이 캠핑을 하면서 생존에 대한 공포를 넘어보는 모험학습(※운동장캠핑, 옥상캠핑, 모험놀이터, 무인도탐험)
- 경계 넘나들기 교육 : 자연에서 문화를 지키며 사는 활동, 도시에서 자연을 일구며 사는 활동. 국경을 넘는 여행, 언어나 종교가 다른 사람과의 파티, 세 가지 이상의 디자인과 기술을 결합한 발명 활동 등을 통해 다름을 발견 인정하고 서로에게 배우면서 함께 조율하며 사는 법을 찾는 교육
- 공공공간 만들기 교육 : 수많은 정보와 시선, 소음에 휘둘리는 광장이나 공장, 교실도 아니고, 걸어 잠근 자기만의 동굴이나 꿈속도 아닌, 타인과 함께 있으면서도 고요하고 안전하게 자기 호흡을 찾고, 리듬을 익혀갈 수 있는 광장과 동굴 사이의 ‘손님 같은 주인’, ‘주인 같은 손님’의 공공공간 만들기 교육

3.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지역 현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언

- 건강한 생태계는 개체의 건강성과 다양성이 지속 가능한 상태를 일컫음. 건강하게 작동하는 지역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생태계는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주체가 얼마나 많은가 여부와 관련됨. 이는 다음을 통해 이뤄지고 지속될 수 있음.

- ① 준비된 주체의 조사 매핑과 네트워킹 및 활동 지원(조사연구사업, 포럼, 교류사업)
- ② 잠재적 주체 발굴과 성장 지원(공모사업, 조사연구사업, COP지원, 아카데미)
- ③ 외부주체의 초대와 지역 밀착 혹은 특성화 기반 협력 프로젝트 추진(학교기반 문화예술교육리빙랩)
- ④ 위 세 가지를 기획하고 촉진하고 지지하고 점검하는 지역사회공론장과 협력적 실행 체계 마련과 운영

• 이러한 과제의 실현은

- ⑤ 현행 광역단위 단체장 임무로 한정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운영’과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을 기초 자치단체장의 임무로 옮기고, 법 10조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작동하면서 구체화 실질화 할 수 있으며,
- ⑥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지역 내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협의체’를 포함하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화예술교육 거버넌스’, 시범사업 및 실행단위 거점으로서의 공간을 아우르는 형태로 조성되어야 함.

토론문

고은아 (참교육학부모회 중등)

학부모가 바라본 학교문화예술교육

학교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하면 학부모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활동이 떠오릅니다. 1인 1악기 사업과 문화예술 관련 주제의 학생 동아리 활동입니다. 초등학교는 방과후 활동으로 오케스트라 활동 및 악기 배우기 수업이 있기는 하나 중고등학교에서는 주요과목 수업에 밀려 그마저도 폐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과후 활동은 별도로 하고 위의 주제 두 가지와 학교문화예술교육에서 지역인프라의 적극적인 활용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1인 1악기 사업

문화예술교육이 강조되면서 경기도는 1인 1악기 사업이 점차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악기 하나 정도는 연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좋은 의도이기 는 하나 진행방법이 획일화된 교육방법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이나 학교장의 선호 악기로 일괄되게 진행되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학생들이 원하고 배우고 싶은 악기는 다양할 수 있는데 학생들의 수요 조사없이 학년당 혹은 학교당 한 악기(기타, 오카리나, 리코더 등)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학생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관리자나 교사의 욕구가 아닌 학생들의 욕구가 반영되어서 한 반 단위가 아닌 다양한 학생 수의 그룹으로, 좀 더 다양한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학생 동아리 활동

치열한 대입경쟁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그나마 경쟁에 치우치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토래 친구들과 할 수 있는 기회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의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으로 우리 아이들은 하고 싶은 댄스활동이나 노래, 뮤지컬 등 본인들의 끼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아쉬운 것은 특정 활동에만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활동이 댄스와 랩 동아리 활동입니다. 물론 현재, 시대적으로 아이들의 욕구가 반영되는 것이기는 하나 학교나 지자체에서 이들 동아리는 예산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시키고 있고 소수의 클래식 악기, 문예, 미술 분야의 동아리는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요즘 뮤지컬 동아리가 활성화되면서 종합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는 있

나 이러한 트렌드에 따르는 특정 분야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이나 지자체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3. 문화예술관련 지역인프라의 적극적인 활용

학생들이 꼭 직접적으로 활동을 해야하는 것만이 아니라 꿈이나 끼가 관련이 없더라도 수준 높은 작품들의 간접적인 체험 역시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마다 예술의 전당 등 훌륭한 지역 문화예술 기관이 있어서 훌륭한 작품들이 전시, 공연하고 있음에도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문이 높거나 딱 닫혀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학생들에게는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활동 장으로, 간접적 체험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생들이 쉽게 영화관을 찾아 영화를 감상하는 것처럼 감상의 장으로서 지역의 문화예술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교육청이나 학교와의 연계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토론문

고일석 (전라남도교육청 장학사)

지역 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원탁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은 예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한 일이다. 다름 아니라 이러한 고민과 실천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주도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회와 입시교육의 회오리속에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소홀하다는 점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 교육청의 경우에도 예술교육담당 장학사가 1명이며, 이 한 명이 다른 수많은 사업과 업무를 함께 맡고 있어 예술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지역사회와 학교에 기반한 예술교육 정책과 사업으로 재구조화해 기획,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희망도 있다. 10여년 전부터 공교육의 주요 흐름 중 하나로 등장한 혁신교육은 모든 교과교육이 과목의 교수요목만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학생이 합리적이면서도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10여년의 혁신교육의 실천현장에서 몸담았던 교사로서 내린 결론은 개별 교과교육을 뛰어넘는 민주시민교육으로의 업그레이드는 2020년 또다른 질적 성장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교육선진국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나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이 학교교육의 중심으로 자리잡았을 때 우리가 원하는 미래교육의 새로운 비전이 완성될 것이다.

1. 2015 개정교육과정의 특징 중 유의미한 변화

-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중심 교육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예술·체육교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수행평가의 반영비율을 확대하고 학습의 결과 중심이 아닌 배움의 과정을 평가하는 과정중심평가를 도입되었다.
- 과정중심평가가 성공적으로 학교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모든 교과교육이 타 교과와 연계하여 융복합

수업이나 프로젝트 수업으로 수업의 양을 줄이고, 배움의 질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 모든 교과교육이 단순한 교과 간 통합수업이 아닌 융·복합수업이나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예술교육이 연결고리이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의 주변부로 밀려나 있는 예술교육이 교육과정의 중심부로 이동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금의 시간을 예술교육의 주체들이 준비 없이 맞이했을 경우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결정적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도 없을 것이다.

2. 집단지성으로(지역단위 교사연구회) 학교예술교육의 질을 높여야

교육과 수업은 교사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공공의 자산으로 교육과 수업을 인식한다면 교사들은 개인의 실천을 넘어 동료교사들과 함께 고민하고 수업을 만들고 수업안에서 아이들의 변화와 성장을 들여다보며, 동료들의 교사로서의 삶을 함께 성찰해 가는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고흥예술교육연구회’의 활동 사례

기존 음악과 미술과로 독자적으로 운영되던 모임을 통합하여 2016년 고흥예술교육연구회로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였으며, 예술교육적 역량을 키우고 수업나눔 등을 실천하면서 동료의식을 강화해 왔으며, 2017년 말, 지역사회 연계 공동프로젝트 수업과 지역예술인, 주민과 함께 하는 ‘연홍도 프로젝트’라는 예술교과 연계 지역예술교육축제를 만들어 보기로 제안하였다.

- 2018년 1학기 : 사전협의회와 공동수업안 주제 선정, 현장답사 진행
- 2018년 여름방학 : 공동 프로젝트 수업 기획 및 운영을 위한 교사직무연수 진행
- 2018년 2학기 10차시 공동수업 실시
- 수업결과물을 활용한 공공 예술작품 설치와 작은음악회를 겸한 마을예술교육축제 실시를 통해 지역민과의 마을축제의 장을 만들어 내었다.

수업과 마을예술교육축제에 참여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웠던 예술교과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몰입할 수 있는 수업이었고, 나의 작품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귀한 쓰임이 될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를 내려 주었다. 그러한 학생들의 긍정적 평가에 힘을 얻어 2019년에도 ‘과역 프로젝트’라는 공동 프로젝트 수업과 지역예술교육축제를 운영하였다.

3.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통한 학교교육과 연계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체험장으로 활용하는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넘어 학생들의 심미적 역량을 키우는 공간과 도구로서의 문화예술의 쓰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확장된 교육적 공간과 자신의 삶과 세상을 인식해 가는 참 배움의 공간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많은 지역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영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진로탐색과 문화예술 체험장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자신의 예술적 역량이 단순한 체험도구로만 사용되는 것을 넘어 학교교육과정의 일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 좀 더 밀접한 연계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

학교 안과 학교 밖 목공수업 연계 사례

예를 들면 ○○지역의 경우 지역의 목공예를 하는 마을학교 선생님이 2018년 2월 체험장과 가장 가까운 중학교의 선생님들과 협의하여 해당 중학교 1학년과정에 전면 시행중인 자유학년제의 교육과정으로 목공예 수업을 연간 배치하고 학교 안과 학교 밖(마을학교)에서의 목공수업을 입체적으로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교육활동의 질이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 체험의 장을 넘어 다시 교육공간으로 인식
- 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적극적 결합
- 2015. 개정교육과정의 특징 중 하나 - 자유학년제 적극 활용 필요

4.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와 학교교육이 교집합할 수 있는 공간재구조화 필요

2019년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공간혁신 사업이 매우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2020년에도 좀 더 많은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통한 학교 공간혁신 사업이 많은 학교에서 펼쳐질 것이다.

전남교육청의 경우 학교공간 혁신 사업을 학교교육과 마을교육이 만나는 플랫폼으로서의 공간재구조화를 제안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이 마을로 나아갈 수 있고, 마을이 학교교육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학교 공간혁신을 통해 2015. 개정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지역사회 연계 교육이 가능한 하드웨어적인 완성을 이루어나갈 예정이다. 그렇다면 이 공간에서 학교교육과 마을교육(문화예술)이 만나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사, 지역문화예술인들의 교육적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 문화예술교육 체험공간 구축(교육청+지자체)
- 학교의 일부 공간을 지역민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조화
예) 학교 : 도서관 ⇒ 방과후 마을 북카페로 무료 개방
마을 ⇒ 학생들을 위한 독서나 그림책 읽기 프로그램 운영
- 국내외 우수사례 발굴과 지역화를 위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정책적 지원

5. 예술교육 담당교사들의 자발성과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 문화예술인들과 학교교육이 만나는 중간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에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예술교과 담당교사들에 대한 질 높은 연수 프로그램 제공과 지역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교사들이 자신이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서 문화예술과 학교교육이 교집합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밑그림을 스스로 그리고 완성해 갈 수 있는 바턴 업 방식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사 연수프로그램 개발
- 지역 문화예술인을 위한 교육적 역량을 키우는 워크숍 기획 및 운영

더 이상 교육은 학교와 교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문화예술이라는 매개를 통해 지역의 모든 교육적 인프라가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토론문

박만용 (전국미술교과모임 대표, 성서중 미술교사)

토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사업들의 활성화, 다각화, 현실화 등을 논할 때 사업을 중심에 두고 나누는 의견과 이야기가 가지는 아쉬움이 있어 먼저 거론코자 한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이라는 말 속에 담긴 다양한 함의와 특성에 관한 이야기이다. 먼저 문화예술이라고 하면서 과연 예술과 다른 것인가. 문화는 어떤 측면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장르 중심의 예술교육⁷⁾과 다른 특별하거나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가. 그러한 선례를 수년간 만들어 내거나 발전해 오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진전되었는지를 되묻거나 되돌아봐야 할 일이다. 이는 근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업의 활성화 이전에 말이다.

학교	+	문화	+	예술	+	교육
장소, 대상, 접근성		생활, 주도성		창의성, 예술성		목적, 방법, 사업성

충분하고 적절한 콘텐츠로 교육활동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업의 승패 이전에 사업의 목표와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먼저여야 한다는 생각에서이다.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명칭을 만들 때부터 가진 의도성과 고민이 담겨지는 교육콘텐츠와 그 실현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되물음이 그치지 않아야 할 일이다. 그 토대 위에서 사업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된다.⁸⁾

김지연 선생님의 발제문을 읽으며 전체적으로 동의되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섬세히 제시되었다 생각되어 크게 고치거나 반론을 제기하기보다는 제시된 발제문에 아이디어를 덧붙여 보는 입장으로 몇 가지 정리하여 토론을 하고자 한다.

크게 ‘기존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재구조화’, ‘지역형 학교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매개인력(조정자)육성’으로 나누어 발제 된 내용을 토론자 입장에서 대안과 함께 정리해 본다면 다음의 다섯 가지 개선방안으로 아이디어를 덧붙여 본다.

1.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재구조화를 위해

발제문 ‘학교 예술 강사 지원사업 재구조화’에 거론된 바와 같이 본 사업이 과연 알차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적인 입장에서 개선점을 찾는다면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수요자(학교)와 공급

7) 문화를 포기하고 예술 교육적 측면일도 제대로 되었느냐는 질문에 또한 자신 있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 학생들과 그에 걸맞은 적절한 예술교육인지, 체험형 장르 위주 교육인지 등. 이 또한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한다.

8) 문화+예술 또는 문화예술이라는 측면에서의 근본적인 고민에 추가로 왜 교육으로 접근 되었는지와 학교를 통한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을 사업으로 만든 의도 또한 본 사업의 본질을 고민하는데 중요한 지점이라고 본다. 일개 토론문에 장황한 글이 될까하여 나머지는 간단 표로 대신한다.

자(강사, 지역예술가)의 상황에 맞추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 과정에서 학교(담당교사)와 강사는 대상화되지 않기 위해 사업이나 필요한 콘텐츠를 스스로 요구하거나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2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학교 측 사업 제안 방식

해당 학교(담당교사)들은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콘텐츠를 사전 제시(공개)하고 이를 강사들이 검토하여 교육 가능한 강사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학교와 강사의 매칭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한다.⁹⁾

2) 강사 측 사업 제안 방식

반대로 학교들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프로그램이나 내용이 없을 수도 있으며 강사들의 특, 장점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강사들이 직접 자신이 진행 가능한 콘텐츠나 하고픈 프로그램을 제시(제안)하고 이렇게 공개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다.

두 경우 모두 사람부터 배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과 콘텐츠를 함께 고민하고 매칭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강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능하고 잘할 수 있는 또는 학교에서 필요로 할 것으로 예측되는 콘텐츠를 생산(기획)하거나 준비하여 자신의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곳과 매칭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과정은 강사(지역예술가)들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콘텐츠 연구와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학교와 강사 간 매칭의 효율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반대로, 학교 측 사업 제안 방식 또한 단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에 따라 전문가와 매칭되는 방식이기에 두 경우의 수 모두 사업의 주도성을 학교(담당교사)와 강사 측이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러한 방안은 프로그램 안내, 선택, 매칭, 선발 등의 과정이 지금과 달리 새롭게 갖추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는 별개로 발제를 통해 거론된 (담당교사와 예술강사의 소통과 협업을 위한) 평가시스템의 개선 필요성과 예술강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이나 연수 등 지속적인 지원 또한 꼭 필요한 개선지점이라는데 동의하는 바이다.

2. 지역형 학교문화예술교육 모델개발 사업으로

세 번째로 제안할 개선방안은 발제문에서 다룬 ‘지역형 학교문화예술교육 모델개발’을 위한 협력적 시범사업과 프로젝트 팀 운영사업이다.

1) 협력적 시범사업(시범학교) 신설

학교(교육청)와 문화예술강사(문체부 또는 지역 센터)간의 협력적 시범사업으로 성공적인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형식적인 시범연구학교와 같은 형태로 보일 수도 있으나 ‘혁신학교’ 사업이 학교현장의 수업과 학교문화 개선에 크게 영향일 미친 것처럼 대표적인 시범케이스, 모범케이스를 만들어내어 이를 사례로 제시함으로 학교운영과 문화예술교육의 상을 보여줄 때 파급력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이론이 아니라 실현되는 모습을 보임으로 예시가 되어 타 학교나 사업에 의미 있는 변화를 선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선발된 사업대상에게는 지역예술가와와의 협력 및 예산 사용에 있어 자율권을 보장하고 그 결과

9) 선정 절차와 관련한 기술적인 문제는 추후 설계 필요

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을 가졌으면 한다. 더불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적 발전을 위해 큰 문제가 없는 선정된 시범사업(시범학교)은 4년 정도 지속되도록 했으면 한다. 물론 공정한 선정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우수한 사례와 현실 가능한 모습을 구현해 낼 수 있다고 본다.

많은 학교, 많은 강사의 학교파견 사업이 아니라 성공적인 사례 몇 가지가 가지는 힘은 학교와 본 사업을 변화시키는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이는 지자체 및 교육청 등의 문화교육복지 차원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켜 예산지원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¹⁰⁾.

협력적 시범학교 신설을 위하여 한 가지 더 제안하고자 내용은 ‘지역 또는 전국단위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디자인을 위한 캠프(연수)’를 개설하여 운영했으면 하는 바이다. 특출한 한 개인이나 단체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거나 단순히 선발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사업 공지와 기초적인 선발 후 프로그램이 모범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학교 현장교사와 지역 전문예술인들이 함께 만나(한 개의 팀이 아니라 여러 팀이 만날수록 아이디어와 시너지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함께 설계하고 기획하는 단계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다¹¹⁾.

2) 프로젝트 팀 (신설) 운영

이 제안은 발제문에서 제시한 ‘학교 수요 환경을 고려한 ‘주제 중심 사업’ 개발 및 환경 구축’ 과도 같은 맥락에서 제안하는 바이다. 발제문에서는 진로교육, 학교폭력, 성교육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문화예술교육으로 재구성하여 학교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강사 개개인이 학교의 요구를 교육콘텐츠로 그때그때 변화시키는 일은 알찬 프로그램으로의 재구성이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때문에 이는 지역단위에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내실 있는 방식이 아닌가 한다.

개별 학교에서의 요구를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로 만들어 내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통일, 성교육, 폭력, 진로, 안전 등)를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로 변환, 개발하는 프로젝트 팀이 존재하고 이렇게 개발된 프로그램을 해당지역(팀이 방문 가능한 범위) 학교들에 사전 제시하여 신청을 받아 일정을 조율하여 순차적으로 방문¹²⁾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과학, 정보, IT, 진로 등의 내용으로 일반 학교에 특정 팀들이 방문하여 1개 학년 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이를 문화예술교육에서도 활용하는 방식인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함께 방문 교육이 가능한 지역별 팀이 존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프로젝트 팀을 선발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 모습은 유랑극단의 형태가 될지, 움직이는 도서관처럼 문화예술교육버스가 될지 알 수 없지만 문화적 소외지역일수록 학교단위 체험학습과 문화체험의 기회가 부족하여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¹³⁾

3.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매개인력(조정자)육성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매개인력(조정자)육성’과 관련된 발제문에서는 학교 내 도서관 사서 배치 사

10) 각 시도별로 이루어지는 혁신학교 운동들의 파급력과 지자체, 교육청 등의 지원은 과도하다 할 만치 적극적이고 크게 작용되고 있다. 본 사업을 지역형 문화예술교육 모델개발에 분류한 것은 다분히 지역교육청이나 지자체 등의 호응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서이다.

11) 뛰어난 누군가로부터 듣는 강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사업의 주체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주어진 조건과 상황의 공유 위에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노력이 더욱 현실적이며 창의적인 새로움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12) 학교별로 방문 요청시기가 제각각이기에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신청받아 학교의 교육과정 등 조율을 거쳐 진행 가능하다.

13) 특히 문화소외지역일수록 학생들을 이동시키는 방식보다 찾아가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업과 비교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1) 학교 예술 공간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한 예술 공간 운영자 배치 : 학교문화예술교사

교육부를 통해 전국의 많은 학교들이 학교 공간 리모델링, 문화예술 공간 만들기 등의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기존의 리모델링은 교내 인테리어나 특별실 리모델링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학교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예술활동이나 체험 등이 가능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에서 가장 아쉬운 일은 훌륭한 공간을 만들어내고도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이다. 보기 좋고 근사한 공간과 시설을 만들었지만, 관리문제와 안전문제, 지속적인 활용의 노력(인력) 문제로 닫힌 공간, 활용성이 떨어지는 ‘전시실 위한 공간’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이다. 바쁜 현장교사들에게 공간관리 운용의 업무가 부가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당연히 창의적인 활동으로 이어지기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꿀’과 같은 형국이다.

학교¹⁴⁾에서의 문화예술적 공간이 생각과 생활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공간을 관리, 유지, 운영, 활동하는 주체적인 사람이 존재해야만 한다. 나는 이를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교사’가 있듯이 문화예술공간을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사’라고 칭하고 싶다. 문화예술교사는 해당 공간을 문화예술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학생과 만나고 놀고 창작하며 공간을 꾸리거나 수업활동을 교사들과 협업하여 진행하는 중심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교사를 근본적으로는 현재 사서교사와 같은 방법으로 교육청이 선발하여 배치하였으면 하지만 중간과정으로 초기에는 문화부의 예산 등으로 학교로 파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¹⁵⁾.

토론을 마치며, 토론에 들어가며 했던 말과 같은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다. 문화예술교육임을 잊지 말자는 것이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했던 예술(장르) 중심의 사업들은 많았지만 문화예술교육이 가지는 생활화, 삶을 바꾸는 주도적 경험으로의 방향성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선상에서 예술을 넘어 문화로, 교육으로, 지역으로 더 큰 생명력을 확장시켜 갈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예술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찾아가는 예술, 맞춤형 예술, 자라나는 교육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임을 잊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강사파견사업 이상을 넘어설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역의 예술가와 지역의 학교교사가 함께 수업을 만들고 운영하며 서로 보완적인 협력을 상상해 본다. 프랑스 미술교실에서 만나봤던 그들처럼...

토론문

박은주 (참교육학부모회 성남지회 사무국장)

우리 자녀들의 미래교육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정책방향 재정립 및 실행계획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학부모로서 기쁘게 생각한다. 유의미한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다양한 의견들이

14) 미성숙한 학생이라는 점과 공간대비 너무 많은 학생들이 생활하게 되는 점, 자율성이 제약받고 있는 점 등의 영향이라고 본다.

15) 당장 공무원 정원, 선발과정, 자격 등 다양한 난제가 있는바 초기 사서교사를 학교단위에서 임시계약직으로 고용하여 운용하던 방식처럼 한시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잘 수렴되길 바라며 학교 현장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현황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개선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교육과정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현황

정확한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교육의 목표를 세워 진행해야 하는 문화예술교육이 부족한 예산이나 교육 철학과 교육목표의 부재 등으로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때는 그나마 자유롭게 문화예술 분야를 공교육과 사교육에서 경험해 보지만, 중·고등학생들은 입시위주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문화예술분야를 입시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는 한 대부분 등한시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1) 초등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현황

첫째, 연속성이 없는 단발성 교육

현 초등 교육과정에서 문화예술교육의 모습을 보면 외부강사들의 단발성 교육으로 맛보기만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학교 예산이든, 각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각 시 등의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이든 특히나 단발성의 교육이 가장 빈번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바로 문화예술 분야이다. 문화예술분야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 한 번 체험해보는 경우가 많다.

둘째, 외부강사와 학교와의 자유로운 소통의 부재

다양한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요즘은 많은 외부강사들이 학교 안에서 수업을 진행한다. 이런 경우 학교 교사들과 외부강사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는 필수이지만, 실제로는 소통이 잘 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아 보인다. 쉽게 소통할 수 없는 구조이거나 그 필요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전체 교육과정에서 교육 과정을 같이 조율할 필요는 없고,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원하는 부분만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소통이 불필요할 것이다.

셋째, 학생들의 수준과 요구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수업

학생들의 1인 1악기 연주를 목표를 하거나 오케스트라 등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에서 학생들의 요구에 충분히 부합하는 교육을 제공하는지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한다. 음악과 미술 등은 사실 사교육 시장에서 학생들이 많은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초등과정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사교육은 맞벌이 부부들의 돌봄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교육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 중고등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현황

중고등의 경우는 진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문화예술 분야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더 고액의 사교육을 받고, 인문계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과목으로 취급을 받는다. 주요 과목이라고 일컬어지는 몇 과목만 수능을 보고, 입시에 영향을 미치니 대학 입시가 목표인 학생들에게 당연한 모습일 것이다. 특히, 고등학생들에게 문화예술은 시간 낭비로 생각되어지곤 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문화예술을 접할 수 기회가 충분한지의 여부 등의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2. 미래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1) 학교 안팎 다양한 모습의 선생님들과 상호작용하며 함께 성장하는 학생들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 바로 인간의 삶을 사람답게 살기 위함이 아닌가?? 이를 위해서는 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학교가 바로 이를 도와주고, 사람을 연결해 줘야하는 것이다. 믿을 수 있는 어른과 전문가들이 바로 학교와 마을에 학생들과 언제나 소통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 물론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법도 이제는 낯설지 않지만, 사람은 사람과 직접 소통하며 진정한 감정과 정보를 같이 얻을 수 있을 때 사고의 확장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외부강사들과 학교는 충분히 소통이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외부강사들도 가능하면 지역사회에서 능력 있는 외부강사들이 학교와 연결된다면 소통면에서 훨씬 수월하고, 학교 안팎으로 확장도 훨씬 수월하리라 본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2) 학교로 마을의 양질의 강사들이 쉽게 수업을 할 수 있고, 마을 전체가 학교

양질의 강사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도 필요해 보인다. 마을과 학교를 넘나드는 그 역할이나 그 역량이 있는 외부강사 중에 학부모들도 한 몫을 하리라 본다. 또한, 학교라는 좁은 공간을 벗어나 온 마을이 학교가 될 수 있다는 열린 사고는 문화예술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창의력과 연결되지 않겠는가?

3) 분명한 교육 철학 속에서 전 교육과정이 조화롭게 진행되기

단순한 체험을 넘어서 전체 교육과정과 조화롭게 진행되도록 전체적인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여유 있는 예산이 있어서 중간에 하나씩 체험해 보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경로로 문화예술교육을 접하게 할지 고민해봐야 한다.

3. 맺음말

우리나라에서 공교육에서의 문화예술 분야는 아직도 입시에 가려 그 중요성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지만, 문화예술은 인간이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인간의 삶에서 더욱 행복한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문화예술교육에서도 교육철학이 분명해야 한다. 교육의 철학과 목표 없이는 단순한 예산 낭비가 되는 일회성 교육이 되기 쉽다. 모든 교육은 효율성보다는 단 한 명의 학생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 교육을 받는 주체인 학생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교육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의 교육은 특히, 일방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분야이다. 이는 인간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분야임을 상기하며, 문화예술 교육의 가치 공유·확산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부터가 힘써야겠다.

토론문

백령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교수)¹⁶⁾

1999년 예술강사품제로 시작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20년은 다사다난하였다. 7차 교육과정과 주 5일제 실시, 음악, 미술, 체육교과의 존폐 위기 등을 포함해 21세기적 환경과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했을 뿐 아니라 예술가의 사회참여 등을 중심으로 문화와 예술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의 새로운 전략의 변화가 필요했다. 문화예술교육의 출현과 정책으로 학교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여건과 상황을 크고 작게 바꿨다. 2020을 여는 현재 우리 사회는 문화예술교육 전반에 걸친 또 다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번 학교문화예술교육의제 발굴 회의 역시 사회문화적 변화와 대응하기 위한 방안모색의 기회라 생각한다. 포용성, 지역화, 공유, 혁신, 과학과 기술(융합과 확장), 디지털과 삶의 문해력 등 문화예술교육에 핵심처럼 등장 해 새로운 변화를 주고자 하는 시대적 언어들과의 교차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2018 발표한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2018-2020>,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예술교육 중장기 계획>과 누리과정 개편을 수용하면서 학교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방안의 찾는 시간일 것이다. 기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재구조화, 지역형 학교예술교육 모델 개발, 학교 안팎을 연결하는 매개인력 육성을 중심으로 한 제안된 이슈와 사업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논의와 구현의 구체적 단계를 위해 논의가 요구된다.

그 이야기의 시작을 “학교”로부터 하고자 한다. 학교는 시설이기보다 행정관리 조직이다. 학교가 조직이기에 절차와 제도를 기반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선택한다. 그 선택 중 하나가 문화예술교육일 것이다. 이 선택은 학교, 교육지원센터, 교육청, 교육부와 협업,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구현 가능했고, 이후 양적 질적 확충을 위해 그 파트너십은 한층 더 중요 해질 것이다. 그 파트너십의 핵심은 소통(설득)일 것이다.

현재 국내 초중 고등학교 혹은 유치원을 포함한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변화와 발전을 위해 파트너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소통과 협업을 기반으로 한 교육 내용과 방법 개발 실행을 위한 파트너십의 진단과 함께 다음 단계의 설계 과정이 필요하다. 이 파트너십 과정에서 지역화 시대적 접근을 반영한 주체와 예산, 단계와 협업의 4 요소를 중심으로 체계화가 필요할 것이다. 제안된 이슈와 사업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물과 평가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된 바 있다. 이 시기(지역화 시대)에 이들이 다시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의 필요성이 더 이상 논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실행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이야기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목표와 근거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하는 것 역시 필요할 것이다. 목표가 명확하게 될 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역할이 논의될 수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계획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2018-2020>을 근거로 할 것이며 특히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경우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큰 틀인 <학교예술교육 중장기계획> 혹은 누리교육과정 개정안 맥락에서의 담론이 마련되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2018-2020> 내에는 수요중심교육 다각화 안에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개선으로 질적 내실화를 포함하고 있다.

무엇을 한다는 것보다는 왜 이것이 필요하고 어떻게 과정을 만들어 갈 것 인가를 검토하고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목표 설정되며 이와 관련된 여건, 환경 마련과 동시에 이를 실행할 주체와 예산

16) 문화예술교육이 출발했던 시점부터의 간헐적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읽고 떠오른 짧은 생각과 질문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반복적인 당위성 혹은 필요성 논의에서 멈추지 말고 학교와의 연계 및 사업 (환경 구축, 시스템 마련, 모델개발, 인력 육성 등)의 주체와 예산, 여건 및 상황 속 설득력, 실행력 (로드맵, 액션 플랜)과 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주체(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센터, 혹은 중간 매개 기관 등 그 가능성은 열려 있음)의 문제와 더불어 2020년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¹⁷⁾ 대부분이 강사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다각화 방안의 사업예산에 대한 환경 구축, 시스템 마련, 모델개발, 인력 육성 등에 대한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질문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하나, 제안된 사업 중 선 순환 구조를 위해 순차적 실행이 가능하다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효과적 협업을 이루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둘,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실행을 위한 시작은 어디가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top down/bottom up의 이슈) 중앙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광역센터, 이제 준비 중인 지역 거점, 학교 예술강사 사업 운영단체와 도, 시 단위의 교육청, 지역의 교육지원센터 어느 단계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하는가? 물론 각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있으나 보다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이를 시작하는 첫 단추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셋, 제안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학교의 변화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는 이러한 변화가 필요한가?

좋은 생각과 의견이 모아지는 계기를 기대한다.

토론문

손동혁 (인천문화재단/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팀장)

2004년의 문화예술교육과 2020년의 문화예술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얼마나 변화하였는가? 다시 창의한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으로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최초의 정부 정책서인 창의한국(2004)은 5대 기본방향과 27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역량 강화를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하며,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철학, 방향성, 정책 비전에 대한 사회 공론화 과정 부재’, ‘문화기반시설 내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과 프로그램 부족 등 사회문화예술교육 역량 미흡’, ‘입시 위주 학교교육으로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등 제반 여건 미흡’, ‘학교 안팎의 자율적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정책 미흡’을 당시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음악, 미술의 정규 수업시간이 축소 또는 선택교과화됨으로써 정상적인 교육목표 달성이 힘들”고, “변화하는 문화환경에 부응하는 교원 재교육 프로그램, 자율연구 활동지원 등이 부족하여

17) 902억 (국고 548억, 지방비 58억, 지방교육재정 296억) 예산

교원들이 새로운 지식이나 교육방법론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음악실, 미술실, 무용실 등의 학습공간과 기자재가 미흡하고, 디지털 영상매체 등의 시설을 갖춘 문화작업장 개념의 활동 공간도 부재”하며 “이러한 자원을 보유한 지역사회 시설 또는 단체와의 연계도 부족하여 질 높은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기대하기가 힘들”뿐만 아니라 “학교 안팎에서의 청소년 자율 문화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학교와 지역문화기반시설, 지역대학 문화예술 관련 학과, 전문예술단체 등과의 자원 교류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담임교사와 예술 관련 교사, 지역 예술가 간의 인적 네트워크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2005)에 따르면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이며, 사회문화예술교육¹⁸⁾은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입니다. 여기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전체 교육과정의 일부분으로 계획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 보아야 합니다. 교육부와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이 각 부처 또는 교육계와 문화예술계의 입장만을 반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미 교육운동 영역에서는 ‘OECD 최하위 수준의 아동·청소년 행복도’, ‘교육 불평등에 따른 학생 간 교육 격차 심화’, ‘학교 서열화에 의한 학벌사회의 부작용’, ‘극심한 경쟁이 초래한 윤리의식의 하락’ 등에 주목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혁신교육지구’ 등 학교와 마을과 지역이 협력하여 교육을 혁신하고자 하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역시 이러한 흐름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교육 활동 현장은 물론 정책 논의의 장에서조차도 교육 전반을 혁신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학교와 사회로 문화예술교육을 구분하고, 장르 기반의 감성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 2010년에 유네스코에서 채택한 ‘서울 어젠다:예술교육 발전목표’에서 제기된 목표와 전략들에 관한 논의도 찾아 보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학교/사회문화예술교육 프레임으로는 소위 학교문화예술교육을 비롯한 문화예술교육의 과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돌아가 창의를한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목표를 유기적으로 바라보고 현재 시점에 맞는 실천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의 문화향유력 향상과 창의력 고취를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문화예술교육은 삶의 질 향상과 창의적 인력 육성의 기반
- 국가적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혀, 문화예술교육의 참 가치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개인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
- 전문 예술가 양성과 함께 문화적 삶의 실현 능력을 길러주는 문화예술 향유자 교육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사회 전체의 문화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어린 시절부터 노년 시기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지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문화예술교육은 세대간·계층간 소통능력을 확대하고 공동체 지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8) 참고로 평생교육법 제2조는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학교 교육을 지식중심에서 문화중심으로 전환

- 학교교육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과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 지성, 인성, 감성 모두를 풍부히 갖출 수 있는 전인교육으로 전환
-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고 학교교육과 연계를 맺는 외부 문화예술인 재교육을 통해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
-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 현장에서 문화예술 경험과 향유기회를 신장하는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음악·미술 문화예술 관련 교과만이 아니라 기타 과목의 교육에 있어서도 문화예술이 응용되는 통합적 교육을 활성화

3. 지역 문화자원과 학교 교육 간 연계 강화

-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학교와 문화기반시설, 지역 대학의 문화예술 관련 학과, 문화예술 전문인력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역기관, 단체 또는 개인과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정착
- 지역 문화기반시설과 대학 등의 물적·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주민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청소년들의 학교 밖 문화활동을 활성화
-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문화예술인들과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들이 일상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친밀감 증진

4.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 교육부와 함께 관련 여건, 현장 경험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 각종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 마련
-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을 제정하고 각종 교육·문화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
- 문화예술교육의 참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방송,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

토론문

신운섭 (연극분야 예술강사)

1. 학교 현장 수요에 기반을 둔 학교문화예술교육 다각화 방안

양적 팽창은 공감하나, 질적 성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경향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 문제를 알아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1. 기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재구조화	
1) 기존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의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체험화, 선택의 제약성, 지역의 한계 - 시간의 부족, 강사의 자질, 협력의 부재, 신규진입의 어려움, 휴직년 불가

(1) 학교와 예술강사 간 협력 또는 희망선택제에 대한 재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은 많이 알고 보아야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 서로의 호흡을 함께 할 수 있는 학교와 예술강사라면 연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필요한 지점이다. - 현재 상호배치 1차, 1개 학교에 한해서 진행 중이다. 나머지 학교는 예술강사 수업시수 고른 분배를 위해 제한을 두고 있다.
(2) 학교 교육차시의 현장을 고려한 유연성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시도보다는 학교, 학급을 고려한 1/n이 습관화되어 있다. -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실례가 있는지, 구체적 방법이 궁금하다.
(3) 담당교사-담임교사-예술강사의 사전, 중간, 사후 평가 시스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과정을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 -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 그러나 '시스템' 도입이라고 하니 거부감이 든다. 또 다른 의무와 일을 만들어 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2019년 두 개의 고등학교를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진행했다. 두 학교 모두 담당 선생님이 수업에 참관했다. 상반기에는 매시간 담당선생님이 달랐고, 수업 중 다른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반기에는 고정된 담당선생님이 매시간 참관했다. 하반기 선생님과 수시로 수업에 대해, 참여 학생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자연스럽게 평가나눔 시간이 되었다. 그러나 강사에 대한 배려와 하소연이었지 평가를 통한 발전적인 관계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긍정적인 관계였다. 처음이다.
(4) 예술강사의 전문성 개발 및 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모임 지원, 단체 지원, 이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단체 안정화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 지원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 좋은 선례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잘 해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선례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2) 교사-예술강사 협력 사업 개발 및 환경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 가능성이 만들어진 예술강사와 교사 협력시스템으로 학교별 협력 계획 운영서를 제출할 경우 우선적 지원환경 구축, 학교-교사-예술강사 간의 협력에 대한 동기 부여. - 좋은 생각이다.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 그러나 선의와 달리 강사의 일방적 기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학교는 예술강사의 성과를 학교의 성과로 만들어 버리는 나쁜 사례를 만들 것이다. 학교와 학교 교사에 대한 믿음이 없다.
3) 학교 수요 환경을 고려한 '주제 중심 사업' 개발 및 환경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은 매뉴얼을 통해 현장에서 교사/예술교육가 활용이 자료가 될 것 있다. - 매뉴얼? 자료로서의 역할 정도로 - 사례집 정도면 되지 않을까? 매해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 동안 '창체시간'에, '진로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물어본다. 아마도 학교에서 진행되는 진로수업은 전국이 동일할 것이다. 학교 교사는 매뉴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 일면 이해하면서도 답답하다. 수업시간에 만나는 아이들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다. '교육'을 하겠다면 역량과 무관하게 매번 매뉴얼을 만들 수밖에 없다. 주제중심수업! 강사의 역량과 관련된 문제다.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4) 신규 예술강사 인력 참여를 위한 사업 개발 및 환경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 집중기간, 축제를 통한 다양한 예술 활동에 청년예술교육가 그룹이 함께 하는 것! 현장 파악과 경험의 기회. - 좋은 취지임에는 동의한다. - 신규강사이건, 기존강사이건 예술강사는 어떤 경험을 가져야 예술강사라 할 수 있는가? 언젠가부터 대학 전공 혹은 문화예술교육사 과정을 수료해야 자격조건이 주어진 것으로 바뀌었다. 예술교육은 무엇을 교육하는 것인가?
2. 지역형 학교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	
1) 지역 문화예술교육단체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 근거한 단체들의 학교 연계 프로그램 개발, 지역 환경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실행 등을 통해 지역단체 육성 및 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다

-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양화
2) 교사 예술교육가 협력 프로그램 연구 개발, 실행 다양화 및 지역별 지속적 환경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 교육을 책임질 교사와 예술적 전문성을 지닌 예술교육가 사이의 새로운 상상과 현장 연계 프로그램 개발의 힘이 될 것이다. - 교사들의 주체성을 키우고, 예술교육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3) 지역 환경을 고려한 초·중 등, 학교 규모별 문화예술교육의 접근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이~~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효과가 높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3.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개인력(조정자) 육성	
1) 기초 단위 지역대상 학교 문화예술교육 디렉터 PM 육성 및 현장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와 예술강사, 학교와 지역 사이를 연계해 줄 수 있는 사람 -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판짜기(프로듀서/디렉터) 학교의 지역 매개자(에이전시), 예술 특성화 학교 연출가(디렉터) 프로그램 기획자(플래너), 교사-예술가 단체 매개자(코디네이터), 프로그램 진행 지원(매니저) - 진짜 한번 실행해 봤으면 좋겠다. - 단, 학교에 고용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우뚱! 조심스럽다. 고용된다는 것은 고용주체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것인데, 학교에 대한 신뢰가 없다.
2) 학교 교사 대상 문화예술교육 기획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내에 부수적 역할의 담당교사 문화예술교육사(진로부장제도 처럼) - 지역에서 어느 선생님의 사례, 담당교사가 해마다 바뀐다. 비정규 기간제 교사에게 배치가 되어있고, 매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 결정권자는 결과물만 보고 계약을 연장할지, 예술강사를 다시 부를지 판단한다. 이런 환경에서는 관계가 쌓일 수가 없다. 1년 단위 기간제 교사가 무엇을 계획할 수 있을까? 1년 단위 예술강사가 무엇을 계획할 수 있을까?
3) 중앙-광역 단위 매개인력 지원 환경 구축 (교육부 협력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가 많아지고, 관계가 어려워지는 사회..... 조정자, 매개자의 역할이 많이 이야기된다. 진로부장제처럼 교육부의 역할에 대한 인정과 지원이 필요하다. 직위와 존재가 인정되어 질 때 학교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그 파급력이 안정적으로 될 것이다. - 전적으로 동의한다. -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다. 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시스템이 생기고, 매뉴얼이 생기면서 언뜻 보기에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복잡해지고 해야될 일은 더 많아지고 있다. 그에 따른 직위와 존재 또한 좋아져야 할 것이다.

2.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다. 어떤 시스템이 해결할 수 있을까?

협동심을 키운다고 모둠학습을 그토록 시키는데 왜 관계는 진전되지 않을까? 도움반 아이가 같은 모둠에 있어 공정치 못하다고 정색을 하며 항의하는 이유는 뭘까? 좋아하는 일로 1년을 만나면서 공연도 하고 영화도 만들고 지냈는데 함께한 친구의 연락처를 왜 모를까? 공연 연습은 했는데 왜 공연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일까? 아이들은 학교에서 왜 잠을 잘까? 학교에서 자는 것이 너무 당연해졌다. 이러한 아이들의 모습은 이미 오래전 중학교로, 초등학교로 전이되었다.

나는 [연극+영화]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 그중 ‘제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어렵다. ‘공연’을 목표로 활동이 진행되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잘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 아이들은 그저 학교에서 연극시간을 배정해주니 참석할 뿐이다. 연극을 하려고 학교에 온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된 나는 이 아이들과 연극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시스템이 가능할까?

토론문

이동준 (가평교육지원청 장학사)

최근 문화예술정책·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문체부, 교육부 등 관계 기관들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일은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지역에서 문화예술업무 담당 장학사로서 일하며 얻은 경험과 생각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문화예술이 학생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따뜻한 공동체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예술의 본질을 지켜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되돌아봐야 할 것이 적지 않다. 학교 현장 수요에 기반 한 학교문화예술교육 다각화 방안에 대해 교육과정, 교사와 문화예술가의 협업,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지역별 거점 구축의 측면에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첫째, 초, 중, 고 학교교육과정에 관한 측면에서 되돌아봐야 할 측면은 우리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교실 수업이 분절화 되어있다는 점이다. 예술 과목은 음악과 미술이라는 과목으로 대표되는데, 예술교육은 분절된 방식의 접근을 넘어서서 학생들의 삶의 맥락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과와 융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학교 예술 수업은 교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음악과 미술은 주당 2시간 정도로 진행된다. 그나마 최근에 학생주도의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이 교육청 단위에서 정책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다행이다. 국어와 사회와 같은 인문학 중심의 교과와 음악, 미술, 체육과 같은 예체능 교과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예술전문가가 결합한다면 다양하고 의미 있는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이와 함께 교사와 문화예술전문협업을 통해 수업기획과 수업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수들이 만들어진다면 더욱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교사와 문화예술 전문가 집단의 다양한 협업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문화예술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 예술강사 사업은 중요한 한계가 있다. 지금의 방식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분야(연극, 국악, 공예, 애니메이션 등)에 대해 예술강사를 파견하고 강사들이 학교에 들어가 주어진 시간을 수업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의 방과후 수업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는 점이다. 원래의 취지는 예술강사와 학교 교사들이 사전에 교육과정을 서로 논의하고 학교 교사들이 수업을 주도하고 예술강사를 활용하는 것인데 현실은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만 하고 예술강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해당분야의 기능을 중심으로 학생들과 수업하는 방식이다. 심지어 수업 시간에 교사들이 교실에 있지 않아 지침으로 반드시 교실에 교사들이 상주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학교로 파견되는 예술강사와 교사들의 사전 협업 과정이 매우 부족하고 그 과정에 대한 치밀하고 체계적인 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예술강사 지원 사업 학교가 정해지면 학교단위 또는 지역 단위로 교사와 예술강사 간 사전 연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바람직한 운영 모델이 소개되고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장르별 지원 방식이 아니라 프로젝트별로 지원방식이 변경되어야 한다. (예를 든다면 **초등학교 연극 100시간 같은 방식이 아니라 **초등학교 마을이야기 기반 연극 만들기 방식과 같은 주제별 프로젝트 형식). 이렇게 되면 사전에 교사와 예술전문가 사이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이루어지고 보다 진전된 방식의 예술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별(교육지원청 단위를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문화예술기획자와 예술전문가들이 상시적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방식) 거점을 구축하는 일

이다. 문화예술을 장르별로 사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의 삶과 연관 지어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예술기획자들은 담당하는 지역의 자원들을 문화예술적으로 해석하고 학교와 협력하여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는 양평의 세월초 사례 (달님과 손뼉치기라는 마을축제를 통한 예술교육 운영 사례)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역량 있는 예술가들이 많은데 이들이 제대로 된 활동 거점을 만들지 못하고 대부분 방과후 강사 형태로 학교와 연결되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지역에서 다양한 예술 거점들이 만들어진다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 속에 문화예술의 가치들이 스며들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사항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무척 많다. 법과 제도적인 정비도 필요하고 더 많은 예산 확보도 필요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장에 바탕을 둔 연구도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 가지 제안을 해 본다면 지역교육청 단위로 문체부와 교육부가 협업을 하여 지역단위 문화예술교육 특구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왕이면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가 많고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가평이나 연천 같은 지역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을 결집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 가평의 경우 가평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이 줄어들어 통폐합의 위기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예술기획자와 교사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마을의 자원을 예술적으로 해석하여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마을기반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 것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은 교사와 예술기획자와의 협업 구조를 만들어 보는 것이다. ‘예술꽃 씨앗학교’를 학교 단위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해 보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토론문

이재영 (한국교원대학교 문화예술교육대학원 교수)

현장 수요 기반 학교문화예술교육 다각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반갑다. 지속적인 사업 운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장벽은 높다고 판단된다. 학교문화예술교육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김지연 선생님 원고에 감사를 드리고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서 몇 가지 논의해 볼 사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발제된 다각화 방안은 첫째, 기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재구조화, 둘째, 지역형 학교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 셋째,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매개인력 육성이다. 각각에 대해 다음 사항들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학교 예술강사 사업의 경우 학교 예술강사 사업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고민의 최우선이 맞느냐이다. 학교 예술강사 사업을 대하는 학교의 시선과 태도에 대한 우리들의 전제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교육계의 전제나 의도와는 달리 학교 입장에서 학교 예술강사 사업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어떠한다고 생각하는가? 전제와 눈높이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발제한 학교 예술강사 사업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대안적 논의의 정점이 맞을까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학교 예술강사 사업은 여전히 학교구조와 요구에 종속되어버린 제한적 사업이 아닌가? 학교문화예술교육 생태 변화를 제안하고 견인하고 있다고 보는가?

둘째, 지역의 의미와 참여를 격려하는 접근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지역사회 중심(또는 연계) 학교 운영 방향성을 고려할 때, 더욱 구체적인 아이디어 모색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지역 문

화예술교육단체나 교사-예술교육가 협력 등 다양한 인적자원의 육성이나 활용과 함께 지역형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기획과 운영의 문제는 문화예술교육계의 요구나 기대 수준을 넘어 학교 교육의 현실적 여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변화를 필요로 하는 부분임을 숙지해야 한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학교라는 생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학교의 핵심적 역할과 생태 변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체계성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셋째,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매개인력 육성은 다른 두 가지 논의를 포괄하는 핵심적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특히 교육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전제에서 더욱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학교 예술강사 사업이나 지역 연계 문화예술교육 사업 패러다임은 지속성과 반복성을 가지지만, 학교의 현실적 운영 여건이나 태도를 고려할 때 단편적인 특성을 가지지 않는가?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단위 차시나 단위 프로그램이나 사업적 안목이 아니라 학교 문화예술교육 전체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전문적인 인력의 투입과 활용을 통한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학교 문화예술교육 생태 변화에 초점을 둔 사업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술강사, 지역문화예술교육단체, 예술교육가 등은 매개인력 또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코디네이터와 같은 핵심적인 전문인력으로 육성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선을 돌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업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문화예술교육 생태를 기획, 조직, 운영하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전반 업무를 종합적으로 운영할 인력양성 방안과 이를 지원할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리라 본다. 발제자가 언급한 매개인력의 범주와 육성 그리고 활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 논의가 요구된다.

토론문

정진아 (무용분야 예술강사)

학교 교육과정에서 교원과 학교의 예술교육 역량강화

1. 학교 교육과정에서 교원과 학교의 예술교육 역량강화-현 문제점 및 방안

1) 예술강사 의무 연수 부재

- 교과 연계형 수업의 부재 및 예술수업의 질적 향상 미흡
 - 연간 2회 의무 연수
 - 교급의 독립화 : 초등교급/중등교급 분리 및 독립화

2) 학교예술교육 모니터링 부재

- 강사 평가제도 부활

3) 예술활동을 위한 지역협력 네트워크 조성

- 학교 밖 자원과의 연계 전무
 - 타 분야와 지속적 컨소시엄 형성

4) 학생의 예술 교육 기회 확대

- 문화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부족한 예술교육 지원
 - 특수 학교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플랫폼의 예술교육 지원 확대

토론문

정혜은 (서평초등학교 교사)

지역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현장 생태계 조성 방안

1. 교육시설 활용을 위한 학생 운송수단 필요

- 지역 내 예술거점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등 도교육청과 지자체에서 교육시설을 마련하였으나, 학생 운송수단이 없어 교육프로그램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초등학교의 경우 보호자 없이 혼자 이동하기 어려움.

2. 지역에 공연장 대관 용이하게 제도적 지원 마련 필요

- 예술강사의 지원으로 연극, 국악, 미술 등의 수업이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결과물을 발표할 전문적인 시설¹⁹⁾을 갖춘 무대를 마련할 수 없음.

3. 연속적이지 않은 단발적인 키트 조립형, 기능 중심의 예술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

- 40분~80분 내에 결과물이 나오는 형태의 예술수업이 주류임
- 음악의 경우 오카리나, 바이올린, 우쿨렐레, 장구 등 기능 중심의 수업이 주류임 (사실 학생이 악기를 좋아하지 않아도 해야하는 실정)
- 본인의 역할을 찾아 인정받는 형태의 프로젝트수업이나, 무대 뒤에서 스텝으로 조력하는 역할, 집단지성으로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나서 전문성이 필요한 예술과업 속에 발생하는 교육적 가치를 찾기 어려움

4. 지역의 예술가 교사 및 교사 예술가 네트워크 구축 후 안내

- 예술전공자가 아닌 일반 교사의 경우 예술가 섭외에 어려움을 겪음

5. 예술가 교사 양성 파견 방식 필요

- 교육대학교, 대학원에 교육문화예술과를 운영하여, 실제로 일반 대학의 예술 전공자들을 교육대학교에서 선발하여 예술가 교사를 양성하여 초등학교에 파견하는 방식이 필요해 보임.
- 담임교사양성에 집중되어 있는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과는 차별화를 두고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교사의 전문성의 깊이에 따라 학생의 성장 폭이 달라짐)

19) 전문적인 시설의 필요성은 이미 예술가 교육가들이 목소리를 높였던 것으로 알고 있음. 학교의 다목적 강당이 아닌 진지한 태도로 본인의 작품이나 연주를 가치있게 만들 수 있는 무대임

6. 지역별 예술교사 컨설턴트(교육문화콘텐츠 크리에이터, 콘텐츠 컨설턴트)를 두어 운영

- 예술거점 시설확보가 되었다면, 학생, 학부모의 니즈와 예술가 섭외, 지역에 맞는 혹은 학교의 실정에 맞는 예술콘텐츠를 기획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전문컨설턴트가 필요해보임. 이 컨설턴트는 지역별 교육청에서 인력을 충원하여 운영 가능해보임.
- 예술단체 기획자와 검증된 교사예술가가 함께 기획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예술가 단독으로 진행할 경우 학교 현장의 이해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수 있음.
- 반대로 교사 단독으로 진행할 경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파격적이며 앞서가는 문화콘텐츠를 농칠 우려가 있음.
- 이들을 각 학교에 파견하여 학교의 특색있는 예술교육과정 운영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 사실 학교 현장에서 일련의 과정이 특기가 없는 교사에게는 큰 업무에 속하기 때문임

7. 예술교육을 위한 예산을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의견

- 예술가들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지원은 다른 부서에서 다양한 각도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함.
- 반면에 학생들에 대한 예술교육을 위한 예산지원이라면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다.
- 예술가들 대부분이 갑자기 교육자가 되어 프로그램은 운영하게 된다. 예술교육에 필요한 자료제작, 인건비 등이 지출되는 것 외에 회계운영인건비, 교육장소대여비, 개인악기 대여 등의 항목에 예산 지출이 된다. 일부 비양심적인 운영에 따른 비판이 일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임.
- 예술가들의 창조적인 작품활동이나, 철학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 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함. 교사의 시각을 볼 때 교육과 예술을 이해하고 있는 예술컨설턴트(코디) 인력을 확보하여 투명한 운영을 위한 검토체계가 필요함.

8. 각 학교의 예술교사 전문성 향상과 예술적 영감을 위한 수준 높고 실직적인 연수, 지원 필요

- 교사에 대한 창작지원금 지급 (창작콘텐츠 제작 및 활성화)
- 해외연수-유학, 해외공연관람, 교육기관 연수(미국 링컨센터 등)
- 전문예술단체(국회, 국립국악원,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국립미술관, 각 전문 오케스트라, 시립, 구립 예술단)에 파견근무
- 전문예술단체와 학교의 MOU로 예술교육 장소 제공 및 공동연주 기획, 학생 및 교사 작품 공연 등
- 지적재산권 교육
- 학생들의 해외 무대 활동 지원
- 해외 학교와 예술 MOU를 맺어 다문화 교류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운영)

사회분과

사회문화예술교육 의제발굴을 위한 전문가 원탁회의

【발제문】 사회문화예술교육 공론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 정민룡

수도권

【토론문】 강승진 (춘천문화재단 정책기획팀 팀장) 고주영 (공연예술 독립프로듀서)
권오현 (극단 치악무대/원주예술교육연구소 대표) 윤종필 (CCS525 대표)
이효순 (문화기획자, 상상놀이터) 임재춘 (문화기획자, 생활적정립 빼꼼 대표)
제한정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최영화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충청권

【토론문】 강선미 (디자인 강선미 대표) 김인숙 (대덕문화원 사무국장)
박성연 (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 들락날락 이사장) 복관승 (교육기획협동조합 품 대표)
서은덕 (문화예술협동조합 움직이는 대표) 오혜자 (초롱이네도서관 관장)
이춘아 (지역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 이희성 (단국대학교 문화예술학과 교수)
장윤하 (가물가물 대표) 정지은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경상권

【토론문】 김정주 (Gachi예술협동조합 대표) 류기정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센터장)
박진명 (생각하는 바다 대표) 안진나 (홀라 대표)
원항미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이강민 (울산미학연구소 봄 대표)
이현혜 (경북문화재단 문예교육팀 팀장) 최수환 (웃골 대표)

전라권

【토론문】 고길섭 (고창군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김수재 (전남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교육팀 주임)
모상근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케팅팀 팀장) 임영규 (전 전남문화예술전문위원)
임진아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 팀장) 임현수 (지리산씨 협동조합 대표)
정혜영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팀장) 추말숙 (문화예술교육공동체 연나무)

발제문

사회문화예술교육 공론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정민룡 (광주 북구문화의집 관장)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중앙공급 중심의 경직된 하향식 정책 확대로 양적 성장과 질적 도약에 한계 발생

- 특정사업(학교 예술강사 67%), 특정대상(초중고교생 92%), 특정시설(학교 및 비문화시설)에 편중
- 공급자 중심 지원, 인력파견 방식으로 지역 자율성 위축, 지속성·파급성 미흡
- 학교와 사회로 정책구조 이원화, 지역 특성 및 현장 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정책지원
- 유사 정책(생활문화, 평생학습 등)과 중복 문제 지속 및 학교예술교육 정책 변화 대응 요구

2) 새정부 출범 이후 자치분권 기조에 따라 문화정책 내 지역문화분권 강조

- 중앙과 광역 중심의 지역화 논의를 넘어 기초·생활권 중심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활성화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밀착형 추진체계 구축 필요성 대두
- 사회 환경 변화, 수요에 대응한 정책 실현 및 대국민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생활권·기초 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구축 및 정책구조 전환·혁신 필요

- ☞ 사회 환경 변화 및 수요에 대응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로 보편적 문화예술교육 실현 및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 강화
- ☞ 지역 내 환경과 수요를 고려한 지역화 및 지역의 자율성과 특색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 체계 구축

2. 추진계획

1) (공론화) 미래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 기반의 구체적·실질적 사업실행계획·전략 도출, 과정에서 대외적 협의·소통·확장의 공론 장(場) 마련

- 공론화 추진단 구성('19년 하반기) : 정책 영역별 주요의제와 개선방안 도출
- 공론화(간담회, 토론회) 추진('20년 1~2월) : 주요의제 관련 관계자 대상 공유와 협의의 장 마련 및 추진결과와 정책사업 반영
- 공론화 거버넌스 구성('20년 3월~ 예정) : 정책 사업에 대한 상시적 논의 추진

2) (사업화) 중앙-지역 간 역할 재정립, 사업구조 개편 및 중앙의 기반 기능 강화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통합적·장기적 목표에 기반 한 사업구조 개편안 마련
- 중앙-지역 간 사업 관련 역할 재정립 및 단계별 사업구조 전환 실행
- 교육진흥원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기반 조성 역할로 단계적 전환(기획연구기능 강화, 네트워크형 거버넌스로 기관 혁신)

이슈1)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할까?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상의 정의

“사회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각종 시설(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및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1) 문제의식

- 현재 지원법상 개념은 소재와 영역만 다루고 있음. 현 시대적 상황/환경에 맞게 철학과 가치(지향성)

를 담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재정의 필요

-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세분된 정의만 존재함

(2)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의 (안)

①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념적 정의(안)

“예술적 삶을 위한 배움과 사회적 실천”

전-생애 동안 사회에서 경험하는 ‘예술 배움’을 말한다. 문화예술적 태도, 지식, 기술, 기능을 습득하고 실행하는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이다.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인본적, 기능적, 창의적 가치를 배우고 실행함으로써 창의 사회를 위한 문화예술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실현한다.

“미적경험(체험)과 공감의 상상력을 위해”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시민의 기본 문화 권리다. 개인의 미적경험을 통하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적 공감력을 키우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과정 및 활동”

“사회와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제 이해를 위한 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기술문화 환경에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며, 창의적 삶을 향유하는 전-생애적 문화예술교육을 지향한다.

②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조작적 정의(안)

- 범주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범주는 학교를 포함한(학교와 연계한) 지역사회까지다.
- 방식 : 장르별 예술교육 뿐 아니라 경험교육으로서 모든 무형식 교육 방식을 포함한다.
(강의·관람·체험·실연·답사 등 다양한 교육 참여방식)
- 장소 : 생활권 내 문화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평생학습시설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
- 대상 : 문화적 취향계층을 포함한 모든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보편적인 문화예술교육
- 주체 : 예술강사, 예술가, 문화예술교육 기획자가 주체가 되어 구성된 교수학습 및 활동의 결과

(3) 이야기 주제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념 정의와 그 정체성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범위와 특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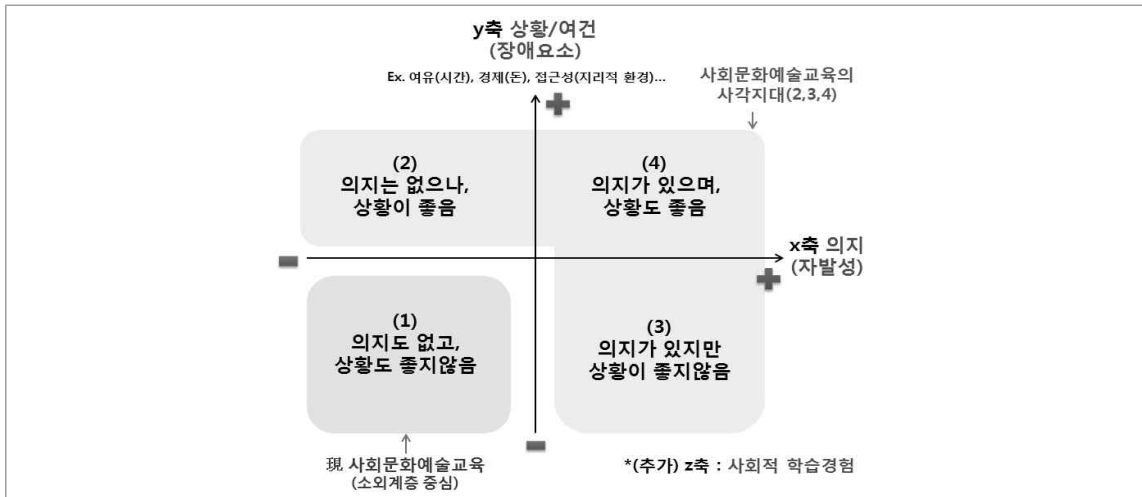
이슈2) 언제나, 그곳에 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할까?

(일상성과 보편성,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 접근방법론에 대하여)

(1) 문제의식

- 그간 특정 대상/시간/시설 중심으로 지원된 단일구조 방식의 한계. 지역분권화 기초 및 정책 일상 체감도 제고를 위한 개개인의 생활권(기초) 단위까지 확장될 필요
- 소외계층 대상 중심의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인해 보편적인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시간적, 공간적 접근성이 떨어짐
-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 공간적/계층적/내용적 배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에 대한 좌표



(2) 사회문화예술교육 접근방법론(안)

- 대상 접근성 : 일반계층에서 소외계층으로 전환하는 방향이 아닌, 일반계층과 취약계층 두 영역을 건 강하게 지원하는 투트랙 전략
- 시간 접근성 : 계층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시간선택 전략, 주1회 제고, 다양한 회차 구성 등
- 장소 접근성 : 생활권 문화예술교육의 강화 생활문화공간(생활문화공간/시설, 생활SOC와의 연계 등), 민간 공간, 전용 공간(꿈터) 등 연계 전략, 문화예술교육시설 인증제 도입

※ 단, 접근성을 높이는 문제는(공간 접근성, 프로그램 접근성) 문화예술교육의 보편성, 수용성을 높일 수 있지만 수월성은 떨어질 수 있음. 결과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차별화된 특성이 약화될 수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주체 형성이 중요. 지역단위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지향을 충분히 이해하 고 구현해내는 주체의 형성이 핵심

(3) 이야기 주제

-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구조, 내용, 방식, 대상 전략은?
(4분위 표에서 2, 3, 4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이슈3) 생활문화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관계

(생활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의 연계, 조정, 통합에 관한 사항)

(1) 문제의식

- 최근 현장에서 생활문화사업과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경계 모호, 차별성보다는 연결점을 보여줄 수 있 는 정책 방향이 고려될 필요
 - 생활문화의 개념은 특정 내용으로 범주화된 개념이 아니라 문화개념과 같이 매우 보편적인 개념임
- ※ 현재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 지역문화진흥원은 '생활문화동호회 활동지원사업, 생활 문화공동체사업' 추진, 교육과 활동으로 정책영역 구분하고 있음

(2) 논의의 전제

- 넓은 의미의 ‘교육’을 ‘활동’의 범위까지 확장할 때, 문화예술교육이 생활문화의 일환이 될 수 있다.
- 생활문화는 문화예술이 생활화(일상화), 문화화,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문화예술이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공유되는 과정에 문화예술교육적 방법이 주요하게 적용된다.
- ‘개인의 예술감상과 창작활동’, ‘예술동아리 활동(교육과 사회참여)’, ‘예술교육을 통한 문화공동체 활동’까지를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예술교육으로 본다.
- 개인적 영역에서 취미활동뿐 아니라 개인들 간의 관계형성과 가치 있는 생활문화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 시민들의 창작과 향유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 시민들의 일상문화(생활문화)가 되기 위한 방편으로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을 강조

(3) 생활문화와 사회문화예술교육 통합연계(안)

- 지역문화분권 정책의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사업과 생활문화 사업의 통합
- 생활문화공간 정책 및 문화여가향유 정책과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연계 및 조정

(4) 이야기 주제

- 생활문화 사업과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통합 논의

이슈4) 사회적 변화(혁신)를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문화예술교육의 실천 방안)

(1) 문제의식

- 그간 특정 대상 중심의, 복지적 관점에서 예술교육의 수준을 넘지 못했다는 한계 존재. 미래 차원에서는 사회변동에 따른(인구절벽, 고령화, 기후변화, 계층 간 갈등, 지역 간 불균형, 4차 산업혁명, 여가사회)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필요성이 요구
- 사회문화적 문제해결이라는 결과 중심보다는 목표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문화예술교육적 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
- 사회문화적 문제를 드러내고 이해하는 과정, 이를 인식하고 실행하는 실천 과정의 문제가 더 중요함
- 사회적 변화를 ‘추진’하는 것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2)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발맞춘 문화예술교육

-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조응하는 문화예술교육 강화
- 배제의 관점이 아닌 포용의 관점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재정립
- 사회정책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위상 정립
- 동네 리빙랩(living lab, 생활에 필요한 예술실험실)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종합적인 삶의 기술자(크리에이터)양성
- 지속가능한 삶(대안적 삶)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3) 이야기 주제

- 사회정책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어떻게 드러내게 할까? 사회적 변화를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필요조건은?(정책 체계 및 교육 내용, 도구)

이슈5)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구조 개편 방향

(1) 문제의식

- (주체의 확장)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지난 15년간 지원대상과 참여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 초기 군부대, 교정시설, 아동·노인·장애인 복지기관 지원에서 청소년, 청장년 등 지역주민으로 참여대상이 확대되었고, 매년 1천여개의 문화예술단체와 5천여명 이상의 예술강사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분절성과 휘발성) 사회문화예술교육은 '19년 기준 15개 사업, 36개 세부 사업이 진행됨. 방향성이 부재한 병렬적 사업구조의 확장으로 인해 누군가는 '메인요리 없는 뷔페식 사업구조'라고 평가하기도 함. 그리고 일 년 단위 공모·파견 방식이 대부분으로 지속성, 확장성을 가지기 어려운 구조임
- (경직성과 제한성) 30회차, 3시간, 4만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항목임. 지난 10년간 대부분 전형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머물고 있으며, 특정한 계층이나 시설 중심 지원으로 정작 문화예술교육에 참여를 원하는 국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제한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2) 논의의 전제 : 현행 사업구조 분석 결과

-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추진전략 중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화의 세부 과제로 중앙단위 사업의 단계적 지역 이관 제시
- 미래 문화예술교육 사업 추진방향(2019.9월, 장관보고)의 과제로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혁신-수요 기반 지원방식 다각화 세부 과제로 소외계층 관련 특정시설 편중 현상 해소 및 일반계층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구조 개편) 제시

□ 사업 분류 “대상, 방식, 목적에 따른 나열식 분류”

- 사회문화예술교육은 15개 사업, 36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
 - 진흥원 30개(30,498백만원), 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 2개(2,700백만원), 지역센터 4개(35,690백만원)로 구성
 - 진흥원 사업은 부처 간 협력과 복지기관은 대상별로, 문화예술치유는 지원방식별로, 토요문화학교는 사업내용별로 단위 사업이 분류됨

□ 지원 대상 “문화예술 관련 단체·기관·시설로 열린 구조”

- 대부분은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단체·기관·시설로 설정하여 큰 제한 없음
- 문화예술치유-치매예방형,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은 문화기반시설로, 토요문화학교-어린이는무엇을밟는가는 공립 미술관으로, 한문연 사업은 문예회관으로 지원대상 제한
- 복지기관-노인 및 장애인, 노인미디어영상, 토요문화학교-건축문화는 관련 협회로 지정

□ 사업 내용 “대부분 특정 장르나 유형으로 제한”

- 진흥원 사업은 특정한 장르 또는 유형으로 설정되어 있음. 문화파출소, 문화예술치유 일부, 직장인 등 일부 사업에 한해 지원대상이 프로그램 자율 설정 가능
- 한문연과 지역센터 사업은 대부분 지원대상이 프로그램 자율 설정 가능

□ 지원방식 “대부분 특정시설이나 장르로 설정”, “공모와 위탁 방식 혼재”

- 진흥원 사업 중 부처 간 협력, 복지기관, 문화예술치유 일부는 특정한 시설이나 제한된 장르를 지원하는 지정공모 방식으로 지원. 꿈의 오케스트라 문화파출소, 문화예술치유 중 기획형, 토요문화학교 중 일부는 지원 일반공모 방식으로 지원
- 진흥원 사업 중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직장인, 토요문화학교 중 일상의작가 등은 용역 방식으로 지원
- 한문연 사업은 지원대상이 문예회관으로 특정된 지정공모 방식으로 지원

- 지역센터 사업은 일반공모와 지역별로 특화된 기획공모 방식으로 지원
- 지원 기간 “대부분 1년 단위 지원”
-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의 대부분은 1년 단위로 지원
 - 진흥원 사업 중 꿈의 오케스트라(3+3년), 문화파출소(지자체 매칭 시 지속)와 지역센터 사업 중 일부 기획공모 사업은 2년 이상 장기로 지원
- 지원 내용 “대부분 강사비,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의 대부분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등 지원
 - 진흥원 사업 중 꿈의 오케스트라, 부처간 협력 중 지역아동센터, 문화파출소, 문화예술치유, 토요문화학교, 생애 전환 사업 등은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 지역센터 사업 중 지역기반구축 사업 중 기획공모 사업 등은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 절차 “사업별 자체 기획에 따른 지원 절차 복잡성”
- 지원 절차는 사업 주관처와 지원방식 등에 따라 대략 10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진흥원 또는 지역센터에서 단체시설을 통한 지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참여대상 및 시설 “대부분 특정하게 설정된 범위 내에서 지원”
-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의 대부분은 특정한 연령대나 계층, 시설을 설정하고 있음
 - 진흥원 사업 중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문화파출소, 문화예술치유 중 기획형은 지원대상이 참여대상과 시설을 자율 제안하는 방식임
 - 지역센터 사업 중 지역기반구축 사업 중 지역 특성화 및 자체 기획사업, 창의예술교육 랩 등은 지원대상이 참여대상과 시설을 자율 제안하는 방식임

(3) 이야기 주제

- ① (포용적 관점의 사업구조) 현재 사업구조는 중앙단위에서 설정한 대상과 방식, 내용을 토대로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하향식 사업입니다. 이로 인해 정작 원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제한적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차별(배제)없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 ② (생활권 단위 지원체계 구축) 대상별·계층별 비 문화시설 대상 1년 단위 프로그램 지원방식에서 생활권 단위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원방식을 어떻게 전환해야 하며,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 ③ (생태계 관점의 지원)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현장의 활동가들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 1년 단위 공모방식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강사비, 재료비 등) 지원에 의존하는 취약한 현실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을 전담영역으로 설정하고 활동하는 조직이나 활동가가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식과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수도권

토론문

강승진 (춘천문화재단 정책기획팀 팀장)

1. (이슈1)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념 정의와 그 정체성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범위와 특성은?

-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 생활권을 한정할 필요가 있을까?
- 초연결사회, 관계의 단절, 외로움과 고독
- 문화자본, 문화관계, 관계자본, 문화적 삶
- 공급자 중심의 주체? 수요자 중심, 수요자 주도의 교육설계는 불가능한 것인가?

2. (이슈2)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구조, 내용, 방식, 대상 전략은?

- 라이프스타일, 일상의 삶의 과정과 방식에서 느끼는 결핍, 욕구, 욕망으로 계층과 대상을 연결해 주는 방식

(2) 욕망 자극 (매개)	(4) 취향의 재발견 (자발성)
(1) 결핍 충족 (동기부여)	(3) 욕구 해결 (여건 조성)

- 지역에서 기 진행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유사 프로그램에 어떤 경향들을 만들어 줄 것인지, 어떤 주체가 어떤 자극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필요

3. (이슈3) 생활문화 사업과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통합 논의

- 시민 또는 활동주체들의 활동 단계, 역량의 축적과 성장 단계로 생활문화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통합 연계 할 수 있지 않을까?

4. (이슈4) 사회정책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어떻게 드러내게 할까? 사회적 변화를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필요조건은? (정책체계 및 교육내용, 도구)

-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역과 사회의 보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음
-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론에 대한 시민들의 성숙된 의식과 관점을 제시하는 정도일 듯
- 그런 면에서 사회적 변화를 추진 -> 사회적 가치 추구 동의

- 내 삶의 주변에서 내삶을 둘러싼 환경(구조,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라 생각함

5. (이슈5)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구조 개편 방향

- 현장의 튼튼한 주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토론문

고주영 (공연예술 독립프로듀서)

예술창작과 예술교육의 관계설정

대부분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제도는 예술창작활동과 별개의 영역으로 구분·정의되며, 이러한 정책실행 하에서 실제로 예술교육과 예술창작은 매우 다른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그 주체 역시, 넓지 않은 문화예술계를 고려할 때, 불필요할 정도로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예술창작 영역에서, 소위 ‘동시대’ 예술은 예술의 주체, 장르/매체/형식의 제한을 뛰어넘고 확장하려는 시도가 최근 20년간 지속적으로 실험되고 있으며, 유의미한 결과물과 개념 확장을 이뤄왔다. 그 흐름에서 한국 예술계도 예외는 아니다. 공연예술계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연출가의 작품에 모든 출연진이 일반시민 이거나, 장애, 젠더 등 특수성을 가진 비전문 예술가(소셜 액터 포함)와 전문예술가의 협업은 더 이상 새로운 것도 없지만, 항상 유의미한 질문을 관객과 사회에게 던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완결된 스토리와 명확한 주제의식을 관객에게 전달함으로써 발생하는 ‘뚜렷한’ 계몽적/교육적 방식을 넘어서, 기획과 창작과정 자체가 예술교육이라 칭할 수 있는 창작작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역으로 예술교육 영역에서 이뤄지는 결과발표가 엄연한 창작물로서 가치나 완성도를 갖는 경우가 있음에도, 이 창작물들은 창작물 유통의 영역과는 연결되지 않은 채, 일회성 발표회라는 이벤트로 끝나고 만다.

이렇게 예술 안에서의 영역 구분이 서로의 영역이 갖고 있는 강점과 장점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를 연결하고, 자원들을 서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예술교육과 예술창작을 막론하고 끈질기게 물어지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 갱신되어야 하는 것은 “예술은 무엇이며,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일 것이다. 이에 대해 끊임없는 고민의 과정과 그 결과가 예술교육과 예술창작 두 영역에 공유되길 바란다.

토론문

권오현 (극단치악무대)

〈언제나, 그곳에 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할까〉 토론문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 하고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기본원칙을 고려해볼 때,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와 구체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지역문화예술교육과 시민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그 교육대상이 사회취약계층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으로 확대되고 지역사회와 유기적이고 다층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노력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몇몇의 '특정한 대상'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가 향유하고 제공받아야 한다.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은 일단 경험해보지 않으면 적절한 수요가 형성되기 어려운 '경험재 (experience goods)'이다. 문화예술교육을 한 번이라도 접해보는 것이 필요하며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공공기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업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문화예술교육은 사회소수계층을 위한 것이 아닌 생활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한 전 국민을 위해 열려 있어야 한다.

1. 일반 기업의 후원을 넘어 적극적인 참여는 가능한가?

일부 대기업의 메세나 활동을 통해 공익사업이 있지만, 문화계 일부에 상징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기업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 문화예술단체, 기관은 지속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지원금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의 지속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

3. 지원금을 단체를 넘어 개인예술가에게 확대할 수 있는가?

4. 교육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하기 위한 기초가 공교육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토론문

윤종필 (꾸물꾸물문화학교 대표)

1. (이슈1)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념 정의와 그 정체성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범위와 특성은?

1. 문제의식에서도 도출되었듯 문화예술교육이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세분된 정의만 존재하고 있는데 점차 이는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범주는 학교를 포함한(학교와 연계한) 지역사회까지 모두 보는 것에 동의를 한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큰 범주의 한 부분으로 존재해야 하며 지역과 학교가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적이고 연계되는 방식의 시스템을 정책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 사회문화예술교육 개념적 정의(안)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이나, ‘예술 배움’과 ‘미적경험(체험)’, 기능과 기술 습득 등의 말들은 자칫 문화예술교육이 ‘예술교육’에만 치우치거나 오해될 소지가 있다. 용어의 선택이나 배치에도 예술교육과 문화교육의 조화로운 안배가 필요해 보인다.

2. (이슈2)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구조, 내용, 방식, 대상 전략은?

1. 이제까지 문화예술교육정책은 학교예술교육과 사회예술교육의 사업 범위를 통해 광범위한 차원에서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이루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확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접근성의 주요 장애요인을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간주하면서 소외계층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 왔으나, 이제는 계층별로 진행한 것과 동시에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적 배제 현상에 집중하면서 장애요인을 복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을 일괄적인 혜택의 수준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사회적 배제를 겪는 대상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대상의 확대에 따라 접근성 강화를 이루는 계기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배제로 인한 사회 갈등과 차별, 불평등, 그리고 통합을 저해하는 현상에 대해 문화예술교육이 대응함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의 다층적 접근과 문화예술의 위계질서에 따른 주류 중심적 사고를 벗어나는 계기가 제공되어야 한다.

2. 장소적 접근에 있어서는 생활의 터전 지근거리에서 접근이 가능한 ‘생활권 문화예술교육의 강화’가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한다. 현재 각 지역의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SOC가 공공기관 등에 속해 있다 보니 공공기관의 근무체계 등에 맞물려 사용자 중심보다는 관리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그 기능이 큰 시너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 공간, 전용 공간(꿈터) 등 연계 전략, 문화예술교육시설 인증제 도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장소적 접근의 다양화와 사용자 중심의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

3. (이슈3) 생활문화 사업과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통합 논의

논의의 전제에서도 지적되었듯, 넓은 의미의 ‘교육’을 ‘활동’의 범위까지 확장할 때, 문화예술교육이 생활문화의 일환이 될 수 있다. 또한 생활문화는 문화예술이 생활화(일상화), 문화화, 사회화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문화예술이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공유되는 과정에 문화예술교육적 방법이 주요하

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예술교육이 궁극적으로 민주시민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시민교육, 문화예술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통해 공동체성의 회복, 삶과 여가의 관점에서 문화예술의 일상(생활)성 등을 고려해본다면,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정책이 별도로 구분되어 정책이 적용되는 것은 정책적 효용성에서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시민들의 일상문화(생활문화)가 되기 위한 방편으로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을 강조함과 동시에 생활문화와 사회문화예술교육이 통합되어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연동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이슈4) 사회정책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어떻게 드러내게 할까? 사회적 변화를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필요조건은? (정책 체계 및 교육 내용, 도구)

사회정책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드러내기에는 지난 15년, 문화예술교육 서울어젠다가 발표된 이후 10년간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적 이슈에 등한시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15년간 눈부신 양적 성장이 있었고, 약간의 장르중심적이기는 하나 예술교육이 확장된 성과는 있으나 정작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준비를 위한 어젠다에 문화예술교육이 실천적 과제를 가지고 접근한 성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

인천의 경우 2018년도에 수립된 인천문화예술교육기본계획에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연구와 실천이 과제로 등재되어 있다. 인천문화재단의 문화포럼 문화예술교육 분과에서는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으로 접근 가능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의제로 채택을 하였으며 이를 위한 연구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으며 향후 사회정책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저변확대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천문화예술교육기본계획에 ‘문화적 다양성’의 실천과제가 설정되어 있어 2020년도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의 주제는 ‘문화적 다양성’으로 설정을 하고 주제에 맞는 지역에서 실천가능한 사업들을 선정하여 진행할 계획에 있다.

5. (이슈5)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구조 개편 방향

① (포용적 관점의 사업구조) 현재 사업구조는 중앙단위에서 설정한 대상과 방식, 내용을 토대로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하향식 사업입니다. 이로 인해 정작 원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제한적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차별(배제)없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문화예술교육 정책 15년, 대부분의 사업들은 공모사업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공모사업의 선정 심의에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 투명성은 행정적 처리방식에 있어 피나 민주적인 방식이고 타당한 방식이고 효율적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지금도 신생 단체들이 생겨나기도 하지만 정책이 15년이 된 만큼 문화예술교육에 경력을 가진 단체들도 상당하다. 그러나 여전히 노하우를 지닌 경력단체나 신규단체나 공모사업의 방식에서는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공정성과 투명성에서는 효과적 일련 지는 몰라도 전반적으로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하향 평준화되는 양상이다. 지원 트랙을 분리하거나 다른 지원시스템의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시간의 지속은 경력단체나 신규단체나 체급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의 상호간 역차별적 상황이 발생한다.

② (생활권 단위 지원체계 구축) 대상별·계층별 비 문화시설 대상 1년 단위 프로그램 지원 방식에서 생활권 단위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원방식을 어떻게 전환해야 하며,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우선 1년 단위 사업은 그 자체적으로도 접근성을 가지기 어렵다. 그것이 프로그램이든 사업이든 한 장

소에서의 연속성이 필요하다. 경험에 의하면, 일반인들은 문화예술교육의 정보에 접근이 비교적 수월하지는 않다. 그리고 대부분 주위 사람들의 입소문에 의해 접근이 다수 이루어지는데 비문화시설의 경우 그때 그때마다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폭이 제한적이다. 고로 중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지역 내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인지도를 높여가며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사업이 있고 내년에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운영하는 입면에서나 참여하는 입장에서나 그다음을 기억할 수 없기에 접근성이 약화 될 수밖에 없다.

③ (생태계 관점의 지원)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현장의 활동가들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 1년 단위 공모 방식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강사비, 재료비 등) 지원에 의존하는 취약한 현실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을 전담영역으로 설정하고 활동하는 조직이나 활동가가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식과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1. 강사비의 불균형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기준이다. 우선 꿈다락사업이나 지역특성화사업에서 책정된 주장사비나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주장사비는 동일하게 시간당 4,300원으로 동일하며, 이제 =는 대한민국의 웬만한 강사비의 기준은 진흥원 기준에 맞춰져 있는게 실상이다. 그러나 지원사업의 주장사가 사업 내에서 해야 하는 일의 양과 역할과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예술강사가 해야 하는 업무의 양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같은 주장사이지만 동일업무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일임금체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지원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비만 지원을 해 주는 소모품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어차피 문화예술교육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현 정부 문화정책의 중심 키워드도 “사람”이 아니던가. 좀 더 나은 조건에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조건에서 더 연구하고 즐겁게 문화예술교육의 일들을 해나갈 때 더 질 높은 문화예술교육으로 향상되리라 판단된다.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단체의 대표자의 경우 사업비만 있고 운영비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강사비만 받으면서 사업의 기획, 운영, 회계, 공간 운영비(공과금 및 임대료)를 모두 부담하면서 공모사업을 낼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로 인한 불공평, 피로도가 누적된다. 최소한 이러한 상황적 판단과 고려가 필요하다.

2. 문화예술교육을 전담영역으로 설정하고 활동하는 조직이나 활동가가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식에는 우선 전문활동가를 양성하는 일이 중요한데, 공공기관에서 집단적으로 강의 중심으로 양성을 하는 방식은 크게 기대할 만하지 못하다. 문화예술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에서 그 상황에 맞는 커리큘럼과 운영체계들을 습득하고 인턴과정을 통해 실무와 문화예술교육 연구와 기획 등을 실무차원에서 학습하면서 인력양성이 되어야 소수 인원이라도 실제 현장에서 활동 가능한 인력이 만들어 질까 말까한 상황이다.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의 방식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수료증 컬렉터들만을 양산할 뿐이다.

3. 1년 단위의 공모 지원사업은 신생 단체들에게는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문화예술교육의 공모사업들도 10년 이상씩 되었고, 단체들도 그만큼 경력단체들도 많아졌다. 이러한 경력단체들은 좀 더 연속적인 사업의 프로젝트들로 중장기적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실험할 기회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경력단체들의 노하우를 지역 내에 녹여내어 지역특성화 해내는 방식일 것이다. 1년 단위 아니 현실은 6개월짜리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피로도를 증가시킬 뿐이다.

토론문

이효순 (문화기획자, 상상놀이터)

강원도래요~ 지역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이야기 주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념 정의와 그 정체성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범위와 특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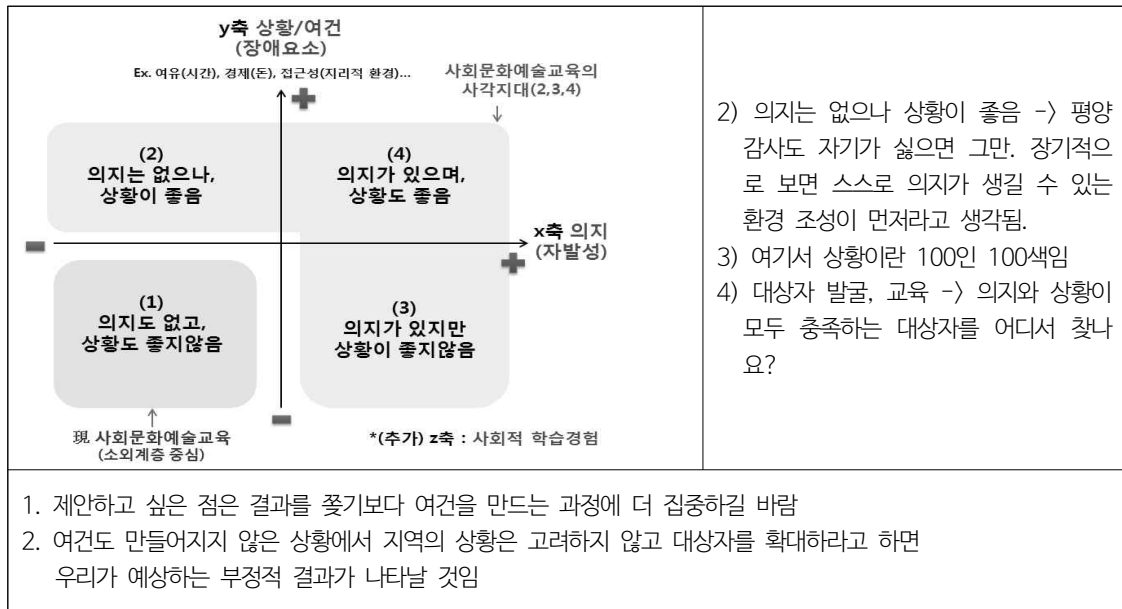
‘지역’이란 공간으로서의 지역, 주체로서의 지역, 수혜자(대상자)로서의 지역이 있다. 이런 개념을 포괄하여 지역을 아우르는 문화예술교육이 사회문화예술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은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이며 분명한 자기색을 갖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아무런 특징이나 특성이 없다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과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차이는 장소 즉 학교인가 아닌가로 나뉜다. 프로그램 이미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문화예술교육이 개인의 긍정적 변화(정서적, 행동적) 또는 학교나 교육단체, 또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효과’ 또는 ‘효과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하다고 해서 그 효과나 효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에서 정책 과제로 음악, 미술, 무용 등 문화예술교육관련 현장 교원을 중심으로 연구한 ‘초·중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교육부, 2005. 01)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문화예술교육은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을 상호 연계적이고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설정한 개념으로, 예술교육을 근간으로 하여 현행 예술교육이 지향하는 미적 감수성 함양이나 창의성 육성, 정서 함양을 통해 궁극적으로 예술교육을 통한 교육적 가치들이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모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를 지향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와 문화부의 접근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적 가치에 방점이 있다는 점이다.

요즘 들어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동아리, 평생학습 동아리 등 지원부서가 어디인가에 따라 이름만 조금씩 다른 사업들에 대해 생각한다. 비슷한 지원방식과 비슷한 결과물, 그러나 각 지원처의 identity에 따라 분류한다. 예를 들면 유화반, 유화동아리, 혹은 유화로 표현하는 세상처럼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강사가 있고 그림 그리는 과정 등을 함께하고 발표회를 한다. 프로세스로 보면 같다. 그 안에 이루어지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속에서 그림이 매개가 되고 매개가 관계를 만들고 매개가 견고해짐에 따라 관계도 견고해진다. 이런 점을 인정하고, 각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역할이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고민한다. 평생학습관에서 아이들과 수업도 해봤고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보았기 때문에 장소만 다를 뿐 과정을 유사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원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사업비가 달라는 정도다.



세 번째 이슈는 카테고리에 대한 접근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문화예술교육이 생활문화의 일환이 될 수 있다. 라고 한 부분에 공감한다. 생활문화 속에 사회문화예술교육이 포함된다. 사실 먹고, 자고, 입고 생활문화가 아닌 것이 어디 있는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생활문화동아리가 발아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예술가 등 단체가 주체라면 생활문화동아리의 주체는 일반시민이라 볼 수 있다. 사회문화예술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단위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방식으로 생활문화동아리로 성장하게 되면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이슈는 효과성을 어떻게 드러낼까. 연구사업을 하고 평가틀을 만들고 척도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사회정책적 측면에 대한 기여도 하지만 작업을 하는 예술강사 등 활동가에게도 절실하다. 프로젝트 안에서 자기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하면 이 활동을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이슈인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분절성화 휘발성, 경직성과 제한성 모두 공감한다. 이런 좋은 제도도 굴이 탱자로 변하듯, 지역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기대하는 효과를 이루기 어렵다. 강원도 농어촌 지역처럼 인구가 노령화되고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나타내는 지역의 경우 젊은 예술가(활동가)가 지역으로 이주하여 활동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광역센터에서는 시골에서 살아보기 등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설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2년 동안 2400만원 급여를 지원받는 등)과 연계하는 등 젊은 예술가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다방면으로 조성하는 방식 말이다.

결론적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우선 지역에 대한 이해를 위한 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역주민과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과 프로그램, 혹은 간단한 방식의 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지속성에 대한 보장이다. 현장에서 우리는 8개월 단위의 계약직이다. 매년 새로운 작업을 기획해야 한다. 분절적이고 휘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지원체계를 받아, 성장, 개화 등 단계별로 연속 지원하는 것으로 발아단계에서는 지역사회를 연구하는 단위사업을 포함하여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마을 사람들과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장 단계는 연구에서 발아단계에서 나온 문제를 구체화하고 문화예술교육을 접목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식들을 실행하고 그와 관련한 feed back 진행하며 개화기에는 발아 단계에서 목표로 삼은 결과를 도출했는지 평가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효과성 제고와 더불어 단체도 과정을 통해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사로 관련하여 평균 3,225,000(43,000×3시간×25회차)로 생계를 위한 별도의 직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받는 것에 비해 요구하는 것이 너무 무겁습니다. 지역센터는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사회적 실천을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단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강사에게 요구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어려운 점도 있으시겠지만 현장 상황도 녹록지 않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9 강원문화재단 지역특성화, 기반조성 지원사업

- 강원도 2019 지역특성화 지원사업의 경우 18개 시·군 중 7개 지역 16단체 선정
 - 춘천(5), 원주(5), 홍천(1), 강릉(2), 평창(1), 영월(1), 동해(1)
- 기반조성 지원사업인 2019 “우리동네 흩어지다”는 총 10개 단체 선정
 - 평창(3), 인제(3), 삼척(1), 동해(1), 철원(1), 속초(1)
- > 12개 지역(동해, 태백, 속초, 삼척, 횡성, 평창, 정선, 철원, 인제, 양구, 고성, 양양) 중 6개 지역 선정

토론문

임재춘 (문화기획자, 생활적정립 뽀뽀)

1. 포용적 관점의 사업구조

1)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정체성

- 학교-사회문화예술교육의 구분 허물어야.
- “문화예술교육”으로 통칭하고 이를 맥락(의미나 지향 등, 목표 중심으로)에 따라 언어화(언어 클러스트의 구성). 이를테면, ‘이슈4’의 사회변화의 요소들
- 문화예술교육이 이뤄지는 장소를 비‘공공시설’ 즉, 민간의 공간 및 임시적인 장소 등으로도 포괄하여 사고의 확장 필요.
- 주체를 행위주체(예술강사, 예술가, 기획자, 교사) 외에 행정주체(지역센터, 지자체 공무원, 교육공무원), 수요주체(시민 등) 등으로 구체적으로 범주화하여 주체별 의제 구상해야

2) 일상성-보편성-접근성의 방법

- 보편성, 접근성의 문제는 기존의 사회, 교육 등의 공공정책 및 관련시설과 연계. 생애주기, 삶의 이슈에 따라 접촉하는 주요 문화시설을 대략 구분해보면,
 - 영유아와 초등 학령기는 공공기반시설(문화예술, 체육, 사회복지, 교육 등), 유치원(교육), 어린이집(돌봄)
 - 중고등 학령기의 아이들은 학교
 - 청년은 시설보다는 관련 제도나 정책 플랫폼
 - 자녀가 있는 가정의 성인은 영유아와 동일하게 공공기반시설 및 민간의 동네 기반 인프라와 평생학습시설
 - 양육, 생계의 책임에서 벗어난 성인은 공공기반시설(문화, 평생학습, 사회복지시설 등)

-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공 물리적 인프라가 존재하긴 하지만 낮은 수준의 문화체험(일회성, 시혜적, 예술의 도구화, 결과중심 등)에 머물러 있는 것이 대부분
- 각 시설들이 질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사고할 수 있는 정책 프로세스가 필요(사업의 단순연계 외에). 지역단위에서 행정체계를 기반으로 논의와 실행 체계를 만드는 것과 분야 중심으로 각 영역의 특수한 상황과 환경, 익숙한 언어로 논의, 실행하는 체계가 교차 진행될 수 있는 방안 등

2. 생활권 단위 지원체계 구축과 생태계 관점의 지원

- 각 시설이 자립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는 방향과 기존에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예술가, 문화기획자, 예술강사들이 시설과의 연계 외에 자신의 그라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방향이 필요.
- 유관 정책인 생활문화는 사람들의 자발성, ‘자기 조직화’에 중요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봄. 생애주기로 보면 성인들이 주요 주체. 활동의 방향이나 방식으로 보면 ‘공공의, 유무형의 장(場)’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과 결과에 초점. 삶의 문제를 당사자의 입장에서 문화적으로 해소하는 솔루션 성격
- 문화예술교육은 전문성을 필요로 함. 지식과 실제적 경험, 문화적 태도는 전문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
- 생활문화는 보편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하는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음.
- 기존에 해왔던 파견, 연수, 양성,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정책의 방향, 방식에 대한 점검, 운영주체(행정주체 포함)들의 역량에 대한 점검과 진단 필요
-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쌓기 위한 자기 질문의 발견, 궁리, 실행, 리뷰와 같은 경험들이 자유롭게 수행될 수 있는 지원환경 필요함. 연수나 Cop, 창의랩 등 유사한 문제의식의 사업이 없지 않았으나 단기적이고, 기존의 지원사업의 한계(프로그램과 성과요구, 차시별 운영 등)를 벗어나지 못함.
- 현장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 교육의 방식을 비롯해 운영시간, 요일, 기간, 주기, 회수 등의 시간적 설정이 자유로워야 함. 1년 단위의 회계방식 최대한 확장되어야 함. 연말에 모든 현장이 번아웃되는 현상 문제
- ‘공모’ 방식 : 공공재원에의 접근을 공개적으로 한다는데 의미가 있지만, 경쟁적 방식으로 많지 않은 문화예술교육 주체들 간에 지역사회 안에서 긍정적 시너지로 작용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기도 함. 공모로 단일화하지 말고 파트너십을 이끌 수 있는 구성적 참여도 고려해야.

3. ‘이슈4. 사회변화’와 관련하여

- 문화예술교육에서 문화적 다양함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는가와 관련된 이슈로 해석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제
- 근본적인 문화예술교육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다름 아님.
- 솔루션의 시선으로 기울어지지 않아야 함.

4. 그 외 걸리는 것들

- ‘수요’를 누구의 시각과 관점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예측하며, 범주화할 수 있을까.
- 국가나 지역의 행정체계에서 문화예술교육의 비효율적, 반가성비, 변동성 등의 가치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
- ‘지역센터의 역량=지역 역량’, ‘지역주체=지역센터’이라는 등식

토론문

제한정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예술교육자의 관점에서 본 이슈들

• 정체성과 관련, 진흥원이 진흥시키고자 하는 “문화예술교육”이 하나의 단어로서 전달하는 우선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Unlearning 등 진취적인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려는 진흥원의 노력과, 현장에서 경험치가 주는 예술교육자의 자기 반복(“노하우”)이 괴리를 보임. 현재로는 문화+예술+교육의 구분된 형태로 예술가가 장르적 활동을 하는 것이 대다수이며, 방점과 강조는 사업별, 개인별로 나타나고 있음.

• 현재의 양적 팽창은 고무적이나 사업의 병렬식 구조, 증빙 가능한 방식의 예산구조에 묶인 시스템은 예술 활동의 핵심인 예술적 창의성,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실험성을 시도하기가 쉽지 않음. 예술가/교육자가 (개인이 모두 젊어지기 힘든) 도전적, 실험적 작업에 대한 리스크를 기관이 지지하기보다는 예측 가능한 프레임 안에서 예측 가능한 결과, 반복적인 증빙의 과정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실패 확률을 최소화하는 데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부정적으로 보자면 이것이 예술가-기관(의 agent)의 관계를 경직시키고, 각 프로젝트의 범위를 대상의 형편에 반응하는 정도로 축소시키는데 기여함.

• 사회문화예술을 복지개념에서 인권개념으로 전환. 문화예술교육이 소외계층을 우선하는 의지는 고무적이거나 “가정된 소외”가 오히려 복지적 맥락을 강조하여 중복적이거나 사업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는 경우 발생함 (혹은 증빙의 과정을 폭력적으로 만들). “기능이 아닌 창의력, 배타가 아닌 공감, 위로가 아닌 삶의 통찰을 길러주는 문화예술교육 (2017, 5대 원장 취임 사중)”을 지향하였으나, 복지의 맥락이 강한 사업의 경우, 시대적 요구에 맞춰 사업의 가치지향을 재고하고 업데이트할 필요 있음. 이는 예술 혹은 예술가가 견인하는 창의적 활동보다는, 수혜 기관이 요구하는 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로 흘러갈 우려있음. 또한 대상으로 구분되는 각 사업 간의 정체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 있음. 과연 대상의 여집합이 사업 간의 구분을 명징하게 하는 최선의 정의인가 하는 질문이 발생함.

•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대상의 차별성 외에 예술적, 미적 경험의 차별성을 갖기 쉽지 않은 구조. 예술가 대 다수의 참여자 구도에서 티칭중심, 콘텐츠 전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존 시설이라는 정형화된 장소에 예술가가 파견되어 장르적 예술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참여자의 개별성, 자발성 혹은 예술가의 개별성보다는 공여자와 수혜자로 나뉘는 이분법과, 예술가가 대상을 타자화하는 위험이 빈번하게 발생함. 문화예술교육은 교육이라는 안정성과 역사성도 필요하지만, 예술이라는 위험 감수, 동시대성, 열린 구조, 다면성이라는 실험성(이라 쓰고 위험요소라 읽어야 하는)도 함께 포함할 필요 있음.

• 개인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이 반드시 순수예술을 주제로 하거나, 오로지 예술가만이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다만, 문화예술교육이 예술의 방식(창의성, 문제 해결, 양면성, 열린 결말, 진취성, 실패의 포용 etc)으로 기획되어야 하는가는 필수적이라 생각함. 즉, 지난 세기 동안 예술이었던 것들을 학습하기보다는, 21세기의 예술의 방식을 선점할 필요 있음.

• 진흥원이 가진 허브로서의 상징성이 지역기관에서 상당히 유효한 만큼, 용어, 개념의 사용, 가이드라인, 지급 기준 등이 보다 세밀하고 탄력적으로 진행될 필요 있음. 또한 진흥원의 담당자 등이 행정인력이 아니라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매개자로서 보다 탄력적인 결정권을 가질 필요도 있음. 지역, 기관, 사업의 개별성에 대한 인정을 통해 “형평성”의 이유로 하향 평준화(지급기준, 예산변경, 사업구조 등) 되지 않는 장치가 필요함. 현장에서는 “담당자”의 역량(열정, 배려, 도전의식, 현장에 대한 호기심, 혹은 새로운 시도를 운허하는 느슨함)에 따라 기획과 실행에서 큰 변수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많음.

• 상당수의 문화예술교육이 최초 진입하는 대상으로 설정되거나, 중복 수혜를 지양하는(참여자 수 중심) 경향성이 있어, 문화예술교육 자체의 수준이 하향 평준화되는 위험성이 있음. (늘 초보자, 최초 진입자 대상 위주의 프로그래밍)

• 진흥원의 선발체계가 예술가의 “탁월함(현장에서의)”을 유지하게 하는가, 이를 통해 예술가의 역량이 끊임없이 재조정되며 진보하는가, 예술가의 경험치의 누적이 새로운 시도를 하게 하는가, 그 모든 수고를 가능할 만큼 경험치에 대한 보상이 제공되는가, 혹은 끊임없이 새로운 예술 인재들을 유혹할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는가, 예술가로서의 활동과 정체성이 반영 가능한가, 등에 대한 질문이 필요해 보임. 문화예술교육이 재생(기능훈련)이 아닌 창의성, 창작의 역량을 요구한다면, 그에 대한 보상(피드백, 평가, 관객개발, 경제적 지원)이 꾸준히 매력적일 때, 인재의 탁월함은 유지될 수 있다고 보여짐.

• 1년 단위의 공모제 사업이 많고 사업별로 아웃소싱으로 이루어져 평가와 피드백, 그의 반영이 즉각적이기 어려운 점이 있음. 평가사업의 경우, 시장조사를 위한 고안된 만족도 조사를 적용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특화된 평가와 사정의 툴 개발이 필요해 보임. 현재로서는 대체로 높은 만족도(무료프로그램 등)를 보이지만, 만족감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문화예술교육의 맥락과 가치지향의 변화에 맞춘 평가의 준거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참여자의 입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접근방식이 1인(혹은 1팀)예술가의 교육방식이 대다수이다 보니 개별예술가에 대한 의지가 높은 편. 예술가 입장에서도 오디션 등을 통해 매번 달라지는 대상을 접하다 보니 피로감을 호소하는 상황 많음 (“늘 오디션을 통과해야 하고, 사람들은 매번 바뀌고, 예술가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잖아요”) 인적자원의 개발 외에도 유지와 확장, 협업과 연계에 대한 고민 필요함. 문화예술의 인력, 공간, 특징이 지역별로 달라 이에대한 토론회 필요해 보임. 각 지역의 문화적 자산과 리소스를 활용한 아이디어들이 더 구체화 될 필요 있음.

•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함. 문화예술 사업의 참여자의 폭이 어린이 등 제한적인 것과도 관련 있음. 또한 예술교육 시장의 프로그래밍과 다른 공공성, 미래지향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인구 구조의 변화, 사회적 구조의 변화, 개별화되는 취향을 고려한 방식 고려할 필요 있음.

토론문

최영화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1. (이슈1)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 재정의

1) 사회문화예술교육 개념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상 ‘문화예술교육’을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으로 정의. 내용은 있으나 목적은 제시되지 않음
- ‘문화예술교육’은 크게 예술교육, 문화교육, 문화예술교육 3가지로 정의됨(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 학교문화예술교육 중장기 사업전략 연구)
 - 예술교육: ‘예술을 위한 교육’과 ‘예술을 통한 교육’으로 예술을 미적성취의 도구로 활용하거나 사회적으로 조화된 개인의 양성 지향
 - 문화교육: ‘문화를 통한 교육’과 ‘문화에 대한 교육’으로 학교와 교과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전인적 발달을 지향하며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과정
 - 문화예술교육: ‘예술의 문화교육적 재구성’과 ‘문화예술의 경계를 초월한 통섭교육’으로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의 유기적인 연계 및 다른 학문과의 융복합을 추구하며 모든 사람의 예술적 향유와 문화역량의 극대화 추구
- ⇒ 사회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을 통해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고 사회적 가치, 행동, 삶의 양식을 배우고 공감하며 실천하는 개인을 양성하기 위한 삶의 교육.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민주시민 양성 교육

2)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조작적 정의(안)에 대한 의견

- 방식: 장르별 예술교육, 경험(체험)교육, 비평교육 등
 - 1980년대 초 미국과 영국의 예술교육자들의 ‘훈련기반 예술교육(DBAE)’은 기술과 제작(skills and making), 역사적 지식(historical knowledge), 미적 이해(aesthetic understanding), 비판적 판단(critical judgement) 등으로 커리큘럼 구성
- 장소: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정의)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은 기존 문화시설에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함. 장소 확대 필요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회관, 예술인 창작공간 등)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학교 부설시설, 사내시설, 원격대학형태 시설, 사업장 부설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시설, 언론기관 부설시설, 인력개발 관련 시설 등)
- ⇒ 생활문화시설 포함 필요. 사회복지시설(장애인평생학습관 등)에서도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문화시설 외 기타 사회복지시설 연계 위한 사업추진체계 재구성 필요

2. (이슈2)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 제고 방안

1) 의지는 없으나 상황(시간·돈·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경우

- 문화예술교육 자체를 경험하지 못해 인지도와 의지가 낮은 경우가 많음
- 노인정·양로원 대상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후 문화시설 연계
- 재미있는 원데이 클래스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문턱 낮추기

2) 의지가 있지만 상황(시간·돈·지리적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경우

- 시간이 없는 경우: 직장인(직장동호회 연계 강사 지원, 야간 프로그램 운영), 육아인(공공 키즈카페·놀이터·생활SOC 공간 연계 부모 대상 프로그램 개발·운영)
- 돈이 없는 경우: 대체로 공공 문화예술교육의 비용은 매우 저렴하거나 무상교육이므로 돈은 큰 문제가 아님. 단, 비용대비 질적 향상 필요. 또한 저소득층 대상 문화누리카드 사업과 연계해 교육프로그램 이수 확대 추진 필요
- 지리적 접근성이 없는 경우: 생활문화시설, 복합형 생활SOC,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민간단체시설 등 대안시설 연계 활용, 그 외 지역특화형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사례 확대

3) 의지도 있고 상황(시간·돈·지리적 접근성)도 좋은 경우

- 수요 맞춤형 질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중단 없이 단계별 교육 참여 가능하도록 지원
- 교육이수자가 교육활동에 (보조)강사 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 필요

3. (이슈3) 생활문화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관계

1) 목적을 구분하되 연계 지원 필요

- 사회문화예술교육은 문화자치활동 이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생활문화사업은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충족이 되지 않는 주민참여·주민자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목적을 구분하되, 생활문화공간이나 문화예술교육 인력 연계 활용 필요

2) 생활문화는 생활권 내 자발적 문화활동이자 문화운동

-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에 발표한 <문화비전2030>의 9대 의제 중 생활문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아래 3대 의제임
 - ‘의제1.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와 관련해 정부는 개인의 문화권을 경제적·사회적 권리와 연계하여 권리 영역을 확대하고, 개개인의 다양한 문화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문화 환경의 기틀을 다지는 문화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함. 이를 위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정책과 생활문화공간 확대 및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의제6. 지역문화분권 실현’은 지역문화정책이 시민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지역과 생활이라는 장소와 공간에서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표방함. 따라서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주민의 자치역량을 키우기 위해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의 문화일꾼을 양성해 배치하도록 할 계획임
 - ‘의제9.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에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 의제가 삶, 즉 문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문화를 통해 창의적 사회혁신을 이끌어내자는 것임. 문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생활문화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

- 생활문화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와 ‘지역문화분권 실현’,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이라면 향후 생활문화정책의 영역은 지역주민의 동호회 활동이나 생활예술 참여 진흥의 범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영역 확대
- 문화주체성의 제고가 생활문화정책의 기반이자 목표. 문화를 향유하고 생활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에서, 주체성을 가지고 지역의 문화를 주도해나가는 시민으로 나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임. 그렇다면 지역문화 진흥과 생활문화 활성화의 목표는 사회혁신이라는 과제와 연결될 필요가 있음. 즉, 지역 내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인식과 경험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생활문화정책에서 시민의 역할과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생활문화정책으로 중장기적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생활문화정책이 표방하는 것이 삶의 질 개선이므로, 삶의 질과 관련된 정책영역에 생활문화정책의 개입 필요

〈표 1〉 삶의 질 측정지표

분야	내용
소득·소비	소득, 소비생활, 소득분배를 중심으로 경제자원에 대한 통제력
건강	건강행태, 건강상태, 의료서비스의 질
노동	고용환경과 근무환경 중심
교육	교육기회의 충족도, 교육자원, 교육효과
주거·교통	주택수급, 주거환경과 질, 교통의 질
안전	범죄와 사고, 화재 및 안전 인프라
가족	가족형성, 가족형태, 아동양육 및 가족관계
환경	환경오염도와 환경투자
사회통합	사회적 포용과 사회자본
문화·여가	문화여가 자원(시간 및 비용), 기반시설 및 문화여가 활동

출처: 통계청

-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생활문화활동을 통해 정신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직장 등 노동환경을 문화적으로 바꾸어나가고, 누구나 필요한 문화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주거환경의 하나로 생활문화가 중요해지도록 정책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임. 생활권 내 범죄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활문화활동, 다양한 가족형태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주민이 직접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결과적으로 사회적 포용도를 높이고 주민이 자발적 문화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생활문화정책의 영역과 지향점을 재설정하고, 그에 기반한 새로운 정책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며, 그것의 주체는 생활권과 밀접한 기초문화재단이 되어야 할 것임

4. (이슈4) 사회적 변화(혁신)를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

1) 사회문화예술교육과 지속가능 발전교육의 가치 지향 공유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해 범지구적인 문제를 학교나 지역에서 가르치는 교육을 일컬어 유네스코는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DS)이라고 명명함. 2005년에 수립된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10년 국제이행계획(DES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Scheme)에 따르면 EDS란 “모든 사람들이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을 의미함.²⁰⁾ 2010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실무작업단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정의로 “지속가능성의 토대가 되는 사회, 환경 경제 영역의 상호관련성, 세대 간 형평성, 지구적 정의를 인식하고 현 사회에 대한 성찰적 태도, 가치, 실천을 바탕으로 개인적, 지역적, 국가적, 지구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전망하고 행동을 이끌어가는 교육”이라고 제시한 바 있음.²¹⁾

-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주제는 환경교육, 평화교육, 인권교육, 소비자교육, 개발교육, 보건교육, 생물다양성교육, 양성평등교육, 다문화교육, 시민교육 등 지속가능발전의 요소를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주제교육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음.²²⁾ 지속가능발전목표가 17가지 영역에서 제시된 것처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영역도 환경,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있음.

〈표 2〉 지속가능발전교육(EDS) 개요

구분	내용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들이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 - 지속가능성의 토대가 되는 사회, 환경 경제 영역의 상호관련성, 세대간 형평성, 지구적 정의를 인식하고 현 사회에 대한 성찰적 태도, 가치, 실천을 바탕으로 개인적, 지역적, 국가적, 지구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전망하고 행동을 이끌어가는 교육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교육으로 지칭되는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비정규교육 포함. 간학문적이고 총체적인 접근방식으로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능력 증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교육, 평화교육, 인권교육, 소비자교육, 개발교육, 보건교육, 생물다양성교육, 양성평등교육, 다문화교육, 시민교육 등 지속가능발전의 요소를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주제교육과 서로 긴밀히 연계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교육 10년 영역별 전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 - 교사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 - 고등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 - 직업교육훈련(TVET)과 지속가능발전교육 - 시민사회(NGO)와 지속가능발전교육 - 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교육 - 민간영역과 지속가능발전교육 -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역전문센터(REC)와 지속가능발전교육 - 대중인식과 지속가능발전교육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교육

출처 : 이선경 외(2014), 한국의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10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 혁신적 사회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제고 방안

-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커리큘럼과 교육방법, 도구, 정책체계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회문화예술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연계방안 고려
- 단,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되 문화예술을 교육의 도구 또는 방법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을 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 강사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사회적 가치 지향에 공감할 수 있도록 강사 교육 커리큘럼

20) UNESCO(2004). United Nations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5-2014: Draft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Scheme. Paris: UNESCO.

21) 정우탁 외(2010). DESD 후반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지속가능발전교육 사업 추진방안.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2) Wals, A.(2009). United Nations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DESDE, 2005-2014): Review of Contexts and Structures for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ESCO.

개발, 각 분야 지역 NGO 협업 통한 교육과정 연구개발, 실험 필요

- 이론, 체험, 실습, 답사, 발표, 프로젝트 등 심화단계별 다양한 방식의 교육방법론 활용

5. (이슈5)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 지원구조 개편 방안

1) 포용적 관점의 사업구조

- 중앙(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연구, 조사(통계 등), 컨설팅, 모니터링 등 사회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역할을 하고, 교육사업의 시행계획 마련과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책임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위임. 지역별로 지역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충청권

토론문

강선미 (디자인 강선미 대표)

사회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이슈 논의

1. 이슈 1)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할까?

삶의 다양성 회복을 위해 시민들과 예술 관계자들이 함께 예술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과정부터 시작한다. 생각을 모으고 철학을 세우고 시스템을 만들어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2. 이슈 2) 언제나, 그곳에 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할까?

마음을 열고 얼굴을 맞대며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매주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고, 관계가 있는 그룹과 개인에 관한 관심과 기록을 한다. 비생산적이고 지루한 작업이지만 서로에게 라포 형성이 되어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접근으로 가능성이 크다.

3. 이슈 3) 생활문화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관계

교육이라는 의미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보는 기회를 맞볼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4. 이슈 4) 사회적 변화(혁신)를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

다양한 계층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진화하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일상의 공간을 재구성한다. 유아나 반려견을 위한 프로그램, 몸을 이용한 놀이, 야외 놀이터 등 불편함도 활동으로 풀어나가 본다.

5. 이슈 5)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구조 개편 방향

① 포용적 관점의 사업구조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실행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유연성이 요구된다.

② 생활권 단위 지원체계 구축

커뮤니티에 대한 진정성 있는 관심과 활동을 하는 지역의 관계자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응원할 수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③ 생태계 관점의 지원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나 활동가를 위한 응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심리적 에너지를 충전시켜준다.

단, 모든 문화예술교육이 문화의 핵심인 기초 예술생태보호를 전제로 활성화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토론문

김인숙 (대덕문화원 사무국장)

사회문화예술교육을 만난 지 10년차이다. 지난 10여년 간 지역에서 진행되었는 문화예술교육은 양적 성장을 하였으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은 양적인 성장에서 오는 허전함?을 달래줄 질적 성장을 고민해야하는 시기가 왔다.

예전 문화예술교육은 정해진 기관, 시설(복지관, 노인정, 지역아동센터등)의 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예술교육(장르)중심적 문화예술교육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접근방식으로 행해져 온 문화예술교육의 지금 현장의 모습은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철학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으며, 시대의 흐름에 더디게 반응하기 시작하였다.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과 질적 제고를 높이기 위한 지역화의 실천방안이 제시되어야 될 것이며, 이에 문화예술교육 접근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문화예술교육의 현장모습은 더 이상 예술을 즐기며, 향유하는 소극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우리의 일상이 문화가 되고, 삶의 모든 장면이 예술과 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창조하고 공유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또한, 사람과 사람이 모여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가며, 일상생활문화 중심으로 필요에 의한 활동들이 연결되며, 활동이 곧 문화가 되고 예술을 둘러싸고 표현되는 방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문화예술교육은 특별한 장소(전시장, 공연장...), 공간의 개념을 탈피하여, 일상의 생활공간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변화는 매우 더디게 움직이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수년간 성장해온 문화예술교육은 지금의 현장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것이며, 사업구조의 개편이 절실하다고 본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포럼협회, 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원, 한국문화의집협회에서 사업을 지역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도,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지원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의 특성(환경)을 고려한 지원방식이 아닌 중앙에서 정해진 지원방식의 틀 안에서 현장이 역으로 맞춰가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참여자들도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으로 접근하다보니 현장은 사업 방향의 중심이 흔들리며, 혼란 속에 사업수행을 해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문화예술교육은 더 이상 결핍을 채우는 목표가 아닌 필요를 어떻게 찾아내고 채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다.

토론문

박성연 (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 들락날락)

1.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념 정의와 그 정체성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범위와 특성은?

- 예시로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문화를 통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직면하여 해결해 가는 과정을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추구하면 좋겠다. 작은 지역 단위 주민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역량은 크지 않지만, 누구보다 본인들의 문제와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이 많다.
- 지역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인구위기, 기후위기, 생업 구조 등의 현안들을 발굴하여 문화예술로 해결해나갈 수 있다면 좋겠다.
- 기존의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 설정하고 있는 문화적 취약계층의 범위를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소득수준과 가정환경 등을 포함하여 경제적 여건은 있지만 시간적 공간적인 문화취약계층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2012년부터 이야기해왔다.
- 지역사회 내에서 어디든 문화예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소적인 제한도 자유롭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 마을 단위, 직업 현장 등등

2.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구조, 내용, 방식, 대상 전략은?

(4분위 표에서 2, 3, 4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 일반계층, 소외계층 양분된 개념보다는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문화기획을 하면 좋겠다.
- 문화 대상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진행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화적 욕구들을 확인하고 재구조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민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면서 가야 함.
- 주 1회, 몇 회기 이상이라는 기본적인 교육시간과 기간을 제한하지 말고, 2박 3일이든, 캠프든, 집중기간이든, 하루든 일주일이든 주민들이 선택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3. 생활문화 사업과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통합 논의

- 작은 지역 단위에서는 생활문화, 사회문화예술교육 등의 개념을 공유하고 주도해나가는 주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한 문화활동에 기대어 진행되기 마련
- 생활문화센터에서 제안하고 주도하는 생활문화의 개념과 행사들이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루는지는 의문
- 각종 문화동아리 지원, 하드웨어 운영 수준에 그치는 경우
-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생활문화든 사회문화예술교육이든 이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문화기획자, 창작자 등의 발굴과 육성이 시급

4. 사회정책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어떻게 드러내게 할까?

사회적 변화를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필요조건은? (정책 체계 및 교육 내용, 도구)

- 사회변화를 추구한다는 관점에는 동의, 주민 주체가 개인의 문화적 성장을 넘어서 지역사회를 문화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주체로 성장하면 좋겠다.

- 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 들락날락이 활동하고 있는 충남 금산은 충남지역에서도 지리적으로 맨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예술 기획자로서 성장하고 싶은 청년들이 차도 없이, 홍성에 있는 충남문화재단까지 교육을 받으러 간다거나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 각 지역, 각 권역별로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기획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장 단기, 온라인 프로그램 등 지리적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 창의적인 능력자들이 문화기획자들이 지역에 발굴 육성되어야 모든 한계들을 드러내고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완주문화재단의 경우 청년일자리+문화기획자 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문화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마다 문화이장을 위촉하고 약간의 활동비를 지급하여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로 양성하고 주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음.

5. 포용적 관점의 사업구조

현재 사업구조는 중앙 단위에서 설정한 대상과 방식, 내용을 토대로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하향식 사업입니다. 이로 인해 정작 원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제한적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차별(배제)없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 리빙랩 사업 공모의 경우 예산을 기준으로 두고 주민들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주민주체들이 참여하면 지원해 주는 방향, 대상, 이슈, 방법 등을 제한하지 않음 시범적으로 문화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큰 틀거리만 제공하는 공모사업을 실행해 보는 것 제안

6. 생활권 단위 지원체계 구축

대상별·계층별 비 문화시설 대상 1년 단위 프로그램 지원방식에서 생활권 단위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원방식을 어떻게 전환해야 하며,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지원 기간을 신청하도록 하고 1년 단위로 평가(사업 내용, 실제 문화적 효과, 예산집행 등)하여 지속 지원해주는 방법

7. 생태계 관점의 지원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현장의 활동가들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 1년 단위 공모방식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강사비, 재료비 등) 지원에 의존하는 취약한 현실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을 전담영역으로 설정하고 활동하는 조직이나 활동가가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식과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 현장의 활동가들이 좀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유연한 지원 필요,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먹고살기 힘든 환경을 다양한 사업에 참여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활동의 시간과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필요
- 문화이장, 청년활동가+마을조사단 활동, 같은 청년일자리와 문화를 접목시키는 것, 문화기획자를 꿈꾸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1일 4시간 문화예술 또는 마을 문화예술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계발, 네트워킹, 다른 사업에 참여하는 것 등으로 생활과 시간을 분배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에서 어떤 가능성과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론문

복권승 (교육기획협동조합 “품”)

1. 들어가는 말

다양성이 문화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볼 때 최근 민주주의적 보충성의 원리에 기반한 분권과 분산 분화의 모습은 바람직하다. 특히 중앙공급 중심의 획일적 문화지원정책들은 과거 정권 유지 또는 홍보도구로서 활용되던 개발독재시대의 문화예술 역할에서 구조상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생활권에 중심을 두는 생활문화를 중시하고,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자생적 문화생태계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추구한다는 것은 당연히 환영받아야 한다.

발제문은 지원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잘 찾아주셨다. 소재와 영역보다 더 중요한 사람과 가치의 지향을 언급하는 부분 또한 좋았다.

2.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예술테마의 교육활용

영역 간의 콜라보를 요즘의 트렌드 정도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트렌드라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해답이라고 본다. 복잡계로서의 지역생태계 생활생태계에 전문화된 정부체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생활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직접적 사업 말고도 최근 이슈가 되는 마을만들기, 마을교육공동체, 보건복지 영역에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 등 지역 전반에서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도구적 활용이 활발하다. 기본적으로 많은 정책 사업들을 통해 주민학습에 예술교육의 톨이 결합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양적인 예술도구를 통한 활동의 팽창을 가져왔지만 필연적으로 질적인 부분에서의 고민을 깊게 한다.

3. 양적인 팽창의 문제점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다양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이템 위주의 얇고 졸속적인 예술활동의 단순 모방을 하는 프로그램이 늘었다. 또한 철학과 지향, 본질에 대한 이해도 없는 따라쟁이 예능인이 예술인으로 둔갑하거나 얇고 졸속적인 예술활동들이 많이 양산되는 특성도 나타난다.

노인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방과후학습과 돌봄교실 등 다양한 생활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의 톨들이 활용되는데, 지방과 지역으로 갈수록 양질의 교사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는 몇 개월의 과정으로 신속하게 경험 없는 대량의 강사들을 양산해내는 결과로도 나타난다.

4. 보조금사업들의 한계와 조건이 만드는 현상

최근 정부의 각 부처, 민간조직의 각 분야에서 이뤄지는 공모사업 또한 양적으로 분야별로 엄청나게 팽창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사업에서의 공통적인 문제는 인건비나 기획비 사용의 제한, 다양한 공간 마련 및 시설확보 등의 제약조건들이 많다는 것. 조건에 맞추다 보면 단순학습 위주의 강사료와 재료비 정도가 지출되는 획일적인 교육형식이 현장을 지배한다. 문화예술역량과 지역의 사람을 발굴하고 생태계를 키우기보다 강사예능인과 프로그램들의 도구만을 다양하게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최근 행자부의 지침을 좀 더 자율화 하려는 움직임 등 몇몇 변화를 기대할 만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현장은 여전히 변화가 미미하다.

5. 문화의 분권 분산 분화를 위한 기본기와 기초역량 마련의 투자 필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찾고 문화예술적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자신감과 도구를 갖게 하고, 사회현상과 철학, 지역정체성으로 고유성과 명분을 더해 사회적 가치와 계열 간의 경유와 공유를 통해 지역 고유의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사람에 투자되는 보조금 환경을 만들었으면 한다.

이러한 기대에는 도구로서 프로젝트와 실험적 시도, 능동적인 활동과 기획부터 참여하는 학습, 토론과 사색 그리고 휴식이 겸비되는 학습과 동아리 문화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지역기획가들을 양성하고 그들에게 많은 돈이 아닌, 작지만 자유로운 기회가 되는 씨앗자금이 필요하다. 공간이 필요하다. 다양한 지역의 공간들이 최근 빠른 속도로 생겨나고 있으니 그에 걸맞은 기획활동가와 강사들을 위한 기초적 소양을 키우는 모임들도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문화정책현장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인근의 지자체에 주민들이 참여기획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문화정책에 대한 대화마당을 주민들과 함께 기획하고 있는 현장을 본다. 지역의 기존 문화예술인의 틀에 신선한 자극을 줄 사람들로 협치적 시각을 갖는 제3섹터의 기획들과 그 자유로움의 영역에 힘을 실어줄 정책들을 기대한다.

“인간의 영혼이 개인의 세계에 머물지 않고 가치와 계열을 경유하고 공유되는 공동체적 나”로 성장하는 사회적 활동... 게오르크지멜의 문화에 대한 정의가 다시금 최근 생활문화예술교육 정책과 고민들에 각인되어지는 듯 하여, 생활과 지역에 기반한 문화예술의 활성화에 기대를 갖게 한다.

토론문

서은덕 (움직이는 협동조합 이사장)

1. ‘사회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쟁점 이슈’에 대한 의견

1) 기존 사회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 도시재생, 마을지원사업,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공동체 등 큰 규모의 지원들이 ‘시민참여형’ 지원으로 변화 발전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크고 작게 문화예술교육 지원함으로 기존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의미가 희미해짐
- 기존의 지원 시스템의 높은 문턱과 문화예술교육으로 에너지가 고갈된 예술가들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떨어짐. 이에 평생교육 강사들이 상대적으로 강사비가 높은 문화예술교육지원으로 진입. 예술적 감성이 떨어지는 1회성 키트 교육 진입 높아짐
- 세대 및 지역, 젠더 갈등이 깊어지면서 전반적인 이해는 아니어도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기반이 필요함

- 지역만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조사 필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내, 지역을 연구할 수 있는 전담인력 확보. 단순한 점검식 모니터링 아닌, 치밀한 전수조사 진행해야함
- 도시재생, 마을지원사업 등 타 사업과 차별된 지점을 위해 예술인들의 강사 참여를 확대 지원. 예술인이 개인이라면 팀 구성 가능하게 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획자 양성 및 지원에 힘을 기울여야 함
- 사회통합을 위한 이슈 지원 확대. 다양한 세대, 특징이 다른 지역 융합, 다양한 젠더를 구성한 사업 지원 확대

2.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구조 개편 관련’ 의견

-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지원된 지 15년가량 된 현재, 지원사업 주체, 심의위원, 지원센터 담당자 모두 비슷한 양상을 갖고 매너리즘에 빠진 경향이 있음. 형식과 틀을 모두 바꾸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임. 기존의 방식을 모두 부정하기보다 새로운 사업의 진입을 높이고, 부족함을 센터에서 채우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 제안.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교육의 콘텐츠 영역, 운영영역, 연구조사영역을 서로 보완하게 하는 사업으로 구성하는 시도 필요
- 기존의 수혜자들은 무료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정보를 독점하고 이를 이용하는 영리한 수혜자들을 위한 필터링 필요.
- 교육의 내용과 필요에 의해 장기와 단기로 세분화할 필요 있음.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할 때 2년도 턱없이 모자라는 때가 있음. 때에 따라(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가 높다면, 지역주민의 요구가 강하다면) 사업 기간에 유연성을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함. 더불어 4월-12월 진행에는 한계가 있음. 지원 기간 또한 연속성을 가져야 함. 1-3월 춘궁기를 버티게 하는 힘도 필요.
- 기획자를 양성하지 않는다면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 기획적 측면을 기대하기 점점 어려워질 것임.

토론문

오혜자 (초롱이네도서관 관장)

1. 배경

- 보편적 문화예술교육 실현 및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 강화
- 지역의 자율성과 특색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 체계 구축

2. 논의

1)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념 정의와 그 정체성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범위와 특성은?

- 삶터로서의 지역사회에 대한 내밀한 이해가 필요하다
- 지역사회는 구성원들에 있어 환경이자 관계이고 정체성이다
- 사회구성원이 주체로서 삶을 가꾸는 방식에 대한 문제

2)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구조, 내용, 방식, 대상 전략은?

- 도시와 농촌의 사회적 토대를 고려해야 한다
- 대상, 시간, 시설환경의 다양성이 바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전략
- 문화공간, 공유공간의 발굴과 전략적 제휴 등 공간 활성화로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환경 개선효과 (예 : 문화편의점사업을 공간의 관점으로 재조명)

3) 생활문화 사업과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통합 논의

- 생활문화에 대한 전형적인 장르교육 의식이 틀어 되고 있음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책 속에서 뿌리내리고 성장하는 생활문화(문화다양성)

4) 사회정책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어떻게 드러내게 할까? 사회적 변화를 위한 사회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필요조건은?

- 변화하는 사회문화환경과 구성원의 욕구를 담아내고 실험하는 기획역량 필요
- 정책의 실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효과성 논의구조’ 필요.
- 바로 살피고 바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 체계정립 (논의의 반복으로 무력, 이탈, 위축의 학습화)

5) 사업구조개편

- (포용적 관점의 사업구조) 누구나 차별(배제)없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
 - 기획의 확대가 ‘누구나’에게 열려 있다는 참여의 관점이 아닌, 문화예술기반과 역량이 있는 시민주체를 찾아 논의하는 다가서는 관점이 필요
- (생활권 단위 지원체계 구축)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원방식?
 - 접근성을 높이는 다양한 공유공간의 관계망과 생활문화거점공간에 기대하는 역할의 부분 고려
- (생태계 관점의 지원) 문화예술교육 전담 조직이나 활동가가 활성화?
 - 마을단위 문화주체들을 연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는 마을문화기획자, 퍼실리테이터의 발굴과 양성

토론문

이춘아 (지역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

1. 문화예술지원 중간조직의 역할 변화

오랫동안 문화예술 관련한 일체의 지원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중심으로 지원되었음. 2005년 이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형태로 체제를 정비함. 2005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발족되면서 교육 관련 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짐. 2016년 생활문화진흥원에서 출발하여 2017년 지역문화진흥원이 발족되면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이루어지던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들이 이양됨(생활문화공동체). 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동아리축제 등의 사업이 지역문화진흥원으로 이양됨. 따라서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 분화가 이루어짐. 3곳 중간조직은 창작, 교육, 활동 지원으로 역할을 분담하였으면 함.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창작 / 예술가 및 단체 창작 지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교육 / 학생, 시민, 지역민 교육 지원
- 지역문화진흥원 : 동아리 활동/ 학생, 시민 지역민 동아리 활동 지원

수혜의 주체

- 예술가 : 위원회, 진흥원, 문화재단 등에서 창작과 교육, 동아리활동 위해 지원받을 수 있음.

- 학생, 시민, 지역민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재단으로부터 문화예술교육 지원받음
- 학생, 시민, 지역민 : 지역문화진흥원, 문화재단으로부터 동아리 활동 지원받음.

창작, 교육, 활동

- 창작 : 예술의 질적 고양을 위한 창작
- 교육 :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음. 학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예술강사 진행의 교육. 복지관, 마을회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예술강사 진행의 교육
- 활동 : 취미, 여가형 동아리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지원(1996년 ‘문화의집’이 만들어질 때 문화의 집에서 개인 또는 단체들이 문화의집을 이용하는 공간이었음. 따라서 문화의집이 직접 교육이나 강좌를 운영하기 보다는 동아리들이 활동을 위해 필요한 강사를 모셨음. 문화의집은 동아리 활동에 요구되는 공간을 빌려주는 곳이었음. 평생학습과는 다른 개념이었음. 따라서 지역문화진흥원은 그러한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공간,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함.

1)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할까?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념 정의와 그 정체성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범위와 특성은?

이제까지는 각종 학습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교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함. 문화예술지원 중간조직이 세분화됨에 따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전문성을 토대로한 연구 및 실험, 실습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대상을 위한 교육을 보다 전문화함.

2) 언제나, 그곳에 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할까?

-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구조, 내용, 방식, 대상 전략은?

교육의 대상을 일반인에게로 넓히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되나, 제한된 예산의 배분일 경우, 문화소외층 및 특정대상 우선이 되어야 함

3) 생활문화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관계

- 생활문화 사업과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통합 논의

생활문화 사업은 ‘활동’형이므로 지역문화진흥원으로 이양함. 사회문화예술교육은 보다 전문화된 ‘교육’을 지향하도록 함.

4) 사회적 변화(혁신)를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

- 사회정책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어떻게 드러내게 할까? 사회적 변화를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필요조건은?(정책 체계 및 교육내용, 도구)

효과성은 기존의 교육연구 방법에 의한 효과성 검증, 과학적 검증에 기초한 결과물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방법을 개발하도록 함.

5)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구조 개편 방향

- (포용적 관점의 사업구조) 현재 사업구조는 중앙 단위에서 설정한 대상과 방식, 내용을 토대로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하향식 사업. 이로 인해 정작 원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제한적 구조라고 할 수 있음. 누구나 차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앞으로 ‘시민’ ‘지역민’ 이 주체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함. 즉 중앙단위와 지역을 연계하는 역할인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움직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야 할 것임. 예컨대 ‘문화도시’ 사업에서 강조하는 주민주체 주민주도 방식을 지역 내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확산시켜야 할 것임.

- (생활권 단위 지원체계 구축) 대상별 계층별 비 문화시설 대상 1년 단위 프로그램 지원방식에서 생활권 단위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원방식을 어떻게 전환해야 하며, 고려해야 할 사항은?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야할 것임. 지역 내 배분구조도 있으므로 사업의 성격상 1년~3년으로 구분하여야할 것임. 이 또한 지역문화재단 등에서 결정하도록 함.

- (생태계 관점의 지원)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현장의 활동가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 1년 단위 공모방식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강사비, 재료비 등) 지원에 의존하는 취약한 현실. 문화예술교육을 전담영역으로 설정하고 활동하는 조직이나 활동가가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식과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소속의 교육전담 강사는 ‘교육’전문가로서 자격을 강화하고 그에 응하는 강사비용을 높이도록 함. 재료비 역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한두지 않도록 함. 이러한 전문성 없이는 지역문화진흥원의 프로그램과 차별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단체활동가의 경우, 교육과 기획을 구분하도록 함. 기획자의 경우 예술가에 응하는 대우가 이루어지도록 함.

토론문

이희성 (단국대학교 문화예술학과 교수)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평가결과 중심 정책제언

1. 참여자 특성

- 2019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평가에서 나타난 참가자 특성은 충남도와 울산광역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지특사업 분석결과 충남도와 울산시에서 여성 비율이 매우 높음. 꿈다락사업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남

- 지특사업 연령은 충남도는 60대 이상이 매우 높으나 울산시는 30~40대의 비율이 높음. 꿈다락은 두 지역에서 초등학교 비율이 높음
- 재참여율은 지특 사업에서 높게 나타나며 꿈다락은 낮게 나타남. 특히 충남도는 농촌지역 특성상 동일인의 프로그램 연속참여가 높음
- 따라서 지역특성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문화예술 수요와 욕구조사 분석을 통해 수요자 중심 맞춤형 사업설계가 필요함.

〈표〉 지역특성화사업과 꿈다락사업의 지역간 참여도 비교

구분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지특	꿈다락	지특	꿈다락
성별	남성 14% 여성 86%	남성 46% 여성 54%	남성 10.8% 여성 89.2%	남성 44.5% 여성 55.5%
연령	60대 이상 77.6% 50대 9.1% 40대 2.5% 30대 5.0% 20대 5.8%	초등학교1~3학년 47.9% 초등학교4~6학년 37.6% 중학생 6.5% 고등학생 3.8% 기타 4.2%	60대 이상 9.2% 50대 23.1% 40대 29.2% 30대 27.7% 20대 10.8%	초등학교1~3학년 48.2% 초등학교4~6학년 39.2% 중학생 6.6% 고등학생 6.0%
재참여율	87%	23%	56%	18%

*자료 : 2019년 지역문화예술교육평가보고서, 충청문화관광연구소

2. 기획 부문

- 대상자(지역) 선정 시 사전 조사를 통한 수요조사 및 교육대상과의 소통을 통한 욕구 조사를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 필요
- 수업 진행 시 보조강사의 역할은 주 강사만큼 중요함. 그러나 현실적인 강사비 책정이 안 되고 있음(주 강사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미술전공은 주 강사의 수시가 과다하게 배정되어 있어 균형에 맞지 않게 수업이 진행됨 (장르별 특성에 맞게 전문 강사의 적절한 배치가 필요함)
- 교육내용이 다소 과하게 자체성과 발표회와 수료식에 맞춰져 있어 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교육이 진행된 수행시설에서 차기년도 참여자 모집과 프로그램홍보의 일환으로 보여짐)
- 수혜를 받은 참여자가 같은 프로그램에 또다시 수강함으로써 다른 참여자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중복 참여는 지양해야 함
- 소외계층 및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시 강사진과 참여하는 학생 주변여건에 따라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 있음에 대한 고려와 다양한 대안이 필요함

3. 프로그램 부문

- 수업을 진행하는 참여자 특성에 따라 내용 수준이 다를 수 있고 당일 참여자의 부재(결석)시 대체 수업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함
- 참여자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지나치게 놀이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강사들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함
- 주 강사가 수업을 진행할 때 보조강사의 역할이 모호한 사례발생. 팀을 나눠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주 강사와 보조강사의 역할, 프로그램 목표와 진행 등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과 실행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됨
- 문화소외계층인 장애 청소년만의 프로그램진행으로 문화예술 적 성취감은 수업진행 그 자체만으로 의의를 가진다고 봄. 그러나 그 이상의 문화예술적 성취감 고취를 위한 노력은 향후 숙제로 남음

- 공예(미술) 프로그램은 대상자들의 만족도는 높지만 공예프로그램에 치중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이 추구하는 인지활동이나 내적 치유 등이 등한시되는 사례발생, 향후 융합형 프로그램 개발 필요
- 단순한 흥미와 재미를 끌어내기 위한 수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기능적 측면이 강한 수업이 되지 않도록 수업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학원식 교육을 응용해서 창의적이지 못한 주입식 예술교육을 지양해야 함
- 미술과 공예 파트에서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연극이나 미디어 파트는 지속적인 연습과 습득력, 기술력을 수반해야 하는 부담감에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4. 운영 부문

- 근로자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진행 시 긴급회의나 감사, 노사문제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 시 수업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회사 측과 대책방안이 필요함
-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 주강사와 보조강사에 대한 자격요건과 강사기준을 제시하여 일정 수준의 경험 이 있는 강사풀이 투입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은 각각의 지원사업 특성에 따라 재단에서 정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주강사와 보조강사의 역할에 대한 매뉴얼을 구축하고 이를 지원단체에게 제시하여 주강사와 보조강사의 역할분담을 통한 수업의 시너지효과를 질적 성장을 유인하여야 함
-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구조화된 수업방식 제시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는 의무를 준수하기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평가방법임으로 적절한 조절 방법이 필요해보임

5. 제도 부문

- 예산집행에 있어 항목 간 변경은 가능하도록 열어주기. 실행에 들어가면 애초 계획과 달리 더 필요하고, 덜 필요한 부분에 변화가 생기는데 융통성 있는 예산 운영이 필요함
- 전체 프로그램이 모두 확인 가능한 자료집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방식 등 전체 프로그램이 일목요연하게 안내되는 홍보방안이 필요함
- 수업일정 및 수업 변경 때마다 제출해야하는 과도한 서류/ 예산집행 및 물품 구매의 규제/회계 및 과도한 서류제출로 인한 어려움 발생(행정의 간소화 필요)
- 장애 청소년의 현장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강사 및 상해보험 가입 등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마련이 필요함
- 이전의 문화예술교육은 참여하는 수요자들은 토요일, 여유시간 등의 활용에 대해 수요자 스스로의 욕구가 있었음.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지식습득의 빠른 접근, 미디어, 유튜브의 활용과 짧은 시간에 효율성과 유용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짐에 따라 프로그램은 수요자의 욕구를 빠르게 읽어내어야 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식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
- 문화적 소외지역이나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자녀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주를 이루었던 과거와는 달리 문화예술교육사업도 수요자 중심의 초개인화, 수업주제의 정밀화, 전문화 등이 요구됨. 이를 위해서는 강사의 전문화, 기획 및 수업과정의 구조화, 수업교재에 대한 효과성이 검증되어야 함
- 문화예술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과도한 중복을 예방하고 수행단체와 수행대상(기관)이 3년 이상 진행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사업 참여자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토론문

장윤하 (가물가물 대표)

1.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념 및 정체성 재정의

먼저 사회문화예술교육이라는 커다란 덩어리를 해부해보면 어떨까? 다른 말로 “문화예술교육은 (무엇 무엇)이다.”라는 공동의 합의점 몇 가지는 도출해보자는 것이다. 이것은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과는 다르다. 대신 이 커다란 언어적 정글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또한 예술강사를 무엇으로 이해할까? 문화는? 예술은 무엇이라고 정의내리는 걸까? 행정과 현장 속 많은 사람들이 이 간극 속에서 현재의 진단이 제기되었다고 추측해본다.

예술가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예술가적인 능력을 사회 참여적인 방식으로, 보편화된 교육이라는 형태로 풀어내는 것이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아닐까.

2. 생활문화와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영역은 지역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적 활동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문화예술 교육은 그보다는 더 넓은 영역으로, 생활문화영역과 일부 중복되는 지점들이 있다. 생활문화의 참여자들이 마을과 동네 기반의 모임 성향이 더 중심이라면,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는 특정 욕구에 따라 유동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에 “왜 이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동네에 필요한가? 내가 이것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참여자 스스로의 고민과 질문의 기회 제공이 중요하다. 단순히 어떤 예술적 기능을 습득해 그것을 반짝 실현하고 끝나는 것은 문화가 아니다. 개인들 속 다양한 결핍들에 용기를 심어주고, 건강을 회복하는 개인들이 모이면 조화로운 공동체 문화가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3. 사회 변화(혁신)에 발맞추는 문화예술교육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식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확실히 예전과 달라지고 있다. 점차 활동의 규모는 작아지고 종류는 다양해져간다. 작은 규모들의 활동들에 집중하고 그 단체들의 교집합에서 만들어지는 시너지를 만들어 가야한다. 또한 다수를 상대로 하는 얇은 문화예술교육 보다는 더 적은 인원을 상대로 하더라도 단계를 설정하고, 욕구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소규모 형태의 활동들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4.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접근 방법론 : 사업구조와 내용, 지원방식 및 대상

각 지역마다 정책에 의해 이미 만들어진 사회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공간들이 있다. 곳곳에 문화재단과 문화센터, 다양한 크기의 도서관과 같은 문화기반시설들이 지어졌지만, 그 다양함과는 별개로 획일적인 프로그램만 운영되고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2가지 접근 방법론 중 공공기관의 차원에서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 보려는 실험과 실패들이 필요하다. 지역마다 문화적 유형을 파악하는 과정에서는 공공부문에서 할 수 없는 민간의 영역에서 여러 형태의 네트워크 자리를 만들어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민간차원의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5.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 지원구조 개편 방안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우리가 흔히 연결 짓는 문화예술분야 이외에 문화유산이나 문화산업도 포함된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 예능 중심의 문화예술분야만 파이가 커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이 포괄하는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인식과 균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상층 또한 기존의 방식보다는 전 연령에 해당하는 좀 더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방식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토론문

정지은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문화예술, 생활문화, 지역문화 등 문화정책 큰 틀과 연계하여 국민의 문화생활 관점에서 향유와 창작 전 과정을 포괄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지침에 따른 하향식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추진은 지역의 자율성 위축 및 정책대상별 수요 대응에 한계가 존재하여, 지역 특성과 현장의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급자 관점을 탈피하여 다양한 욕구와 특성을 지닌 수요자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전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진행되는 ‘사회 문화예술교육 의제발굴을 위한 전문가 원탁회의’에서 제기되는 주요의제(안)에 대한 토론 의견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첫째, 발제문의 내용과 같이 사회문화예술교육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포함한 정의로 확대되어야 하며, 융복합, K-POP 등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는 예술교육과 경험교육을 포괄하는 교육 방법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대상이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현재는 소외계층을 포함한 유아부터 청소년, 직장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기에, 생애주기·사회적·지역적 여건 등 수요를 고려한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이 필요합니다. 즉,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생애주기별 인구구조의 변화, 계층별 특성, 지역적 특색 등에 대한 현황과 변화를 염두에 둔 정책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현재 중앙정부 주도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운영 방식에서 나아가 다양한 주체 및 유관 사업들(생활문화 사업, 생활문화공간 정책, 타 문화예술교육사업: 동아일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등)과 연계가 필요합니다. 현재 생활문화 분야에서도 국민의 문화생활 관점에서 정책의 효율성·체계성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교육 등 유관 사업 및 기관과의 연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문화 사업과 사회문화예술사업의 통합보다는 각 사업 고유의 개념·영역·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연계를 통해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및 생활문화사업, 생활문화공간 정책, 타 문화예술교육사업 등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사회문화예술교육과 유사 사업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 및 진단을 통해 향후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회적 변화를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사회문화예술교육은 미적 감성·창의성·정체성·자존감·성찰력의 ‘문화적 가치’와 공감·소통·포용성·공동체성·사회성의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지원받는 단체가 장기적으로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역과 소통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였을 때 사회정책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에 참여하였을 때 느낀 부분은, 1년 단위 공모 방식과 지원비 항목 등으로 인해 각 단

체에서는 장기적 계획보다 그 해 지원 양식에 맞추어진 교육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소외받지 않는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각 단체별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장기 운영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원받는 단체가 향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단계별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 개선해야 할 세부 내용은, 지원 절차의 간소화, 사업 유형의 자율제한형(역제안 모델) 발굴, 단체 간 다양한 사례의 공유 등을 통해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경상권

토론문

김정주 (Gachi예술협동조합 대표)

1. 이슈1) 정체성과 방향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할까?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념 정의와 그 정체성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범위와 특성은?

- 사회에 왜 문화예술이 필요한 걸까?
- 문화예술교육자는?

2. 이슈2) 언제나, 그곳에 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할까?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구조, 내용, 방식, 대상 전략은?

- 지역의 문화예술교육공간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시설과 설비 필요
- 무료수강의 문제점
- 문화예술교육자의 대우

3. 이슈3) 생활문화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관계

생활문화 사업과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통합 논의

- 커뮤니티아트
- 전문문화예술인의 교육과 멘토가 필요

4. 이슈4) 사회적 변화(혁신)를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

사회정책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어떻게 드러내게 할까? 사회적 변화를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필요조건은?

- 시대적 변화를 이해하고 세대 간 소통과 공동체의 요구사항을 문화예술교육으로 해소
- 사회문화예술교육기회의 불균형 해소

5. 이슈5)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구조 개편 방향

특정계층, 시설중심보다 지역공동체, 지역주민 중심으로

- (포용적 관점의 사업구조)
교육진흥원 지원시스템과 별도의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제안사업 활성화

- (생활권 단위 지원체계 구축)
적절한 프로그램 운영의 평가와 대상의 만족도와 지속교육의 희망 등을 고려
1년 단위보다는 장기적 연속프로그램지원 필요
- (생태계 관점의 지원)
프로그램기획자 전담인건비, 회계 전담인건비 필요

토론문

류기정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센터장)

1. 주제1에 대한 의견

각 지역의 현장 상황에 따라 개념과 정의가 달리 해석될 수 있다. 행정 입장에선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사업의 방향성이 명확할수록 정책적인 예산과 제도적인 부분을 잘 뒷받침할 수 있겠지만, 현장은 반대로 정책적인 사업이 분명해지고 강화될수록 자율성과 창의성은 떨어지고 획일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확률이 높다.

현장이 스스로 만들어 갈 때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이 행정의 위치이다. 그동안 예술교육은 늘 앞에서 끌고 가는 위치였다. 이제 성찰하며 거리의 간격을 줄일 필요가 있다.

2. 주제2에 대한 의견

때론 대안을 마련하는 방법보다 기존 방향과 진행상황에 대한 문제를 보완해 나아가는 것은 어떨까? 현장은 피로도가 높고 신뢰도가 상실되어 가고 있으며 역량있는 단체들이 기피하는 상황이다.

3. 주제3에 대한 의견

주제1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예술교육의 확장을 위해 생활문화와의 통합을 고려 중이었는데... 생활문화는 평생교육의 영역에서부터 전문예술영역까지 확장해 있는 상황이다. 교집합 되는 부분이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발전을 고민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경계가 모호한 현장을 굳이 인위적으로 합치거나 나누는 것은 현장을 혼란 시킬 수 있다.

4. 주제4에 대한 의견

한국이 OECD 36개국 중 공동체 부분이 꼴찌를 기록했다. 자신이 어려운 일을 닦했을 때 공동체로부터 의지할 수 있느냐의 질문에 응답자들이 0점을 주었다고 한다. 공동체가 사라지고 배려하지 않다 보니 상호 신뢰가 사라진 사회... 예술교육의 효과성은 공동체복원, 개인 간, 단체 간 신뢰회복에 초점을 두고 가는 것은 어떨까? 예술교육은 개개인 관계 맺기 > 심리적, 정서적 공동체 만들기 > 나아가 경제 마을공동체로 나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5. 주제5에 대한 의견

활동가들을 양성하거나 학교 예술강사처럼 직접 고용해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 결국 한정된 예산으로 저임금에 숫자 늘리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므로 예산지원방식을 일부는 공모방식을 택하더라도 일부는 위탁, 용역방식으로 해서 정당한 이윤을 보장해 민간단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

토론문

박진명 (생각하는 바다 대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다음을 상상하기 위한 고민들

1.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문화예술의 출발점, 사회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교육이라는 영역이 결부되었을 때 ‘사회문화예술 교육’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설정. 단순히 사업체계의 범주가 아닌 아르페의 존재적 의미 규정하는 것이기도 함

2. 커뮤니티 방식의 문화예술교육의 확대

- 아직도 현장에서는 장르예술을 중심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으나, 토요문화학교 등 사회문화예술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놀이와 체험 등 기능교육에서 벗어난 철학을 확대함으로써 여러 방법론들이 탐색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임.
- 하지만 도시재생, 마을, 생활문화, 공동체 사업 등과 결부된 문화예술 사업과 프로그램들이 형식적인 측면에서 기능교육을 탈피한 방법론들을 수렴하면서 확대되는 사이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새로운 역할과 방법을 탐색하지 못했음. 지역재단 현실에서는 오히려 유연한 실험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단위 사업을 진행하는 체계로서 굳혀지고 있어 고답적인 영역으로 인식되면서 앞선 성과 퇴색되기 시작했음. 경직된 집행으로 안착.
- 교수자와 피교육자가 뚜렷하게 나뉘는 형태로 대부분의 사회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이 안착되고 있는데 이러한 형식은 오히려 도시재생, 마을, 생활문화, 인문 프로그램 등에서의 워크숍 방식 등의 유연한 대응에 비해 경직된 형태

3. 지리적 접근성, 심리적 접근성

-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서비스를 생활하는 지역 인근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좋기는 하나 서비스 생산자 그룹이 지역에 균질하게 있지 않고, 단체별 교육 역량과 프로그램이 특화되는 경향이 있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다양성이나 질적인 부분을 담보하기 쉽지 않음.
- 따라서 접근성의 확대는 문화예술교육 서비스 생산자와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달리 설정될 필요가 있으며, 지리적인 접근성뿐 아니라 심리적인 차원의 접근성의 확대에 상정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생활권 내의 문화예술 교육의 강화나 심리적 접근성 확대는 현행의 수혜자의 숫자로 환원되는 성과지표와 배치될 가능성이 있으며, 오히려 양적인 성과지표의 한계를 인정하고 질적인(생활권 확대,

심리적 완화) 부분을 성과지표로 수립하기 위한 고민이 동반되어야 함.

4. 생활문화/문화다양성/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이라는 관점의 수립

- 생활문화 등 문화 정책의 트렌드와 방향을 문화예술교육 영역에서 적극 수립하는 방향과 오히려 문화예술 교육 독자성 구축해 차별 점을 강화하는 방향의 기로에 있음. 정책 트렌드나 방향을 수립할 경우는 더 적극적으로 형식, 방법, 가치들을 탐색하는 유연한 방식의 사업 발굴 및 진행이 담보되어야 할 것. 장르, 대상 중심 등 현행의 문화예술 교육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정책적 차별성을 만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생활 문화 등이 점차 강조되는 상황에서는 도태될 가능성 높음.

“생활상(라이프스타일, 시대상) 담은 문화예술교육”

“생활상, 다양성, 사회적 가치를 담은 문화예술 교육/콘텐츠”

- 찾아가는 문화활동
- 인문활동가 장흥
- 토요문화학교 일반형/기획형 → 전부 기획형
- 지원 내용 중 기획/강사비 등 제한 →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토론문

안진나 (홀라HOOLA 디렉터)

1. 이슈1)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할까?

- CITY AS SHOOOL / LOCAL PRESS / CAFE SOCIETY /
- 자신과 사회의 관계를 탐구 → 주제 및 이슈를 발굴 → 문화적인 접근(변용, 은유, 우회)
→ 예술적 경험(재발견, 재구성, 제작) →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정체성, 지속성)을 구축
- 개인과 사회, 세대와 전승, 관찰과 해석, 이야기와 현재화, 입체적 레이어의 구성, 생태계적 사고
- 작업(몰입) → 작품(경험, 가치) → 내적 체험과 외부적 발화의 결합이 생성되는 플랫폼 필요

2. 이슈2) 언제나, 그곳에 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할까?

- 기계적 기술습득이나 훈련이 아닌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매체로서의 자신을 발견하는 경험
- 공통의 경험을 통한 공감대와 문제의식 공유에서 출발하는 주제의 모험
- 일상과 변방의 재발견을 통한 관심 범위의 확장과 차별적 프로그래밍(밤낮의 리듬, 아파트, 빈집, 쓰레기, 놀이터, 길고양이 등 일상문화 KEYWORD를 가지고 접속하기)
- 강사-학습자 관계를 탈피하여 코치-대원/팀워크 방식의 수평적 멤버십 구성(포지셔닝과 스포트라이트)
- 개성 없는 시설 너머 경계를 허무는 장소적 전략(아웃도어, 공터, 옥상, 길, 폐허, 틈새 등)
- 종다양성, 서브컬처, 1인 객체의 생애주기 변곡선에 대한 이해와 문화생태계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지원

3. 이슈3) 생활문화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관계

- 낯설게 보기 → 틀을 벗어나는 경험 → 몰입과 작업세계로의 이행 → 예술의 교육적 계속효과(영향력)

4. 이슈4) 사회적 변화(혁신)를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

- 해킹 → 제작 → 공유 (되감기 → 놀이 → 재생 → 재현과 전유 → 공유와 변화)
- 문화예술리터러시 강의 → 탐사 → 기록 → 편집과 재구성 → 자기문법과 문체 획득 → 작품화
- 인문과학, 사회과학, 공학, 물리학, 화학, 수학 등 다종 분야의 예술화 및 이들의 결절구조를 가진 다원 예술 기획과 협업

5. 이슈5)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구조 개편 방향 HOW

- 대상, 방식, 목적, 장르가 아닌 지역, 주제, 접근법, 협업구조 등 결합과정 중심으로 사업 구성
- 익숙한 관성을 탈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의 기획과 실행 참여 독려
- 주제 및 지역에 대한 리서치에 기반하여 기획의 맥락이 지속성을 지닐 수 있도록 선정기준에 포함 혹은 컨설팅 및 연구자/연구집단과 결합 된 공모구조 편성 : 일회성 체험→인사이트 확산과 계속가능성 지원

토론문

원향미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발제문의 이슈와 문제의식들을 살펴보면 오늘날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문제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문제정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간 우리가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떠올렸던 ‘특정계층을 위한, 특수시설에서 행해지는 교육’이라는 고정된 이미지에 대한 문제의식부터 시작하여 생활문화, 평생교육과 같은 유사한 영역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까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혁신을 위한 준비단계가 착실히 시작된 듯하다. 이 토론문에는 그 고민들의 연장 선상에서 더 말하고픈 문제를 제기해보고자 한다.

1.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속성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속성은 무엇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변해야 하는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속성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서로배움’과 ‘함께자람’이다. 즉, 교육자와 피교육자로 구분되는 기존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수평적 상호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활동이 되어야 한다.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의 구분을 넘어 모두가 참여자로 서로에게 자극이 되는 문화예술활동이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을 수행하는 예술가에게도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자신의 예술활동의 연장선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교를 제외한 모든 문화예술교육을 지칭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은 학교 밖 사회 전반에 보편적인 활동으로 자리잡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정 실체를 위한 교육에서 국민의 일상에서 소외된 틈새를 메꾸는 문화예술교육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생애주기적 측면에서 바쁜 삶을 살아내느라 문화예술로부터 소외되는 청소년, 위킹맘, 3040 세대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틈을 만들어주기

위한 고민이 시작되어야 한다.

2. 기초단위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현실

- 평생교육, 생활문화 영역,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기초단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활동, 평생교육, 생활문화 영역에서 일어나는 예술활동들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기초단위에서는 이 모든 활동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동시다발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생활문화, 평생교육 분야의 질적 제고를 견인할 수 있다. 지역에서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주체와 공간들을 다양하게 발굴할 수 있는데, 이 주체들과 공간들을 엮는 기능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이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의 동네서점, 갤러리 카페 등 소위 제3의 장소들은 앞서 이야기했던 문화예술교육의 틈을 메꿀 수 있는 지역의 핵심 스팟이다. 이러한 공간들과 지역의 주체들이 함께 연계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등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문화예술교육 주체의 성장에 대하여

-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현장의 활동가, 예술가들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 중요한 리더는 예술가를 비롯한 활동가들이다. 그들은 예술과 사회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예술세계를 확장하기를 원하는 이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간 이들에게 수동적인 문화예술교육자로서의 역할만을 요구해왔다. 이들에게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예술활동의 연장선장보다는 예술활동과 별개의 활동으로 인식되어 왔다. 앞으로는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가지고 새롭게 문화예술교육활동에 진입하고자 하는 예술가들이나 활동가들을 위한 <진입-성장-안착 단계 모형>을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마을단위, 생활권 단위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시작을 위하여

과거, 아르떼가 주관했던 <시민문화예술교육사업 시시콜콜>과 같은 사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을 보여줬던 좋은 사업으로 기억된다. 사회적 변화를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인식하는 과정부터 포함되어야 한다. 문제 인식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모색과 참여, 연대의 실천과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중심을 지역에 맞추고, 지역사회의 주체 간 협력회의 구조 등을 주도적으로 고민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토론문

이강민 (울산미학연구소 봄 대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가치와 철학을 위하여

1.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념

먼저 사회란? 사람들이 살며 활동하는 시공간이다. 이곳은 가치 지향적 활동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회란 사람들마다 가치관에 따라, 사회적 관계에 따라 갈등이 상존한다. 그리고 학교와 사회는 분리되지 않는 사람의 활동 영역이지만,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행을 위한 구분으로 인정될 뿐,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이나 가치와 철학은 다르지 않다.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 즉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독특한 환경과 사람들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살면서) 만들어진 의식과 관행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는 사람들이 만든 결과이지만, 반대로 문화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익숙한 데(가치 정향에 따라)로 통제한다. 문화를 교육한다는 것에는 애초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만든 것 중에 최고’(매튜 아놀드), ‘위대한 전통’(리비스주의)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문화와 예술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도와주는 것이다. 즉 자신의 생활권, 지역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 삶의 방식으로서 표현을 발견하고, 이해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교육이란 은행입금처럼 텅 빈 학습자의 머리에 동전을 채우듯이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그동안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요구와 지적 탐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살며 생활하는 삶터에서, 자신들의 필요와 가치가 구현된 문화와 예술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능력을 배양하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뿌리

‘위대한 전통’의 리비스주의는 대중문화 비평과 함께 1950년대까지 이어졌고, 레이몬드 윌리엄스와 E.P. 톰슨에 의해 노동자계급의 문화정치의 가능성이 제시된다. 68혁명 이후 박탈된 공동체의 정치, 경제, 문화적 권리를 위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한 문화와 예술을 만드는 커뮤니티 아트가 탄생한다. 커뮤니티 아트는 과거 엘리트예술을 따라하는 아마추어 예술이 아니라, 그리고 구좌파들의 위로부터의 정치적 예술과 다르게, 보통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한 아래로부터 문화예술 창조 활동이었다. 커뮤니티 아트는 70년대 지역사회개발과 만나면서 풀뿌리 주민운동과 결합하면서 영국 전역에 만개했다. 그러나 커뮤니티 아트는 1980년대 대처주의를 맞아 비영리 자선단체로 전환(1980) 급격하게 쇠퇴한다(1986). 1997년 토니 블레어 신노동당 정부에서 탈정치화된 ‘참여 예술’로 대체된다. 참여 예술은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포용이나 창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정책의 토대로 사용된다.²³⁾

한편, 문화예술교육의 배경이 된 문화 민주주의는 ‘모두를 위한 예술’로 각국의 정책으로 수용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70년대 공동체 예술가들에게는 문화정치의 선언문(1986에 발표)이었지만, 1990년대 이후, 환자의 복지와 관련된 보건 관리자나 성취에 초점을 맞춘 교장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사회적 포용

23) 참여 예술은 오늘날 동시대 예술계에서 그것이 ‘반자본주의인가 아니면 기독교적 선한 영혼인가’라는 비판과 인간 소외를 극복하는 반자본주의의 실질적인 대응책이라는 주장과 논쟁 중에 있다. 프랑수아 마타라소의 『사용인가 혹은 장식인가?』(Use or Ornament?)는 논쟁의 중심에 있다.

정책으로써 참여 예술-예술가와 지역사회(공동체)의 협력 실천-은, 문화기관뿐 아니라 보건의료, 교육과 교정, 여성, 인권 등의 다양한 영역과 파트너십을 맺게 된다. 참여 예술은 사회적 개선과 치유, 그리고 창조성 향상에 전념한다.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C/P)은 이 결과로 탄생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의 예술에 대한 참여는 영국에서 빅토리아 시대부터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자선 단체 예술은 엘리트 예술,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유통되던 고급예술을 전파하는 아마추어 예술이다. 따라서 이것은 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은 고급예술의 전수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예술가와 비전문예술가의 예술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주체들에게 문화예술의 권한 부여를 위한 교육이다.

3.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철학: 문화 민주주의

현재의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에 기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개인의 권리와 능력의 강화라는 의미로 보인다.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나 문화와 예술이 경계가 되는 시대에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삶의 질이나 문화적 역량이, 예를 들어 소외된 장애인이 그림을 잘 그리게 됨으로써 인생이 즐거워질 수도 있고, 장애인이 자립역량(복지축소를 위한 자립)이 커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교수이자 전직 교도소 및 프로포지션 센터 연극 감독인 톰슨(James Thompson)은 1990년대 브라질 상파울로에 있는 한 교도소에서 영국적 맥락의 재범방지 예술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예술 프로그램은 영국에서 분명히 재범률이 낮아지는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프로그램을 브라질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보니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났다. 그 이유는 영국과 브라질의 사회안전망의 수준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회적 조건 변화 없이 개인의 변화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오늘날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예술 치유와 창의성만을 강조하는 현상은, 개인과 지역사회가 처해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보다는 신자유주의적 경쟁을 내면화할 수 있다. 게다가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지역의 과제와 연결되지 못하면, 지역의 거점조차 없이, 지역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예술 강사를 통해 프로그램 소비를 반복한다면, 사회문화예술교육은 단지 경험 경제의 시장화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장차 생활문화와 마을공동체만들기 같은 주민주도형 사업에도 뒤처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풀뿌리 주민 조직과 빠르게 결합하기 때문이다. 1970년대 공동체 예술이 지역사회개발 노동자와 협력했듯이, 마을 단위에서 풀뿌리 조직과 생활권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꾸릴 수 있어야 한다. 마을예술가(사회문화예술교육사)는 자기 이익(가치 실현)에 동기화된 주민들의 문화예술 창조권리와 능력의 배양을 촉진함으로써, 네트워크는 주민 창조와 소비의 생태계로 조직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가치와 철학을 가진다는 것은 인생이란 배에 돛을 다는 것과 같다.

문화예술교육은 단지 사람들에게 미적 경험이나 예술적 경험을 소비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을 통해 자기 삶의 주인으로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주적 주체화의 장치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토론문

이현혜 (경북문화재단 문예교육팀 팀장)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문화예술교육의 정의를 보면 정체성이나 방향성이 없이 관련 법만을 제시해 놓고 있다. 그래서 이번 사회문화예술교육 의제발굴을 위한 회의가 더욱 중요하게 다가온다.

2005년부터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지원사업 중심으로 진행되어오다 보니 정형화된 틀에 갇혀버린 느낌이 있다. 20명 이상, 30차시 내외는 안내문에 있지 않아도 그대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물처럼 인식되어 있다. 물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진행하면서 기수의 개념도 생기고 4차시 이상 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되어 있긴 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안된다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하고 있다. 이런 작은 예이지만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프로그램 기획이 쉽게 나오지 못하는 것의 원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한다.

경북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지원 단체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 문화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예술가나 예술가들이 만든 단체의 참여는 줄어들고 인문학이나 놀이를 중심으로 하는 단체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긍정적으로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서 예술 부분만이 아니라 영역을 확대한 이후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부정적으로는 보조금 사용에서 정확한 회계처리, e나라도움 등 행정 중심 체계로의 지원사업 변화에서 예술가들이 기획을 담당하기 힘들어하고 있거나 함께 할 기획자를 구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경북의 경우 순수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고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예술가가 부재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또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기획자가 생계의 문제로 다른 곳에 취업을 하고 있어 문화예술교육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우수 인재의 유출 문제를 막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는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재료비와 강사비만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사업구조 개편에서는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문화예술교육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고민과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람이 있어야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지역문화분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우수 인재들이 다른 분야로 유출되지 않고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만의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 ‘문화’의 강조도 중요하지만 ‘예술’이 없는 문화예술교육으로 변하는 것은 우려가 된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범주와 대상은 넓히고 예술만의 특별함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특정 장르의 제한이 아닌 예술을 통한 특별함을 통한 넓은 범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토론문

최수환 (갤러리도암한방, 경북 의성)

농산어촌에는 다른 방식의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교육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솔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의 구조로 보면 수요자(대상)가 중심인 것 같지만 수요자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게 되어있어 그 설득력은 좀 떨어진다. 반면 공급자(예술가)가 중심일 경우에는 그나마 이해될 수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게 무슨? 이라는 물음에 도달하게 된다. 초기 설계 시 예술가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상당한 고려가 있었다고 보여지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것마저도 퇴색되었다.(30회차, 3시간, 4만원) 예술가의 일자리 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한 것인지, 시민들의 문화예술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아님 둘 다 절실한 것인지를 명확한 구분 하에서 새롭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된 대단히 많은 의미를 포함한 단어이다. 그런 관계로 해석과 정의에 있어서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중의적 부의적 자의적으로 될 수가 있다. 정체성의 모호함과 새로운 개념정의를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합성된 네 단어 중 문화+예술에서 문화와 예술을 분리하여 정의하여야 한다. 특히 문화라는 대단히 넓은 의미를 어느 부분까지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의식주문화, 놀이문화, 여행문화, 생활문화, 음주문화까지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쓰이고 있지 않은가? 예술 또한 문화에 비해서는 덜하지만 전문가예술, 아마추어예술, 생활예술, 취미예술 등으로 어디까지를 문화예술교육의 영역으로 구분할 것인가? 이를 지역별로 구분해서 대입해보면 더욱 그 구분 혹은 확장(통합)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도시지역의 경우는 비교적 많은 시민들의 분포로 인하여 더 세부적인 구분에 의한 범위나 대상자 결정이 가능하겠지만 농산어촌의 경우 문화와 예술을 분리해서 결정하거나 오히려 문화예술교육에서 우선시되고 있는 예술을 우선시할 때 그 대상이 급격히 좁아지는 심지어 교육이 불가능한 지역도 존재한다.

중앙과 실행단위 행정구조의 불일치성으로 인한 어려움이 빈번히 나타난다. 정부행정구조상 상위(중앙, 광역)에서는 문화체육관광을 하나로 묶었다. 물론 담당 실국과로 나뉘어져 있다. 이는 시군단위로 내려오면 계 혹은 담당으로 구분되어지고 읍면동으로 내려오면 담당이 없어지게 된다. 구조는 사고와 일상을 그것에 맞게 하도록 유도한다. 문화예술교육은 진흥원이나 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당연히 행정구조의 상하위 불일치성은 생활현실에서는 문화예술의 실종을 낳았고 문화예술교육은 상위 행정단위의 습관에서 오는 다양하지 못한 정책수립과 실행과정의 상실로 인하여 교육대상이기도 한 문화예술교육 수요자의 접근도 어려워졌다.

도시에서의 정책은 많은 이들의 고민으로 대신하고 농산어촌의 문화예술교육을 살펴보면 우선 지금과 같은 방식의 공모사업 규모와 형식으로는 이동수단이 확보되지 못한(노령화) 소규모마을단위의 대상자들의 교육은 영원히 해결될 수가 없다. 현재까지의 일반적 방법인 대상자 모집과 교육의 진행이라는 틀을 벗어나 교육자가 대상자를 방문하는 새로운 형식이 필요하다. 마을단위(10명 미만)의 교육이 필요하며 장르예술교육보다 종합적인 문화교육이 절실하다.

전라권

토론문

고길섭 (고창군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1. 공론화 과정의 이해

‘개념’과 ‘방법’의 진화의 문제로 이해

2. 다시,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의 질문들

- ‘사회’란 무엇인가 → 사회구성의 문제 : 사회구성에 대한 성찰적 과제
(ex. 문제해결과정으로 은유화되지는 않는가)
 - ‘교육’이란 무엇인가 → 주체형성의 문제 : 삶의 (인문학적) 주체에 대한 성찰적 과제
(ex. 생애사적 기회 제공으로 은유화되지는 않는가)
 - ‘문화예술’이란 무엇인가 → 가치지향의 문제 : 사회와 주체의 좌표설정의 과제, 기능전환의 과제
 - * 좌표설정(가치지향) : 어떤 정해진 곳으로 가자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지금-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의 과정
(ex. 레토릭으로 은유화되지는 않는가)
- ➔ ‘은유’라는 안개숲으로의 숨은그림찾기’를 넘자는 것.

3. 자치분권-지역문화분권 관련 : 농촌형의 실질적 고민 필요

- 상상공간의 이동 : ‘사회’라는 추상적/기능적 범주에서 (‘생활문화’와는 다르게) ‘생활세계’라는 구체적/의미론적 범주로
- ‘생활세계’/‘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 개념의 적극화 : ‘생활세계’라는 미시사회, ‘생활세계’의 삶-주체, 생활양식 변화의 가치지향
- 농촌형 설계 필요: ‘도시’와 ‘농촌’의 삶의 기반, 문화예술의 존재지형 차별성 인지, 보편성으로 내세워지는 도시 시각의 탈피.
 - 문화예술활동의 생활세계에 밀착.
 - 문화예술활동이 생활세계에 밀착해 있으면서도 생활세계의 문제와 활동은 부재(자연주의 혹은 생활주의?).
 - 관변화, 순응주의의 최적화 → 문화예술활동의 심각한 왜곡. 비판적 담론의 생성, 지역문제를 문화예술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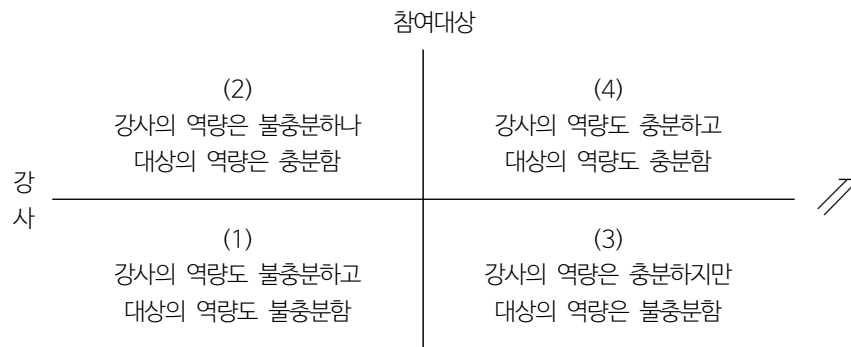
4. 이슈 1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할까?

- 사회문화예술교육 = 생활세계 내 구성원들의 주체형성 및 가치지향을 추구하는 인문적, 다각적 문화예술교육

5. 이슈 2 : 언제나, 그곳에 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할까?

• 농촌형 생활세계 접근성 및 수월성

- ➔ 공동체 구성원 문화예술활동 : ex. 농촌형 공동체 문화예술기지 → 마을(공동체) 자원조사 → 프로그램 → 공동체 축제
- ➔ 농촌형에서는 교육참여대상과 대상들의 생활세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교육의 목표가 생활세계를 향하되 교육참여대상은 제한적이라는 점 고려.
- ➔ 지역문화예술강사 역량강화 및 문화예술기지 활동조직 구축



6. 이슈 3 : 생활문화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관계

- 생활세계 내 생활문화+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7. 이슈 4 : 사회적 변화(혁신)를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

- 농촌형의 경우
 - ➔ ex. 문화예술 생태계의 전환을 위한 사회적 수단으로서의 사회문화예술교육 배치
 - ➔ 문화예술 생태계의 전환 자체로 농촌형 지역사회 변화의 의미가 있음
 - ➔ 마을재생(마을공동체만들기) 및 마을학교와 연계한 사회문화예술교육 배치 고민

8. 이슈 5 :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구조 개편 방향

- 진흥원-생활세계권 문화예술교육 협약에 의한 지원은 어떤가 : 행정 혹은 문화재단이라는 중간 경유지를 거치지 않고 생활세계권 내 문화예술교육 주체에 대한 직접 연계
 - 생활세계 환경별, 성장조건별, 중단기 계획별 등 단계적 이행과 지원

토론문

김수재 (전남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교육팀 주임)

1. (이슈1)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할까?

이야기 주제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념 정의와 그 정체성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범위와 특성은?

- 광역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으로 도서벽지 등 문화소외지역은 참여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생활권 중심의 기초단위 추진체계 구축으로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제고 및 수요자 참여기회 확대가 필요함
- 대안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연결통로를 구축해야 함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상에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문화예술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사회문화예술교육 조작적 정의는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까지다’라고 범주를 정하고 있어서 두 정의가 상충됨
- 학교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학교 문화예술교육, 특히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함. 공교육 내에서 이뤄지는 예술교육의 경직성을 벗어나야 함. 학교 내에서 보편적 문화예술교육을 이루겠다는 의무교육적인 관점을 버리고 자유로운 공간과 시간,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함. 사회 문화예술교육은 방식과 장소와 대상의 자율성이 담보되어야 함

2. (이슈2) 언제나, 그곳에 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할까?

(일상성과 보편성,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 접근방법론에 대하여)

이야기 주제

-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구조, 내용, 방식, 대상 전략은?
(4분위 표에서 2, 3, 4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 전남의 문화지소는 문화예술교육의 가장 기초 단위 시설로 17개 군, 읍·면을 포괄하는 전초기지로 기초지자체의 역량을 스스로 강화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와 실험이 이루어지는 장소임
- 지역 내 인적자원을 연결하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맞춤형 콘텐츠 개발이 가능함
- 또한, 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장소가 될 것으로 봄. 문화지소는 전남문화관광재단에 필요 요구사항을 요청하고 사업 과정 중 상황에 따른 대응과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음
- 군-1지소-1코디네이터를 목표로 전남형 지역문화예술교육의 기초 거점으로 문화지소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임

3. (이슈3) 생활문화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관계

(생활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의 연계, 조정, 통합에 관한 사항)

이야기 주제

- 생활문화 사업과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통합 논의

- 생활문화사업과 사회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통합되어야 함. 생활문화사업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화예술교육의 형태임. 또한 생활문화사업 대부분의 활동 장르가 문화예술교육 영역에 포함됨. 봉사, 체육 등의 영역을 제외한 예술 장르의 생활문화사업은 사회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포함하여 사업간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4. (이슈4) 사회적 변화(혁신)를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문화예술교육의 실천 방안)

이야기 주제

- 사회정책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어떻게 드러내게 할까? 사회적 변화를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필요조건은? (정책체계 및 교육내용, 도구)

- 세대갈등이 부각되면서 ‘세대’를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세대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 양상들을 정치·행정적 요소로 보면서 생긴 문화임. 문화예술교육에서는 당사자성 중심의 다양한 시도와 접근 필요
- 또래집단의 문화정체성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개발과 확대를 통해 세대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보기 보다는 그들 세대가 갖고 있는 ‘문화’를 읽어내고 그에 맞는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문화예술교육으로 세대 문제 해결형 문화예술교육 확대 필요
- 결론적으로 세대의 문화를 응원하고 일상에서 문화적 관계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지향함

5. (이슈5)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구조 개편 방향

이야기 주제

- ① (포용적 관점의 사업구조) 현재 사업구조는 중앙 단위에서 설정한 대상과 방식, 내용을 토대로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하향식 사업입니다. 이로 인해 정작 원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제한적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차별(배제)없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 ② (생활권 단위 지원체계 구축) 대상별·계층별 비 문화시설 대상 1년 단위 프로그램 지원 방식에서 생활권 단위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원방식을 어떻게 전환해야 하며,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 ③ (생태계 관점의 지원)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현장의 활동가들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 1년 단위 공모 방식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강사비, 재료비 등) 지원에 의존하는 취약한 현실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을 전담영역으로 설정하고 활동하는 조직이나 활동가가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식과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1) (포용적 관점의 사업구조)

- 문화지소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활동가 및 지역민 네트워크 구축
 - 장르별, 읍면 단위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활동가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방안 마련
 - 사례 스터디, 통합 워크숍 기획·추진 등 파일럿 프로그램 및 워크숍 운영
- 문화지소의 플랫폼 역할 강화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마련·제공하여 예술교육 정보 서비스 제공
 - 관계자들의 현장 경험과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과의 교육 활동 참여 기회 확대(예술 교육 진입, 활동 지원 포함)

2) (생활권 단위 지원체계 구축)

- [‘문화지소’의 등장] 전라남도 문화예술교육계획 중점 추진과제
 - 전라남도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전라남도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문화예술

교육계획(2019 ~ 2022)을 수립, 주민의 삶과 밀착되는 문화예술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17개 군에 ‘문화지소’를 설립하는 과제를 설정함.

- [‘문화지소’의 목적] 전남형 문화예술교육 거점 마련
 - 전남문화관광재단은 공모 방식의 1년 단위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한계에서 벗어나 예산 지원의 연속성으로 장기 체계적 교육과 교육생들의 능동적 참여 등의 시대적 다변화에 대처하고자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신진 인력 발굴·육성, 지역성을 반영한 장기 계획 수립 등 전남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의 거점을 마련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개선코자 함.
- [‘문화지소’의 운영] ’19년 시범운영 20년 확대운영
 - ’19년 문화지소 시범운영을 위해 17개 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추진하여 사업추진 의견을 제시한 담양군·장흥군을 선정, 시범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도출하여 운영하였음. 2020년에는 1개소를 추가하여 4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임.

3) (생태계 관점의 지원) :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지원사업

- 지역간 교류를 통해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프로그램 추진
 - 문화예술교육 지식, 지역 이슈, 중앙 트렌드 분석 등을 도출하기 위한 행사 진행
 - 참여자 모두가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지역 자원과 인력풀을 활용하여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시범 사업 운영
 -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모델 연구 및 운영 지원
 - 지역 전문인력(예술가, 문화예술교육사 등) 주축의 밀착형 기획 프로젝트 실현

〈참고〉 전남도 3개 권역 지역

- 광주근교권 : 나주, 담양, 곡성, 화순, 함평, 영광, 장성
- 동부권 :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강흥, 보성
- 서남권 : 목포, 해남, 영암, 무안, 진도, 신안, 완도, 강진



토론문

모상근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케팅팀장)

1. 사회적경제 정의(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2017.10.)

-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간 협력과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 및 용역의 생산·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국가별·시대별 정의는 다양하나, 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의미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협동조합(기획재정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2.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성 연구(2018.10. 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양적 성장 :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기업의 제도화와 더불어 200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함. 사회적기업은 2008년 11개에서 2018년 223개, 협동조합은 2013년 77개에서 2018년 1,219개로 증가
-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활동의 정의 : 문화예술 활동(문화예술을 통하여 개인이 느끼는 만족과 기쁨이 공감능력을 확장하고 인식 능력을 신장시켜 사회적 연대나 공동체적 의미를 형성)을 중심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통해 영리를 추구
-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정책의 흐름 :

구 분		주 요 정 책
초 기	2009-2011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및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시작 -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도입, 교육과 포럼을 통한 인식제고 노력 -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벤치마킹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성장기	2012-2014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협동조합의 폭발적 증가 - 개별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자금지원, 멘토링, 컨설팅 진행 - 인식조사 및 경영사례 발굴 진행
정체기	2015-2017	- 공공구매 진출 사례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 온라인 컨설팅 및 DB 관리
도약기	2018-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재원조성 모델 개발 등을 통한 지원 및 생태계 구축

- 정책방안 : ① 문화예술 사회적 가치 인식 확산 및 다양한 주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② 문화예술형 사회적 임팩트 측정과 자본과 투자 접근성 확보, ③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제도 설계 및 운용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2019.9.)

- 배경 : ①일과 삶의 균형 중시, 소득 3만불 시대, 주52시간 근로에 따른 문화 서비스·일자리 수요 및 문화 참여 욕구 증가, ②단기의 프로젝트형 일자리가 많고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문화분

야 맞춤형 일자리 확산 필요, ③문화향유 측면에서 지역별·계층별 문화격차 해소 및 생활 SOC/ 문화프
로젝트의 양적 확대와 함께 주민참여 및 체감도 제고가 필요

- 현황 : ①창의적 아이디어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 사업모델을 창출하는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은 전체의 10.7%('18년 2,233개), ②사회적경제조직 창업 수요 증대로 최근 3년간 연평균 21% 성장('15년 905개→'16년 1,135개→'17년 1,347개→'18년 1,605개)
- 문제 : ① 문화분야 맞춤형 지원체계 미흡, ②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사업모델 부족, ③ 금융 접근 등 재원조달의 어려움, ④협업 체계 미비 및 낮은 인지도
- 목표 : ①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 확산 및 지속가능한 문화 일자리 확대, ② 사람 중심의 문화생태계 조성 및 지역사회 활력 제고
- 전략 : ① 문화 분야 특화 지원체계 구축(예비사회적기업지정, 전담조직, 성장 맞춤형 지원, 인력양성, 가치 측정 체계 마련, 금융 접근성 제고), ② 지역·주민·사회적경제가 함께 문화 창출(혁신적 사업모델 확산, 지역문화자산 활용, 문화재생, 생활문화/문화예술교육 확산), ③ 연대와 협력의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공공·민간·사회적경제 간 다각적 협업체계 마련, 인식제고)

4.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도입(2019.10.)

- 문화의 창의성과 감수성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 사업 모델을 창출 목적
- 문화참여 욕구 증대에 발맞춰 문화 분야 사회적기업들이 주민과 함께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기획·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목적 실현도 기여하기를 기대
- 전문예술법인·단체(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스포츠클럽(생활체육진흥법 제9조),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등이 참여 가능
- 조직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 목적 실현(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창·혁신형 등), 배분 가능한 이익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등의 4가지 요건 구비
-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 문체부의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경영·판로개척 컨설팅, 생활문화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특화사업 지원 참여 가능
- 총 194개 기업 신청하여 56개 기업 지정(문화예술교육 관련 영역 14개 기업)

5.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2019.2.)

-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활성화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운영
- 2018년 시작으로 지원 본격화, 문화예술분야 특화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플랫폼 구축(2018년 10억→2019년 59억)
-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문화예술 사회성과 측정지표 개발 등을 추진
- 창업 아이디어 발굴, 창업과정전반 지원(1.5), 사업기반구축 지원(5.0), 사업도약 지원(8.0), 기업협력사업 지원

토론문

임영규 (전 전남문화예술전문위원)

1. 이슈1)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

- 평생교육의 실행 차원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이해되어야 한다고 봄. 특히,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범주를 학교를 포함하는 지역사회까지로 넓게 정의하고자 한다면, 상호 협조, 성숙·발전의 과정·단계로써 연계·보완되어야 하되, 각 교육이 주 학습대상과 생활환경(여건), 수혜자들의 필요·요구에 따라 분명한 지향점(특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함.
- 학교교육은 행위주체와 교육자, 교육대상과 목적 등이 확실함.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다양한 분야 지식 축적·경험 등이 중시되는 교육의 일부로 행해지는 교육임.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사회취약계층과 일반대중 모두를 포함하는 ‘시민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을 가지고 시민주체, 시민양성 등의 차원에서 실행되었으면 함.

2. 이슈2)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일상성·보편성·접근성 제고

- 취약과 일반계층, 두 영역을 모두 지원하는 투트랙을 지향하며, 사회의 각 계층을 두루 아우르는 전략으로 간다면, 교육시간과 과정(회차)구성, 실행공간과 프로그램의 접근성도 당연 각 계층에 걸맞게 치밀히 모색되어야 할 것임.
- 감성공유와 단체활동으로 공감대가 이미 형성(조직형식으로 기존 구성되어 있거나, 지인이나 거주지 이웃, 개인취향 선호 등으로 이미 갖추어진 소규모 모임단체 등)되어 있고, 시·공간적으로 동석이 용이한 대상들을 겨냥하되, 해당 모임의 성격에 따라 특화된 프로그램 발굴을 적극 꾀해 봤으면 함.

3. 이슈3) 생활문화와 사회문화예술교육

- 발제에서 논의되었다시피 ‘생활’은 사회·문화·교육이라는 말과 같이 분야와 방법 등이 특정되거나 세분화되지 않은 매우 포괄적이며 지극히 보편적인 개념임. 생활문화사업이 문화예술교육사업과 보조기관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지원대상과 활동에 있어서 구분되어야 할 특별한 요소가 없다면, 통합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4. 이슈4) 사회적 변화를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

- 개인의 일정기간 학습과 단순 경험으로만 끝나는 교육프로그램이 대부분임. 이후 일상생활에서 지속되면서, 사회문제 해결수단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면 고무적일 것임. 그러기 위해서는 당초 교육 설계부터 이 시대가 접한 사회적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고려·반영해야 한다고 봄.
- 현대는 개성이 중시되며 독거현상이 확대되어가고 있고, 고령화와 인구감소(소멸)가 증가되고 있음. 하지만 상호 역할분담과 조화, 사회 네트워크 형성으로 소통하며 상호 연결 관계를 긴밀히 유지해 가고 있듯이, 협업과 공동체 의식이 강조된 교육정책발굴이 필요해 보임.

토론문

임진아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장)

1.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념... 고민들

- 그간 지향해온 문화예술교육적 방식으로 볼 때 우리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은 단순 체험·장르중심, 사회문화예술교육은 관계·지역·성찰 등의 언어로 해석하고 있어 체험·장르문화예술교육을 하위개념으로 폄하하기도 함
- 또한 기존 ‘학교 외의 영역에서 운영되는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으로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정의내리는 것이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결합과 연계의 제한요소로 작동함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영역 안에 문화예술교육의 대상, 목적과 방식의 형태로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존재하는 개념으로 포괄·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의 ‘예술적 방식’에 보다 더 집중·치중하는 것이 평생학습, 동아리 사업과의 차별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됨. ‘예술적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2. 문화예술교육의 일상적 접근

- 이슈 2에 대한 고민은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는 기획자입장에서도 많이 고민한 바 있음.
- 지원사업(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 회차, 장소, 강사 등 운영방식을 보면 일부 주민만이 지속해서 참여하는 형태의 한계성이 있으며 개개인의 성향이 반영될 수 있는 지원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는 고민에서 ‘문화예술클래스’ 지원사업을 운영하게 됨

(추진배경)

- 도민 누구나 생활권 내에서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적 환경의 부재
- 참여자 대상 8개월 이상의 연속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분야 지원사업과의 차별적 단기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반영
- 관 주도형 문화예술강좌 형식에서 벗어나 도내 운영거점의 다양화를 통해 장르 및 단계별 참여의 체계화
- ※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로 한정함

#소규모 #모임지원 #

- 일상적 참여를 위해서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불규칙성’)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은 반드시 필요하며 ‘불규칙성’도 인정되어야 함.
- 전북은 ‘모모의 작업실’사업을 통해 특히 예술가 공간을 문화예술교육콘텐츠로 확장을 시도해봄
- 문화예술교육적 방식과 목적을 전제로 하는 자율기획사업(#소규모 #모임) 필요...고민중

3. 생활문화 vs 사회문화예술교육

- ‘차별성’이라는 단어로 이분화할 수 없어 연결점으로서의 정책방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
-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예술적 경험, 예술적 방식, 예술적 사고와 영감 등)의 마중물로서 그 과정을 지원하거나 사회적 역할로서의 문화예술의 활용 등 진보한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 생활문화는 이를 지속하기 위한 자율적 취미공동체로 이해하려고 함 #자율적, 지속적, 공동체가 강조되

는 만큼 생활문화는 예술활동이나 모임체의 질적·사회적 역량 관리에 대한 지원

4. 사회적 변화 그리고 사회문화예술교육

- 사회적 변화를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은 '교육'이라는 단어가 주는 목적이 너무 명확해서 연결고리를 이해하기 힘들 →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사회적 변화(혁신)가 적합하지 않을까...
- 이슈 해결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적 방식 즉 일방성이 아닌 상호작용적 방식이 중시되어야 함.

토론문

임현수 (지리산C 협동조합 대표)

1. 문화예술교육의 프레임을 넘어 패러다임의 전환

주체와 객체, 학교와 사회, 교육과 실천의 벽을 허무는 과정에서 혁신이 나온다.

구례에서는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이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구례교육공동체를 구성하여 평생교육 및 학교교육의 통합적 전개를 모색하고 있다. 민간에서도 이를 견인하고 생태계로 발전시키는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인데 유아부터 직업,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과정으로 접근 중이다.

여기서 문화예술교육 주체들은 산발적인 체험교육에서 융합형, 자기주도형 교육과정을 모색하는 단계까지 나가고 있다. 핵심은 지역의 교육력과 지속가능성이라는데 공감대가 모여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안 그래도 사람 없는 작은 지역일수록 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다.

2. 문화예술교육의 단위와 역할의 재구성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나? 혹은 지금까지의 정책이 양적 지원을 추구했지 주체들의 역량과 고민들을 담아 왔는가? 의문이다.

많은 경우 예술가들의 생계를 보조하는 수준에서 머무르거나 이른바 사교육의 변형으로 유지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주체들이 스스로 지역교육의 주체로 설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운영하거나,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거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공공성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하는데 거의 투자되지 않았는데 특히 기초단위는 누가 단위로서 작동할 수 있을까?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는 교사와 단위의 역할이 현실에 맞게 변화가 필요하다. 매개자와 촉진자로, 이에 대한 진입과 혁신이 일상이 되도록.

결국 단위의 현실에 맞는 교육의 주체를 형성하고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하는데 먼저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이는 긴 안목으로 가야 한다.

3. 상향식, 수평적 정책의 전환

이런 전환을 위해서는 상향식 정책과 지원, 생태계 중심의 수평적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다.

프레임이 정해진 하향식 공모보다 지역성과 혁신성, 융합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고 다양한 영역과 주체들의 접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좋겠다. 공모도 상향식으로 플랫폼에 올리면 다양한 주체들(교육, 학교, 기술, 주민, 등)의 평가로 보편성과 공정성을 획득하고, 기업이나 기금의 후원으로 매칭

을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교육자원과 주체가 문화적 자본화될 수 있는 수평적 거버넌스가 모범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강화해서 지역중심의 생태계를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필요하다.

토론문

정혜영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팀장)

본 토론문의 주요한 관점은 광주문화예술교육5개년 계획에 근거하고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현재 우리가 알고 실천하고 있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최근 급속하게 변화·성장하는 사회·문화 전반 속도에 맞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 사업, 교육방법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였는가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이 현실성을 담보하고 주변 환경 변화 속도에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와는 다른 사업의 형태와 유형으로 달라져야 할 것이고, 그것은 사업의 체계나 방식이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그에 맞는 인력창출 또는 인력의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발제문의 세 가지 정의에 공감한다. 덧붙여 광주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에서 말하는 문화예술교육은 한 개인이 전인적 존재로서 성장하기를 지향하고 인간과 자연의 분리, 개인과 세계의 분리, 이성과 감성의 분리, 교육과 삶의 분리를 지양하면서, 이를 통합시키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총체성을 확보함으로써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에서 배움이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과 배움이 교차하면서 서로를 성장시키는 ‘서로 배움’이 작동되는 것이고, 각자의 삶을 전개시키면서 배운 지혜를 서로 나누고 배우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발제문의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에 대한 좌표 세 가지 유형을 고민을 한다는 것은 장애적 요소(공간, 시간, 금전, 신체 등)를 없애 줌으로써 ‘행복감’ ‘성취감’을 경험하게 하여 문화예술교육의 보편성과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관계 맺기’의 중요성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대상층은 일반적인 시민이 대다수이다. 이에 접근성강화 및 개인의 총체적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은 생애 통합적, 세대 통합적, 계층 통합적, 장르 통합적 관점 하에 구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결과물은 개인적 성장으로 머물게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문화예술교육의 과정과 결과가 공동체성을 발현시키고 공동체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결과가 개인의 변화→공동체의 변화→사회의 변화로 이끌어 질수 있도록 ‘우리들’이 강조된 교육과정의 체계화가 의도적으로 필요하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구조의 변화와 개편을 위해서 포용적 관점의 사업구조를 위해서 통합형문화예술교육사업의 유형 확대가 필요하고 생활권 단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생활권역별 다양한 형태의 거점발굴과 관련시설의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자율성 확보가 중요한 관건일 수 있다.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관점의 지원에서 전문인력에 대한 양성과 지원에 대한 사회적 현실 반영이 시급하다.

지역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참여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85.3%가 기회가 되면 참여하고 싶어 했고, 참여경험이나 경로, 미참여 이유 등의 결과치를 보면 기회가 많고 잘 알려지고 다양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었

다. 문화예술교육의 양적 확대를 이야기 하지만 여전히 지역의 사회문화예술교육영역은 여러모로 좁고 적다.

토론문

추말숙(문화예술교육공동체 연나무)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있어 대상의 문제와 공간의 문제

1. 문제의식

- 소외계층이 문화예술교육현장에 방문하여 또는 그들을 우리가 찾아가 문화예술교육을 시행하는 것의 한계
- 자주 이야기되고 있는 소외계층이 물리적인 소외계층이냐 아니면 문화예술 접근성에서의 소외계층이냐?의 문제
- 실제로 문화예술교육을 시행했을 때 공간의 문제 발생 : 청소년 전용공간은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여성이나 어른 전용공간은 없다는 점.
ex)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려 해도 상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공실 없음
- 지역공간에 있어서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역할
청소년 공간에서는 어른들이 끼면 청소년들이 불편해할까 염려로 실제 함께하는 프로그램의 부재. 저학년 아동들에게만 시행 가능한 부모동반교육
- 남성어른들의 이용공간 부재, 또는 프로그램의 부재
최근 마을합창단이나 인생이모작의 경우 은퇴남성들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간간히 시행
- 여성 어른들은 짧은 단기의 교육 선호. 결과물을 자신^이 소유하는 교육 선호
장기간 교육에 있어서의 시간소모의 부담, 자신의 커리어를 쌓거나 물질적 소유, 유용성(실용성) 추구

2. 대안

- 지역 속에서의 구체적인 참여인원의 숫자의 중요성 탈피 - 한 사람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일상에서의 소소한 기쁨(낭독모임, 뜨개모임, 시쓰기 모임 등)
- 문화예술교육(생활문화예술교육) 거점의 확보
- 전시나 공연 공간의 확보 및 지원
- 생활문화예술교육팀의 무정산 지원
-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인력뱅크 마련
- 문화예술교육기획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

기반분과

문화예술교육 기반 정책의 의제발굴을 위한 전문가 원탁회의

- 【발표문】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추진단 기반분과 논의현황 공유 / 추미경
문화예술교육 기반 정책 추진현황 및 전반적 이슈 / 김자현
- 【발제문】 R&D 기반 공론화 의제 - 동반성장형 R&D 시스템 구축·운영 / 김창환
문화예술교육 R&D기반 이슈 / 안성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반정책_인적자원 관련 공론화 의제 / 김정이
문화예술교육 지역화에 따른 인적기반(전문인력양성) 이슈 / 홍기원
- 【토론문】 강승진 (춘천문화재단 정책기획팀 팀장) 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손동혁 (인천문화재단/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팀장)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
임진아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 팀장) 임학순 (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정시윤 (인천 연수문화재단 문화도시팀 팀장) 주성진 (문화용역주성진 대표)
최도인 (메타기획컨설팅 본부장) 최혜자 (문화디자인 자리 대표)

발표문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추진단 기반분과 논의현황 공유

추미경 (씨문화다움 대표, 분과장)

1. 도입

1)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추진단 미션과 역할에 대한 사전 논의 흐름

(1) 아르떼(문화부)

- 기관 차원의 중장기 종합적 실행계획 및 전략 도출을 위한 공동 기획 추진단 구성·운영/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 실행계획 및 전략 도출 과정에서의 대외적 협의·소통·확장의 공론 장(場) 마련

(2) 기반분과

- 문화예술교육 정책적 전환기에 발맞추어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필요한 기반영역에서의 이슈, 어젠다를 도출하고, 향후 실질적 공론화 방향과 방법에 대한 사전기획의 역할 / “공론화”라는 사회적 과정을 전제할 때, 현재 구성원들이 기반 영역에 대한 합리적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기간과 예산 등 주어진 여건을 고려할 때 공론화 추진단 역할을 분명히 설정

2) 기반분과 라운드테이블(2020.1.22.)의 취지

지역화,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맥락 속에서 문화예술교육 기반영역의 이슈와 어젠다 공유, 제안 등

- 기존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지만 15년 문화예술교육 추진의 성과와 과제를 충분히 성찰하지는 않았음. 때문에 이 부분이 공론화 추진단 논의를 시작으로 향후 지역 현장 속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상황과 연결, 취합되고 재구성되면서 사회적으로 합의를 만들어가야 할 것임.
- 본 라운드 테이블은 지역마다의 문화예술교육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슈와 어젠다들이 발굴되고 현장의 실천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인지를 모아보는 초기 이야기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기반분과 1~6차 논의내용 흐름과 1월 15일 진행된 총괄분과 원탁회의시 정리한 의견을 취합하였음.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이러한 논의내용을 참조삼아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 기반 영역에서의 이슈, 변화의 요소, 미래적 수요 등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분권화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생태계가 다양화, 지속가능할 수 있는 중앙(문화부/아르떼)과 지역(지역센터/지역현장등)의 기반구축 주요 영역, 역할분담 등이 어떻게 접근되어야 하는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2. 1~6차 주요 논의내용

1) 1차 회의

(1) 공론화 추진단 운영계획 공유 및 기반분과 운영방향 논의

- (기반분과 운영 취지) 기존 학교사업 위주, 또는 프로그램 중심 사업운영에서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진흥원 고유의 기반강화 역할에 미흡
 - ※ 최근 지방이양 관련 중앙-지역 간의 연수 역할 및 방향, 연수 단독예산 확보('20~)에 따른 진흥원 전체 연수의 체계화 사안의 중요성(전문 연수원 건립 검토 중)
- (기반분과 논의 범위) 주어진 물리적 여건을 고려, 구체적 실행계획 도출보다는, 기반 영역의 프레임과 향후 프로세스 정립하는 방향으로 추진

(2) 기반분과 주요 의제 도출 관련 논의

- (전문인력 양성의 전반적인 패러다임 전환 관점에서 접근)
 - 변화된 시대환경에 따라, 연수 대상과 목적에 대한 근본적 질문 필요
 - 중앙 공급 방식이 아닌, 현장/민간의 고유한 내용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 진흥원 역할 범위를 넘어 전체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의 생태계 관점에서의 논의 필요
 - 연수 사업의 질 제고 측면에서, 전략과 포트폴리오 수립 필요
 - 대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 스스로 문제해결/학습하는 방식으로의 교육관점 전환, 보다 구조화된 시스템을 마련하여, 경험을 축적/업그레이드해 나갈 필요
- (분과 중점 논의를 전문인력 양성 영역으로 집중)
 - 전문인력 양성의 관점, 틀, 실행프로세스 위주로 안을 마련하고, 이를 채울 수 있는 콘텐츠는 진흥원의 몫 또는 후속 과제화
- (정책 대상으로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논의 포함) '전문인력 양성' 영역을 중심으로 다루되, 기

타 주제(연구, 국제 등)는 개괄 차원에서 논의(약 1회)

(3) 기반분과 주요 의제안 도출

- ① 지난 15년 전문인력 양성 추진 현황 리뷰 및 향후 15년의 추진방향
- ② (새로운 관점에서의)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철학, 목표, 가치지향점
 -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연수를 통해 양성하고자 하는 목표/가치지향점
 - 시대가치와 문화예술교육의 본질은 어떻게 만나야 하며, 교육 대상과 방법의 방향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관련 논의 포함)
- ③ (새로운 관점에서의) 교육방법론, 실행의 유사 사례 검토
- ④ (새로운 방향 정립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구조화, 시스템
 - 예술대학/민간과의 협업, 현장/지역과의 협업, 전문가 결합 등 새로운 전문인력 양성 방향을 작동시키기 위한 다양한 협치 방식 등
- ⑤ (기타) 연구/통계, 국제교류 등 문화예술교육 기반 역할 및 방향

2) 2차 회의

(1) 지난 15년간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추진현황 리뷰 및 이슈 논의

(2) 문화예술교육 재구조화 방향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방향 설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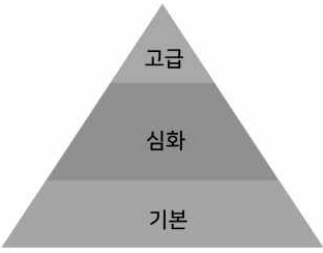
-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지향점 확립) 현재 문체부/진흥원 차원의 '문화예술교육'의 기본 개념, 이상적 모델, 지향점에 대한 합의가 부재한 채, 개별 연수 프로그램 운영
- 변화된 환경에 따라, 학교/사회 구분 없는 문화예술교육이 될 필요. 특히 학교 예술교육(교육부)의 본격화에 따른,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재편되는 방향성 확인. 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재설계 필요
- (전문인력 양성 대상과 지향점 명료화)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의 '대상'과 '지향점(목적)'을 명료하게 할 필요

(3) 전문인력의 대상, 범주에 대한 논의

- (문화예술교육사에 관련 논의) '전문인력'에 대한 법적 정의(문화예술교육사)와 현장(예술가, 예술강사, 기획자, 단체 등)과의 괴리 존재. 이를 좁혀가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 마련 필요(문화예술교육사의 보수/재교육 등)
- (전체 전문인력 양성 틀 내에서 교육사 접근할 필요) 교육사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을 개선하는 접근보다는, 전체 전문인력 양성 틀 안에서 교육사 쟁점을 논의할 필요
- (최근 학교 예술교육 지형 변화) 교육부의 학교예술교육 중장기 계획의 구체성, 최근 교육청 중심 프로그램 추진현황 등을 고려할 때, 학교에서 문체부 문화예술교육의 역할 축소방향은 분명할 것으로 예상. 문체부의 차별화되고 전문적인 문화예술교육 방향을 통해 협업 포인트를 찾고, 이에 맞는 전문인력 연수의 재편이 필요

(4) 전문인력 양성의 방식, 구조에 대한 논의

- (경력단계별 연수체계화) 전문인력의 경력단계를 고려, 연수의 구조를 체계화(경력단계별 연수 세분화)하여 각각의 내용과 방식을 달리 설계할 필요(기본, 심화, 고급 연수 등)

	문화예술교육 경력자/전문가 대상, 차별화된 고급 전문 연수 - 저명한 전문가의 지도, 해외연수 기회 제공 등 - 해외 또는 아시아 협의체를 통해 핵심국가 전문가 2~3명과의 지속적 교류(연 2회, 1:1 코멘트 등)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기본적 역량을 보유한 경력자 대상 심화연수(*핵심) - 다양한 지식과 정보의 교류와 습득, 자율주도, 협업기반, 실습기반 형식 등 - 집체형의 집중 연수
	문화예술교육 입문자가 교육현장에서 활동하기 위한 기본적인 필수교육 -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교육대상에 대한 이해 등 - 온라인 등 보편적 교육이 가능한 형태

- (생애 관점의 문화예술교육) 학교/사회의 이분법적 구분이 아닌, 생애 관점에서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을 펼치기 위한 연수의 방향성 지닐 필요

(5) 전문인력 양성의 목적과 환류에 대한 논의

- (연수 프로그램 중심성 탈피, 사람과 조직 중심) 기존 진흥원 연수는 좋은 프로그램을 수혜하는 방식. 연수를 통해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 ‘좋은 사람과 조직(지역센터 등)’을 남게 하여, 이들이 교육현장과 많이 연결되도록 할 필요

3) 3차 회의

(1) 문화예술교육 ‘기반분과’ 운영 및 논의 방향 재점검

- (분과의 목표 정리) (정책보고서 형태가 아닌), 현안과 문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 어젠다로 정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전략 정도가 추진단 분과의 결과물로 도출될 수 있을 것 ⇒ 핵심 어젠다 도출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진전략 제시하는 것으로 정리
- (기반 분과 의제 정리) 당초 제한된 시간을 고려, ‘기반’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인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나, ‘기반’의 개념에 대해 전반적 정리할 필요

(2) 문화예술교육 ‘기반’에 대한 논의

- (기반 개념 및 분류화) 기반을 ‘인프라’로 보았을 때, ‘인적기반’, ‘제도기반’, ‘R&D기반’의 틀 안에서 분과의 핵심 어젠다 도출

기반분과에서의 ‘기반’의 개념 정리	
구분	주요 내용
인적기반	전문인력(사람) 관련 포괄적 논의(연수, 자격증 등)
제도기반	법제도, 네트워크(협치)/시스템 등
R&D기반	통계, 조사, 평가, 연구 등

* 통상 ‘기반’의 분류 중 ‘인적기반’, ‘물적기반’, ‘제도기반’의 구분에서, ‘물적기반(예산, 공간 등)’은 논의대상 이슈로 적합하지 않아 제외, ‘R&D기반’을 포함하여 구성

(3)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관련 의견 공유

- (문화예술교육 시스템 내 전문인력 위치) 문화예술교육 철학을 재정립, 그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 개념정의 및 전략 수립 필요

- 인적자원 중, 현실적인 차원의 전문인력과 법적으로 정의한 전문인력의 괴리 심각. 이는 정책 목표가 모호한 것에서 기인하기 때문 (문화예술교육의 목표, 교육철학 없이 (법적으로) 인력정의를 이루어짐)
- 문화예술교육의 철학을 재정비 → 핵심(코어)그룹에 대한 정의 → 그에 따른 제도적 재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필요
- 특히 문화예술교육이 '예술가의 교육'인지, '예술을 활용한 문화교육'인지 혼재
⇒ (논의) 전문인력의 상을 정의하기 위해, 현재 문화예술교육의 지형과 정체성을 정리할 필요('예술교육'과 '문화교육'을 구분하여 정립/구조화하는 방안 등)

(4)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연수 시스템에 대한 의견 ※ 회의 자료 참조

-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환경변화) 4차 산업혁명 등 지식과 역량의 개념 변화. 협소한 티칭(Teaching) 관점보다는 러닝(Learning) 관점에서의 전환이 필요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연수 철학과 목표) 문화예술적 가치 외에도 현장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할 필요(사무처리 능력 등), 또한 공급 관점의 협업 중심에서 수요 사이트(기관/단체)와의 협업 강화 중요
※ 시설/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강화 등

4) 4차 회의

: 문화예술교육 인적기반(전문인력 양성) 정책방향 전문가 자문회의 결함
정원철 교수(추계예술대학교), 남인우 대표(극단 북새통), 우지연 이사(한국문화의집협회)

(1) 전문인력 양성 관련 의견

- (장기 프로젝트형 연수) 단기/개별 연수 외, 현장 실행 단계까지 연결되는 장기 프로젝트형 연수 형태가 마련될 필요. 이를 위한 예술교육 특성을 갖춘 전문 연수공간 조성 필요
- (예비인력 대상 연수) 현재 전문인력은 (예술대학) 전공자 중 관심 있는 사람이 재교육을 통해 현장에 투입되는 구조. 졸업을 앞둔 대학생 대상 문화예술교육 인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사전 워크숍 형태의 연수가 제공될 필요. 단, 진흥원-예술대학 간 역할분담이 있어야 함
- (철학적 가치 정립) 예술교육의 철학적 가치에 대한 정립이 선행되고, 이를 확산할 수 있도록 연수 총괄기획 감독과, 전용 공간이 마련될 필요(철학을 중심으로 연수 전체를 구조화, 체계화하여야 함)
* 미국 링컨센터 에듀케이션, 덴마크 댄스할레네(Danse Hallerne) 사례
- (교육 현장에서 '예술'의 부족) 현장에서는 예술강사를 통해 '예술'(가)을 만나고 싶으나, 점차 예술을 만나기 어렵고, 예술강사에게 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
- (문화기반시설과의 연계) 문화기반시설 여건과 특성상, 문화예술교육은 여러 분야 중 일부. 따라서 문화예술교육만을 위한 전담인력 투입/배치 어려움. 예술강사-시설종사자 서로의 이해를 넓혀가는 과정(연수 등) 마련 필요('19 협력연수 추진)
- (아르페 연수의 지향점)
 - 예술의 본질을 경험하게 하는 기초 연수가 반드시 필요. 이를 바탕으로 심화, 등 단계별로 커리큘럼을 구조화하는 방식이 마련되어야 함(이상적인 방향으로 대학 아카데미 형태(1-2년 과정 등)도 고려할 필요)
 - 최근 들어 커리큘럼, 교안을 제공하는 기존의 연수방식은 의미를 상실함. 예술교육가가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연수기회를 제공할 필요(예술적 발견의 과정을 공유, 스스로 탐구/재발

전하는 시간 등)

- 아르떼 연수는 예술 본질에 대한 감각과 경험을 통해, 예술의 교육적 가치, 삶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기회가 되어야 함
- 창의적 예술교육 프로젝트와 (기존 아르떼 연수와) 차이점 : 프로그램 안에서 스스로 예술적 체험을 통해, 자기 존재와 정체성을 확인
 - 무선접속의 시대에 많은 관계 맺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소외 현상 발생. 이로 인해 개인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강조되고 있는 맥락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스스로 찾고, 일깨우는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이 중요

(2) 전문인력의 상, 생태계 관련 논의

- (전문인력 생태계 및 환경)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철학을 가진 단체가 육성되고, 기반과 매칭되어, 그 철학이 현장에서까지 연결되어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함(지원사업, 행정에 매몰되는 양상 지양)

- 예술가/단체가 장기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의 수준을 갖출 수 있음. 현장에 건강하고 신뢰감 있는 단체가 생겨나야 하고, 그들에 의해 현장인력이 연수/재교육되어야 함

- (전문인력-시설 간 풀 공유) 시설에서는 단체/예술교육자를 찾기 어렵고, 단체/예술교육자는 활동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정보 부족. 이를 연결할 수 있는 역할 또는 체계가 필요

※ 지원사업 구조개선을 통해, 특정 목적이 없어도 상호 매칭할 수 있는 유연화된 구조가 마련될 필요

(3)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범주, 지향점 논의

- (문화예술교육의 범주) 현장(시설)에서는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이 다소 구분되어 펼쳐지는 양상이 있음(문화교육도 예술을 연계해서 하고자 하는 수요 등). 다만, 이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고 무의미하나 예술교육(예술활동)에 방점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계획/비전(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과 같이, '예술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연결되고, 변화시킬 것인지 집중해야 함
- 변화한 현대예술 특성에 맞춰, 기능/장르 위주 탈피한 유연성과 창의성이 발휘되어야 함

(4) 문화예술교육사 관련 논의

- (인적기반 틀 안에서 교육사의 명확한 역할 정립) 전체 인적기반 틀 안에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상, 역할 등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교육사의 역할, 역량 등을 논의할 필요(현 상황상, 자격증 발급 확대나 무리한 1급 자격 발행 등은 신중히 접근)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문화기반시설의 상황

- 시설 여건상, 문화예술교육 담당만을 별도로 채용하기 어려워, 의무배치 여력이 되지 못함
- 교육사 인턴십 사업도 6개월 짧은 기간 내 업무숙지(문서작성 등) 소화도 어려운 상황
- 시설에 대한 이해 부족. 박물관의 경우, 학예사와 에듀케이터 인력이 이미 배치되어 있어, 문화예술교육사의 역할이 모호
- 기반시설에서 평생교육자격증, 청소년상담자격증 소지자 다수. 문화예술교육사는 필요성과 업무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모호하고 수요가 낮음. 현장의 어떤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근본적, 전반적 고민 필요

- (교육사 논의의 관점 재고) 교육사를 대상화함으로써, 문제시 접근 또는 가볍게 토론되는 것에 대해 신중할 필요. 지역별로의 교육사 비중/편차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

- (현장과의 괴리 문제 해결방안) 현재 교육사 자격이 부여되는 교육과정과, 문화예술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를 위해 필요한 연수과정(예. 예술체험, 창의적 활동 등)을 장기적으로 병행하여, 교육사의 역량수준을 끌어올릴 필요
 - ※ 현장에서는 예술교육가의 질적 관리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교육사 재교육 과정에 대한 고민 필요함(예술경험 뿐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 등)
- (사회 변화 요인에 따라 필요한 역할 부여) 재소자, 군장병, 장애, 노인 등 사회구성원이 다변화됨에도 불구하고, 대상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갖춘 예술교육자 부재. 추가 전문지식 습득을 통해 교육사가 하나의 전문 자격증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5) 문화예술교육 R&D 기반 관련 주요 의제(어젠다) 제안 및 논의

- (R&D 기반 현황과 이슈 공유) 문화예술교육 컨트롤 타워로서 R&D 기능 강화 추진 중. R&D기반을 연구, 콘텐츠 개발, 통계, 조사(평가) 범위로 설정하여 이슈 제안

- 연구 및 콘텐츠 개발 : 문화예술교육 정책 관련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의 역할 중첩 이슈. 현장에 필요한 콘텐츠 개발과 확산 방안이 필요한 상황
- 통계 및 조사 : 공급통계, 행정/조사통계로 구분하여 통계 체계화 작업 진행 중. 실시간 서비스되는 통계 보다는, 통계 체계화, 데이터의 정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
- 평가(조사) : 평가는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부분으로 필요. 사업별 통합 추진 이슈가 있으며, 평가 외에도 사업별로는 컨설팅 등 추진이 가능할 것. 또한 조사대상(장애인, 노인, 아동 등)을 고려한 설계와 방법론 필요
- 기타 : 예술강사 경력관리 시스템 등 이슈

5) 5차 회의

(1) 인적기반 관련 논의

① 인력양성의 대상 중 문화예술교육사 관련 사항 검토

- (문제점) 명확한 수요에 기반하지 않고, 자격제도가 신설된 점이 문제의 근원. 현장에서는 자격이 없어도 우수한 인력이 많음에 따라, 자격제도에 대한 신뢰도 저하 및 자격과 역량 사이의 갭 발생
 - ※ (유사사례 검토) 평생교육사와 청소년지도사 : 관련 시설을 설립할 때,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를 필수 배치하도록 정책적으로 설계되어있음
- (정책 방향) 인력양성에서 교육사를 주요한 대상으로 포함할지는 교육사 1급 자격제도와 연관되어있음(1급제도 운영 시 엄격한 역량강화제도 운영 필요). 다만, 현재 현장 상황과 여건을 고려, 2급 자격만을 유지하되, 질 관리, 일부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정책 사업 발굴(예 인턴십 제도) 등 정부의 적극적 노력 필요
 - ※ '18년 문화예술교육사'제도개선TF 운영'시 해당 내용 논의. 관련 자료 별도 공유 예정

- ▶ 문화예술교육사는 정책의 주요한 영역과 대상. 특히 데이터/증거 기반 정책 수행에 있어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예. 예술인복지재단 약 5만 명의 예술가(예술인증명) 데이터 보유)
- * 지역분권에 따른 향후 진흥원(중앙)의 중요한 역할은 예산확보, 정책수립 등. 이를 위해 교육사 정보 등을 통해, 데이터/증거기반 정책 수립이 중요

- (활동영역의 확장 관점으로 전환) 다양한 시설(평생교육, 사회복지 기관) 등으로, 문화예술교육사의 활동영역을 확장하는 관점으로 접근 필요. 더불어 다양한 시설 대상 교육사 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 * 자원지도 등 현장과 매개자를 연결할 수 있는 매칭시스템 마련도 필요
- (역량강화 인증제도 도입) 우수 프로그램/기관 인증제도 도입 등 민간과의 협업을 통한 교육사 역량

강화 방식 마련. 중앙에서는 연수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식보다 플랫폼,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필요

※ 연수: 무료교육 보다는 자부담 의지가 있어야 하며, 개별 '프로그램'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

☞ (정리) 교육사의 역량을 높이고 활동영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진흥원 역할 설계

② 전체 인력양성의 틀, 방향 관련 논의

- (연수 틀, 방향 제시) 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 인력이 갖춰야할 단계별 연수 프로그램(틀)과 가이드라인 제시 *문화예술교육 가치, 인재상, 인력양성 방향 등
- (참여자 중심의 연수 재구조화) 참여자 스스로가 목적에 따라 필요한 연수를 설계(러닝맵)하고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필요
- (민간 등 교육주체 다각화) 진흥원에서 공급하는 연수 방식이 아닌, 여러 민간전문 단체/프로그램과 연결할 필요

※ 민간 공모를 통한 추진 (파일럿 형태의 시범운영 추진할 필요)

- 진흥원 전체 연수프로그램 틀 안에서, 세부 프로그램은 민간 공모(또는 인증)를 통해 추진
 - 인증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상시화, 민간에서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권 부여
 - 결과적으로, 교육사와 민간/현장 생태계 모두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정책 구조
- ※ 예. '노인'에 특화된 대표적인 연수기관 등 전문적인 거점이 많아지는 구조
- ※ 차년도 파일럿 형태 시범운영 추진해볼 필요

☞ (정리) 문화예술교육사를 포함한 문화예술교육 인력 전반을 대상으로, 이들이 스스로 러닝맵을 형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설계 및 지원(진흥원 직접 추진, 기관 인증을 통한 추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

(2) R&D 기반 관련 논의

- (R&D 위원회 마련 필요) 현재 진흥원 다수 연구가 개별화, 파편화되어있는 구조. 보다 현장에 효용성 있는 R&D 생산을 위해, R&D 관련 전체방향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질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가 마련될 필요

'R&D 위원회' 역할 및 방향

- 현장의 요구, 내부의 수요 확인을 통해 R&D 의제를 셋팅할 필요. 위원회 위원이 심사와 연구 질관리 등 참여를 통해 일관된 방향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전체 큰 기초 하에,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창의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함

- (R&D 기능 재구조화) 학술적 연구보다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현장형 연구가 될 필요. 또한 진흥원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R&D 역할 중요(이슈화)

※ 아카데미한 연구보다는 현장에 필요한 R&D가 될 필요(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문화예술교육 이슈/트렌드 리포트(월별 또는 격주) 생산 등

- (내부역량 강화) 연구에 외부 자원 활용하기보다, 내부 연구역량 강화를 통해 역량과 경험을 축적할 필요(예.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 (정리) R&D 혁신과 구조개혁이 필요. 기획연구, 정책연구, 아카이빙 기반, 프로그램 개발 등 보다 기획/통합적으로 추진될 필요

6) 6차 회의

(1) 기반분과 의제 논의

- (이슈 명확화 필요) 그간 어젠다를 명확히 논의하기보다, 아르떼 아카데미, 교육사 등 전문인력 양성 방향 중심으로 논의 진행. 기반분과의 이슈와 포지셔닝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
- (추진단 및 분과 목적 명료화) 공론화 추진단과 분과의 목적에 따라 논의 방식 결정할 필요. 현재 목적에 대한 공통의 상이 부재함에 따른 혼선 존재
 - ※ 연역적 선포 없이, 분과별 논의 결과를 귀납적으로 정리하는 현 구조와 수준
- (지역변화 속 중앙/지역의 역할) 목표/방향을 새롭게 제시하기보다, 종합계획 등에서 제시된 정책방향을 어떻게 이행할지의 관점으로 논의 구체화할 필요. 이와 관련,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변화,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활성화 등이 고려된 “지역화”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기반에 대한 중앙/지역의 역할 제안(“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 인적기반 : 매개자(generalist)/전문가(specialist) DB화를 통해 광역/기초가 이를 활용, 조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 R&D기반 : 연구/콘텐츠 자료 DB화를 통해 현장/지역에 활용/유통 등 지식순환구조 마련할 필요. 평가체계 다룰 필요
 - ※ [참고] 전체 중앙/광역 역할 관련 지역화로드맵(지역분과) 보고서를 통해 정리 중이나, 인력양성 방안 등 각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과 역할을 포괄하지는 않음

발표문

문화예술교육 기반 정책 추진현황 및 주요 이슈

김자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장)

1. 도입

1) 대내외 요구

- (기관 역할 재정립) 지역 분권화에 따라 전 국민 대상 지원사업은 단계별로 지역 이관, 중앙은 정책 종합 컨트롤타워로 기관정체성 재정립 필요. 이를 위해 연구개발, 조사통계, 인력양성, 국제교류 등 기반조성 사업 강화 필요
- (기반 기능 고도화) 법령상 기반(연수, 연구, 국제, 홍보, 정보) 지원 기능을 기관의 핵심역할로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구성 취약 및 역할 미흡
※ 기반 분야 예산(80억, '19년) 전체의 6.3% / 독립 계정이 아닌 사업예산에 포함, 분산 운영

2) 고민과 과제

(1) (연구) 대내외적으로 요구받는 R&D 컨트롤 타워 기능,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 불안정한 예산구조 및 연구인력 부재로 내부역량 축적 한계 (*연간 30건 연구발주)
- 기관차원의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시급성, 중요성 등) 및 통합관리방안 마련
- 통계정보기반 정책 환류 및 발굴, 효과(양적, 질적) 분석 본격 추진
- 지역별(지역중심의) 사업평가 통한 전국 현황 분석, 정책사업단위 관리 체계화
- 이슈·문제·도전과제의 담론화 - 대응·대안제시를 위한 실행방안 마련

(2) (연수) 15년간의 전문인력 연수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 '20년 전문인력 양성 예산(19억) 신규확보, 미래적·종합적 추진계획 마련
-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 맥락에서 진흥원 연수의 역할 설정
- 정책사업 현장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연수로서의 기능
- 진흥원(중앙) 추진 연수의 공신력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연수의 핵심요소(대상자, 커리큘럼, 운영방식) 설계
- 협력적 연수 운영구조 마련

2. 문화예술교육 연구

1) '05년~'18년 추진현황 (연평균 약 30건)



2) 연도별 특성

시기	주요 정책 이슈	시기별 연구사업 특성
2005	법령 제정, 진흥원 설립	→ 정책 수립 정책 기본방향 설정
2006	사회 문화예술교육 본격화	→ 정책대상별 콘텐츠 개발
2007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06년), 아카데미 시범사업 시작('07년)	→ 교육콘텐츠 확보 인력양성체계/연수 구체화
2008	유아 등 문화예술교육 대상 확대	→ 대상별 콘텐츠 다각화
2009	교육개발팀 신설, 연수 브랜드화(CETA), 정책성과 점검 필요(정책추진 5년)	→ 사업결과 중간점검 기초연구 확대, 연수교재 개발 증가, 사업/성과평가 연구 확대
2010	다문화사업 신설, 교육부 창의교육센터 설치('10.9)	→ 신규사업 발굴 및 교육내용 구조화 다문화, 창의교육 관련 연구, 학교문화예술 교육표준 개발
2011		
2012	문화예술교육 효과 검증 필요성 증대	→ 사업결과 가시화 효과분석 연구 확대
2013		
2014	문화예술교육 제도운영('13년~), 기초자료 체계화 필요성	→ 신규 제도 및 기반자료 구축 교육사 제도 관련 연구, 학교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2015	정책추진 10주년	→ 10년 점검 및 향후 방향 중장기 사업전략 연구
2016	제도개선 이슈(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개별 사업 개선 등) 및 데이터 축적 필요성 제기	→ 제도 개선 및 체계화 사업별 개선방안 연구, 성과 연구 및 다년 지속 연구
2017~18	지역분권, 진흥원의 역할, 종합계획 수립('18~22), 4차 산업혁명	→ 평가, 통계, 콘텐츠 개발 평가 및 통계 체계 구축, 기관협력 콘텐츠 개발

3) 2020년 주요방향

(1) 문화예술교육 정책·연구·조사의 종합 플랫폼 역할 수행

-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이슈, 문제, 현안에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 월간 이슈분석-콜로кви엄-포럼 등 정책 시리즈로 담론화, 심화발전, 대안제시
- 지역센터/유관학회/예술단체·전문가·대학/유관기관 등과 협력 강화

(2) 문화예술교육 통계정보 및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법 제 도	조사통계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실태조사/통계조사 근거 명시)			
	행정자료	• 행정자료(단체/시설/강사/참여자/예산/프로그램) 산출양식 취합 • 문화예술교육 통계수집용 〈개인정보동의서〉 작성·배포					
통계 수집 생산 조사	행정자료	진흥원 사업(일부)		진흥원 사업(확대)			
		-		지역센터(지자체보조) 지원사업			
	조사 통계	공급	• 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계속)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계속)				
		-	단체 실태조사 (진흥원)	단체 실태조사 (지역)	단체 실태조사 (진흥원+지역)		
		수요	(학생/학부모)수요조사	• 국민 문화예술교육 실태(인식/이용) 조사			
국민 수요조사							
분석 활용	가공 통계	종합	-	• 행정통계/조사통계 기반 심층분석 및 해설 • 문화예술교육 유관기관 행정자료(공급/수요) 수록			
제 공	통계 정보 서비 스	오프 라인	• 문화예술교육 통계연감 발간(종합) • 사업별 실태조사 보고서				
		통계 정보 시스 템	-	• 아르떼 라이브러리_(문화예술교육 통계) 신설 - 분야별/연도별/지역별 통계정보 제공			
			-	• 문화예술교육지원지도_(문화예술교육 통계정보) 신설 - 문화예술교육 정보(학교/단체/시설/프로그램) 제공			
			-	-	통계정보화 계획 수립 (ISP)	온라인 조사통계 정보시스템 구축	
			통계정보 DB화		통계정보 DB화+메타데이터 입력		

(3) 고민과 질문

- 문화예술교육 R&D란 무엇인가
- 진흥원은 무엇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연구해야 하는가
- 중앙과 지역이 각각 어떤 영역과 수준으로 역할분담을 해야할 것인가
- 연구기획-결과활용에 연계협력을 강화하려면 어떤 설계가 필요한가

3.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연수

1) '05년~'19년 추진현황 (연평균 약 4,000여명 대상 120개 과정 운영)

'05년 ~ '10년	다양한 인력양성 시범 사업 및 아카데미 CETA 추진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인력 양성 사업 추진 및 아카데미 시범사업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기반시설 전문인력 양성('07~'10), 예술영재 교육인력 양성('07~'08), 문화예술 희소인력 양성('07~'08), 다문화 교육인력 양성('08~'11),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07~'11) - 예술강사 러닝코치(LC)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핵심인력 개발 사업 추진 - 온라인 아카데미 및 LMS 구축 등 시범 추진('07~'08) • 연수대상 확대, 대상별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연구(핵심역량 모델링 등)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박물관미술관 교육인력, 기관단체 실무자, 중소기업 CEO, 공무원 등 대상별 연수 확대 • 학교·사회 예술강사 등 사업 연계 연수 운영('09 하반기부터 사업팀에서 연수사업 이관) 	
↓	
'11년 ~ '14년	예술강사 연수 확대 및 아르떼 아카데미(AA) 브랜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강사 급증으로 기관 내 연수 전담부서 역할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다문화교육인력 양성사업 등 인력양성 사업 일몰(~'11) - 방학기간 대규모 연수 추진을 위한 매뉴얼·규정 제작, 모둠화(18H, 25명) 등 운영 체계화 • 아르떼 아카데미(AA) 체계 구축 및 관련 연구 추진(연수프로그램 개발, 체계화 연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별(예술강사, 행정인력 등) 연수, 아르떼 강사 연수, 학습공동체 아르떼동아리(CoP) 운영 등 	
↓	
'15년 ~ '17년	연구 기반 집중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질 제고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장르별 장시간 집중 연수프로그램 신규 개발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CP 우수교육프로그램 수료과정 신설(음악, 연극, 디자인, 무용, 미술/'16~'17) • (해외 전문가 연계 연수 개설) 해외 기관(단체)의 전문가 연수프로그램 연계 추진 • (교원 연수 확대 개설)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 종합교육연수원 인가 준비 	
↓	
'18년~ '19년	운영 방식 다각화 및 전문 연수원 확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효율적 연수 제공을 위한 전문연수원 설립 기반 마련(기본구상, 타당성조사연구) • 지역센터 협력 연수 시도, 중앙-지역 간 전문인력 양성 연수 역할 재정립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학기간 집체 연수 형식 탈피를 위해 지역 유희공간 활용 및 지역 탐방 연수 확대 등 • 사회문화적 환경 대비 및 정책흐름을 반영한 신규 연수콘텐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혁명 기술 융합 연수프로그램 신규 개발, 온라인 연수콘텐츠 개발(4종) • 연수 단독예산 확보 및 교육부 종합교육연수원 인가 	

2) 성과와 한계

(1) (성과) 예술강사 등 문화예술교육 인적 자원 양성 및 현장 질 제고에 기여

- 지난 13년간 약 10만여 명의 문화예술교육 연수를 통해 현장 전문인력 배출
- 문화예술교육 현장으로의 선순환 및 다양한 인력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
 - ※ 연수 참여 후 예술단체 설립 또는 후속 모임(교육개발, 예술창작) 형성 사례 다수 발생
- 만족도 높은 연수프로그램과 전문가풀 보유, 대규모 연수 운영체계를 갖추
 - ※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370여명 전문가 참여(신규 전문가 220여명), '18년 만족도 평균 87.7점

(2) (한계) 중앙기관으로서 핵심 연수대상 및 방향이 불분명, 체계화 미흡

- 대규모 연수 효율화를 위해 연수 장소·방식을 통제,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

- 백화점식 강의개설 등 한계 극복, 중앙기관으로서 전문인력 양성 방향을 담은 중장기 전략 마련 필요

3) 2020년 연수 체계화 10대 과제

- ① 연수의 기본 방향 정립
- ② 연수 용어 정립
- ③ 연수 교육과정 체계화
- ④ 연수 기획-운영-평가-재운영 체계 정립
- ⑤ 연간 연수 운영 체계 정립
- ⑥ 온라인 연수 확대 준비
- ⑦ 연수 홍보
- ⑧ 민원 통합 관리 및 감소 방안 마련
- ⑨ 새로운 HRD 시스템 개선 필요
- ⑩ 연수 규정 재정립 및 규칙화

4) 고민과 질문

- 어떤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는가, 양성할 수 있는가
- 전문인력 유형별/경력별 필요로 하는 양성과 지원방안이 있는가
- 지역 분권화 기조에 따른 중앙 연수의 핵심 기능은 무엇인가
- 무엇을 연수의 성과로 볼 것인가

발제문

R&D 기반 공론화 의제-동반성장형 R&D 시스템 구축·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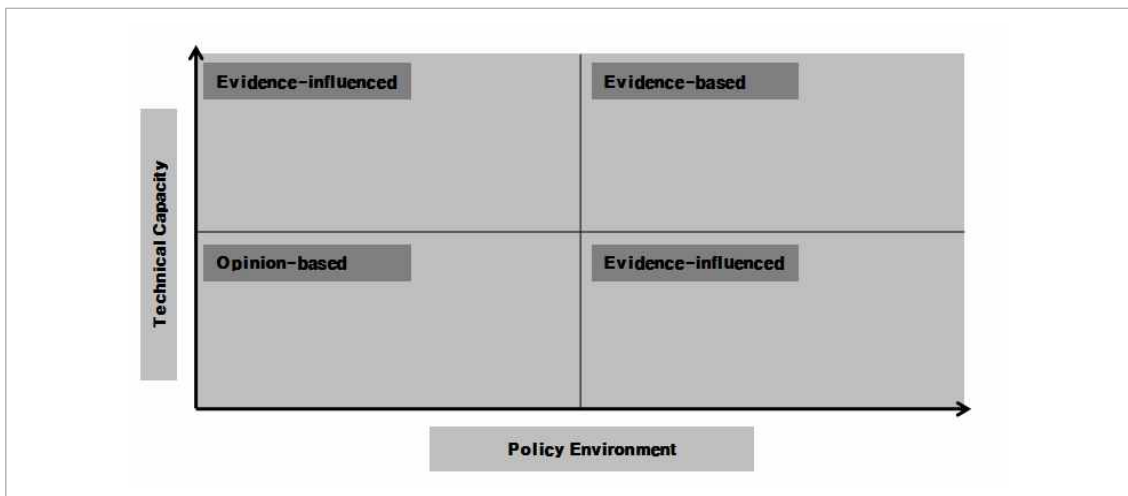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

1. 문화예술교육 연구와 통계의 중요성

1) 정책 수립의 유형

- opinion-based decision making
- evidence-influenced decision making
- evidence-based decision making

〈그림 1〉 정책 수립의 유형



2) 선진국형 정책 수립

- 국가의 의사결정과정의 의견기반정책(opinion-based policy)에서 증거영향정책(evidence-influenced policy)으로, 궁극적으로는 증거기반정책(evidence-based policy)로 발전할 때, 정책(사업)품질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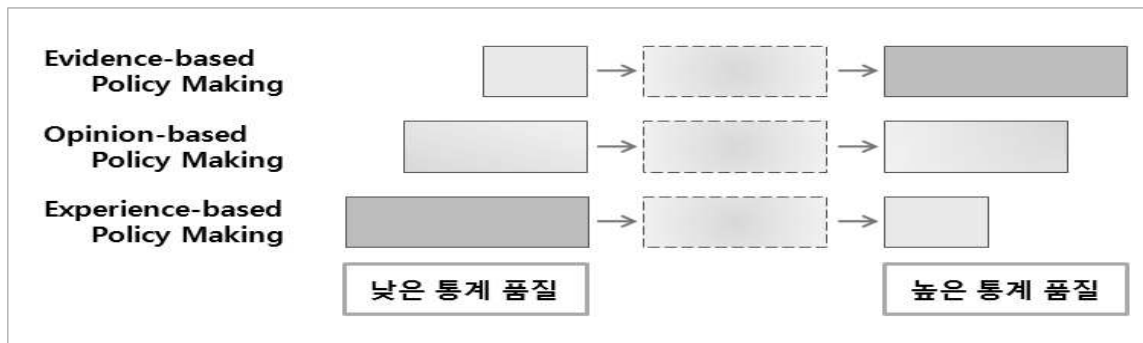
3) 증거기반 정책(사업)의 기초는 연구와 통계

- 연구는 어떤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는 탐구활동으로 연구를 통해 대상의 참된 본질과 의미가 드러나고 이해됨
- 연구(research)는 search한 내용(데이터)을 깊이 있게 탐구하여(re-search) 그 뜻을 밝히는 활동으로, 데이터는 연구의 기초자료임

4) 연구와 통계는 선진국형 정책(사업) 수립의 기초

- 데이터에 기초한 연구가 과학적이고-합리적인 연구
- 데이터에 기초한 정책이 과학적이고-합리적인 정책
- 경험기반 정책결정(experience based policy making)이나 의견기반 정책 결정(opinion based policy making) 보다 증거기반 정책결정(evidence-based policy making)이 훨씬 높은 설득력을 갖게 됨
- 연구와 통계의 품질이 정책(사업)의 품질을 좌우

〈그림 2〉 통계 품질과 정책(사업) 결정 수준



2. 문화예술교육 연구의 방향성

1) 문화예술교육 연구의 현 상태(as-is)

(1) 연구 유형 : 정책사업연구

- 실태 분석 연구
- 교육과정 개발 연구
-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성과(효과)분석 연구
- 만족도 연구
- 개선 방안 연구

(2) 연구 주체

- 외부 전문가

(3) 연구결과 활용

-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의 질 개선

3) 문화예술교육 연구의 방향성(to-be)

(1) 목적

-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의 질 제고
-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 어젠다 발굴
- 문화예술교육 정책 어젠다 발굴

(2) 유형

- 정책사업 연구(기존과 동일)
- 정책사업 기획 연구 : 정책사업 어젠다 발굴
- 정책연구 : 정책 어젠다 발굴

(3) 미래 방향성

〈표 1〉 문화예술교육 연구의 방향성

	as-is	to-be
목적	-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의 질 제고	-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의 질 제고 -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 어젠다 발굴 - 문화예술교육정책 어젠다 발굴
유형	- 정책사업 분석연구	- 정책사업 연구 - 정책사업 기획연구 (사업어젠다 발굴) - 정책연구 (정책어젠다 발굴)

3. 문화예술교육 통계의 방향성

1) 문화예술교육 통계의 현 상태(as-is)

(1) 통계 유형

- 학교문화예술교육통계 : 공급통계, 수요통계
- 사회문화예술교육통계 : 공급통계, 수요 통계
- 문화예술교육 행정통계 : 정책사업 관련 통계, 진흥원 내부 자료 중심

(2) 통계 생산 주체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외부 통계 활용

(3) 통계결과 활용

- 문화예술교육 실태 파악
-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의 질 개선

2) 문화예술교육 통계의 방향성(to-be)

(1) 목적

- 문화예술교육 실태 파악
- 문화예술교육이 가야할 방향 제시

(2) 미래 방향성

〈표 2〉 문화예술교육 통계의 방향성

	as-is	to-be
data colle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문화예술교육통계 - 사회문화예술교육통계 - 행정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체계화 - micro data - small data - big data
data analysis	- 기초통계 분석 (외부전문가)	- 내부 분석 역량 강화
data service	- 데이터 제공(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면적 서비스 (온/오프라인/모바일 등) - 정책(사업)활용 제고

4. 문화예술교육 연구/통계 공론화 의제

1) 문화예술교육 연구 기능 강화

(1) 제안 내용 : 진흥원의 연구 기능 강화

- 증거기반 연구 강화
- 정책연구, 정책사업 기획연구, 콘텐츠 개발(현장형 콘텐츠) 연구 강화
- 정책사업 품질관리(Quality Control) 및 평가 강화
- 연구 전문인력 보강

(2) 제안 사유

- 진흥원 사업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증거기반 연구 수요 증대
- 진흥원의 씽크탱크 기능 강화

2) 문화예술교육 연구기획위원회 구성/운영

(1) 제안 내용 : 진흥원 내에 연구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기능 : 기획연구 발굴 지원, 정책연구 발굴 지원
- 구성 : 진흥원, 지역센터, 대학, 교육원, 민간단체 전문가

(2) 제안 사유

- 연구기획 기능을 강화하여 증거기반 정책 및 사업 개발

3) 문화예술교육 통계 기능 강화

(1) 제안 내용 : 진흥원 통계 기능 강화

- 통계조사, 분석, 서비스 기능 강화
- 통계분석팀 설치
- 통계 전문인력 확보

(2) 제안 사유

- 증거 기반 정책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 확보

4) 동반성장형 R&D 시스템 구축

(1) 지역 문화예술교육센터와의 협력

- 분산형-네트워크형 연구시스템 구축·운영 (공동연구)
- 분산형-네트워크형 통계시스템 구축·운영 (공동조사)
- 분산형-네트워크형 평가시스템 개발 (공통지표, 특수지표)

(2) 문화예술교육 주체들과의 협력

- 문화예술교육원, 대학,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단체
- 네트워크형 연구/통계 시스템

〈협력연구 예시〉

- 내부(진흥원)와 외부(전문가)의 협력
- 중앙(진흥원)과 지방(지역센터)의 협력
- 연구자와 현장전문가(문화예술교육 실행자)의 협력

5) 지역 문화예술교육센터의 기능 보강

(1) 인력 보강

- 연구지원 인력
- 통계지원 인력

(2) 예산 지원

- 인건비
- 사업비(연구 및 통계)

〈참고자료〉 통일부 지역통일교육센터

-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매년 예산 확보
-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원 (인건비 + 사업비)

6) 문화예술교육지원법(시행령) 보완

(1) 제안 내용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일부 조항 보완

- 연구 및 통계 기능 보완

(2) 제안 사유

- 진흥원의 연구, 통계 기능 보완을 위해 법적 기반 마련

“따뜻한 마음으로 수행하는 문화예술교육 활동,
냉철한 머리로 수행하는 문화예술교육 연구와 통계를 지향하며…”

발제문

문화예술교육 R&D기반 이슈

안성아 (추계예술대학교 영상비즈니스과 교수)

1. R&D 플랫폼의 핵심요소

1) 아르떼의 위상 변화

- 지역문화예술 분권화, 교육부의 학교예술교육 계획 발표,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이슈 등 환경변화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정체성 및 역할 재정립 요구
- 문화예술교육사업 컨트롤타워로서의 아르떼 위상을 위해 R&D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20년 주요방향을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 조사의 종합 플랫폼 역할로 설정함

2) 플랫폼의 핵심 요소

- ‘플랫폼(Platform)’이란 참여자 간 연결(connect)을 위한 장으로, 연결을 통해 가치(value)를 창출함 (예)에어비앤비, 카카오택시, 네이버, 공공플랫폼(문화N티켓, 문화포털)
- R&D 플랫폼이 된다는 것은 R&D 결과물을 매개로 문화예술교육사업 참여자 연결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가치를 제공함을 의미 (예)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 R&D 영역: 통계, 조사, 연구, 교육콘텐츠 등

2. R&D 플랫폼의 동력

1) 문화예술교육 R&D 결과물은 누가 원하는가?

(1) 사업대상²⁴⁾

- 직접매개그룹 : 예술강사, 교육기획자
- 협력그룹 : 정책/학교/지역/문화기반시설/기업
- 잠재인력그룹 : 반인, 학부모, 예비교육인력, 기업교육담당

(2) R&D 결과물에 가치를 크게 인식하는 대상일수록 플랫폼 참여 가능성 높아짐

2) 문화예술교육 플랫폼의 R&D 결과물을 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플랫폼 참여로 인한 혜택이 주어지는가?
- 참여자들 간 연결에 의한 가치를 제공하는 기획이 함께 설계될수록 플랫폼 기능은 강화됨
예) 교육콘텐츠와 관련된 문화예술교육 사업 개발, 지역사업과 연계

24)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4), 2014 예술강사 역량 기반 교육과정

3. R&D 영역별 방향성

1) 연구(Research) : 정책지향 vs 사업지향

- 정책지향 연구보다 '사업지향 연구' 제안 예. 지역 연계 신사업 연구, 사업 운영 및 평가 연구
- 기대효과 : 시기별 필요한 연구로 1차자료(연구물, 통계) 생성, 증거기반 정책 수립 지원
- 운영 : 연구관리 전문인력 + C&D(Connect & Development) 모델
 -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 풀(pool) 관리 필요성

2) 교육콘텐츠 개발 : 연수용 + 현장용

- 현장 적용 가능한 교육콘텐츠부터 혁신적이고 수준 높은 연수프로그램(예. 통합예술교육, 미적체험)까지 단계별 교육콘텐츠 개발 제안
- 기대효과: 직접매개그룹의 필요 충족 및 예술강사와 예술교육의 질 향상 효과 기대
 - 연수프로그램은 혁신적 교육콘텐츠의 테스트베드 기능, 호응이 좋은 콘텐츠는 현장 보급용으로 재개발 등 연수체계와 교육현장 간 선순환 고리 구축
- 운영: 콘텐츠 관리 전문인력 + C&D(Connect & Development) 모델

3) 통계 및 조사 : 통계생성 vs 체계화

- 행정통계의 객관성 확보 : 지속성, 객관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우선
 - 사업별 행정통계 통합 시스템 구축 (예)문화예술교육 사업 규모 통계 추출
 - 관련 법적, 제도적 체계 구축 (예)지역통계 유입 관련 평생교육법
- 조사통계의 관리통계 선별 및 신뢰도 제고 (예) 문화예술교육효과, 문화예술실태조사
 - 예술교육 조사통계 한계 : 양적 효과 측정 한계, 적은 시계열적 변화, 조사신뢰성 문제 예) 장애인, 노인, 아동 만족도 조사, 문체부 직접 발주 계획(2020)으로 지속성 문제
 - 지속성, 신뢰성, 의미성 있는 통계 선별 및 서비스(일시적 필요한 통계는 연구로 생성)
- 운영 : 사업별 관리(사업전문성) vs 통합적 관리(통계전문성, 조직 유연성 필수)

발제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반정책-인적자원 관련 공론화 의제

김정이 (비커밍컬렉티브 대표)

"사물에는 일종의 질서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고, 그 전체 질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

아주 작은 변화이지만 그게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어.

조직적이어야 한다고 항상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능사는 아니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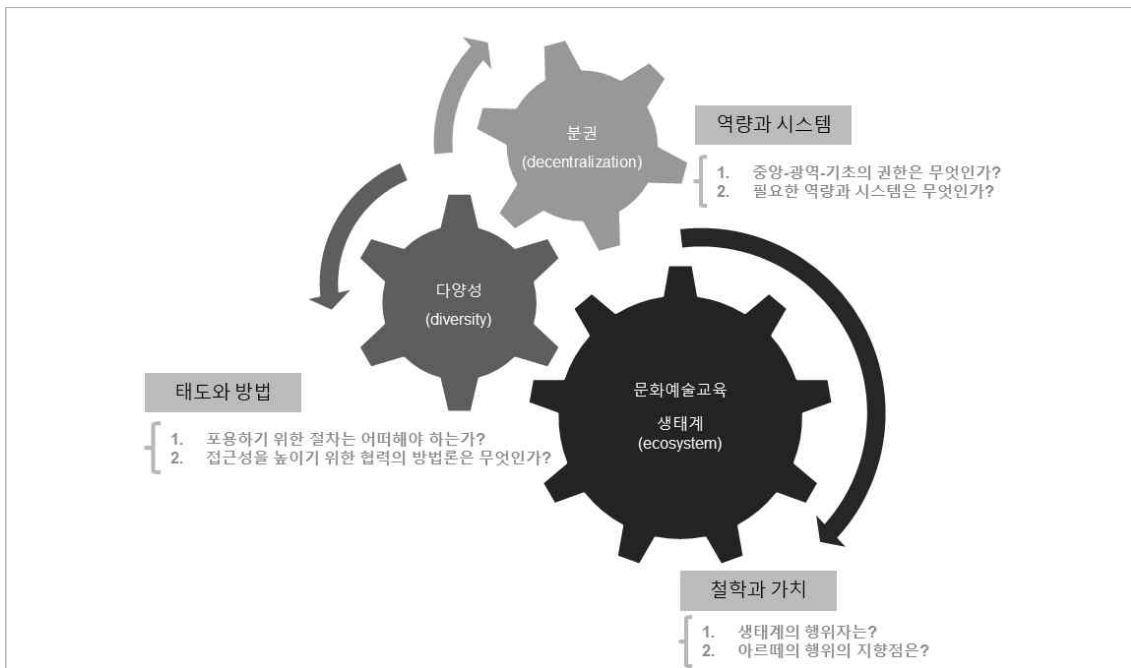
지금 우리가 했던 걸 보면 반복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렇게 훌륭하고 괜찮은 디자인이 가능하단 말이지.

다만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데는 일종의 질서 있는 언어가 필요해"

- 전문가의 조건 : 기술적 숙련가에서 성찰적 실천가로(도날드 쉰)

1. 의제의 메타 어젠다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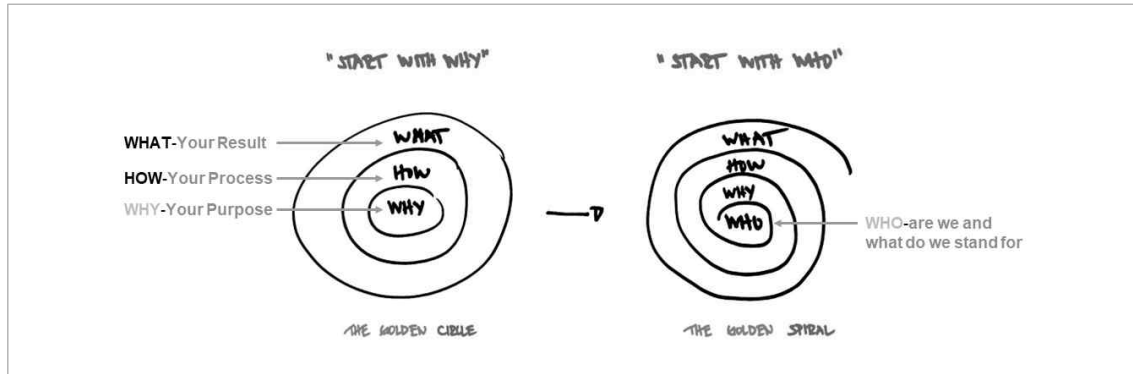


- 생태계 중심 역할로 전환을 상징할 때 ① 문화예술교육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행위자(사람, 사물, 기술 등)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 ②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행위란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 철학과 가치
- 생태계 어젠다는 '다양성'에 대한 철학을 전제로 한다. ① '다양성'에 대한 접근방법은 포용(inclusive)의 태도를 전제로 한다. ② '접근성(accessibility)'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협력의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다. →

태도와 방법

- ‘다양성’을 통해 구현된 것들은 ‘분권’이란 힘으로 귀결된다. ① 분권은 권한이양(empowerment)의 구체성을 필요로 한다. 중앙-광역-기초 각각의 권한은 무엇이고, ②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역량’과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 실천(실행)

2. HRD 방향과 질문



- HRD 정책 추진시 ‘대상화에서 당사자성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 ① 우리는 누구이며, 어떤 가치를 표방하는가?
 - ② 우리는 왜 존재하며,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 ③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함께 어떻게 일할 것인가?
 - ④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3. HRD 시스템

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예술교육철학과 가치 생산

- 주기적 문화예술교육 어젠다 설정 → 해당 언어와 개념 규정
- 기능(기예) 중심 장르형 예술교육에서 경험제공형 문화예술교육에 이르는 다양성을 채택한 프로그램의 생태계 제시 → 활동의 맵핑
- 분석과 데이터에 기반한 자원(예산)의 분배 전략 수립 → 생태계 구조 파악
- 아르떼 HRD센터
 - 광역-기초 퍼실리테이터(강사의 강사) 그룹 Learning system 운영
 - 주기적 문화예술교육 어젠다와 연계된 문화예술교육 실행전략 구축 → 커리큘럼 개발-방법론 제시-열린 교안 제작 등
 - 인력양성 파트너 기관 공모 및 지정(대학, 인력양성 기관 및 단체 등)
 - 경력개발(CD) 진단 매트릭스 제작 및 운영 - 교육이수인력양성 파트너 기관 공모 및 지정(대학, 인력양성 기관 및 단체 등) - 전체 시스템 흐름에 대한 감독

〈그림〉 경력개발의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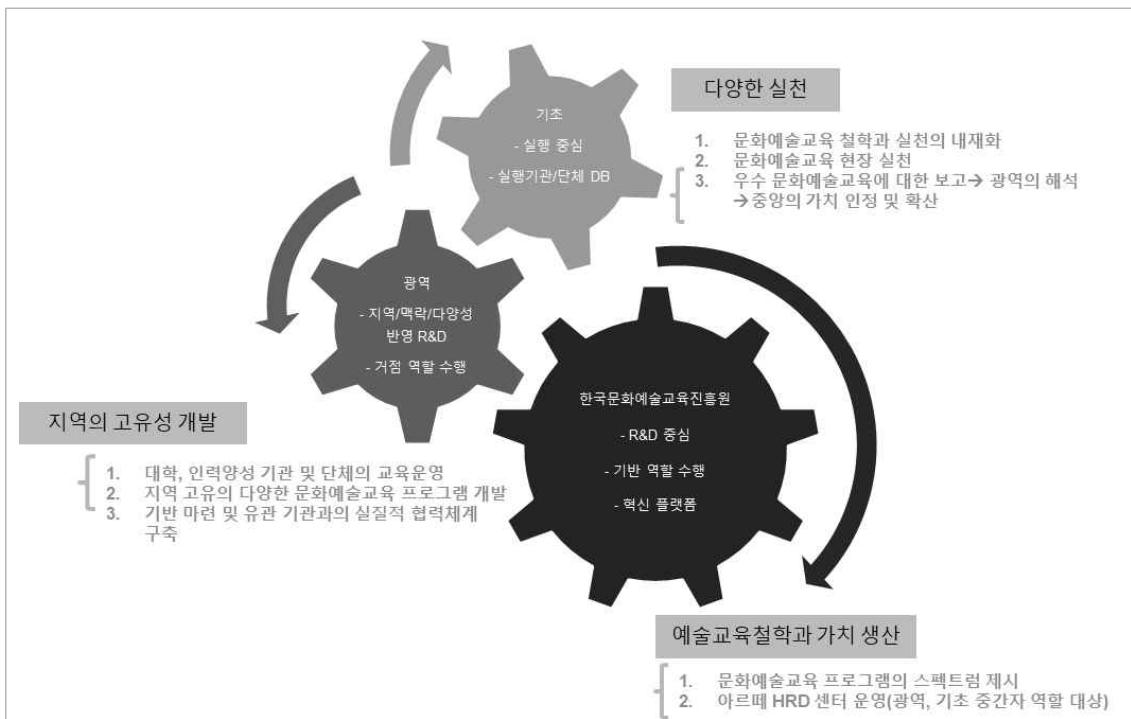


2) 광역

- 대학, 인력양성 기관 및 단체의 교육운영
- 지역 고유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 기반 마련 및 유관 기관과의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

3) 기초

- 문화예술교육 철학과 실천의 개별화, 내재화
- 문화예술교육 현장 실천
- 우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보고 → 광역의 해석 및 인정 → 중앙의 가치 확인 및 확산



4. HRD 운영 방안 예시

내용	As is	To be
연수 프로그램	아르떼 기획 및 실행	<p>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에 필요한 카테고리 설정 (새로운 예술 교육콘텐츠 제작방법론, 예술적 리서치 방법론, 미적체험 등) → 인력양성 기관 및 단체 공모 → 커리큘럼 및 운영 역량 평가 및 선정 → 인증(해당프로그램 신청과 경력개발 연동 통합 플랫폼 운영) → 실행 → 평가 및 브랜드화 ※ 권역별 정기 운영기관 회의</p> <div><div>As is</div><div>To be</div><div></div></div>
평가	만족도 평가	<p>현업적용도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교육훈련은 단순히 교육훈련 활동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교육훈련을 통해 도출된 결과에 초점을 두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훈련의 평가 역시 단순 지식, 기술 역량의 개인적 강화보다는 실제 업무와 연계된 변화된 행동에 대한 것을 포괄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 기술, 태도를 실제 직무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과정 또는 적용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현업적용도 평가라고 함.

<u>단계</u>	<u>준거</u>	<u>사용용어</u>	<u>초점</u>	<u>질문의예</u>
Level 4	결과(Results)	경영성과	교육 참가자에 의해 얻게 된 성과	비용감소, 품질개선, 양적 증가의 관점에서 확인 가능한 성과는 무엇인가?
Level 3	행동(Behavior) 현업적용도(Learning Transfer)	현업적용도	학습한 내용의 현업적용	교육에서 학습한 내용을 직무상황에 적용하고 있는가?
Level 2	학습(Learning)	학습성취도	지식, 기술, 태도, 행동의 습득	원리, 요소, 기법들을 기억/이해하였는가?
Level 1	반응(Reaction)	만족도	교육 참가자의 만족	교육참가자는 프로그램에 만족하였는가?

공모사업설계	아르떼 기획-전달 ※ 의견기반 정책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기획단계(전문가, 현장담당자, 대상자-서비스 디자인)2. 설계(사업제목, 대상, 내용 등 언어와 개념에 대한 철학, 가치, 방향 제시)3. 설명(페르소나 대입 발생할 다양한 사례에 대한 구체적 제시 및 상시적 의견수렴 채널 제시)4. 정기적 사업단위별 운영위(현장 문의에 대한 피드백 내용 협의 및 실행)5. 사업에 대한 리뷰 및 분석, 홍보와 연계 <p>※ 증거기반 정책</p>
--------	------------------------------	---

발제문

문화예술교육 지역화에 따른 인적기반(전문인력양성) 이슈

홍기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1) 선행연구들이 집중하는 부분은 ‘어떻게’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양성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의 문제는 문화예술교육이 ‘무엇인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그 내용적 측면을 규정하지 않고서는 인력양성을 어떻게 설계할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

- 중앙단위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가 무엇인지 공유되고 있지도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질 혼란
- 문화예술교육을 서로 달리 정의하는 기득권 집단들의 대표성 문제 (거버넌스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음)

2)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내재된 ‘문화예술교육’ 개념의 모호성이 지역문화예술교육 관련 조례가 제정될 때나 지역문화진흥법상의 ‘지역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게 될 경우에 그대로 투영되어 일으킬 수 있는 혼란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3)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이것이 지역차원에서는 어떤 의미와 영향을 미치는가

- 지역문화진흥과 관련된 지역의 문화기획 전문가와 문화예술교육기획 전문가는 어떻게 다르며 양성 목적에서 정체성이나 역량에서의 구분이 가능한가?
-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프로그램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가?

4) 문화예술교육이 지양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교육프로그램을 표준화하는 것인데 전문인력양성이 기계적인 시스템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무엇이고 그것이 지역차원에서도 충족이 될 수 있는 여건인가를 살펴야 할 것

5) 예술정책의 중앙에서 파편화된 현상(ARKO, ARTE, 예술인복지재단 등)이 지방에서는 복제되지 않고 연결성을 갖는 가운데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특히 예술전공자인 예술강사)의 양성이 될 수 없는가를 고민해 볼 수는 없을지.

토론문

강승진 (춘천문화재단 정책기획팀 팀장)

1.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기반영역의 이슈변화 및 미래적 수요

- 지역이 스스로 문화예술교육의 활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 활동주체, 지원조직, 시민수요, 정치적 계기 등 어느 하나라도 강력하게 작동하는 힘이 있어야 가능
- 지금까지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은 대부분 활동 주체들이 중앙의 지원정책과 예산공급 등을 통해 중앙 종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지역에서는 예산이 확보되고 활동이 진행된다면 그저 좋은 정도로 인식
- 문화예술교육단체와 강사들은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재단 또는 지원조직의 담당자는 활동과 역할의 확장을 위해서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관심은 무관심이 대부분이었음
- 그런 면에서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은 중앙의 이슈가 있더라도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음. 예술강사의 문제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중앙과 광역) 이야기이며 문화예술교육 활동주체들도 기초단위의 지역에서 특정한 요구나 욕구를 들어내는 데 한계가 있음
- 그럼에도 최근 의미있는 지점은 지역이 스스로 조례 등을 만들어 지역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정책 마련과 활동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믿고 싶음
- 기초단위에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조례는 현재 광명, 구리, 성남, 목포, 창원, 춘천 등 5개 지자체, 그중 광명은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조례임

구분	주요내용	조례제정
광명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	2013. 10. 08 [제정] 2016. 12. 20 [개정] 2019. 11. 15 [개정]
구리	문화예술교육 활동, 인력, 센터 운영	2019. 07. 05 [제정]
성남	문화예술교육 활동, 인력, 센터 운영	2016. 06. 20 [제정]
목포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 인력	2017. 04. 10 [제정]
창원	문화예술교육 활동, 인력, 센터 운영	2017. 09. 29 [제정]
춘천	문화예술교육 활동, 인력, 센터 운영	2018. 11. 30 [제정]

- 그간 문화예술교육 활동 주체들의 성과가 기본이겠지만 정치적 이슈(선거공약)와 중앙이 공급하는 사업 유치와 예산확보 등이 작동하는 경우로 보이는 부분도 있음. 결론적으로 어떤 계기가 조례 제정과 개정의 직접적인 사유였는지를 살펴보면 지역의 문화예술교육기반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와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됨
- 그럼에도 최근 춘천처럼 선거공약으로 문화예술교육이 특화된 사례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음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조성부지 확보, 2019년 춘천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 2020년 문화예술교육 활동지원과 전문인력양성, 기초 센터 설립준비 등 총 14억 7천만원 문화재단 예산확보)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의 미래 수요를 자극하는 중앙단위의 메시지와 동기유발책 필요

2.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생태계의 다양화

- 현장의 공급자 또는 지원기관은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기획, 함께할 수 있는 예술가를 찾고 목말라 있지만, 그 대상들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대부분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업들이 목표와 목적, 수량에 맞춘 중앙공급망에 동원되고 소모되는 형국
-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지향점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매개자들은 모두 사라져가고, 다른 활동들을 이어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문화예술교육 사업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강사, 방과후활동강사, 학원강사, 생활문화로 대표되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들의 활동을 이끌고 있는 리더그룹들이 신규 활동처로 문화예술교육시장으로 이동해 오며 문화예술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이끌고 있음. 그러나 지역에서 이들은 지역의 좁은 관계망에 기생하고 있고, 민감한 민원집단들로 이들의 활동을 통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님
- 이 또한 지역문화예술생태계의 흐름이라 생각한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좀 더 전문영역의 역량을 개발해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이며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시민들의 욕구를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 설계능력과 활동영역의 개척이 지원조직의 역할로 이해됨
- 생태계의 다양성은 역량있는 사람의 다양성으로부터 확보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며, 더불어 떠나간 예술가들과 역량있는 예술강사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동기부여 정책이 필요하며 예술가들의 창작과 영감 등을 불러 일으킬만한 계기와 소재들을 잘 버무리는게 중요하다 여겨짐

3. 춘천의 이야기로 살펴보는 중앙과 광역, 기초의 역할

- 어떤 이슈로든 무언가를 도모해 가는 지역의 입장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작년 한해 1인1예술교육 진행 시 지역의 입장에서 중앙과 광역단위에서 지원받은 것은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남아 있는 춘천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활동을 수행한 단체, 강사 현황자료가 유일함
- 주요 파트너였던 교육청과 학교교사들은 문화예술교육의 중요한 기초와 흐름을 알고 있으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방과후활동’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음
- 결론적으로 작년의 활동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확장하는 데 있어 지역과 현장의 상황은 각자도생하는 구조를 벗어나기에는 어려운 상태임
- 그런 면에서 중앙, 광역, 기초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중앙은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보편적 가치와 타당성,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노력들을, 광역은 기초단위와 현장의 주체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역량을 강화해 갈 수 있는 작업 등을 진행해 주기를 기대함

토론문

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토론을 위한 질문 몇 가지

우리는 어떤 ‘인간상’을 갖고 있는가 또는 ‘기대’하고 있는가? 기대라는 것은 우리의 인식수준과 시대의 반영일 수 있는데, 당대의 합의된 기준은 있는가 혹은 기준이 필요한가?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에 대해 우리가 ‘상상’ 또는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대’와 ‘상상’을 위한 관점의 정립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양성 또는 양산하는 ‘전문’인력은 어떤 점에서, 무엇에 대한 ‘전문’인력인가? 15년 동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양성하고자 했던 인력은 무엇을 위한 인력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성과(performance)를 기대하였고 또 결과로 나타났는가?

“나는 20세기를 인간을 불구화하는 전문가 시대라고 명명할 것을 제안한다… (중략) 따라서 전문가의 전지전능이라는 환상을 사회가 계속 용인한다면… 특정한 정치적 신념들을 강요받거나… 본질상 단명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것이 또다시 역사에 출현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이 시대에 누가 누구로부터 무엇을 왜 얻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전문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반 일리치, 『우리를 불구로 만드는 전문가들』, 『전문가들의 사회』, 사월의 책, 2015)

그동안 문화예술교육은 ‘배움’을 강요하는 방식은 아니었던가? 교육은, 문화예술교육 또한,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자신의 몫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남의 평가에 의존하는 타인 지향적 교육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차이, 가정(가족) 문화의 차이, 학교의 차이 등 교육을 받는 사람의 환경적, 생물학적, 심리적, 경제적 차이에 의한 불이익이 발생할 때, 공적 영역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은 이러한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다시 말해 사회의 탈락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또는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인가?

국가교육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 문화예술교육의 기본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예컨대 교육 기회의 균등, 어떤 지역에서도 접근 가능, 성별에 따른 분리의 부정, 무상교육, 통합방식의 기초교육, 협력, 피드백 기반의 학습과 복지의 맞춤형 지원, 발달관점의 평가, 교과기반이 아닌 역량기반 커리큘럼, 전권을 가진 교사(전문성 가짐)를 신뢰하는 사회, 논쟁적 사안에 대한 토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방식, 학교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 능숙한 지지 활동방법의 학습, 기술과 지식과 사고방식의 혼합이 가능한 문해력(리터러시)과 미디어 리터러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의식적 학습, 시민성 함양을 위한 학습 등

“교육문제는 사회문제이며, 교육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회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문화예술교육은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운가 또는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인가?

교육부-교육청-학교로 이어지는 교육행정체계와 문체부-한국지역문화진흥원-지역문화재단과 문화관련 기관으로 이어지는 체계는 협력적 관계가 되도록 설계된 것인가? 협력적 관계를 위한 구조는 무엇인가?

“교육은 한 사람을 ‘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직업은 그렇게 ‘된 사람’으로 길러진 누군가에 의해 채워지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문화예술교육 영역의 전문인력연수에서 ‘된 사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직업으로서 채워질 수 있는 경로가 있는가 혹은 있어야 하는가?

“서당에서의 스승과 제자가 맺는 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우선 제자가

될 사람이 훌륭한 스승을 찾아가는 것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 맺기는 시작됩니다. 스승이 아무리 깊은 산 궁벽한 곳에 계신다 할지라도 천리 길을 마다않고 찾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되기를 청하는 것이 스승과 제자가 관계를 맺는 시작입니다. 이렇게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행위의 본질적 의미는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재훈, 『서당공부, 오래된 인문학의 길』, 갈라파고스, 2014)

전통의 교육, ‘오래된 미래’를 통한 교육방식의 검토 : 서당(서원)교육을 하는 방식을 보면, 가르침의 기본원리는 동일 하나, 채택하는 교재와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방법은 전적으로 그 서당을 이끌어 가는 선생님의 방침에 따른다. 교재는 서당마다 다르게 채택할 수 있고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은 각기 다른 전통을 갖는다.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보완하는 구조를 갖는다.

예컨대, 쓰기-읽기(성독 : 글의 구조와 의미를 익히게 됨) - 암송(글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미의 토대를 이해함으로써 속뜻을 장악할 수 있는 불씨를 내 안에 보존하는 법)-짓기의 과정을 통해, 문리(글의 결)와 문안(그 결을 읽어낼 수 있는 눈)을 익히며 ‘데움(식지 않게 하는 것)과 익힘(더욱 익숙하게 함)’의 과정을 지속한다. 평가가 아닌 총강(공부를 마무리하는 큰 행사)의 방식으로, 순(純완벽), 통(通막힘없음), 약(略보통), 조(組거침), 불(不잘하지 못함)로 나뉘되, 격려와 보충으로 한 해의 공부를 마무리한다.

다시 되돌아가서 ‘우리는 15년 동안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함에 있어서, 누구를, 왜, 무엇을 어떻게 실행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며, 어디에 기여하는 지에 대해 말할 수 있는가?

조직이 현실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명문화, 문화예술교육이 권리(문화기본권)로 이해될 수 있는 지표와 기준 마련, 독립·소수자·장애인 등과 관련한 교육콘텐츠 및 미디어·인문 영역과의 협력(collaboration) 각각 자기 주체성을 갖고 융합하기)방안, 콘텐츠와 함께 가는 공간(환경의 조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토론문

손동혁 (인천문화재단/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팀장)

문화예술교육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기반

‘사람’, ‘제도’, ‘R&D’ 등 기반 관련 어젠다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과정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위상과 역할 전환과도 관련되어 있는 이슈임

2018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능 및 추진체계의 재정립 방향을 “정책사업 관리자(manager)에서 문화예술교육 혁신자(innovator), 협력자(supporter & facilitator), 조정자(coordinator)”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①조사연구, 통계, 정보, 평가, 정책주창 기능 ②혁신적 정책사업 개발 및 사업화 ③협력 네트워크 및 정책 거버넌스 구축 ④지역의

정책 역량 강화 지원 기능을 핵심 기능으로 설정함. 그리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전략계획(2018~2022)은 향후 변화방향으로 “기반 중심의 역할로 나아가기 위한 진흥원의 내부역량 증대 및 활력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설정하고 있음

이러한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개정이 필요함. 우선 개정해야 하는 조항은 ‘제2조(정의)’,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④항 ⑦항 등임. 문화예술교육의 법적 정의를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철학을 담아 재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함. 그리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업무와 광역, 기초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기초-광역-중앙의 상향적 관점에서 정비해야 함. 요컨대 기초는 생활밀착형으로 해당 지역의 특성에 기반한 사업을, 광역은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기초와 기초 간, 기초와 중앙 간, 광역과 광역 간을 연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중앙은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확장하고, 정책 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재구성할 수 있음

국내외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역 연구원 등 연구소, 학계 등 각 영역에서 생산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공유·확산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DB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현재 주간 단위로 발행하고 있는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동향’의 전문화, 시스템화를 DB시스템 구축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음. 그리고 조사, 통계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함. 문화예술교육 관련 통계정보의 생산과 분석을 통한 서비스 등을 통해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의 기초이자 뿌리임. 그러므로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는 문화예술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문화도시와 창조사회를 앞당기는 등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문화예술교육 자체가 “인간의 품위와 생명의 존엄을 모든 가치의 중심”에 두고, “시민 생활의 질을 높여 모든 이가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하는 사회를 열어 가는 기반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함.

토론문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

지역분권에 따른 향후 문화예술교육 인적기반과 R&D기반 정책 방향

1. 문화예술교육의 R&D 혁신을 위한 체계(연구, 통계 등)

1)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가? 이를 어떻게 생산하고 활용할 것인가?

(1) 중앙

- 사업별 통계,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성과평가
- R&D 전담인력(통계 및 정책분석평가 전문가)이 사업담당자 및 전문가와 함께 어떠한 정보(변수)가

- 필요한지, 어떻게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얻기 위해 설계
- data의 생산 및 원자료 공개를 통해 학계 등에서 다양한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 동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효과성 종합
- 가치/철학/담론 등에 대한 연구 및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 수행 및 제공
- 중장기 사례연구 등 질적 연구의 수행을 통한 질적 데이터의 제공
- 좋은 사례 및 나쁜 사례의 공유를 통한 학습 지향

(2) 지역

- 지역문화예술교육 자원 조사
- 지역문화예술교육 수요 파악
- 지역문화예술교육 사업 성과 평가

2. 문화예술교육 인력 양성 방향 및 체계(연수 등)²⁵⁾

1)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내실화와 전문인력의 역량 제고를 견인하는 양성·연수체계의 마련

- 현장적합성 제고, 경력개발을 고려한 연수체계 설계

2) 문화예술교육의 목표와 철학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초한 양성·연수체계 전략 수립

3) 다변화하는 문화예술교육 수요(needs)에 대응하고 창조적 혁신을 선도하는 양성·연수체계의 구축

4)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에 있어 중앙과 지역 간 역할의 합리적 배분과 실행

(1)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인력양성과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확대

- 먼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력양성 및 연수과정 운영이 가장 우선적이고 필요한 역할이 될 것임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예비문화예술교육인력이나 청년층을 발굴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핵심인력에 해당하는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및 단체 종사자, 예술강사, 교원, 문화시설 교육담당자등에 대해 기초연수와 필요한 경우 심화연수까지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
- 이와 함께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및 단체 종사자, 지역 문화공공기관(지역문화재단), 지역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생활문화시설 등) 교육담당자 등에 대한 기초연수 기능은 지역에서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이 될 것이며, 점차 심화연수 기능까지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25) 2018 문화예술교육 전문 연수원 설립 및 운영 기본구상 연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에서 발췌함.

- 이 과정에서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경우 중앙 차원에서 필요한 연수 프로그램과 교육강사 등을 지원하는 협력연수과정이 일정기간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임
- 또한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교원과 지자체 공무원, 지역에 있는 다양한 교육/복지시설(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평생학습관, 지역에 있는 다양한 문화센터 등)에 대한 기초연수나 재교육 또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
- 이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실험이나 개발, 실행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소규모 자발적 학습모임(CoP, Community of Practice)을 구성하고, 이들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한 역할이 될 것임
- 한편 지역의 중요한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고민과 노하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지역문화예술교육 관계자 통합워크숍’ 등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도 중요함
-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은 정기적으로 지역 내 주요 관계자들의 수요를 조사하고,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유하며, 지역 내 사업관리 시스템 구축 및 성과관리,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의 효과적 조직과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 할 필요가 있음

(2) 지역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기능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편적 고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중앙정부가 담당

- 한편 중앙 차원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철학과 가치에 대한 정립과 공감대 확산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경력직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에 대해 지역 자체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심화연수와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특수대상집단(장애인, 위기청소년, 다문화가족, 탈북민, 군인, 재소자, 폭력가해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특화연수를 핵심적 기능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음
- 한편 지역 단위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문화다양성, 예술치유, 생태, 인권, 노동, 과학기술 등의 주제를 테마로 하는 장기간의 실험적 프로젝트형 연수 프로그램 운영 또한 중요한 역할이 될 것임
- 한편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 및 연수 기능이 더욱 확대될수록, 중앙 차원에서는 지역에서 모두 소화하기가 어려운 타 분야(교육, 복지, 민간 문화센터 등)의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및 협력자에 대한 연수 및 재교육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가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온라인/모바일 연수 프로그램의 제작과 운영을 통해 시간 및 공간적 제약으로 문화예술교육 연수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우수한 연수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이 외에 전국 단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고민과 노하우를 나누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해외 현장탐방, 해외 전문가 연계 연수, 국내외 거장급 전문가(명사)에 대한 초청 강연 기획 등 지역 단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이 자체적인 문화예술교육 연수역량을 갖추고 기반을 구축하기까지 상당기간은 ‘중앙-지역간 협력연수 체계’를 통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지원 역할(연수 프로그램, 교육강사, 공간 등에 대한 지원)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차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타 분야(교육, 복지 분야, 공무원인재개발원 등)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연수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관련하여 지역이나 타 분야에서 문화예술교육 연수과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에 필요한 연수과정을 알기 쉽게 매핑(mapping)해주는 역할 또한 필요할 것임

-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개발(Program R&D)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표준 커리큘럼이나 우수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
-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성과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기능이 필요하며, 연수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해 중앙 연수원의 주요한 의사결정 및 추진방향을 잡아가는 것 또한 중요할 것임

토론문

임진아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장)

1. 문화예술교육 지역화와 R&D 기반 이슈

-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재단 내 문화예술교육팀으로 포지션되어 있어 사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으며 R&D 시스템 체계가 부족하고 여건이 안됨.
- 지역 내 연구용역 수행단체 부재·부족 문제가 상당히 심각, 질높은 결과물 기대 어려움
- R&D 기능이 약하다 보니 재단 내 신규사업 제안 등에서도 근거 부족으로 소극적으로 제안되고 있음
-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협력·공동추진으로 진흥원의 보유경험을 공유
- 지역별 상황과 이슈에 따라 의도적으로 각기 다른 연구, 조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되고 이는 문화예술교육 분야 지역별 강점과 새로운 키워드가 발견될 것으로 예측됨

2. 문화예술교육 지역화와 인적기반 이슈

-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이 그간의 해석과 정의보다는 포괄적으로 확장되어야 함. 최근 10년간의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다양한 시도와 과정 속에서 문화예술교육도 다양성의 관점을 인정하고 있음. 예컨대 ‘단순 장르’ ‘단순 향유’ ‘체험’을 폄하하고 문화적 개념으로 다소 어렵게 문화예술교육 현장들이 운영되고 있었음을 성찰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교육의 다양성 인정과 허용이 문화예술교육 기반, 정책 마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됨.
- 지역문화전문인력, 생활문화코디네이터 등 중앙기관에 따라 다른 타이틀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들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의 고민도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연결되는 지점임. (이들 모두 문화예술교육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음)
- 교육을 위한 분리된 전용공간 마련은 반대. 문화예술교육 생산과 소비, 연구와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 발견하고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함. ex) 문화예술교육 레지던스
- 지역 문화예술교육 단체 육성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 커리큘럼도 지역, 대상, 상황, 공간에 맞게 사례를 만들 수 있음
- 단체가 재단의 협력 메이트로서 공동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지속적 힘을 갖기 위한 행정의 유연성과 구조체계도 필요
- 문화예술교육 인적기반(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 재단(공공기관)과 문화예술단체가 역할과 기능, 파급력과 다양성에 있어 분명히 구분되는 만큼 상호 유기적 순환과 단계별 구조화 방식에 대한 고민, 논의 필요.
- 인력양성에 앞서 고민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양성인력의 활용

토론문

임학순 (가톨릭대학교 교수)

중앙-지역 거버넌스 맥락에서 R&D, 연수, 통계체계 혁신

1. 문화예술교육 R & D Labs 활성화

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직접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 확산하기보다는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연구 개발하고, 지속 발전시키고, 서비스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창조, “지역사회” 문제해결, 통합예술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예술 분야와 비예술 분야의 융합 활성화 등에 초점을 두고, 융복합 기반의 학제적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추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 R & D Labs 활성화 지원사업”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 문화예술교육 R & D Labs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발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의 자산화에 초점을 둠

2) 문화예술교육 R & D Labs 활성화 지원사업 개발

- 지역 대학, 지역 문화예술교육단체의 문화예술교육 Labs 운영 지원
(지역 문화예술교육단체, 대학,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협업으로 추진)
- 지역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의 문화예술교육 Labs 운영 지원
- 예술가, 문화예술교육사, 연구자, 지역문화 활동가, 교사, 지역사회 문제 관계자들의 협업을 기반으로 공동연구 프로젝트 활성화 지원

2. 문화예술교육연수원의 전문 운영체계 및 지역협력형 연수체계 구축

1) 연수원의 전문 운영체계 구축

- 문화예술교육 연수 PD 제도 도입 : 전문가 참여
- 연수 프로그램 연구-평가 센터 운영

2) 지역협력형 연수체계 구축 / 컨설팅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의 협력형 연수사업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광역-기초 협력형 연수사업
- 지역 자체 연수 사업 컨설팅

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통계 협력체계

- “문화예술교육 통계조사” 법적 근거 신설(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
- 지역 문화예술교육 통계 워크숍 개최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통계 업무 수행 체계 구축

토론문

정시윤 (인천 연수문화재단 문화도시팀 팀장)

1. R&D기반 이슈

토론회를 위한 자료를 모두 읽고 느낀 점은 문화예술교육 기반 관련 이야기하는 데 있어 지나치게 아르떼를 중심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며 현장의 목소리는 어디에 반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짐.

문체부-아르떼-광역센터를 통해 전국 244개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간 추진되어 온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미래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과 실행계획을 위한 보다 실증적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내용은 앞서 논의된 것인지 찾아보지 못함.

‘교육진흥’으로 검색을 해보던 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홈페이지를 살펴보게 되었으며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사업소개 페이지의 맨 앞부분에서 안내하고 있었음. 아르떼와 광역센터로 확대 비교해보자면 아르떼 홈페이지는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또는 광역센터의 사업소개 보다 진흥원의 사업들을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음.

경험적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공모를 아르떼가 주관하던 시절에는 비록 사업적 관계라 할지라도 아르떼와 광역센터 간 관계밀도가 높았다고 생각함. 예산의 흐름이 지자체로 이관되어 느슨한 구조의 파트너십을 갖게 되면서 오히려 그간의 관계가 모호해지고 약화됨.

광역센터를 경험한 실무자로서 아르떼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조직 내에 반드시 지역 문화예술교육 대응 조직을 신설하는 것. 그리고 그 대응조직 내에 지역 문화예술교육 R&D 업무를 담당할 팀을 배정하여 적어도 17개 광역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변화와 흐름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일부터 선행되었으면 함.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문체부의 기초에 따라 광역단위에서 그 정책에 기반을 사업을 추진하고 아르떼는 다양한 지역에서의 사업 결과정보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 지원과 지역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연구기관이 되었으면 함.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역할과 위상은 아래로부터 만들기 쉽지 않으며 법적 근거와 정책적 뒷받침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함. 광역센터들이 재단 내 팀으로 편제되어 운영 중인 곳이 대다수이며 센터 운영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운영방침에 따라 예산과 사업이 통제되기도 함. 지금보다 자유로운 광역 문화예술교육 정책실행과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공간거점 마련이 이뤄져야 함.

기초재단은 대부분 문예회관, 생활문화센터, 창작공간 등 공간 운영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음. ‘전문 문화예술교육 공간’이 주는 상징성과 장소성을 생각해보자면 기초재단과 기초 센터는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려움.

기초재단은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사업을 실천하고 광역재단(광역센터)은 기초재단들의 사업 결과를 취합하여 지역에서의 의미를 연구, 아르떼로 모아 17개 광역센터에서 올라온 모든 정보를 통해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책과 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효과, 연구 방향, 사업 구상 등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2. 인적기반 이슈

아르떼의 전문인력양성이 정책적, 사업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은 예산구조만 살펴봐도 알 수 있음. 그렇다고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 없다고 보긴 어려움. 그간 전국에서 운영되어온 많은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문화예술교육 강사, 문화예술교육 전문단체들이 실증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

발제문들을 읽고 기반분과에 대해 고민을 하면 할수록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 자꾸 제자리 돌아오는 것을 느낌. ‘문화예술교육 공론화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 먼저 정리가 되어야 분과별로 의제를 만들 수 있는 것인가? 분과별로 의제를 만들면 공론화가 되는 것인가?’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정리가 되지 않음.

아르떼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기술하고 있는 아르떼 아카데미 소개 글을 찾아봄.

교육소개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문화예술교육 전문 연수 과정
교육목표	창의적 교육 역량 증진, 전문 교수법 체득, 예술 전문성 심화,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등
교육대상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협력자, 예비인력
교육내용	예술 가치 체험, 창의적 사고의 구조화, 효과적 교수법 구안 및 응용력 강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등을 경험하는 기회 제공

전국의 문화예술교육가, 문화예술교육단체들이 아르떼 연수를 통해 전문인력으로 거듭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우나 아르떼 연수를 통해 전문성이 강화된 것은 인정됨.

아르떼의 전문인력양성사업은 R&D 이슈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광역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문화기관들과 협업을 필수로 해야한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강원도 고성군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는 단체의 실무자들은 아무리 좋은 연수 프로그램이 있어도 접근성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기 때문이며 최근 광역센터들과의 협력 연수는 지역 현장에 매우 필요한 사업.

향후 광역센터를 비롯하여 다양한 지역 문화기관, 시설, 단체들과 지역으로 찾아가는 연수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화되고 많아지길 바램. 아르떼에서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교육대상과 교육내용, 기대효과 등을 연구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각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을 고민하고 운영하고 있는 기획자, 강사들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 연수의 양 자체가 늘어나길 희망함.

토론문

주성진 (문화융역주성진 대표)

1. 저점 중심의 접근에서 성장판 중심의 접근으로

-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및 활동가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는 대부분 생태계 저점에 초점을 맞추어 왔음(수혜자 측면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공급자 측면에서 신규인력 양성과 최소한의 자격 제도 마련 등)
- 고점에 초점을 맞춘 시도는 생활문화/예술의 대두와 함께 엘리트주의로 치부되고, 일부 시도조차 우수 사례의 발굴 및 육성 후 이를 복제, 전파하려는 방식에 머물러 있음. 하지만 자신의 경험과 철학이 담겨야 하는 문화예술교육의 특성상 우수사례가 타인에게 전파되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음
-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의 고점, 성장판 자극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고유성과 수월성을 이미 갖춘 활동가들의 활동을 확장 및 자극하는데 집중하여 전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방향이 될 것임

2. 연수에서 학습으로

- ‘모두에게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말이 옛말이 되지 오래고 ‘모두가 생존을 위해서 예술가가 되어야만 한다.’는 주제의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음. 정작 예술교육에서는 예술의 본질이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자조적 반성과 평가가 반복되고 있음
- 이는 문화예술교육강사 연수의 방법과 활동가들의 예술적 실천의 방법 간의 형식적 괴리에 그 원인이 상당부분 있다고 판단함
- 때문에 예술가들의 작업의 방식(자신만의 관심사에 대한 질의의 사슬을 쫓아 리서치와 작업을 진행하며 그 과정을 객관적으로 지각/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감각-실천을 연결 짓고 통합하여 주변과 상호작용하는)이 연수과정의 형식에 반영되어야 하고, 결론적으로 이는 연수보다는 학습에 중점을 둔 프로세스가 될 것으로 판단함
- 예술은 “다양한 관점들의 본성적 차이 그리고 그 파편들 간의 간격을 긍정하면서도, 그들을 단일한 통일로 묶지 않고 횡단성이라는 고유한 형식을 통해 그 안에서 파편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들뢰즈의 정의가 예술을 넘어 예술교육의 실천에도 적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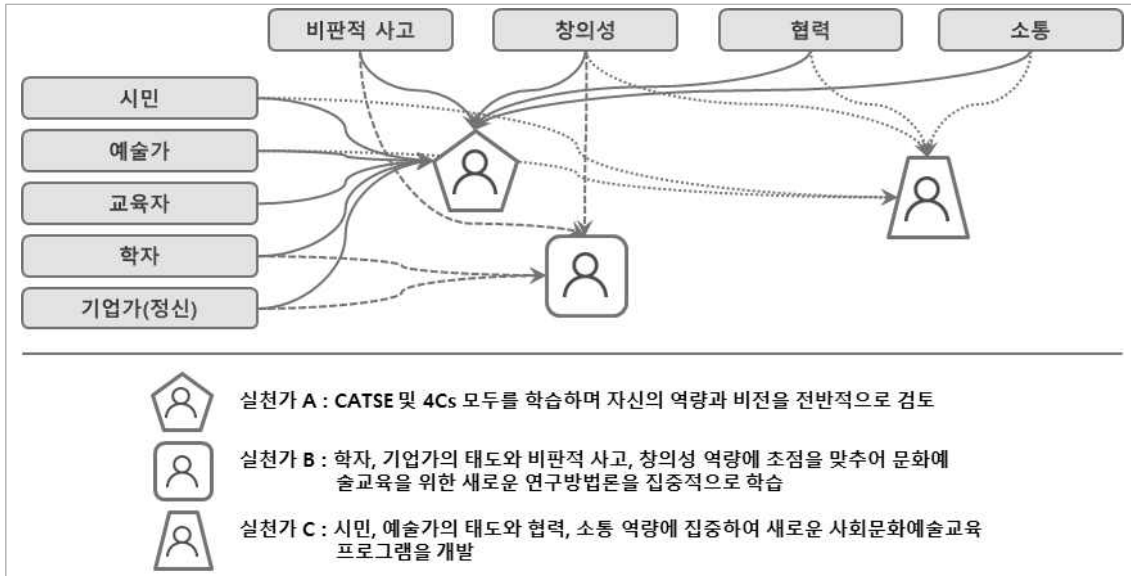
3. 모두의 예술에서 개인의 취향으로

- “취향은 시간자본, 학력자본, 문화자본을 쌓아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결국 계층 간 벽을 무너뜨리기보다 상승지향적 문화를 공모해내는 측면이 있다. 비록 대중화한 살롱 문화라 하더라도 감정적 융합은 인지 행동과 해독 작업을 전제하는데, 먹고사는 세계의 바깥으로 거의 벗어나지 못했거나, 대학 진학을 못했거나, 혹은 지방의 빈곤한 문화자본 속에 살아온 이들은 노와 키를 잃은 내비게이터가 되어 걸돌게 된다.”, “취향은 체계적인 지적 교육과 암묵적 습득의 산물이다. 흙수저 아이들이 인터넷 게임과 동영상에 빠져 문화 빈곤자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л 만한 이유다. 그들은 가끔 떠밀려가는 미술관이나 콘서트홀에서도 오로지 ‘신기함’과 ‘따분함’ 사이를 오갈 수밖에 없다.” (<취향을 가진다는 것>, 이은혜, 한겨레21, 2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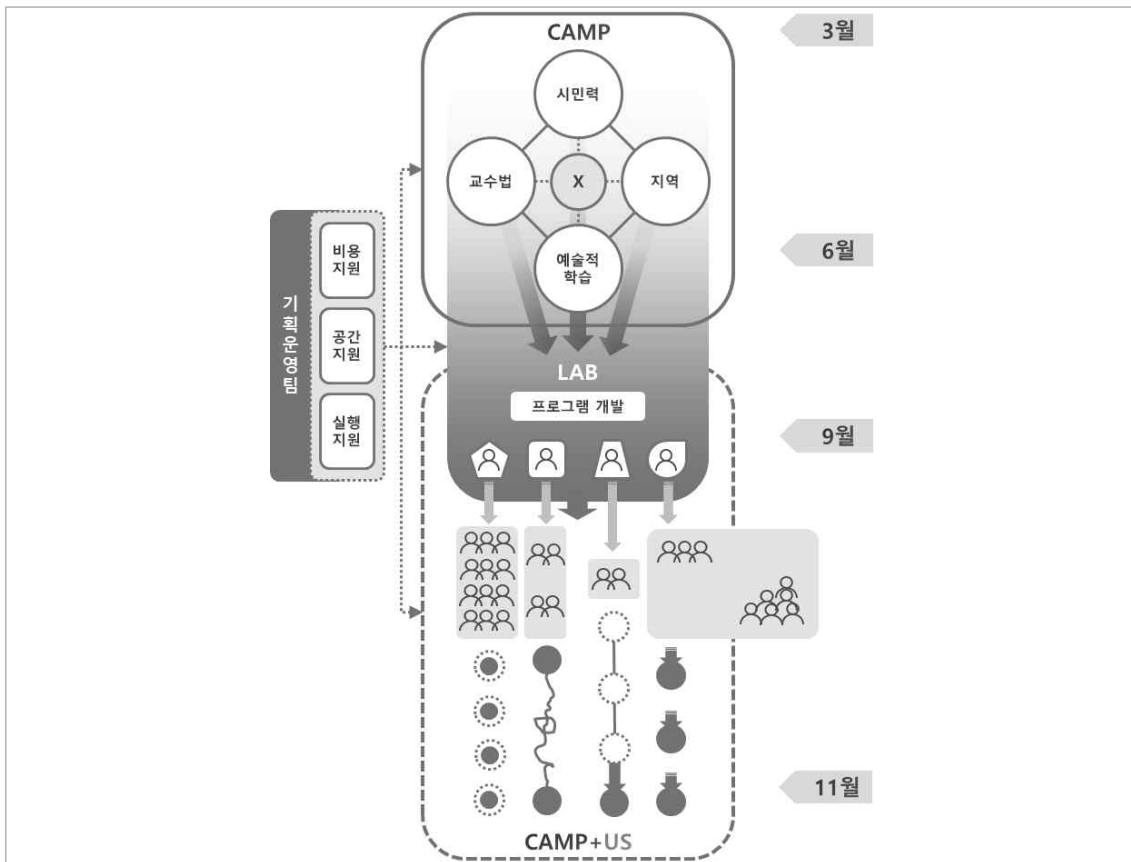
- 가능하다면, 아니 불가능해도 포기하지 않고, 공공에서 개인의 취향을 책임지려고 계속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이 아닐까?

■ 2020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활동가 공동학습 CAMPUS 소개

〈CAMPUS 주제(안)〉



〈CAMPUS 프로세스(안)〉



토론문

최도인 (메타기획컨설팅 본부장)

1. 문화예술교육 R&D 부문

1) 체계

정부 - 중앙(문화부/진흥원) - 광역/기초(재단/센터) - 교육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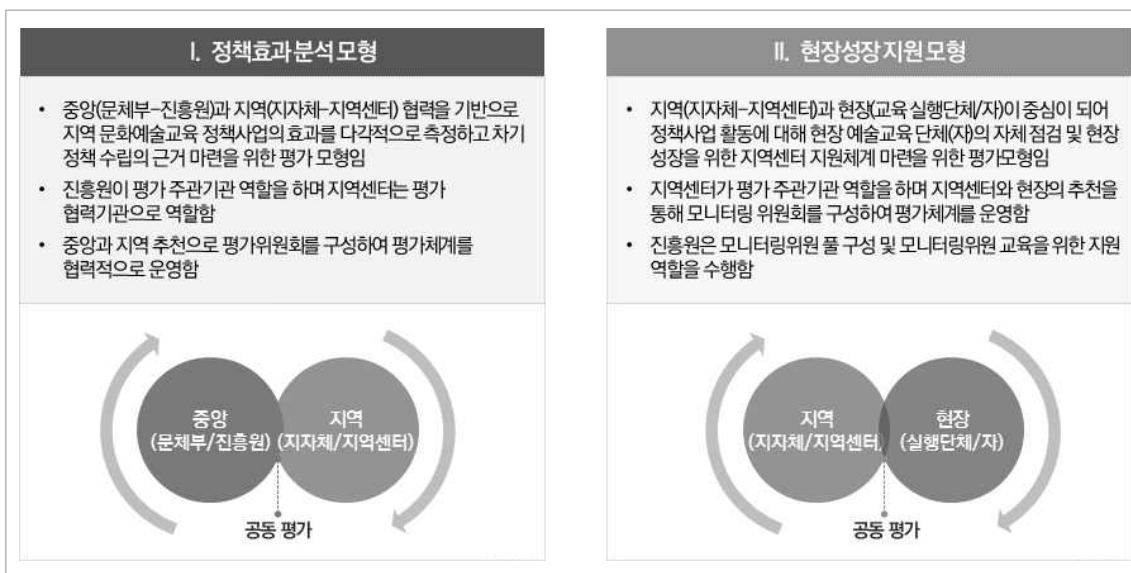
2) 주요 관심사(주체별)

정책 전달이 아니라, 파트너십의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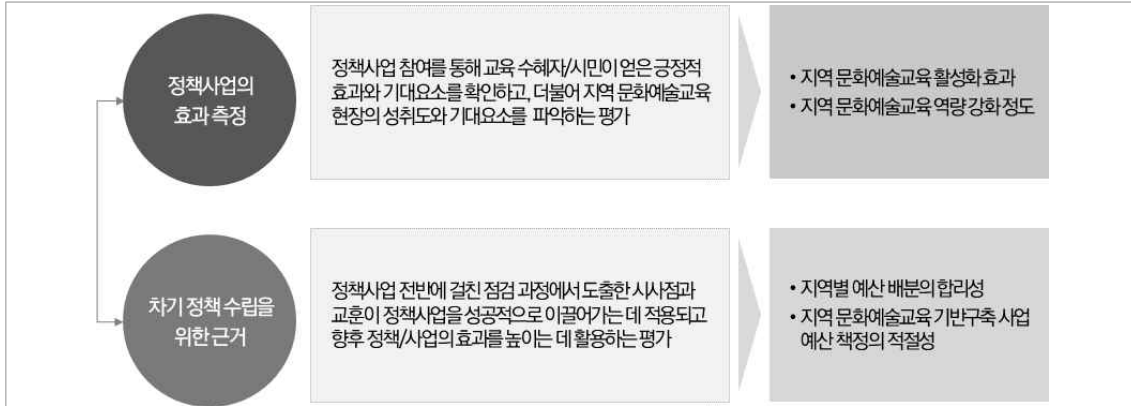
- 정부 : “총합적 정책 우선순위, 예산 투입에 따른 효과”
- 중앙(문화부/진흥원) : “예술교육의 정책 가치(고유성)”, “예술교육 정책-현장 지원”
- 광역/기초(재단/센터) : “지역·시민의 문화적 삶”, “지역·시민의 지지”
- 예술교육/단체/행위주체 : “더 나은 교육, 보람 있는, 경제적 삶에 도움되는”

(발췌) [지역협력 ‘서로도움’ 평가체계]의 두 가지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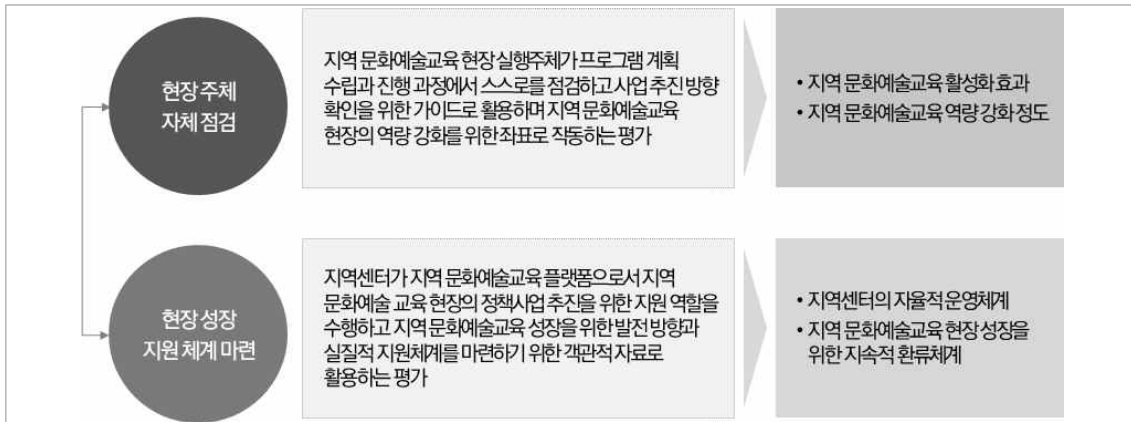
(출처. 2018 문화예술교육 평가체계 연구-지역협력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연구. 메타기획컨설팅, 2019.1)



〈그림 1〉 ‘정책효과 분석 모형’의 목적



〈그림 2〉 ‘현장성장 지원 모형’의 목적



이 모든 것을 지탱해 주는 것, 두 가지

- 예술교육(자)의 탄생, 성장
- 시민의 지속가능한 참여, 지지
 - 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 [플랫폼]

[사례] 지역에서는 “하나의 정책, 복합적 효과”

- 2019 문화예술교육 창의랩 with 제주문화재단 D&I랩(인문/생태/과학) [R&D랩-D&I랩], [랩장-청년연구원]
- [인재발굴·양성-프로그램·개발-시연/검증] 동시효과
- 결국, 지역기반 문화예술교육 R&D 커뮤니티(플랫폼)의 형성

2. 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 부문

- 문화예술교육자(강사 등)에 대한 계속되는 추가 수요가 있는지. (학령인구 감소와 교사 수급 불균형 사례)
- 대규모 집체 연수 프로그램이 시대에 맞는지. 아직도 대규모 추가 공급이 필요한지. 질적 향상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면,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토론문

최혜자 (문화디자인자리 대표)

1. 15년 성찰의 방식

- 그동안의 문화예술교육은 주로 사업의 확장에 관심을 기울이는 성장주의적 관점임.
- 성장주의적 정책사업의 끝에서 만난 우리 사회의 변화와 분권은 당혹스러운 상황
- 현재 논의는 ①미래사회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내용 ②분권 추진에 있어 필요한 절차와 과정 그리고 지역 자치역량에 관한 내용 ③문체부와 진흥원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그사이에 수많은 이슈가 산재되어 있음.
- 이러한 내용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이 논의는 지난 관점의 해석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논의임.
- 현재 가장 중요한 문화예술교육의 과제는 ① 문화예술교육의 역할 정립, ② 중앙 중심적인 사업운영의 해소, 그리고 ③ 사회 일반의 생태계 구축일 것임.
- 이를 위해 관점의 전환이 요구됨.

2. 무엇이 요구되는가 - 관점의 전환

주요의제	기존관점/실무관점/ 설계관점	전환관점	요구되는 지점
미래사회 필요한 문화예술 교육	기술혁명시대, 융·복합의 시대, 분권의시대, 포용사 회에 문화예술교육이 ()해야 한다. 외국에서도 ()하다.	문화예술교육의 본질로 부터의 미래방향과 현 재의 제의식을 통한 근 미래 방향은 차이가 있 고 이에 대한 구분 필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 필요 - 이 는 하나로 정의되지 않고 담론 영역에서 보다 논 의가 확장되어야 하며 다양성 담보하면서 문화예 술교육의 철학, 가치 설정. - 현재의 문제를 중심으로 근 미래 방향은 문화예술 교육정책으로 수립 -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처방전 같은 사업이 아니라 “사람”으로 수렴되도록 관점 재구성 필요
분권의 절차와 과정/ 지역 자치 역량	기초에 ()를 설치하고, 광역은 ()를 하고, 이 를위해 추진과정을 () 으로 설계하고 재정안정 성을 ()담보한다.	지역화로드맵을 통해 정책 프로세스와 영역 설계 기초에 대한 정책방안 의 한시성 명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화 로드맵을 통해 정책 메시지를 지역에 전달 함으로써 지역적 설계와 준비 시간 부여 - 정책프로세스를 중앙이 수행하면서 지역을 추동하 는 지원체계를 구동함. (광역조례는 12개) -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 혹은 도시를 문화도시사업과 연계하여 탑재
문체부와 진흥원의 역할	문체부와 진흥원은 콘트 롤타워로서 기반, 환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를 한다.	중앙의 허브 기능 혹은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 는 방향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트롤타워의 부담을 벗고, 정체성에 기반한 플랫 폼으로 이동 필요 - 현재의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재배치하는 과정과 함 께 새로운 영역으로의 역할 탐색을 통해 구축할 필요 - 다양한 실험적 연구를 현장과 결합하는 미래전략 연구 필요 - 중앙-지역 네트워크, 관-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류와 소통의 형식 마련하여 영역 확장

3. R&D/인력양성과 관련하여

1) R&D와 관련하여

- 미래방향에 대한 연구 필요- 기술혁명, 1인 가구, 도시재생에 있어 문화예술교육은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 것
- 사회적 이슈에 대한 예술의 역할 증대 필요- 갈등, 혐오 등.. 문화다양성, 성인지감수성 등에 대한 역할 확장
- 타 연구 분야와의 통섭적 연구 필요- 행동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도시, 복지, 생태환경, 젠더 등
- 생애주기별 교육 개념을 대체할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공간, 학교, 도시, 문화적 돌봄과 키움에 대한 새로운 시각 필요
- 개인 및 사회에 대한 문화-예술적 시각에서의 통계자료 축적은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 증대에 기여

2) 인력양성과 관련하여

- 인력양성사업은 자칫 공학적 설계를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오류가 여전히 작동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전문인력은 연구, 기획, 개발, 행정, 강의 등 각각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 현재 문화예술교육사는 콘텐츠 개발과 강의 인력으로 양성된 측면이 있음.
-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과정은 지역에서의 진행할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차별성을 두는 방향 즉, 연구, 기획, 개발 등의 과정으로 구성되는 것이 필요.
- 또한, 전환기 현대사회의 문화예술교육의 다원성을 고려한다면 예술+인문적 성격을 보다 강화하여 기능이나 프로세스 중심의 교육은 지양해야 하며, 문화예술교육에서 지향하는 방법론 자체가 적용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
- 문화예술교육의 방향과 현재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아르떼 아카데미(이후 연수기관화 되어도)를 실험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창의·융합분과

창의·융합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발제문】 예술과 기술의 융합과 문화예술교육 / 손경환

아동청소년 관점에서의 융합 문화예술교육의 접근 / 양혜정

무용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융합적 접근 / 차진엽

【토론문】 지우영 (예하예술학교 교장)

황주선 (대진대학교 초빙교수)

황하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발제문

예술과 기술의 융합과 문화예술교육

손경환 (한국예술종합학교 융합예술센터 운영지원팀장)

1. 예술과 기술의 관계, 4차 산업혁명

1) 예술과 기술의 관계

- ‘예술’, art(아트)의 어원은 라틴어 ars(아르스)이다. 이는 ‘조립하다’, ‘궁리하다’라는 의미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숙련된 솜씨’를 가리킨다. 그리고 ars는 그리스어 techne(테크네)에서 유래한다. 우리가 지금 ‘기술’이라 부르는 technique(테크닉)의 어원이기도 하다. techne가 ‘일정한 기술과 규칙의 지식에 입각한 인간의 제작 활동 일반’을 의미한다는 것에서 이 둘은 태생이 같다고 볼 수 있다.
- 예술(art)은 18세기 서양에서 예술과 일반적인 기술을 구별하기 위해 쓰인 fine art, beaux arts(미적 기술)를 다시 규정되었고, 기술(technology)은 18~19세기 1, 2차 산업혁명(증기기관, 기계생산 → 대량생산, 전기에너지 등의 사용)을 맞으며 새로운 시대를 열고 둘은 ‘개념적’으로 분리되는 양상을 보이나 실상 기술 발전은 다양한 예술 분야에 영향(광학)을 주기도, 영화를 탄생시키기도 한다.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예술과 융합

- 1970년대를 전후로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3차 산업혁명(정보기술, 전자공학의 발달)은 디지털 시대를 열었고, 이 새로운 영역을 바탕으로 ‘미디어 아트’, ‘전자 음악’ 등 새로운 양상의 예술이 탄생하게 된다. 결국 예술에 있어 ‘툴(tool)’의 변화는 창작 프레임의 변화’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은 예술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까.
- 4차 산업혁명은 ICT(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그 본질은 연결, 탈중앙화/분권, 공유/개방을 통한 맞춤 시대의 지능화 세계를 지향하며,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등을 통해 현실과 가상을 잇는다(위키 백과). 이러한 기술은 그간 예술가의 직

관이 중요했던 예술의 동향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또는 협업을 불러오며, 새로운 관점의 예술을 우리에게 보여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사용은 아직 높은 비용과 기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극소수의 예술가만이 다룰 수 있다.

- 반면 오픈소스(open source), 저렴한 마이크로컨트롤러(microcontroller) 보드의 보급, 제작 방법의 공유, 협업 문화 등은 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 오픈소스 제조업 운동)의 바탕이 되어 다양한 창작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많은 예술가에게 저렴한 비용과 열려 있는 사용 가능성을 통해 기존 예술은 물론 새로운 예술의 형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동향이다.
- 접근성이 좋은 기술이라 해서 진입 장벽이 없는 것은 아니기에 예술가가 기술을 배워 당장 자신의 작품에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다. 예술과 기술의 융합적 관점에서 동시대 예술가에게 요구되는 소양은 기존 예술 장르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과학기술,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 분야와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일 것이다.

2. 예술과 기술의 융합형 교육 사례 공유와 문화예술교육 적용 방안

1) 예술과 기술 융합형 교육 사례 : 한국예술종합학교 융합예술센터 <팀러닝>

- <팀러닝>은 다양한 분야의 강사들과 함께 동시대 미디어의 사회적 담론과 창작 환경을 다루는 강연, 기술 워크숍, 프로젝트 활동으로 구성된 융합형 인재 양성 기반 교육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오픈소스(open source)와 공유(sharing)를 바탕으로 기존의 예술창작 방법을 넘어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을 협업(co-working)을 통해 실천한다.
- 참여자의 프로젝트 활동과 교육 효과 분석을 통해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과 협업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예술학교 기반의 융합형 교육 방법론을 연구/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론을 개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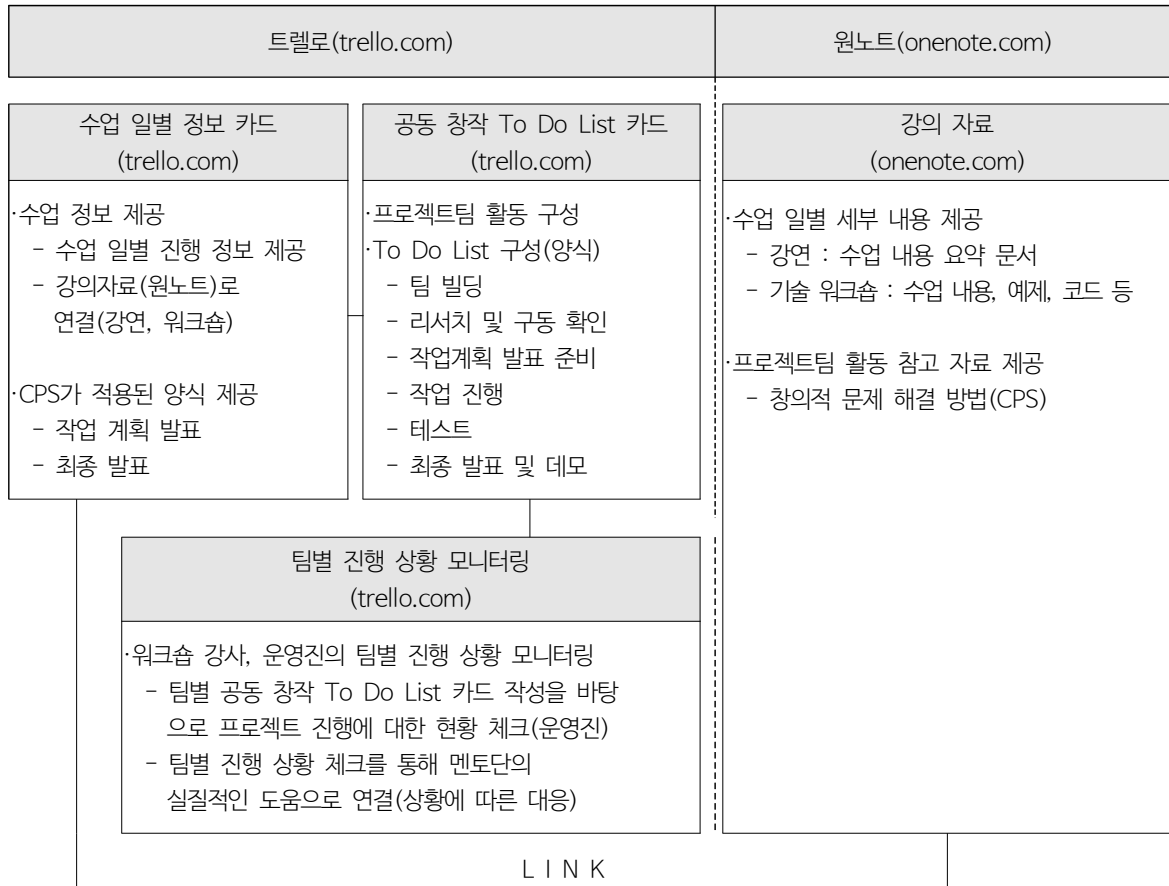
▶ 팀러닝의 특징

- 1) 오픈소스 바탕의 기술적 소양 교육과 애자일 방법론이 적용된 프로젝트 활동
- 2) 웹 플랫폼을 통해 모든 내용 기록과 공유, 프로젝트 활동 가시화(트렐로, 원노트)
- 3)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론(CPS) 적용 실험을 통해 프로젝트 활동 가이드라인 제시
- 4) 예술가의 비판적 사고 형성(좋은 질문 만들기)

- 주요 교육목표 : ‘동시대 미디어와 기술의 사회적 담론, 사용법 이해’,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공동 창작과 협업, 공동 자산의 공유 범위와 한계의 이해’
- 학습 경험 구성(지도 방법)
 - 강연(2회, 회당 2시간+질의응답) : 학습자의 탐구력 배양을 위한 기본 지식 습득
 - * 강의자료 : 강사가 준비하고 센터 아카이브 채널(원노트, 트렐로)로 학습자에게 공유
 - 워크숍(3회, 회당 3시간+질의응답) : 학습자의 기술적 접근 방법에 대한 자발적 탐구와 실험을 위한 기초 환경 구성
 - * 강의자료 : 강사가 준비하고 센터 아카이브 채널(원노트, 트렐로)로 학습자에게 공유
 - * 재료 : 예산 허용 범위에서 센터가 강사와 협의 하에 준비
 - 프로젝트팀 활동(5회+자율 모임) : 공동 창작을 위한 프로젝트팀 구성 및 협업, 진행방법 체득, 주제적 학습과정 형성을 통해 결과 유도, 멘토단 운영을 통해 프로젝트팀 지도
 - * 프로젝트팀 인원 : 팀당 4~5명(팀장 1명)
 - * 프로젝트팀 구성 : 기록자, 리서처(Researcher), 디자이너(Hardware Designer, Software Designer),

개발자(Developer, coding)

- * 협업 툴(무료) 사용 : 트렐로(<https://trello.com/>), 오픈 채팅방
- * 프로젝트팀 작업 현황을 알 수 있는 공동 창작 To Do List(기록) 제공 : 트렐로 샘플카드로 제공
- * 프로젝트팀 공동 작업 계획 발표 및 결과 작성 양식 제공 : PT 양식 등
- * 공동 작업 제작 과정 및 결과 공유 : 센터 홈페이지(<https://www.artcollider.kr/>), 인스트럭터블스(<http://www.instructables.com/>)



*〈팀러닝 2019 : Trouble Shooting@석관동〉 트렐로 보드 참고 : <https://trello.com/b/Pl9B847F>

- 학습 결과(평가)
 - 멘토단의 프로젝트팀 작업 과정 및 결과물 평가(평가 리스트 제공)
 - 예술교양학부 ‘예술참여 프로젝트’ 학점 이수 조건(패스/페일(Pass/Fail))
 - * 총 10회 중 8회 이상 출석
 - * 프로젝트팀 별 최종 제출 자료(공동 작업 제작 과정 및 결과) 제출 및 공유 여부
-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 분석(평가 → 개선 방안 도출 → 적용)
 - 학습자 설문문을 통해 학습 경험(프로젝트 활동, 협업, 문제 접근 방법 등) 평가 / 분석
 - 신청서와 만족도 조사 설문에서 학습자의 기술 숙련도(팀러닝 전) → 기술 향상도(팀러닝 후)를 조사하여 교육 효과 분석
 - 프로젝트팀 활동에 대한 학습자 중심 평가(창의성, 진행, 협업 등)와 강사(멘토단), 운영진의 프로젝

- 트 평가(창의성, 구현력, 결과물, 협업, 공유)를 비교하여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과 창의적인 실험을 시도하는데 있어 협업의 유효성 확인
- 트렐로를 이용한 프로젝트팀 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학습 과정 분석
-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정/보완사항 도출하여 융합예술 교육 방법론, 평가 방법 등 제시(교육 프로그램 질적 향상)

▶ <팀러닝 2019 : Hey, Strangers. Do It Together!>

2019년도 1학기 교육 프로그램인 <팀러닝 2019 : Hey, Strangers. Do It Together!>는 미디어의 상호작용과 놀이 문화 등 다양한 참여 방법을 강조하는 플레이플 미디어(playful media)를 바탕으로 사람 간의 협업, 사람과 인공지능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6회의 워크숍에서는 “우리는 학습된 인공지능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Microsoft의 클라우드 AI 플랫폼 Azure와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한 여러 가지 대상 인식 실습과 프로젝트팀 활동을 진행한다. 3회의 강연에서는 ‘협업’, ‘공유’, ‘인공지능과 인간’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접근을 해본다.

* 세부 구성은 트렐로 보드 링크 참고 : <https://trello.com/b/4uQy73u8>

▶ <팀러닝 2019 : Trouble Shooting@석관동>

2019년도 2학기 교육 프로그램인 <팀러닝 2019 : Trouble Shooting@석관동>은 학교가 위치한 석관동을 배경으로 지역 기반, 사용자 중심의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같이 고민해보며, 기술을 사용해 사회 문제에 접근하는 예술 활동 또는 다른 시선으로 보기를 시도한다. 팀러닝의 전반부인 강연과 워크숍에서는 ‘기술과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예술 활동’과 ‘파이썬(python)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과 읽기’, ‘피지컬 컴퓨팅(아두이노(arduino)와 입출력 장치)을 이용한 문제 해결의 기술적 접근 방법’을 다룬다. 팀러닝의 후반부인 프로젝트팀 활동에서는 참여자들이 팀을 구성하여 문제를 선정하고 멘토단(강연, 워크숍 강사)과 함께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구현한다.

* 세부 구성은 트렐로 보드 링크 참고 : <https://trello.com/b/Pl9B847F>

2) 문화예술교육 적용 방안

- (교육 목적 수립)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이 전문 예술인 양성과는 다르기 때문에 예술과 기술의 융합형 교육을 통해 ‘어떤 효과를 보고자 하는지’를 명확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무분별하게 도입, 기획된 새로운 기술 기반의 문화예술교육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미래를 대변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 교육 현장과 관련된 이슈가 무시된 상태에서 실행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융합형 인재상(제안)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복합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흥미와 즐거움, 공감 능력, 차이에 대한 이해)

- * 청소년의 경우 :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예술, 미디어, 기술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획득
- * 성인의 경우 : 자신의 경계를 알고, 다른 사람과 소통과 협업을 통해 타 분야와의 차이를 이해하고, 경계를 넘어 자신을 새롭게 만들면서 획득

- (제도적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관은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구조화된 폭포수형 관리 체계(계획-구축-실행)와 예산을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을 지원해야 하며, 교육을 개발/실행하는 강사들은 현장에 기민하게 반응(설계-개발-평가)하며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걸맞은 융합형 교육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3. 예술과 기술 융합형 문화예술교육 실행의 쟁점

- 예술과 기술 융합형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어야 하는가? 또는 제3의 새로운 분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교육인가?
 - 예술적 경험이 중요한가? 다양한 경험이 중요한가?

- 예술과 기술융합형 문화예술교육은 누가 가르칠 것인가?
 - 예술과 기술융합형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예술 강사 교육 필요(현재의 예술 강사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양질의 강사를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예술 강사를 가르칠 수 있는 예술과 기술융합형 교육전문가 확보 및 교사 육성 프로그램 개발 필요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년도 <기술융합 문화예술교육 연수 프로그램 연구> 사례를 기초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실행

- 예술과 기술융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대상과 그에 따른 수업내용과 목표에 대한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 다양한 실험군, 난이도 설정을 통해 예술과 기술융합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실행
 - 확산을 위한 커리큘럼 공유 플랫폼 구축과 제작 공간 확보 필요

발제문

아동 청소년 관점에서의 융합 문화예술교육의 접근과 방향

양혜정 (연극놀이 전문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통합과 융합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융합 문화예술교육의 접근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성 함양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1. 예술의 통합적 접근의 현황과 쟁점

1) (경험, 사례를 토대로 한) 통합예술에 대한 문제점과 쟁점 논의

쟁점

- 예술 장르의 전문화 교육에 집중할 것인가? 장르의 경계를 낮출 것인가?
- 양질의 예술교육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술교육가의 예술성을 개성과 독립성으로 볼 것인가? 매뉴얼화를 통해 균등하고 보편적인 방법론의 기준을 마련할 것인가?

(1) 통합예술교육을 위한 필요 요건, 접근방식 및 방법론 논의

※ '17 콘텐츠연구회-‘문학기반 통합예술교육 연구’사례

- (예술 장르 간의 감각적 경계에 대한 이해 선행) 온전한 융합예술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장르마다 서로 다른 감각적 컨디션과 무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 예. 무용을 위한 ‘몸’과 연극적 ‘몸’이 다름
- (어린이 대상 통합예술교육에서 미적 체험의 부재) 어린이 대상 통합교육의 경우 주로 ‘활동’에 집중하게 되므로 깊이 있는 미적 체험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어린이 통합예술교육에서, 강사(예술가)는 본연의 예술장르적 관점(단, 장르별 접근방식이 모두 상이함), 어린이는 ‘활동’의 방식으로 접근
- 이로 인해,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무언가 다이나믹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참여자(어린이)의 깊이 있는 예술적, 미적 체험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상

- (참여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융복합의 해석과 이해 필요) 한 강사가 여러 장르를 체화하여, 통합적 교육을 추구하는 방식이 아닌, 참여자들이 다양한 예술장르에 대한 체감을 통해, 내적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영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
- (통합예술교육 전반 정책구조의 설계) 통합기반의 콘텐츠 개발 뿐 아니라, 이를 실행할 사람들이 협업하고 확장할 수 있게 하는 구조, 개발된 콘텐츠가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한 구조 등이 입체적으로 설계될 필요

(2) 통합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논의

- (예술적 영감을 주는 관점의 연수)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는 기회로서 감각적 트레이닝이 될 필요. 단순 교안을 복제하여 재생산하는 교육의 형태가 되지 않아야 함
- (교안, 매뉴얼 제공의 지양) 교안, 매뉴얼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있는 반면, 이로 인해 예술교육 전문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 매뉴얼 제공 시, 교육현장의 근시안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예술가들이 성장하지 않음

(3) 예술교육에서의 창의성에 대한 논의

- 일방적으로 예술콘텐츠를 제공받는 것이 아닌, 일상에서 창조적인 자기언어를 찾는 경험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경험의 계기가 되는 예술교육의 방향성
- (주체성과 창조성에 영감을 주기 위한 예술교육) 예술교육은 참여자를 단순한 문화예술 소비자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체적인 감각과 창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
- (예술의 본질에 주목) 단순 모방 아닌 상상적 모방을 통하여 예술 본연과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

(4) 기타 논의

- 문화예술 교육의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문화예술교육지형의 구축의 필요성
- 예술교육의 양적측정을 통한 성과증명이 아닌, 질적 측정 및 비평을 통해 양질의 예술 교육 설계와 모색을 위한 '예술교육평론가 양성'에 대한 제안

- 문화예술 교육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공감대 미흡
 - 대다수 국민 어린이, 청소년은 사교육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접함.
 - 창의적인 접근의 필요. 창의성이 실제로 사회가치와 연결되지 못함. 중국적으로 입시 제도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
- (부모 교육과 교사의 미적 감각의 중요성) 유아·초등저학년 이상 자녀를 둔 부모는 예술교육에 관심이 없는 현실. 예술교육이 보편적인 교육이 되려면 부모 교육이 선행되고 교사가 미적체험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
- (예술교육 평론가 양성 제안) 전문적인 예술교육 평론가 양성을 통해, 다양한 해석과 주체적 작업 사례와 인식이 일반 학교, 보편적 예술교육으로 확산 가능
 - * 어린이/청소년 예술교육 분야에 대한 해석, 기록에 대한 전문적 영역이 양성될 필요(단순 예술장르에 대한 해석이 아닌, 대상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함)
- (통합적 융합에서의 과정 중심) 춤추는 것, 또는 신체 움직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통합적 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집중해야 함.

2.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창의예술교육의 주요 쟁점과 해결방안

- 아동청소년이 경험의 주체로써 문화예술교육을 소비가 아닌, 창조적 경험이 되게 할 수 있는가?
- 미디어테크놀러지, 미디어 리터러시와 감각적 소통, 사회적 커뮤니케이션과의 연계방식을 논의함에 있어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감각발달지원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
- 어린이의 발달특성을 고려함이 일반적인 아동발달 이론을 접목하는 것이 아닌, 예술을 중심, 발달의 해석적인 결합이 필요함.
- 창의·융합 교육을 위한 전문가 양성이 핵심

1) 아동·청소년의 대상의 주체적 경험을 중심으로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프로젝트

- 창의 문화예술교육에서, 성인과 아동·청소년의 교육목적이 달라질 수 있음
 - * 예) 아동·청소년 : 자기 고유 언어를 찾아가는 과정/
성인 : 자기 울타리를 벗어나게 하는 접근 등
- 유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관계맺음’에 대한 열망이 내재되어 있고 끊임없이 연결짓기를 시도하는 경향이 있으나 성인이 되면서 내부에 갇히는 경향을 지님. 따라서, 1) 성인인 예술가, 예술교육가가 본인의 창의성을 갖고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교육 방법, 2) 유아·청소년의 호기심/창의성을 일깨우기 위한 방법 고민할 필요
- 현대적 관점에서 창의성의 핵심은 ‘나다움’임. 창의 예술교육 방식과 개인 간의 고유성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융합시킬 것인지 고민할 필요

2) 기술이 해방시킨 인간의 잠재력

- 발달특성을 고려한 테크놀로지 접근방식의 단계 제안
-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능력을 높이는 것이 아닌 인간성을 향상시키는 것
- 신체와 기술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
 - 기술을 통해 무감각해진 감각을 회복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가?

3) Art & Technology + 신경과학, 심리학, 생리학 등의 분야와의 연계

- 이에 주목되는 예술분야인, 무용과 연극에서 Nonverbal metaphor에 대한 연구제안

4) 문화예술교육 비평 활성화

- 예술교육평론을 통해 한국의 어린이, 청소년의 현재적 삶 속에서 창의적 학습, 창의적 예술경험의 가능성과 의미에 대한 담론 형성

발제문

무용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융합적 접근

차진엽 (현대무용가)

1. 예술간 장르 융합 프로젝트 현황 및 쟁점

1) 예술가와 감상자의 경계와 예술창작 방식에 대한 인식 변화

(1) 예술적 경험의 중요성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커뮤니티댄스’, ‘장소특정적 퍼포먼스’ 등, 기존 공연예술의 형식을 해체하고 새로운 형태로 확장되는 공연들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협업과 융·복합 공연이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예술에 대한 접근 또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예술의 질적 수준과 다양성을 위해서는 그것을 소비하는 대상의 예술적 경험과 이해도가 중요하며, 또한 전문교육을 통한 예술가 양성 외에도 예술적 경험을 한 비전문가들이 잠재적인 예술가가 될 수 있다.



- 예술의 향유 방식 ‘감상’→‘경험’으로 변화
 - 의미와 과정, 행위 자체가 중요 > 동시대성, 현장성이 중요해짐 > 즉, 현장을 목격하는 관찰자, 관객의 역할이 작품에 영향을 끼치고 직간접적으로 개입
- 관객의 수동적 역할/태도의 변화
 - 관객이 직접 경험하고 주체적으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제공
- 예술교육 대상→어린이, 청소년, 일반인→잠재적 예술가이자 관객

2) 융합에 대한 개념 재정립 필요

쟁점

- 예술에서 융합이란 무엇인가? 예술장르간의 융합인가? 예술가 간의 융합인가?
- 필요에 의한 융합인가? 시대적 요구인가?
- 융합을 통해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 장르, 공간, 역할의 경계 허물기. 어디까지 허물 수 있나?
- 장르 간의 차이를 통해 융합하는가? 공통분모를 통해 융합하는가?
- 기존 학문체계를 통해 나누어진 장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질문을 해 볼 필요는 없는가?

• 협업/협력 작업 경험을 통한 문제점 제시

-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개념 재정립 필요. 특정 목적을 갖고, 단순 장르별 협업작업 형태로 만나는 경우 다수. 상호 생각의 공통 지점을 명확히 하고, 이후 역할분담 등 이루어질 필요
- 목적과 대상/범위를 정해놓고 작업적인 교류를 통한 결과지향적인 협업방식일 경우, 단순 매체 복합적 콜라보레이션이 됨. 따라서 프로젝트 구상 단계부터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협업가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예술의 본질적 의도와 예술적 지향점을 찾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즉, 결과물의 복합성을 위한 장르간의 매체 융합이 아니라, 예술적 지향점을 찾아가기 위한 융합적 사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타장르의 본질적 속성과 작업방식에 대한 이해가 따라야 한다.
- 타장르의 작업방식과 과정에 대한 이해도 필요
- 관객참여형 퍼포먼스의 경우, 관객의 반응이 매 공연시 다르므로 충분한 시뮬레이션 필요. 기존 공연의 형식에 고착되지 않는 작품의 완성도를 위한 새로운 접근 필요

사 례

- 최근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증가 (국립현대무용단 <루돌프> : 무용 + 미디어아트 - 어린이 공연 특화 기술진 참여 등)
- 수준 높은 해외 초청 어린이공연 증가 (LG아트센터 ‘자스민바드명 <피노키오>’, ‘뮤지컬 <마틸다>, 아시테지 축제 ‘달리아아신 <베이비드라마>’) - 어른들도 함께 볼 수 있는 공연
- ‘커뮤니티댄스’ (안은미무용단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 <사심없는 댄스 등>) - 관객 참여 프로그램 : 전문가/비전문가의 경계를 허물고 직접 체험 유도

(1) 대상에 따른 방향성에 대한 숙고 필요

- 대다수의 어린이 대상 예술교육이 어린이의 눈높이를 맞추려다보니 퀄리티 저하 또는 예술성에 대한 고민 취약
- ‘어린이’ 대상에 대한 이해 부족, 성인 관점에서의 ‘어린이’에 대한 접근, 이해 지양
- 참여자 눈높이에 맞춘 예술(교육)일 경우, 프로그램 질 저하되는 경우 다수(특히 어린이 대상). 대상에 따른 지적 눈높이를 고려할 필요는 있으나 결과물의 퀄리티와 완성도가 저하되면 안 됨

(2) 예술의 대중화, 예술의 사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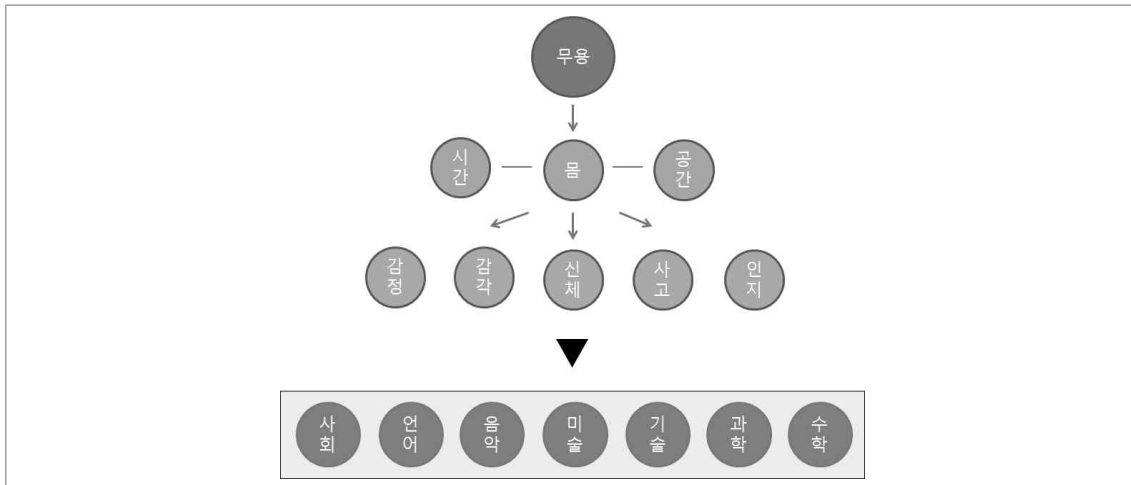
-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개념 아래, 관객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참여형 퍼포먼스를 통해 융합적 개념 확장
- 사회적으로 공통분모를 지닌 다양한 사람들이 무용 제작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정체성을 표현하며 치유를 받고 삶의 즐거움을 얻는 등, 궁극적으로 사회변화에 긍정적인 기여

“많은 인지과학자와 진화과학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음악, 춤, 노래를 서로 다른 예술 형식으로 세분하는 것은 매우 현대적인 착안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모든 예술은 사회의 중심에 있었으며 또 서로 구분되지 않았다고 한다.”

<뇌는 춤추고 있다> -장동선, 줄리아 F 크리스텐슨-

2. 장르 융합의 한계와 협력적 유대관계를 통한 가능성

1) 무용의 관점에서 본 융합



(1) 몸의 가능성 발견을 위한 차별화된 커리큘럼 개발

- 무용에서의 몸은 물리적(Physical)인 신체 인지만이 아닌 생각, 감정, 감각의 상호작용에 의한 관계를 말한다. 즉, 신체의 확장이 단지 신체구조적인 의미뿐 만이 아닌 여러 감각과 사고의 확장으로 이어져 내재감각에 집중하고 숨어있던 신체 전반에 이르는 가소성을 발견한다.
- 신체 움직임을 통해, 내적감각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
- 몸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다른 장르와의 공통지점 발견. 장르별 교육이 아닌 공통분모를 통한 통합적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고민 필요

2) 융·복합 / 예술과 기술융합의 본질적 접근을 위한 숙고

- 기술이 해방시킨 인간의 잠재력.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능력을 높이는 것이 아닌 인간성을 향상시키는 것 ('신체 설계자'-에덤 피오리-)
- 신체와 기술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 : 기술을 통해 무감각해진 감각을 회복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가?

쟁점

- 장르적 융합이 아닌 무용의 본질적 개념을 통한 타 장르와의 연계, 그 방법은?
- 융합을 위해 창의가 선행되어야 하는가? 융합을 통해 창의를 추구하는가
- 융합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는 무엇인가
- 창의·융합적 사고란 어떤 것을 의미하며,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 창의·융합적 사고는 어떤 교육을 통해 훈련될 수 있을까
- 매개자/교육자간의 협력관계는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 기술과의 융합이 예술에서 어떤 가치를 갖는가
- 기술의 발달로 인해 퇴화되어가고 있는 신체기능은, 기술을 통해 무감각해진 감각을 회복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가

- (과정 중심의 융합적 사고) 춤추는 것, 또는 신체 움직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관찰과 탐구의 과정을 통해서 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집중해야 함
- (창의·융합 예술교육 방향성) 창의·융합 교육에서 인력양성, 매개자 연수가 중요. 초기에는 매뉴얼제공

/훈련(exercise) 형태 연수였다면, 최근에는 예술 본질의 경험에 대한 수요가 높음. 즉, 분야/장르에 대한 깊은 예술적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의 성찰과 발견이 이루어지는 목표를 지닐 필요

- (교육자, 매개자의 역할 중요) 교육자의 역할, 매개자(부모 등)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가치, 인식 확대가 매우 중요. '교육'하는 방식보다는 예술 '과정' 자체에서 참여자의 주체적인 태도로 진행되어져야 함
- (예술 창작활동으로 환류) '교육'과 연계한 활동이 결국 예술가의 직업이 될 수 있으며, 예술가 본연의 창작활동으로 환류 또는 새롭게 발견될 수 있음

2) 창의·융합 문화예술교육 개념과 방향성에 대한 쟁점

(1) 창의성의 개념에 대한 논의

- 르네상스 시대 이후 창의성이 인간의 능력 중 하나로 인식되어옴(서양철학 맥락에서는 새로운 영역을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만든다는 의미)
- 융합적 관점에서 창의성의 기초는 나와 타인의 차이를 아는 것(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점과 타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점 인지)과 타 영역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것
- 현대적 관점에서 창의성의 핵심은 '나 다름'임. 창의 예술교육 방식과 개인 간의 고유성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융합시킬 것인지 고민할 필요
- 창의성의 개념은 독특함보다는 자연스럽게 발휘되는 능력. 이미 자신 안에 있지만 인지하지 못했던 가능성을 발견하여 나와 외부를 연결하는 것. 타 영역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새로운 경험을 지속하는 것이 기초

(2) 창의·융합 교육의 정의와 목적(지향점) 논의

- 창의·융합 문화예술교육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다른 장르간 결합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것(보편 교육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호기심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
- 융합교육은 더 나은 사람이 됨을 전제. 창의·융합교육을 통해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와 경험을 토대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
- 단, 창의와 융합의 개념이 일부 상충. 창의적 예술교육을 위해서는 '자기 전문성'(예술 장르에 대한 철학)이 반드시 필요('자기 전문성'이 없는 융합교육의 실효성과 필요성은 의문)
- 이와 같은 창의·융합 교육을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매개자 역할이 중요
- 융합의 개념은 서로 다른 분야 가운데서 일어나는 화학작용. 융합을 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는 점이 아직 모호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합교육이 미래 세대 역량으로 연결되는 시대적 요구가 존재
-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적 차별성 지점) 창의성 증진을 위해 예술이 도구적으로 사용될 경우, 예술교육 범위 축소 우려. 예술교육을 통해 예술 본연의 가치가 충실히 발현될 수 있도록 하되, 부수적으로 창의성 등 다양한 능력이 개발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지닐 필요
- (융·복합적 결과보다는 만들어가는 '과정'에 집중) 융·복합이라는 틀 안에 갇힐 우려가 있으므로 '과정'을 챙겨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토론문

지우영 (예하예술학교 교장)

창의·융합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선 보편적이고 전인적인 통섭예술교육이 필요하다

문화는 환경이 만들어준 선물이다. 그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예술분야는 이미 문화라는 환경적 생태계 속에 융합되어 다양한 형태로 창조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랜 시간 전문예술단체를 이끌며 공연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며 일찍부터 융복합을 지향해 왔었다. 또 무용, 음악, 미술, 연극, 문학의 장르를 통섭한 교재를 개발했고 그에 따른 콘텐츠를 실행하는 대안학교 설립을 통해 융복합의 교육적 효과성을 검증했다. 연구결과로는 장르 간의 전문성이 각각 융합된 것보다 사람 자체가 융합이 되어지는 전인적인 교육적 효과를 통해 보다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 통섭이 발견되어짐을 볼 수 있었다.

수많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예술인들의 융합프로젝트에서 서로의 전문적 장르의 교류로 보여지는 산물의 일시적 융합을 통해 결과물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람 자체의 융합은 비교적 까다로움을 종종 체험하게 된다. 그러나 간혹 이미 어릴 때부터 다양한 문화예술의 체험적 또는 교육적 경험으로 감성 안에 내재되어있는 성향이 융합 자체인 경우엔 서로의 소통과 이해가 더 원활하고 타협이 아닌 공유의 개념으로 경계가 사라지게 되는 것 같았다.

지난 촛불혁명 이후 시민주권의 시대로 전환되면서 모든 예술지원정책이 문화생산자 중심지원정책에서 문화향유자 중심의 지원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문화기본법 제 4조에도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미 자치구마다 생활 속의 융합예술을 지지하는 사업들이 활발하다. 또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곳마다 융합예술을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으며 가족 단위부터 문화예술을 통한 이해관계자들을 확장시키는 콘텐츠 개발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예술인들의 원하는 만큼의 삶의 향유가 어려운 현실 속에 창의·융합을 통한 새로운 콘텐츠 발굴로 문화예술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대상자들과의 소통을 연결해주는 정부 지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릴 때부터 보편적인 융합·전인적인 통섭예술교육을 통해 사람 자체가 융합적 사고로 문화를 바라볼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이 시스템화되어야 한다. 다가오는 미래, 어쩌면 4차 산업혁명 속에 인공지능의 융합적 사고에 밀려날지도 모르는 인격이 있는 ‘사람의 예술’을 지켜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토론문

황주선 (대진대학교 초빙교수)

1. 창의·융합 문화예술(교육)의 목적 및 목표

과거의 사례(바그너의 총체예술, 바우하우스, 블랙마운틴 칼리지, 플렉서스 등)를 통해 볼 때, 학제적 예술(교육)은 통합 장르의 생산이나 탄생보다는 개별 장르의 확장과 성장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융합적 문화예술교육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과정 및 결과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과거의 시도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창의·융합 문화예술 교육의 인재상

학제와 달리 융합적 인재는 기존의 정체성을 소실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이행(being → becoming)하는 것도 염두에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술적 가치나 성과보다는 인간의 가치나 자기실현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제3의 역량(가령,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3. 예술가와 교육자

교육은 피교육자 중심적인 명확한 목적과 목표하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과정 설계와 수행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창작자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만족적인 창작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좋은 예술가가 자동으로 좋은 교육자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창의·융합 문화예술의 교육자/매개자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술의 창의성 vs. 기술의 창의성

창의성은 예술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문, 사회, 기술, 과학 등 개별 분야를 막론하고 중요하게 간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예술적 창의성과 기술적 창의성이 서로 다르고, 예술적 창의성을 더욱 중요하게 간주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아가 장르 간에도 창의성의 차이가 있고 특정 장르의 창의성을 더욱 중요하게 간주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토론문

황하영 (한국예술종합학교)

1. 예술장르 간 융합의 근본적 동기와 지향

20세기 중반 이후 예술은 익숙한 경계를 넘어 다른 장르의 언어와 세계를 만나 탐험함으로써 스스로의 경계와 정체성을 확장하려는 실험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지금 예술장르 간 융합의 논의와 실험은 한편으로는 그때와 맞닿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적, 정치경제적, 환경적으로 매우 다른 조건과 역동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과 역동이 예측 불가능한 속도로 변화할수록, 예술장르 간 융합의 동기와 지향점을 보다 근본적이고, 거시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동시대 예술은 왜 지금, 여기에서 서로 다른 장르를 만나고 결합하려 하는가? 동시대 예술장르 간 융합은 어떤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추구하며, 어떤 지향을 향해 나아가는가?

서로 다른 예술 장르가 어떻게 만나는가는 관념적 설명과 도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프랙티스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존 듀이가 말하듯, 예술의 핵심에는 질성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예술가, 예술교육가, 혹은 관객, 참여자들의 섬세한 경험의 씨줄과 날줄 속에서 각기 다른 예술 장르가 어떻게 만나서 교차되고 통합되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이러한 ‘만남’의 경험의 토대로서 ‘몸과 감각’은 무엇을 생성하는가? 각 예술 장르별로 고유한 ‘몸과 감각’의 경험을 서로 이해하는 것은 장르 간 융합에서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 예술장르 간 융합에서 ‘몸과 감각’에 대한 기반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예술장르 간 융합은 각 장르의 전문성을 갖춘 예술가들의 만남을 전제로 한다.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나의 관점으로 타인의 영역과 경계를 바라보고, 서로의 연결고리와 공유 지점을 찾아내고 탐구한다. 한편, 내 경계 안의 고정된 시각으로부터 벗어나 타인의 경계로부터 내 영역을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비로소 전혀 새로운 발견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처럼 ‘내 경계와 동시에 타인의 경계로부터 바라보기’를 촉발하는 구체적 탐구의 사례를 축적하는 것은 장르 간 융합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이러한 축적은 어떤 초점과 프레임워크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2. 예술장르 간 융합 및 융합문화예술교육에서의 실천적 쟁점 및 정책

관객 및 참여자가 능동적 경험의 주체로 인식되고, 예술적 소통의 창조적 순환구조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중요해지면서, 창작자/실행자/관객(혹은 참여자)의 관계를 한층 역동적으로 탐구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술장르 간 융합 및 융합문화예술교육에서 어린이·청소년을 ‘교육의 대상’이 아닌 ‘잠재적 예술가’로 바라볼 때, 그들의 시선과 경험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유한 ‘예술’을 깊이 탐구하는 것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어린이·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예술’에 대한 탐구가 심화, 언어화, 체계화될 때 이는 예술 및 예술교육의 미학적, 사회적 그리고 이론적, 실천적 논의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가?

예술교육의 양적 확장을 위한 정책 안에는 매뉴얼을 바탕으로 한 표준화된 프로그램 및 예술교육가 양성이 강조되어 왔다. 예술교육가들이 각기 고유한 감각적 경험과 창조적 언어를 찾는 힘을 갖추어야 참여자들로 하여금 몸을 통한 경험과 주체적 창조성을 불러일으키는 예술교육 프랙티스를 할 수 있다면, 예술교육가 양성 정책은 어떤 균형과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가? 이에 따른 예술교육가 연수는 어떤 점진적 단계들을 포함해야 하고, 어떤 요소를 주축으로 삼아야 하는가?

2019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추진단 분과별 토론회 결과 기록집
문화예술교육 의제발굴 원탁회의

발 행 인	이규석
발 행 일	2020년 4월
발 행 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 획	경영기획팀
기획제작	프로젝트 궁리
기록·편집	최순화, 강지영, 주소진, 남은정
사진	이재범(POV스튜디오)
표지디자인	김동훈(노제이)

*등록번호 KACES-1990-C001

홈페이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www.arte.or.kr

웹진(아르떼365) www.arte365.kr

문의 02-6209-5900
